

第6章 社會福祉

第1節 概 觀

I. 概說

대구직할시 사회복지의 역사를 개관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를 살펴볼 수 없다.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대구의 사회복지사는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사의 한 부분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유럽이나 북미의 사회복지 출현이 빈민구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삼국시대의 王家仁政에 입각한 施惠의 구빈활동에서 사회복지사업의 맥락을 찾아볼 수 있다. 삼국시대의 일시적·즉흥적인 구빈활동은 고려와 조선조를 이어오면서 점차 제도화되었지만 溫情主義적 王家仁政思想에서 탈피하지 못했고 국가책임사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그 제도는 근세에 이르기까지 구빈적 한계내에 머물렀으며 보호수준도 빈약할 수밖에 없었다.

朝鮮朝 말기 갑오개혁을 계기로 근세 西歐文物이 도입되었고 인간존중사상과 평등사상이 정치와 행정에 반영되면서 빈민이나 要扶助者에 대한 보호조치는 국가의 시혜가 아닌 책임이라는 인식이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갑오개혁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한일합방으로 우리의 고전적 구빈제도는 단절되고 말았다. 해방과 함께 짧은 기간의 미군정을 거친 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국민의 생활권이 명문화되었고 이후 현대적 사회복지가 확립되는 기틀이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는 짧지만 그 前史라고 할 수 있는 구빈활동과 그 제도의 변천과정을 간략히 살펴 봄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현황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1. 施惠의 救貧制度

동양적 救貧사업은 온정주의를 바탕으로 한 왕가인정에 있었다. 이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부터 천재지변, 凶害兵亂時의 구빈에 관한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백제 온조왕 32년(15)에는 가뭄으로 굶주리는 백성에게 곡물을 나누어 주어 구제하였고, 신라 유리왕 5년

(28)에는 自活할 수 없는 四窮(鰥寡孤獨)을 조사하여 구제하였다.¹⁾ 또 고구려 고국천왕 16년(194)에는 춘궁기에 관곡을 빈민에게 대여하는 賑貸法을 제정하였다.²⁾

고려시대의 구빈활동도 삼국시대와 大同小異했으나 불교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에 와서 더욱 융성하게 됨에 따라 불교의 근본이상인 자비정신에 의하여 구제사업은 한층 더 성행되었다. 조정의 구제사업은 처음에 戶部와 禮部에서 관장하다가 후에 救濟都監, 賑恤都監, 賑濟色 등 중앙구휼행정기관이 설치되었다. 지방의 일선 구제기관으로는 濟危寶, 義倉, 東西大悲院, 惠民局 등이 있었다.³⁾ 또 숭불정책을 쓴 고려조에는 불교도들의 社會裨補事業으로서 시료, 행려자 보호사업이 성황을 이루었다.⁴⁾ 고려의 구제활동이 성행한 것은 이러한 불교의 자비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불심이란 大慈大悲를 뜻하고 자비심의 구상화된 것이 보시(布施)인데 불교도들의 자선 또는 구제활동은 바로 布施行的인 것이다.⁵⁾

조선조의 구제활동도 救恤, 賑貸 및 減免稅·役으로 집약된다. 구휼방법은 衣食제공과 의료가 주이고 대상자는 鰥寡孤獨이었다. 이러한 조선조의 구제활동은 유교의 민본주의에서 발전한 孔孟의 仁義思想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시대는 정치의 근본을 왕가인정과 덕치에 두었고 궁민구제를 치국의 요체로 생각하였다.⁶⁾ 조선조는 건국 이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 부문이 고려적인 기반에서 개혁되고 재편성되어 갔으며 특히 법전편찬작업이 매우 성행하여 민생구휼제도도 법제화하였다.

조선조의 법전으로서 체제가 완성된 것은 건국초에 시작하여 성종 16년(1485)에 全典施行을 본 경국대전으로 갑오개혁(1894)까지 국가기본법전으로 전해졌다. 경국대전의 이전에는 의료구제기관으로 惠民署와 活人署를 두었고, 호전에는 중앙과 지방에 常平倉을 두어 백성들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규정을 두었다. 禮典에는 惠民條에 경로, 婚費補助, 노인과 고아에 대한 수양 및 의류관급, 의약구제 등의 규정을 두었다. 또 兵典에는 면역과 구휼제도를 규정하였고, 刑典에는 恤囚의 규정을 두었다.⁷⁾

1) 《三國史記》권 1, 新羅本紀 권 1; 하상락, 〈우리나라 救貧事業의 變遷과 그 社會의 背景 - 李朝時代를 中心으로 -〉, 《문교부연구보고서》, 1970, pp.7~9. ; 구자현, 《한국사회복지사》, 한국사회복지연구소, 1970, p.7에서 再引用.

2) 《三國史記》권 16, 高句麗本紀 권 4; 하상락, 위의 논문, p.7에서 再引用.

3) 정인지, 《高麗史》志 30, 百官 1 및 二條 ; 신상준, 《福祉行政學》, 대구대학교 출판부, 1983, p.63에서 再引用.

4) 구자현, 위의 책, p.77.

5) 장 훈, 〈佛敎에 나타난 福祉理念〉《사회복지연구》9, 대구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1981, pp.9~10.

6) 최창무, 〈조선왕조초기의 구빈제도에 관한 고찰〉《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논문집》3, 1984, p.170.

7) 구자현, 위의 책, pp.105~106.

민생구휼사업의 시설로서는 중앙에 구황청(후에 진휼청으로 개명되었다가 다시 선�혜청에 흡수, 합병되었다)⁸⁾, 해민국, 활인서, 濟生院, 耆老院, 掌隸院, 水庫, 平市署 등이 있어 각기 독립된 기능을 가졌었다. 제22대 정조 7년(1783)에 증보된 大典痛編의 禮典 惠恤條에서는 부랑아와 유기아에 대한 收養節目으로서 字恤典則을 규정하였다. 또 세종 원년(1419)에는 還穀이라고 하는 춘궁기에 곡물을 민간에 대부하고 다음 해에 환납케 하는 민생구제제도를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고종 32년(1895)에 면을 단위로 하는 社還制度로 발전하였다가 隆熙年間(1907~1910)에 지방금융조합으로 흡수되고 말았다.⁹⁾

2. 社會福祉制度의 變遷

1876년 개국 이후 서구문물이 도입되고 천주교·개신교가 전파되면서 근대적 사회복지사업이 도입되었다. 특히 1894년 이후의 정치·행정개혁에 수반하여 행정면에서도 서구적인 공공복지기능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사회복지사상이 인간존엄성과 평등에 기본이념을 둔 것이라면 門閥班常等級의 타파와 門地를 불문하고 인재를 등용하도록 한 것은 종래의 貴賤계급의 장벽을 타파시켜 빈민 기타 사회부조를 요하는 자에 대한 부조조치가 국가의 시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의무로서 생각하게 되는 한 계기를 조성시켰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방 때까지는 사회복지사업이 주로 보건·위생분야에 한정되었고 사회복지분야는 보잘것 없었다.¹⁰⁾

한일합방 후 조선총독부 사무관장규정에 의하여 1924년 처음으로 중앙에 사회과가 생겨 진휼 및 자선, 사회사업, 濟生院 및 感化院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했고, 도에는 재무부 지방과(또는 사회과)에서 진휼구제와 사회사업 업무를 맡았다. 일제시대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恩給法에 의한 공무원의 은급이 있었고, 공적부조로서 구호법(조선구호령으로서 1944년 시행)에 의한 구호, 水難구호법(조선수난구호령으로 1914년 시행)에 의한 遭難선박구호가 있었으며 기타 사회사업도 있었다.

1945년 해방 후 미군정기에는 군정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일제시대의 법령이 그대로 효력을 지속하였다. 군정당국은 사회복지 내지 노동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 업무는 군정청 보건후생국이 담당했고 이것이 현재 보건사회부의 전신이 되었다. 이 때의 군정 당국자들은 소위 선진국으로서 현대 복지국가이념을 터득하고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 당시 한국사회의

8) 신상준, 앞의 책, p.63.

9) 구자현, 앞의 책, pp.109~118.

10) 신상준, 위의 책, p.64.

경제과탄, 월남피난민, 해외귀환동포 등으로 인한 구호사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외원에 의한 사회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선진 사회복지사업이 도입되기도 했다.¹¹⁾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선포된 대한민국헌법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보호를 명문화하였고 이후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근거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해방과 6·25 사변이라는 난국에 처한 정부는 극심한 재정난으로 사회복지사업에는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군사원호법(1950), 경찰원호법(1951), 전몰군경유가족과 상이군경연금법 등 원호법의 제정만 보았다.

5·16군사혁명정부는 민생고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긴급한 최저생활보장에 주력하였다. 이 때 제정된 공적부조법으로는 생활보호법(1961), 재해구호법(1962),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1968), 사회복지사업법(1970),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구호법(1970), 의료보호법(1977) 등이 차례로 제정되었다.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그 후 개정 생활보호법(1982)에 흡수되었다. 또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으로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1961), 아동복지법(1961)이 제정되었으나 그 수준이 사회질서유지와 최저생활보장의 수준을 넘지 못했다.

제5공화국 헌법은 국가의 사회복지증진의 의무를 최초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 아동복지법(1981), 노인복지법(1981), 심신장애자복지법(1981)을 제정하였다.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법이 제정된지 20년 만에 신법의 제정 형태로 전면개정되었는데 보호대상 및 보호조치 등에서 그 내용이 대폭 강화되었다.

제6공화국은 종전까지의 ‘선성장 후분배’라는 경제개발우선정책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고 국민의 평등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정 이래 시행이 보류되어 오던 국민연금법(1973)을 전면 실시(1988)하고 의료보험법(1970)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1989)하였다. 이와 아울러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으로 모자복지법(1989)과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0), 영유아보육법(1991) 등을 제정하였고 노인복지법(1989)과 장애인복지법(1989),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1991)을 대폭 개정하였다. 그외 내용상 사회복지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갱생보호법(1961), 특수교육진흥법(1977), 그리고 보호관찰법(1989), 장애인고용촉진법(1989), 고령자고용촉진법(1991)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으로는 基本法으로서의 사회복지사업법을 비롯하여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등이 있다.

11) 신상준, 앞의 책, pp.66~69.

이상 한국사회복지제도의 성립배경을 개관해 볼 때, 현대적 의미에서의 사회복지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시초를 조선조의 경국대전 중 예전 해민조에 두어야 할 것 같다. 예전 해민조에는 노인과 고아에 대한 수양규정을 두었는데, 이것은 오늘날 생활보호법상 위탁보호의 전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발전하여 정조때 증보된 대전통편의 예전 해홀조에서는 부랑아와 유기아에 대한 수양절목인 字恤典則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들이 일제통치로 왕정이 단절됨에 따라 자취를 감추었으나 일제하의 조선총독부 사무관장규정에 의하여 공적부조사업으로 맥을 이어 오다가 해방과 함께 공화국으로 바뀌면서 군왕에 의한 온정주의적 시혜제도들이 민주헌법에 의해 국가책임으로 제도화되었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은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국가보호의무를 명문화했고 제3공화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선언하고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의무”를 신설했다. 제5공화국 헌법은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을 신설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처음으로 협의의 사회복지가 국가의 의무임을 헌법에 규정하였다. 현행 헌법은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와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 및 “재해예방 노력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등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구체화하기에 이르렀다.

II. 解放以前の 社會福祉事業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사회복지사업이 펼쳐진 것은 천주교의 전래와 함께 시작된다. 1784년 이승훈이 동지사의 일원으로 중국 북경에 건너가서 세례를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자가 되어 돌아온 이래 이 땅에 천주교가 전파되었다. 그 후 한국선교의 책임을 프랑스외방선교회가 맡게 되었다. 천주교가 전래되면서 개인적이고 비조직적인 자선은 초기 신자들 사이에 열심히 행해졌으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복지사업으로는 매스트르(Ambroise Maistre)신부의 성영회(Santa Infantia)사업이 효시였다.¹²⁾ 1852년에 입국한 매스트르신부는 가난과 전염병 등으로 수없이 많은 버려진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보고 당시 프랑스에서 설립되어 활동해 오던 아동복지기관인 성영회의 도움을 받아 이 땅에 최초로 아동복지사업을 펼친 것이 우리나라에 근대적 사회복지사업의 시작이었다.

이 때는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없었고 천주교가 모진 박해를 받던 시기라 처음부터 고

12) Dallet Ch., *Historie de L'Église de Corée*, 안용열·최석우 역주, 분도출판사, 1979, pp.209~210.

아들을 신자가정에 위탁보호하는 방식을 취하였다.¹³⁾ 그러다가 한·불수교조약이 체결되기 1년전인 1885년 3월 15일 서울에 천주교 고아원을 설립하여 고아들의 수용보호를 실시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시설사회복지사업이었다. 그 후 천주교 고아원은 샬트르 성바오로수녀회에 맡겨졌는데¹⁴⁾, 이 수녀회의 대구진출과 함께 대구에서도 1915년 10월 15일 백백합 보육원을 개원함으로써 대구 최초의 시설아동복지사업을 시작하였다.¹⁵⁾

대구에서도 천주교가 전해지면서 신자들에 의한 개인적인 자선사업이 많이 행해졌다.金玉賢(1821~1896)은 대야불(현 대구 인교동)에 살았는데, 그가 기르다 죽은 영아와 결인들을達成넘어 말무덤에 손수 매장했는데 그 수가 60여명이었고, 기미년 흉년에는 배고파 쓰러지는 노파들을 자택으로 업어다가 수용 구호한 수가 수십명에 달하였다.¹⁶⁾ 또 徐相燾(1850~1913)은 사람을 대할 때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었고 그의 사랑에는 찾아드는 결인들을 용돈까지 주어가며 환대했다. 또 매년 春秋로 빈민들에게 양곡 數百石씩을 회사하여 가난한 이들의 자부가 되었다.¹⁷⁾ 이러한 자선행위가 바탕이 되어 좀 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구제단체가 생겨났으니 인애회가 바로 그것이다.

仁愛會는 당시 천주교 대구본당 신도회 회장 李起雲, 白應道, 李啓榮 등의 발기로 1917년 2월 1일 설립되었다. 불우이웃돕기 모금회의 성격을 가진 이 단체는 매년 초에 소정의 회비(당시 년 10전)를 납부하면 1년간 회원자격을 가지게 되고 전체 회원을 위해서는 매년 生미사¹⁸⁾를 바치고 사망하는 회원을 위해서는 煉미사¹⁹⁾를 한대 드려주는 혜택을 부여하였다. 이렇게 모금된 회비로 무의무탁한 노약자에게 거처할 집을 마련해 주고 사망시에는 초상을 치러주는 것이 인애회의 사업이었다.²⁰⁾ 그 후 日政時期 동안은 민간의 별다른 사회복지 사업은 없었고 총독부의 조선구호령에 의한 공적부조사업이 있었을 뿐이다.

13) 한국샬트르성바오로회, 《바오로딸안의 哀歡 85年》, 가톨릭출판사, 1973, p.566.

박석돈, 〈韓國의 天主教社會福祉事業에 關한 研究〉《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7, pp. 32~40.

14) 한국샬트르성바오로회, 위의 책, p.567.

15) 한국샬트르성바오로회, 위의 책, p.136.

16) 최정복, 《대구천주교회사》, 대건출판사, 1952, p.51.

17) 최정복, 위의 책, pp.58~59.

18) 산 사람을 위해서 하느님께 바치는 천주교회의 고유한 제사.

19) 죽은 사람을 위해서 바치는 천주교회의 고유한 형식의 제사.

20) 최정복, 위의 책, p.64.

III. 解放以後의 社會福祉事業

해방과 함께 월남해 온 동포들과 해외에서 귀국한 동포들로 당시 사회상은 가난과 무질서로 매우 혼란하였다. 더구나 6·25동란으로 전쟁 난민들과 전쟁고아들의 양산으로 긴급구호와 고아문제가 당시 사회복지사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구제사업이 전적으로 外援에 의해 행해졌고 천막이나 판자집 등 임시 가건물로 수용보호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낙동강을 경계로 대구와 부산에 모든 정부기관이 다 모여 있었고 피난민들로 들끓고 있었다. 1947년 5월말 현재 대구시에는 구호대상자가 7만 8천여명이나 되어 총인구의 26.1%를 차지하였다. 여기에 6·25동란으로 전쟁 피난민이 밀어닥쳤는데, 그 수는 1952년 9월말 현재로 12만 4천여 명이었고²¹⁾ 그 중 1만 4천 8백여명만이 40개소의 수용소에 수용되었었다. 휴전 바로 前해인 1952년 당시 대구시의 요보호대상자수는 65,700여명으로 총인구 대비 16.2%나 되었다. 그러다가 6·25동란도 끝나고 경제적으로 안정기에 들어간 1957년에는 그 수가 13%에 해당하는 7만 8천여 명이었는데 이들 요보호대상자의 종류별 수는 전 재민 684명, 원주 빈민 3,877명, 군경 원호대상자 74,377명이었다. 이때만 해도 빈곤이 가장 큰 사회문제로 절대빈곤 퇴치가 가장 절박한 국가시책으로 여겨지던 때였다.

1961년 5·16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는 ‘민생고 해결’을 혁명공약으로 내걸고 생활보호법, 재해구호법, 의료보험법들을 제정, 절대빈곤 퇴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와서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으로 전반적인 생활이 향상되고 사회복지분야에도 점차 관심을 보이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IV. 大邱直轄市時代의 社會福祉事業

1981년 제5공화국의 수립과 함께 대구시는 직할시로 승격하였고 市財政도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다. 또한 국가경제도 더욱 호전되어 198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어서는 역사이래 최초로 무역흑자를 기록하면서 경제에 자신감을 갖기도 했다.

1988년 제6공화국에 와서는 이때까지의 “선성장 후분배 정책”을 완화, 특히 88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 후 복지정책에 더욱 과감히 투자를 하기 시작하였고 제도를 정비·확충해 나갔다.

21) 영남일보사, 《경북연감》, 1953.

이와 때를 맞추어 대구직할시의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도 장애인복지사업분야가 매우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제도가 확립되어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1988년부터는 일선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변화와 발전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같은 유형을 보인 것이다.

1990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재정자립과 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복지행정도 지역특성을 살린 독자적 제도와 시책을 완전히 펴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대구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급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획기적인 예산배정을 하고 있어 앞으로 대구 사회복지 발전에 큰 기대를 갖게 해 주었다. 즉,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전국 677개의 수용보호시설 중 545개 시설을 대상으로 퇴직금제도 시행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대상의 63.9%인 348개 시설의 경우는 아예 퇴직금제도가 없었다. 나머지 36.1%인 197개 시설도 전반적으로 일정한 규정도 없이 법정기준 보다 많게 또는 적게 지급하고 있어 제도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때에 대구직할시는 1993년도 추경예산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중 총 18억여원을 반영시킴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래 전국 15개 시·도 중에서 가장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단독지원에 의한 시설종사자 퇴직금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또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수당 지급액을 크게 인상함으로써 이들의 사기양양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같은 사실은 대구시의 지역사회복지증진에 대한 굳은 의지와 책임감 그리고 지역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지속적인 노력과 民·官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와 유대강화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수준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공립시설종사자 보수의 67% 수준에 불과하며, 유사경력·불인정을 비롯한 퇴직금제도 및 업무과중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시점에서 대구시의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은 타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1996년까지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국·공립시설종사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으며, 퇴직적립금의 경우 1994년도부터 반영하여 노후 소득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第2節 社會福祉의 傳達體系

I. 保健社會局

우리나라에 사회복지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로서 사회과가 처음으로 설치된 것은 일제때인 1924년이였다. 그 이전에는 사회복지사업분야의 공행정분야는 보잘것 없었고 사회복지행정 기능이 주로 보건 내지는 위생분야에 한정되어 있었다. 1910년 한일합방 당시에는 구제업무를 내무부 지방국 지방과에서 맡았다가 1924년 조선총독부 사무관장규정에 의해 내무국에 사회과를 독립시켜 진흥 및 자선, 사회사업, 제생원 및 감화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이에 따라 도에는 내무부 지방과 또는 사회과에서 이러한 업무를 맡았다.²²⁾

해방 후 미군정 때에는 미군정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일제 때의 법령이 그대로 효력을 지속하였다. 1945년 9월 24일자로 경무국의 위생과를 위생국으로 승격시켰고 같은 해 10월 27일에는 이를 보건후생국으로 개편하였다. 동시에 각 도에는 1945년 11월 7일자로 보건후생부를 설치하였다. 보건후생국은 종래의 學務局 사회과, 警務局 防護課 戰災民係, 관방 外事課 보호계 및 광무국의 조선노동자 및 전재민구제회의 직능을 인수하여 편성되었다. 보건후생국의 관장업무는 ① 사변시의 재해구제, ② 빈곤자 구호, ③ 아동후생보호, ④ 근로자의 후생 및 은급제도, ⑤ 주택문제, ⑥ 귀국인 및 실업자 보호, ⑦ 점령군 목적 달성에 필요한 공공후생계획 및 경영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그 후 1946년 3월 29일자로 보건후생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사회부에서 이러한 업무를 관장하였고 1949년 보건부가 설치되면서 보건업무를 분리해서 관장하다가 1955년 보건사회부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²³⁾

사회복지행정을 주관하는 지방의 기관으로서는 1961년 5월 1일 현재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각 도에는 문화사회국에 사회과와 보건과가 있었는데 대개 서울특별시의 사회과와 부녀과를 합친 것과 같은 규모로 사무를 주관하고 있었고 그 직원수는 각 도에 국비직원(과장포함) 3명 내지 5명, 지방비직원 3명 내지 10명이 있었으며 그 합계 숫자는 경북에 11명 등 전국에 79명이 있었다. 보건과는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직원수는 전국에 63

22) 신상준, 앞의 책, p.65.

23) 위의 책, p.67.

명이었다. 이 밖에도 전국 27개 市에 사회과가 있어 사회행정을 분장하고 대개 지방 주사 1명, 지방 서기 2명, 계 3명 정도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었다.

5·16 이후에는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보건사회국을 두어 기능을 강화하고 기구를 확대하고 직원수도 격증하였음은 사회복지행정의 신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69년에 부산시와 각 도에 부녀아동과를 신설한 것은 사회복지 행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사업 중 특기할 만한 것의 하나는 1961년 이후 특별시·도 및 구·시·군에 총 수 249명의 아동복지지도원을 배치하고 또한 구·시·읍·면에 아동복지위원을 위촉하여 각기 아동복리에 관한 제반 사무를 담당하게 한 것이었다.

1969년말 현재 각 시·도에 수석부녀상담원과 일반 부녀상담원 도합 215명을 배치하여 특수지역내 윤락여성선도사업을 비롯하여 전락할 위험성이 있는 요보호 여성에 대한 미연방지사업을 하였으며 요보호 여성으로서 자립갱생 또는 자활을 희망하는 자를 수용하고 1인1기의 직업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모자복지사업으로는 보호자나 배우자가 없는 영세미망인으로서 부양자녀 3인 이상인 모자세대를 시설에 수용·보호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국고와 지방비에서 생계비 또는 생산자금을 지급하여 자립갱생토록 하였다. 현재 대구직할시 보건사회국의 사회복지 사업에 관련된 부서와 담당업무는 다음 <表 6-1>과 같다.

<表 6-1>

보건사회국의 사회복지 관련업무

실과	계	분장사무
사회과	사회계	1.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2. 시민 복지시책에 관한 종합계획 3. 사회복지법인의 인가및 지도감독(노인시설제외) 4.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5. 보훈단체 및 사회등록단체 운영지도 6. 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운영 7. 장애인 일반 및 단체에 대한 운영지도 8.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지도 9. 장애인 재활, 재가 시설운영지도 10. 시립희망원 운영 지도감독 11. 보훈대상자 관련업무 12. 전지구호 계획에 관한 사항

실 과	계	분 장 사 무
		13. 행려사망자 처리 14. 부랑인 선도 및 지도 15. 그밖에 국내 타과,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복 지 계	1.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관리 2. 저소득 영세민 지원 보호관리 3. 사회복지 전문요원 지도관리 4. 사회복지관 운영지도 5. 재해이재민 구호 및 재해비축물 관리 6. 저소득자녀장학금(시비장학금) 운영 7. 저소득 영세민 자활, 자립 지원 지도 8. 영구임대주택 입주 및 사후관리 9. 영세민 취로사업 및 자활정착 사업 10. 저소득층 생업자금등 융자지원등에 관한 사항 11. 의사상자 구호 12. 해외이민 알선 13. 생활보호자 후원 결연사업 14. 종합복지회관 운영 지도감독
	노 정 계	1. 노동행정의 계획 및 조정 2. 기타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참고: 개정 1993년 7월 16일 규칙 제1865호.

II. 家庭福祉局

1972년 이전에 부녀·아동문제를 사회과 부녀계에서 관장해 오다가 1973년 부녀아동과가 신설되면서 부녀계와 아동계에서 각각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 후 1985년 부녀아동과를 부녀청소년과로 명칭을 바꾸고 청소년계가 신설되었다. 이것은 산업화에 따른 청소년 계층이 많아지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인식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였다.

1988년에는 가정복지국이 신설되면서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 청소년과로 업무를 분담하고 가정복지과에는 노인복지계 아동복지계, 부녀복지과에는 부녀복지계 생활지도계, 청소년과에는 청소년계 청소년시설계를 각각 두었다. 1989년 노인복지계는 가정복지계로 명칭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정복지국 소관업무는 다음 <表 6-2>와 같다.

〈表 6-2〉

가정복지국의 사회복지 관련업무

실과	계	분장사무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	1. 가정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2.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3. 가정의례실천 및 업소 지도감독 4. 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 및 기능보장 5. 효행자 선발 포상 6.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행사 실시 7. 경로우대 관련업무 8. 노인능력은행 운영지원 9.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 10. 경로당 운영지도 11. 노인회등 노인관련단체 지원 12. 기타 노인복지업무 전반 13. 묘지, 매·화장 및 납골당에 관한 사무 14. 장의관리소 지도감독 15. 그밖에 국내 다른 과·계에 속하지 않은 사항
	아동복지계	1. 아동복지 종합계획 수립 2.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3. 아동복지기관 및 시설의 지도감독 4. 불우아동(시설아동)건전양육에 관한 사항 5. 기·미아 보호처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놀이터 설치에 관한 사항 7. 요보호아동 선도담당사업 8. 소년가장 보호 지원 9. 어린이날 행사 주관 10. 어린이회관 및 아동, 청소년상담소 지도감독 11.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사항
부녀복지과	부녀복지계	1. 부녀복지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2.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3. 부녀보호시설 운영 지도감독 및 실태조사 4. 요보호여성 선도 복지에 관한 사항 5. 윤락여성 선도 보호사업

실 과	계	분 장 사 무
부 녀 복 지 과	부 녀 복 지 계	6.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 지원사업 7. 미혼모 예방사업 8. 부녀상담소 지도감독 9. 가정문제 및 불우여성 상담활동 10. 그밖에 과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않은 사항
	생 활 지 도 계	1. 여성능력발전 종합계획 2. 여성회관 운영지도 3. 여성단체의 지도육성(새마을부녀회포함)지원 4. 영세층 무료 합동결혼사업 지원 5. 부녀지도협의회 여성 6. 여성직업보도 교육 및 사회교육 7. 자원봉사 인력은행 운영 8. 기타 여성능력개발 사업추진 9. 여성의 지위 향상 및 교양에 관한 사항 10.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청 소 년 과	청 소 년 계	1. 청소년대책업무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2.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3. 청소년육성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시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5. 모범 청소년 포상 6. 불우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지도자 육성 8. 청소년선도 보호 및 상담활동 9.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시책 추진 10. 그밖에 과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않은 사항
	청 소 년 시 설 계	1. 청소년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종합계획 수립조정 2.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민간단체 청소년 시설운영 지원 5. 청소년 사회교육 및 건전 프로그램 개발운영 6. 청소년시설 민간단체 위탁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선도 관련 시설관리 8. 청소년 국제교류 관계에 관한 사항

참고: 개정 1992년 7월 25일 규칙 제 1776호.

第3節 社會保險

I. 國民年金

1. 國民年金制度의 意義 및 沿革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에 달하거나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능력 상실시에도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마련된 공적인 연금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접어들어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평균수명의 연장, 급속한 핵가족화와 더불어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각종 사회적 위험의 증대로 연금제도의 실시가 시급하였다. 이에 따라 1973년 12월 24일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1974년부터 시행하기 위한 제반계획을 추진하여 왔으나 당시 세계적인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연 16%에 이르는 높은 물가상승률 등에 기인하여 법의 실시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그러나 그 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물가의 안정으로 제도 실시를 위한 제반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1986년 국민복지연금법을 전면 개정한 국민연금법(법률 제3902호)을 제정, 공포하였다. 국민연금법이 공포됨에 따라 1987년 4월 29일 보건사회부에 국민연금국이 신설되고 같은 해 9월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설립등기를 마치고 10월 19일에 본부 및 14개 지부를 발족시켰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직할시지부는 1987년 10월 19일 대구직할시 북구 침산 2동 13-54에 사무실을 열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그 후 1992년 2월 1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1623-12에 대구 서부출장소를 개소하였고, 1992년 11월 17일에는 지부사무실을 현재의 위치인 대구 수성구 수성3가 73의 장소로 이전하였다.

2. 國民年金 加入者 現況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지부가 발족된지 5년이 지난 현재, 산하 사업장 및 가입자 현황을 보면 다음 <表 6-3>에서와 같이 7,507개의 사업장이 가입하여 모두 215,105명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다. 이 중 사업장가입자는 211,991명이고 지역가입자는 2,547명, 임의계속가입자는 567명이다.

〈表 6-3〉 국민연금가입 사업장 및 가입자 현황 (단위: 개소, 명 1993년 5월말 현재)

구 분	사 업 장	가 입 자			비 고
		계	사 업 장	지 역	
계	7,507	215,105	211,991	2,547	567
지 부	4,399	118,095	116,344	1,408	343
출 장 소	3,108	97,010	95,647	1,139	224

주: 1) 10인 미만 사업장: 3,237개소(43.1%).
2) 제조업 : 4,333개소(57.7%).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직할시 지부

3. 大邱市 國民年金 釀出料 徵收現況

국민연금가입자 및 사용자는 매월 자기 보수에서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출료로 납부하고 이 각출료는 각종 연금지급 등 국민연금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1988년 1월 국민연금이 실시된 이후 1993년 5월말 현재까지 대구시에서 징수된 연금각출료는 다음 〈表 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4,400개소의 사업장에서 총183,658백만원을 징수하여 99.6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表 6-4〉 각출료 징수현황 (금액: 백만원, 1993년 5월말 현재)

구 분	납 부 대 상 (A)		징 수 (B)		징 수 율 (B/A × 100)	
	사 업 장	금 액	사 업 장	금 액	사 업 장	금 액
합 계	326,210 (45,906)	184,400 (29,767)	324,417 (45,061)	183,658 (29,392)	99.45 (98.16)	99.60 (98.74)
1988~1992	303,596 (36,508)	160,774 (19,638)	302,621 (36,086)	160,486 (19,531)	99.68 (98.84)	99.82 (99.46)
1993	22,614 (9,398)	23,626 (10,129)	21,796 (8,975)	23,172 (9,861)	96.38 (95.50)	98.08 (97.35)

주: 지부 출장소 합계, ()는 출장소.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직할시 지부.

4. 國民年金의 支給現況

국민연금 급여는 산업사회에서 날로 심화되는 사회문제(노인문제, 각종 산업재해, 교통사고에 따른 장해나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에 대비하여 국민이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소득을 장기적으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며, 의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급여는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그 연금급여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균등부분)과 개인의 각출료를 결정하는 각자의 소득(비례부분)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사적 계약에 의한 사보험과는 달리 소득계층간의 상당한 정도의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진다.

즉, 저소득층 가입자의 최종보수대비 연금수급액 비율이 고소득자 보다 높으므로 저소득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가입기간 중의 보수월액은 임금변동률에 의하여 연금수급액 개시년도의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연금수급 진행중에는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므로 연금급여액의 실질가치는 항상 보장된다.

1988년 1월 1일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된 이래 1989년부터 1993년 5월말 현재까지 대구시지부에서 지급된 연금은 1,305건에 총 1,717,807,000원이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다음 <表 6-5>와 같이 노령연금이 342건에 33,952,000원이고 유족연금은 856건 1,448,150,000원, 장해연금은 107건 235,705,000원을 각각 지급했다. 일시금 지급현황은 다음 <表 6-6>과 같이 94,642건에 금액은 27,463,244,000원을 지급했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일시보상금이 120건 178,614,000원이고 반환일시금은 94,522건 27,284,630,000원을 각각 지급했다.

<表 6-5> 국민연금 지급현황 (단위: 건, 천원 1993년 5월말 현재)

구분 연도	계		장 해 연 금		유 족 연 금		노 령 연 금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305 (490)	1,717,807 (377,242)	107 (42)	235,705 (64,116)	856 (308)	1,448,150 (298,770)	342 (140)	33,952 (14,356)
1988~1992	867 (294)	1,408,537 (264,929)	87 (34)	182,046 (44,477)	780 (260)	1,226,491 (220,452)		
1993	1,305 (490)	309,270 (112,313)	107 (42)	53,659 (19,639)	856 (308)	221,659 (78,318)	342 (140)	33,952 (14,356)

주: 1) 지부, 출장소의 합계, ()는 출장소 현황.

2) 장해연금은 장해 4급 제외함.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직할시 지부.

〈表 6-6〉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 현황 (단위: 건, 천원 1993년 5월말 현재)

구 분	계		일 시 보 상 금		반 환 일 시 금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94,642 (12,515)	27,463,244 (5,250,504)	120 (51)	178,614 (73,292)	94,522 (12,464)	27,284,630 (5,177,212)	
1988~1992	82,456 (7,231)	21,920,592 (2,800,098)	82 (32)	114,771 (42,728)	82,374 (7,199)	21,805,821 (2,847,370)	
1993	12,186 (5,284)	5,542,652 (2,360,406)	38 (19)	63,843 (30,564)	12,148 (5,265)	5,478,809 (2,329,842)	

주: 지부, 출장소의 합계, ()는 출장소 현황.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직할시 지부.

II. 醫療保險

1. 醫療保險制度의 意義 및 沿革

의료보험사업은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진료비와 분만비, 장제비 등의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의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1963년 12월 16일 법률 제1623호로 의료보험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나 그 시행은 1977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하여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여 실시한 이래 1979년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을 적용하였다. 정부는 1980년대의 국민개의료보험을 목표로 그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1979년 7월 1일부터는 30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해 왔다. 다시 1982년 12월 21일부터는 16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의무적으로 적용케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은 종업원(피보험자가 될)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 그 적용대상 범위를 계속 확대하였다.

1988년 1월 1일부터는 농어촌지역주민들에게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였고, 동년 7월 22일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강제적용하였으며, 1989년 7월 1일부터는 도시주민에까지 의료보험이 실시되어 전국민이 의료보험을 적용받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직종의료보험조합은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에 흡수되었다.

2. 職場 및 地域醫療保險 受惠現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군인연금법의 해당자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기타 다른 법에 의하여 의료보험에 가입된 자 및 의료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자는 제외된다.

1993년 10월말 현재 대구시 인구의 76%(공·교 및 타지역:21%, 의료보호:3%)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며 1981년 이래 대구시민의 연도별 수혜 현황은 <表 6-7>와 같다.

<表 6-7> 의료보험 수혜자 현황 (단위:명)

구 분	직 장 의 료 보 험			지 역 의 료 보 험		비 고
	계	피보험자	피부양자	세 대 수	조합원수	
1981	273,956	110,818	163,138	—	—	
1982	359,446	131,215	228,231	—	—	
1983	474,679	160,606	314,073	—	—	
1984	524,754	172,484	352,270	—	—	
1985	531,779	173,266	358,556	—	—	
1986	598,532	195,706	407,825	—	—	
1987	705,964	230,546	475,418	—	—	
1988	754,226	245,254	509,012	—	—	
1989	709,085	232,317	476,768	269,275	927,708	
1990	677,737	224,510	453,227	282,001	969,700	
1991	672,267	225,860	446,407	295,412	1,006,012	
1992	657,444	223,565	433,879	319,921	1,054,594	
1993	645,874	220,195	425,679	329,645	1,087,344	

자료: 사회과 의료보장계.

3. 醫療保險組合 運營

1977년도 의료보험사업 실시 당시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에 한하여 직장조합이 설립되었으나 1989년 7월 1일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의 확대 실시에 따라 의료보험법에 의한 특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의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되어 국가 사업인 의료보험사업을 위임받아 수행케 되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도 1989년 7월 1일 대구시 의료보험조합이 최초로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의 조합현황은 <表 6-8>과 같이 1993년 현재 직장조합은 조합수 5개에 7,7042개의 사업장이 조합에 가입해 있고 지역조합은 7개 조합에 조합원 수는 1,087,344명이 된다.

〈表 6-8〉 의료보험조합 현황 (단위:개소, 명)

연 도 별	구 분	직 장 조 합		지 역 조 합	
		조 합 수	사 업 장	조 합 수	조 합 원
1981		5	1,309	.	.
1982		5	1,830	.	.
1983		6	2,561	.	.
1984		6	2,829	.	.
1985		6	3,053	.	.
1986		6	3,467	.	.
1987		6	4,853	.	.
1988		6	6,508	.	.
1989		5	7,013	7	927,708
1990		5	7,604	7	969,700
1991		5	7,309	7	1,006,012
1992		5	7,711	7	1,054,594
1993		5	7,702	7	1,087,344

자료: 사회과 의료보장계.

4. 保險給與의 年度別 支給現況

의료보험에 있어서 보험급여란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질병, 부상, 분만, 사망한 때에 진료를 행하거나 진료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급여하는 것을 말한다.

대구시의 의료보험 급여를 연도별로 보면 〈表 6-9〉에서와 같이 직장조합은 거의 변동이 없으나 지역조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993년도에는 현금급여에 있어 3/4분기까지 이미 1992년도 지급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지역조합의 현물급여수준이 직장조합의 배가 넘는다.

〈表 6-9〉 보험급여의 연도별 지급현황 (단위:천원)

연 도	구 분	직 장 조 합		지 역 조 합	
		현 물 급 여	현 금 급 여	현 물 급 여	현 금 급 여
1990		25,177,129	222,700	43,344,317	144,491
1991		26,338,708	226,050	48,118,956	166,830
1992		27,210,301	238,200	56,486,906	182,504
1993		26,399,701	328,363	57,447,124	175,002

참고: 1993년은 3/4분기말 현재.

자료: 사회과 의료보장계.

III. 産業災害 補償保險

1. 産災保險制度의 變遷過程

우리나라의 산재보상제도는 일제 때부터 시작된다. 일제하의 근로자 재해보상제도는 부분적으로 체신·철도·전매 등 관영기업의 특수분야에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휼적인 태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업무상의 재해가 가장 다발적으로 일어났던 광업에서 1915년에 제정, 시행된 조선광업령에 의하여 광부의 고용 및 노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사용자의 재해보상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다소 제도면의 진전이 있어 1938년에 「朝鮮鑛夫勞務扶助規則」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것은 일제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조적인 정신을 배경으로 한 보상이었다. 船員에 관하여서는 조선민사령에 의한 상법 제725조에 「해원부조규정」이 있었다.

조선광부노무부조규칙에 의하면 그 적용범위는 50명 이상의 광부를 상시 사용하는 광산으로 하고 이에 의하면 몇 가지의 근로보호규정과 아울러 광부가 업무상으로 부상하였거나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광업권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부조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하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상제도는 구휼적 차원에 입각한 부조제도에 불과하였고 그나마도 광산노동자 등 일부 특수분야에서만 적용되었던 것이다.

8·15해방 이후 미군정은 1945년 10월 근로자단결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합법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장려하였고, 1946년 7월에는 노동부(지방의 각 도에는 노동국)를 설치하였으며, 1946년 9월에는 아동노동법을, 같은 해 11월에는 8시간 근로원칙을 규정한 최고노동시간 등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였다.

수립 후의 재해보상제도는 대체로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제1기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까지 노동조합에 의한 단체협약 내지 후생협약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문제를 처리하였던 시기이며, 제2기는 근로기준법의 제정에 의하여 개별적 사용자 책임주의 원리에 따라 재해를 보상한 시기이고, 제3기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의 단체적 책임주의에 입각한 시기이다.

1963년 11월 5일 사회보장제도의 기본법이 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 공포되어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第4節 生活保護事業

I. 生活保護制度의 沿革

1. 現行法體系의 確立

현행 헌법 제34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오늘날 모든 나라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 내지는 생활권을 규정 한 이념적 기초를 제시하고 있다.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여 야 한다”고 하여 제1항의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의 의무를 규정했고, 제5항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여 제1항과 제2항의 구체적 내용으로써 생활무능력자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에 바탕을 두고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제5조에서 “이 법에 의한 보호의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즉, 헌법상 생존권 의 기준인 ‘인간다운 생활’을 구체화하는 것이라 하겠다.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때의 조선구호령에 의해 극빈자에 대한 구호사업과 무의무탁한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수용보호사업이 실시되어 오다가 1961년 12월 31일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빈곤한 국민에 대한 국가적 제도가 비로소 마련된 것이다. 이 와 관련된 법으로서 군사원호보상법(1961년 11월 1일), 국가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보호 법(1962년 4월 16일), 재해 구호법(1962년 3월 30일), 의료보호법(1977년 12월 30일) 등이 제 정되어 생활보호법과 함께 빈곤층 국민의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의 기능을 맡아왔다.

그 후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정책이 성공을 거두어 사회·경제·문화적으로 급격한 발달과 변화 를 가져왔고, 따라서 구빈정책에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분 위기 속에서 1982년 12월 31일 제정된 현행 생활보호법은 종전의 법이 단순한 최저생계비의 급여라는 순수 공적부조적 성격에서 한 걸음 발전한 것으로 최저생활의 보장뿐만 아니라 ‘자 활의 조성’에까지 목적을 두고 있어 보다 복지적 차원에 가까이 다가서게 되었다.

2. 封建時代의 救貧施策

봉건시대의 우리나라 구빈정책은 어디까지나 慈惠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나 窮民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仁政이라 하여 통치자의 덕목으로 삼았으며 사실 가난을 퇴치하기 위한 여러가지 국가적 시책이 있었다.

조선조 때만 해도 구휼사업을 위한 시설로 구황청(후에 진휼청), 혜민국, 활인서, 제생원, 기노소, 장예원, 빙고, 평시서 등의 국가기관이 있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가 제도로 환곡 및 諸倉제도가 있었다. 환곡은 주로 춘궁기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대여해 주고 추수 때 갚게 하는 일과 한발이나 수해에 대비케 하기 위한 제도였다.²⁴⁾

창의 종류로는 의창, 사창, 상평창, 교제창, 제민창 등이 있었는데 각기 그 기능이 달랐다. 의창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의 재난에 대비케 하는 제도로 조선조때에 와서 환곡제도에 흡수되었다. 사창은 일종의 민영 의창제도였다. 사창은 지방향촌의 공공단체가 자치적으로 설치한 곡창이며 그 목적은 비상시에 있어서 상호구조에 있었다. 원래가 사창은 지방백성들의 자치적 조직에 의한 것이나, 때로는 국가가 설치한 의창이나 상평창과 전혀 같은 기능을 발휘하고 순수한 자치단체는 아니었다.²⁵⁾ 이러한 사창법이 대구에 처음 시행된 것은 세종 30년(1448) 정월 李甫欽에 의해서였다.²⁶⁾

상평창은 일종의 물가조절기관으로서 穀과 布의 가격을 조절함으로써 국민의 안정된 경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였다.²⁷⁾ 교제창과 제민창은 각 지방 환곡의 상호교류를 통해 지역 간의 보충·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이었다.²⁸⁾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가난은 나라도 구하기 힘든 것’으로 남아 있었고, 가난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게으름이나 사치 또는 낭비의 결과로 생각했지 개인의 탓만이 아닌 사회적 국가적 책임이라는 의식은 없었다.

3. 近代의 救貧政策

우리나라에 근대적 구빈정책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시행된 것은 일제 때인 1944년 3월 1일 조선구호령이 공포, 실시된 데서부터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서방세계에서는 빈곤이 개인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변동에 따라 발생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빈곤은 이제 하나의 사회적·국가적 책임이라는 사상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사상이 일본에도 영향을 미쳐 일본에서는 1929년에 벌써 구호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그러나 당

24) 구자현, 《한국사회복지사》, 한국사회복지연구소, 1970, pp.1~13.

25) 김용진, 〈大邱府史(1)〉, 《향토문화》, 향토문화연구회, 1992, pp.35~36.

26) 위의 책, p.38.

27) 구자현, 위의 책, p.119.

28) 위의 책, p.120.

시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국가책임하의 구호대책이 이루어진 것은 일본 본토 보다는 훨씬 늦은 해방 1년전인 1944년의 일이었다.

이 법이 공포되고 1년 후에 해방이 되어 미군정시대와 정부 수립 그리고 6·25를 거치는 동안 별다른 입법조치가 없이 종전 조선구호령이 형식적으로 그대로 시행되었으나 급증하는 요구호대상자를 빈약한 국가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대부분 외국인조와 민간시설에 의존한 상태였다. 그러다가 5·16 군사쿠데타 후 비로소 우리 정부에 의하여 여러가지 공적부조법이 제정되었으니 그것은 생활보호법(1961년 12월 31일 제정)을 비롯한 재해구호법, 군사원호보상법 등이 나왔고 이로부터 근로구호, 시설구호, 자활지도사업, 외원조정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²⁹⁾

생활보호사업은 우리나라 공적부조제도의 근간으로서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가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활보호사업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정부의 재정 형편으로 전면 실시되지 못하다가, 1970년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정부재정능력의 향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시책의 확대,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실시와 중학생 자녀에 대한 수업료 지원, 그리고 기술이 없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사업 등이 실시되었다. 1980년대의 복지사회 건설을 국정지표로 내세운 제5공화국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생활지원 방안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최저생계보장, 직업훈련 대상자의 가족생계비지원, 대도시 저소득층의 지방 이주 실시, 생업자금 융자사업의 실시 등 영세민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와 함께 자활보호, 교육보호를 실시하는 등 각종 보호사업을 확충하고 지원내용을 확대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생활보호제도의 확립을 보게 되었다.

II. 解放直後の 緊急救護事業

해방 후 대구시의 구호를 요하는 대상자수의 변천을 살펴보면 <表 6-10>과 같다.

29) 구자현, 앞의 책, p.207.

〈表 6-10〉

요구호대상자 통계

(단위:명)

구 분 연 도	총 인 구	구 호 대 상 자 총 수	총 인 구 대 비	비 고
1947. 5월말	약 30만인	78,218인	26.1%	
1952. 9월말	406,966	65,746	16.2%	총인구는 12월말 현재
1957. 12월말	609,316	78,938	13.0%	총인구는 12월말 현재
1963	761,956	66,835	8.7%	12월 1일 현재
1968	961,657	75,137	7.6%	10월 1일 현재

주: 1) 1947년도의 공식인구통계는 없으므로 동연도의 인구 약 30만은 1946년 8월 25일에 미군정부에서 실시한 대구부의 인구 약 27만과 1949년도의 대구시 인구 313,705명을 근거로 추산하였음.

2) 구호대상자 총수는 구호대상자를 전원 포함하고 있지 않음.

자료: 1) 1947년도와 1952년도분은 영남일보사, 《경북연감》, 1948;1953.

2) 1957년도분은 대구일보사, 《경북종합연감》, 1958.

3) 1963년도와 1968년도분은 대구시, 《대구통계연보》, 1969.

1947년 5월말 현재 대구시에는 구호대상자가 7만 8천명이나 되어 총인구의 26.1%를 차지하였다. 여기에 6·25동란으로 전쟁 피난민이 밀어닥쳤는데, 그 수는 1952년 9월말 현재로 12만 4천명이었고 그 중 1만 4천 8백여 명만이 40개소의 수용소에 수용되었었다. 그러다가 6·25동란도 끝나고 경제적으로 안정기에 들어간 1957년에는 그 수가 13%에 해당하는 7만 8천명으로 되었는데 이들 요구호대상자의 종류별 수는 전재민 684명, 원주 빈민 3,877명, 군경 원호대상자 74,377명이었다.

해방 직후에는 행정기관이 구호태세를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애국적인 각종 시민단체를 조직하여 많은 해외 귀국동포를 敵産건물 등에 수용하여 의식, 施療 등을 제공하고 수송을 알선하였다. 그러다가 1945년 12월말에 이재동포의 구호사업을 관영으로 행하게 되어 道와 府의 후생과에서 구호물품을 수집하여 적산건물 등에 수용되어 있는 이재민에게 배급해 주었고, 1947년 8월에 이재민 425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월동주택을 건설하여 3천여 명을 수용하였으며, 1957년에는 200호의 재건주택을 건립하여 난민들을 수용하였다. 5·16이후 민정이양의 해인 1963년에는 구호대상자의 수가 6만 6천명으로 총 인구의 8.7%였고, 1968년에는 그 수가 7만 5천명으로 총 인구의 7.6%였다. 1963년 이후부터는 요구호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 시설구호대상자, 일반 영세민의 3종류로 구분하여 구호행정을 더욱 합리화하였다. 〈表 6-11〉 및 〈表 6-12〉를 통하여 보면, 1968년말 현재 요구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7,356명(0.8%), 일반 영세민이 60,336명(6.0%), 시설구호대상 수가 7,445명(0.8%), 합계 75,137명인데 이

중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1963년이래 이들에게는 1일 1인당 250g(연중 92kg)의 양곡을 지급하였고, 일반 영세민에게는 이들의 대부분이 근로능력이 있는 잠재 실업자이므로 이들 중 질병, 재난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응급구호를 요하는 자에 대해서만 20일 한도내에서 1일 1인당 250g씩의 양곡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건설사업, 조림, 사방, 치수 등의 각종 자조근로사업장에 취역케 하여 이들에게 1일 1인당 3.6kg씩의 양곡을 지급해 왔다. 마지막으로 총 인구의 0.8%에 해당하는 7,445명의 시설구호대상자에게는 1일 1인당 420g의 양곡과 생계비를 지급하였다. 1963~1968년 간의 요구호대상자의 추이를 보면, 생활 보호대상자와 시설구호대상자는 그 절대수에 있어서 감소되어왔고 일반 영세민은 총인구에 대한 비율은 약간 감소되었으나 절대수는 늘어났다.

〈表 6-11〉 요구 호 대 상 자

구 분 연 도	총인구수	구호대상 자 총 수	생활보호 대 상 자	일반영세민 구호대상자	시설구호 대 상 자	비 고 (구호양곡)
1963	761,956명	66,835명 (8.7%)	8,485명 (1.1%)	50,116명 (6.6%)	8,234명 (1.1%)	13,273,610kg
1968	961,657명	75,137명 (7.6%)	7,356명 (0.8%)	60,336명 (6.0%)	7,445명 (0.8%)	1,915,123kg

주: 1) ()내의 비율은 요구호대상자의 총인구 대비임.
2) 구호양곡 난의 ()내는 시설구호대상자에 대한 구호양곡임.

자료: 《대구통계연보》, 1969; 《대구시 종합계획》, 1969.

〈表 6-12〉 구호양곡 지급실적

구 분 연 도	총인구수	구호대상 자 총 수	생활보호 대 상 자	일반영세민 구호대상자	시설구호 대 상 자	비 고
1963	761,956명	66,835명	843,300kg (98.3kg)	1,503,500kg (30kg)	10,926,810kg	
1968	961,657명	75,137명	673,074kg (92kg)	118,398kg (1.8kg)	1,123,651kg	

주: 1) ()내의 수치는 '1인당 지급기준량'임.

자료: 《대구통계연보》, 1969; 《대구시종합계획》, 1969.

III. 生活保護制度에 의한 低所得市民 對策

1. 生活保護對象者の 選定

1) 基本內容

신청보호의 원칙은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최저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의 수준과 질을 향상시켜 명실상부한 공적부조제도가 되도록 시책을 펴고 있다. 따라서 대상자의 정확한 파악없이 과거에 보호받던 사람을 계속 보호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자립을 유도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1부터는 종전의 職權保護의 원칙에서 탈피, 대상자의 선정방법을 신청을 받아 보호하는 申請保護의 원칙으로 바꾸어 시행하고 있다.

2) 選定基準과 節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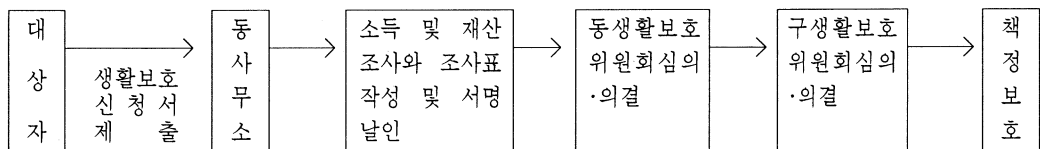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은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거 매년 9월에 저소득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하여 각종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 및 절차는 다음 <表 6-13>, <圖 6-1>과 같다.

<表 6-13>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1993)

구 분	소 득 (인/월)	재 산 (가구)
○ 생활보호대상자		
－ 거택보호	130,000원 이하	1,300만원 이하
－ 자활보호	140,000원 이하	"
○ 의료부조대상자	150,000원 이하	"

참고: 단, 재산평가시 전·월세보증금의 경우, 거택 및 자활보호는 800만원 미만, 의료부조는 1,000만원 미만까지 인정
자료: 사회과 복지계.



<圖 6-1>

대상자 선정 절차

대구직할시 생활보호대상자의 연도별 변동추이는 다음 <表 6-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2년에 154,897명이던 것이 1993년에는 60,462명으로 반이상 감소했다. 전체적인 생활보호대상자의 감소는 자활보호대상자가 거의 1/3정도 감소한데 따른 것이고, 거택보호는 10년간 거의 변동이 없으며, 시설보호는 4,256명에서 5,913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그 요인은 경제활성화로 자활보호대상자들의 취업 등 자립능력 향상으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것이고, 시설보호는 국가의 재정지원 증가로 시설의 확충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이 증설됨으로써 시설수용보호가 늘어난 것이다.

<表 6-14> 생활보호대상자 추이 (단위: 명)

연 도	계	시 설 보 호	거 택 보 호	자 활 보 호
1982	154,897	4,256	5,922	144,719
1983	123,465	5,250	5,031	113,184
1984	95,038	5,396	4,392	85,250
1985	90,413	5,359	4,837	80,217
1986	90,698	5,798	5,329	79,571
1987	94,772	5,858	5,521	83,393
1988	89,935	5,926	5,713	78,296
1989	83,389	5,938	5,496	71,955
1990	69,078	5,983	5,598	57,497
1991	69,362	5,939	5,939	57,648
1992	59,990	5,758	5,563	48,669
1993	60,462	5,913	6,102	48,447

자료: 사회과 복지계.

2. 生活保護의 種類

보호의 종류로는 1) 생계보호, 2) 의료보호, 3) 자활보호, 4) 교육보호, 5) 해산보호, 6) 장제보호가 있으며 보호실적은 다음과 같다.

1) 生計保護

생활보호대상자 중 노령, 불구, 폐질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

第6章 社會福祉

상자에 대하여 기본생계 유지를 위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생계비의 내용은 주식인 양곡은 현물로 지급하고,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은 현금급부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모두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다음 <表 6-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마다 지원수준이 조금씩 향상되어 왔다.

<表 6-15> 연도별 생계비 지원실적 (1인당 월평균) (단위: 원)

구 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90	1991	1992	1993
거 택	12,504	12,990	13,615	16,395	22,423	27,300	29,900	39,000	43,768	49,000	56,000
시 설	21,958	22,909	24,097	31,380	36,744	40,300	44,000	48,000	49,700	55,000	57,000

자료: 사회과 복지계.

거택보호 생계비의 구체적 내용은 <表 6-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곡은 1990년까지는 1인 1일 단위로 백미 341g과 정맥 85g씩 지급하던 것을 1991년부터는 1인1일 단위로 백미 10kg과 정맥 2.5kg씩을 지급하고 있다. 시설보호의 경우 양곡은 계속해서 1인1일 단위로 백미 456g과 정맥 114g씩 지급하고 있다. 부식비는 시설보호의 경우 처음부터 1인기준으로 지급해 왔으나, 거택보호에서는 1992년까지 가구주와 가구원을 차등해서 지급해 왔고 1993년부터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가구원 전원에 대해서 1인1일 700원씩 지급하고 있다.

<表 6-16> 연도별 거택보호 지원내용

연 도	환 가 액 (원)	거 택 보 호					
		백 미 g (인/일)	정 맥 g (인/일)	부 식 비 (원)		연 료 비 (원)	장 의 비 (원)
				가 구 주	가 구 원		
1988	29,900	341	85	320	40	392	110,000
1989	35,643	341	85	400	45	513	130,000
1990	39,000	341	85	500	110	513	130,000
1991	43,000	10kg(月)	2.5kg(月)	550	200	513	150,000
1992	49,000	"	"	600	400	513	200,000
1993	56,000	"	"	700	700	563	250,000

자료: 사회과 복지계.

〈表 6-17〉 연도별 시설보호 지원내용

연 도	환 가 액 (원)	시 설 보 호					
		백 미 g (인/일)	정 맥 g (인/일)	부 식 비 (원)	연 료 비 (원)	피 복 비 (원)	장 의 비 (원)
1988	44,000	456	114	430	45	39,000	110,000
1989	46,000	456	114	450	50	42,500	130,000
1990	48,000	456	114	500	50	43,600	130,000
1991	51,500	456	114	550	50	46,040	150,000
1992	55,000	456	114	600	50	47,420	200,000
1993	57,000	456	114	700	50	49,790	250,000

자료 : 사회과 복지계.

2) 醫療保護

(1) 醫療保護制度의 意義

의료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적부조 제도의 한 방법으로 의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7. 1. 4 의료보호제도를 실시한 이래 1977. 7. 1 직장의료보험제도를 실시했고, 1988. 1. 1 농어촌주민에게까지 의료보험제도를 확대했고 1989. 7. 1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게까지 의료보험이 확대 실시되어 의료보장을 받게 되므로 명실공히 전국민 의료보장이 실현된 것이다.

(2) 醫療保護制度의 沿革

① 실시배경

우리나라의 의료보호사업은 1977. 1. 4 의료보호사업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부터 의료보장사업의 기반이 조성되었다. 의료보호사업이 실시되기 이전에는 제도적인 기반을 갖춘 사업이 없었다. 다만, 6·25이후 계속된 구호사업의 하나로 각 읍·면·동 단위로 영세민에 대하여 요구호대상자 증명서를 소지케 하여 인근 시·도립병원이나 지역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민간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게 하는 잠정적인 조치만 있었을 뿐이었다. 또한 이에 대한 진료비는 정부지원에 의한 의료구호비로 일부만이 보상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잠정적인 영세민 의료대책을 대폭 개선하고 국가책임 하에 영세민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충분하지 못한 정부재정이지만 최소한의 기금을 마련 공적부조에 의한 영세민 의료대책을 마련코자 의료보호사업이 발족, 시행되었다.

② 의료보호제도의 변천사

1977. 1. 4: 의료보호사업에 관한 규칙 제정 - 의료보호사업 기반조성
1977. 12. 31: 의료보호법 제정
1978. 5. 23: 의료보호법시행령 제정
1978. 9. 1: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정 - 실질적 의료보호사업 실시
1978. 12. 30: 의료보호대상자(2종)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 70 → 50% 인하조정
1980. 11. 5: 의료보호대상자에 3종대상자 신설 - 의료시혜 확대
1982. 6. 20: 3종대상자를 2종대상자에 흡수 포함
1985. 12. 31: 의료부조제 신설 -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확대, 진료비 본인부담률 60% 조정
1987. 1. 1: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조정 - 2 종: 50 → 40%
- 의료부조: 60 → 50%
1991. 1. 1: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조정 - 2 종: 40 → 30%
- 의료부조: 50 → 40%
1992. 1. 1: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조정 - 2 종: 30 → 20%
- 의료부조: 40 → 30%
1993. 1. 1: 한방의료보호 실시 - 의료보호범위 확대
1994. 1. 1: 의료부조제도 폐지 - 의료보호대상자 1,2종으로 구분보호
1994. 1. 1: 의료보호 2종대상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조정 - 전액무료 → 방문당 1,000원

(3) 醫療保護 實績

대구직할시의 의료보호실적을 보면 의료보호대상자는 다음 <表 6-18>과 같이 81년도에 비해 현재 반으로 줄어들었으나 의료보호 비용은 대상자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음 <表 6-22>와 같이 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의료보호의 내용과 질적인 향상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表 6-18〉 연도별 외래·입원 진료실적

연 도	대 상 자	외 래		입 원	
		실 인 원	연 인 원	실 인 원	연 인 원
1981	162,612	351,814	949,485	31,925	174,054
1982	167,548	362,494	1,081,342	34,955	199,945
1983	160,526	347,302	1,227,641	37,323	220,308
1984	139,877	301,140	1,097,005	32,969	208,780
1985	152,969	363,839	1,326,036	35,826	248,181
1986	193,683	451,314	1,557,049	51,152	386,143
1987	174,364	461,397	1,714,457	62,215	475,146
1988	159,575	440,698	1,777,062	58,445	171,795
1989	159,411	476,008	1,718,347	70,908	662,262
1990	126,450	377,585	1,363,048	56,246	525,327
1991	107,392	251,903	2,171,844	4,394	98,367
1992	95,359	235,374	2,189,435	4,582	110,024
1993	85,001				

자료: 사회과 의료보장계.

〈表 6-19〉 1종대상자의 연도별 진료실적

연 도	대 상 자	외 래		입 원	
		실 인 원	연 인 원	실 인 원	연 인 원
1981	21,285	53,285	205,122	10,394	72,785
1982	26,317	66,550	253,616	12,852	89,993
1983	27,342	69,143	263,494	13,353	93,499
1984	28,847	80,584	310,206	15,302	102,212
1985	29,000	81,008	311,851	15,382	102,754
1986	29,112	130,386	472,303	24,654	214,037
1987	29,251	144,312	569,257	29,662	250,898
1988	12,357	39,135	351,498	28,225	104,962
1989	29,323	155,520	617,607	36,828	387,226
1990	29,411	123,363	619,460	30,938	318,388
1991	29,954	110,440	1,112,151	2,305	54,924
1992	29,120	114,050	1,194,117	2,581	66,848
1993	27,769				

자료: 사회과 의료보장계.

〈表 6-20〉

2종대상자의 연도별 진료실적

연 도	대 상 자	외 래		입 원	
		실 인 원	연 인 원	실 인 원	연 인 원
1981	59,136	123,507	504,143	10,642	56,304
1982	77,763	162,410	662,942	13,995	74,040
1983	133,184	278,159	964,147	23,870	126,809
1984	111,030	220,556	786,799	17,667	106,568
1985	123,969	282,831	1,014,185	20,444	145,427
1986	79,571	277,643	972,179	18,283	128,935
1987	83,393	275,008	1,025,442	23,691	162,819
1988	78,296	256,163	1,029,720	21,651	174,028
1989	71,492	263,770	983,995	23,531	189,794
1990	60,652	223,775	834,796	17,963	147,016
1991	57,648	120,325	919,506	1,707	36,530
1992	48,669	110,452	846,985	1,569	35,616
1993	48,447				

자료: 사회과 의료보장계.

〈表 6-21〉

의료부조 대상자의 연도별 진료실적

연 도	대 상 자	외 래		입 원	
		실 인 원	연 인 원	실 인 원	연 인 원
1981	82,191	174,482	240,220	10,889	45,165
1982	63,468	133,534	164,784	8,108	35,912
1983	—	—	—	—	—
1984	—	—	—	—	—
1985	—	—	—	—	—
1986	85,000	43,285	112,567	8,215	43,171
1987	61,720	42,077	119,758	8,862	61,429
1988	52,907	41,346	136,512	8,569	75,804
1989	58,596	56,718	166,745	10,549	85,242
1990	36,387	30,447	91,208	7,345	59,923
1991	19,790	21,138	140,187	382	6,913
1992	17,570	20,872	148,333	432	7,560
1993	8,785				

자료: 사회과 의료보장계.

의료보호비의 지급실적도 <表 6-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년 전에 비해 2~3배 가량 증가했는데, 이것은 대상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호의 내용과 질적인 향상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表 6-22> 의료보호기금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 도	계	진 료 비	행 정 비
1981	747,197	746,063	1,134
1982	2,263,080	2,258,752	4,328
1983	4,048,350	4,044,909	3,441
1984	2,231,018	2,228,411	2,607
1985	3,678,148	3,674,611	3,537
1986	4,187,748	4,176,787	10,961
1987	5,441,537	5,419,280	22,257
1988	8,023,936	7,971,991	51,945
1989	8,531,165	8,466,463	64,702
1990	7,680,212	7,591,220	88,992
1991	8,231,367	8,131,517	99,850
1992	9,435,575	9,306,324	129,151
1993	10,126,000	9,953,102	172,898

자료: 사회과 의료보장계.

3) 自活保護

생활보호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호대상자들로 하여금 자활을 조성하는데 있다. 개인의 생활 유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개인에게 있다. 또 사실상 인간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으로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가능성을 발견케 하고 이를 개발, 육성 시킴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과 행복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활이야말로 사회복지사업의 이상이고 최종 목표라 할 만큼 중요한 영역이므로 대구시에서는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생업자금의 대여, 직업훈련, 취업사업 등의 자활보호사업을 펼쳐왔다.

(1) 生活安定資金 및 生業資金融資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시민 중 새마을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왕성한 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있다.

훈련은 다음 <表 6-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시기의 경제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1985년, 1986년, 1987년도에는 수료생 중 취업률이 90%를 넘었으나 1989년과 1990년에 와서는 취업률이 39%, 38%로 급격히 떨어졌다. 1992년부터는 직업훈련에 더욱 관심을 가져 훈련목표 인원을 늘리고 1992년에 1,470명, 1993년에는 3,899명으로 입소를 많이 시켰으나 1992년에는 24%나 되는 348명이 퇴소하고 41%인 600명이 수료하였고 수료인원의 35.2%인 211명이 취업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경제불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3년에는 입소인원 중 568명이 퇴소하여 15%의 퇴소율을 보였고, 41%인 1,607명이 수료하였으나 그 중 30%인 482명만이 취업을 하였다.

연 도 별	훈 련 목 표	입 소	퇴 소	수 료	취 업 (%)
1985	50	74		74	72(97)
1986	100	103		103	102(97)
1987	200	476	23	453	421(92)
1988	210	305	7	298	243(82)
1989	620	1,493	123	1,370	536(39)
1990	622	901	123	747	286(38.2)
1991	829	952	219	636	238(37.4)
1992	1,300	1,470	348	600	211(35.2)
1993	2,130	3,899	568	1,607	482(30.0)

자료: 사회과 복지계.

(3) 就勞事業

기술이나 경험부족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고용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 취로사업을 실시하여 취로노임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유향 노동력을 활용하고 환경정비사업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선정하여 실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와 주민숙원사업 달성의 이중 효과를 거두고 있다. 취로사업에 동원된 인원과 투입된 금액은 다음 <表 6-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한 추세가 없이 들쭉날쭉하고 있어 일관된 정책의 목표가 없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89년부터는 취로인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노임인상을 따르지 못하는 정부 취로사업비의 영향으로 이해된다.

〈表 6-25〉

연도별 취로사업실적

연 도 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취로연인원(천명)	551	90	69	206	209	238	289	91	68	70	61	65
사업비(백만원)	2,590	572	592	1,444	1,365	2,014	2,075	897	709	759	824	900

자료: 사회과 복지계.

(4) 傳賞資金 融資

주택의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주택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0년에 정부재정자금의 지원을 받아 주택은행을 통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세대당 300만원 한도로 연리 7.5%(본인부담 5%, 市비부담 2.5%),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1,954세대에 5,836백만원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였다.

4) 教育保護

취학연령기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부모로부터 가난이 세습되지 않고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여 주고 있다. 1986년까지는 중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여 왔으나 1987년부터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에 대하여 실업계 고교생까지 확대하여 학비 전액을 지원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부조 대상자 자녀의 중학생 및 실업고교생 1·2학년에게도 학비 전액을 지원하였고, 1991년부터는 거택, 자활보호자 뿐만 아니라 의료부조 대상자 자녀에 대하여도 실업계 고교생 전학년에게 학비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직할시의 연도별 교육보호 실적을 다음 〈表 6-26〉에 보면, 1982년에 비해 10년후인 1992년 기준으로 대상 인원은 거의 배로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4배 이상 증가했다.

〈表 6-26〉

연도별 교육보호 실적

구 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2
사업량(명)	5,922	5,031	4,392	4,837	5,133	13,285	12,593	14,651	15,998	11,638
사업비(백만원)	1,000	1,064	929	1,024	1,087	2,602	2,668	4,116	4,965	4,228

자료: 사회과 복지계.

5) 不遇이웃돕기

전래의 미풍양속인 상부상조의 정신에 의하여 市가 주관이 되어 언론사의 협조 하에 대대적으로 전개한 불우이웃돕기 운동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사회복지 시설의 부식비, 김장비 등 생계비지원에 큰 몫을 해 왔다. 연도별 이웃돕기성금 모금실적은 다음 <表 6-27>과 같다.

<表 6-27> 이웃돕기성금 모금실적 (단위: 백만원)

연 도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금 액	223	276	136	578	678	57	756	1,310	1,321	1,882	1,897

자료: 사회과 사회계.

6) 社會福祉專門要員 擴大 配置

생활보호를 포함한 공적부조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대상자 선정과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행정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위해서는 개가정의 동태와 욕구의 변천 등을 계속적으로 추적·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市에서는 저소득층 지원행정체계 보강의 일환으로 1987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배치해 오고 있는데, 그 현황은 다음 <表 6-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7년 7월에 처음으로 12명, 1990년 7월에는 36명을 추가 배치하여 48명이 되었고, 1991년 7월에는 35명을 추가하여 83명을 배치하였고, 1992년에 또다시 60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증가시켜 지금까지 모두 143명이다.

이들의 주요담당 업무는 ①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및 책정, ② 생계보호금품지급, ③ 직업훈련 및 부업알선, ④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 및 자활시책추진, ⑤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업무 등이다.

<表 6-28> 연도별 사회복지 전문요원 증가실태 (단위: 명)

연 도	1987	1990	1991	1992	1993
인 원	12	48	83	143	143

자료: 사회과 복지계.

第5節 社會福祉施設

I. 兒童福祉事業

1. 概 說

우리나라 아동복지를 변천사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면, 중세기 때는 구빈제도의 일환으로 상부상조 조직인 계와 향약이란 제도가 있었으며, 조선조 후기의 대표적 아동복지 관련 법령으로는 자휼전칙이란 법규가 제정, 공포됨으로서 주로 유랑아, 유기아 등에 대해 체계적 구제시책을 전개하기도 했다.

공적 아동복지사업은 그 후 일제식민지 시대였던 1944년도에 조선구호령을 제정하여 13세 이하의 아동 및 임산부와 불구폐질아동 등을 구제 조치하거나 구호시설에 수용보호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공적부조 시책을 펴왔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식민지 지배체제를 강화 내지는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공행정 체계를 통한 아동보호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 오면서 프랑스 선교사로 입국한 매스뜨르신부가 聖嬰해회(Saint-Enfant)사업을 펼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아동복지사업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회복지사업의 시작이었다. 聖嬰해회는 당시 프랑스에서 시작된 아동복지사업기관으로 오늘날까지도 세계적인 아동복지기관으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이때만 해도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심하던 때라 聖嬰해회는 처음부터 요보호아동들을 신자들 가정에 위탁양육을 했다.

1885년 3월 15일에는 서울 곤당골(美洞:현 서울 을지로 1가 미대사관 서편)에 기와집 세채를 사서 남아, 여아 그리고 직원용 숙사로 한 채씩 쓰고 정식으로 “천주교고아원”이라는 이름을 내걸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시설복지사업이었다. 천주교고아원은 그 후 한 국에 진출한 샬트르 성바오로수녀회에 맡겨졌다.³⁰⁾

샬트르 성바오로회가 대구에 진출하면서 1915년 10월 15일에 대구 성바오로 수녀원에 부설 아동복지시설을 개설했는데 이것이 오늘의 百百合保育院이다. 백백합보육원은 대구 최초의 아동복지시설이자 근대적 사회복지시설의 시작이었다.³¹⁾

30) 한국샬트르성바오로회, 《바오로딸안의 哀歡 85년》, 카톨릭출판사, 1973, p.567.

31) 박석돈, 〈韓國의 天主教社會福祉事業에 關한 研究〉,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p.46.

8·15 해방 후 미군정기와 정부 수립 때까지는 격동기적 과도단계로써 아동복지의 문제는 극히 소극적인 대응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의 연속 선상에서 6·25동란을 맞이하게 되었다.

6·25동란으로 많은 전쟁고아와 미망인 자녀가 발생하였으며, 이 아동들이 보호 대상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 당시 이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시설보호와 倨宅보호로 크게 양분되었으며, 시설보호는 주로 민간운영 아동복지시설에 맡겨졌다. 이로부터 민간운영 아동복지시설이 아동복지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사실상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基幹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복지문제는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6·25동란으로 발생한 전쟁고아와 미망인 자녀가 핵심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후 사회의 급격한 변화 즉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가치관의 혼탁 등과 같은 요인으로 가출아, 棄·迷兒, 유랑아의 발생은 물론, 非行청소년, 학업부진아, 정서장애아, 심신장애자 등 다양한 아동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아동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61년도에는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후 시대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1981년도에는 아동복지법이 보완, 개정되었다.

이 법에 있어서의 보호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遺失, 遺棄 또는 이탈된 경우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보호아동은 棄兒, 가출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 중에서 緣故者 引繼, 입양 및 위탁보호가 되지 않을 경우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게 된다.

아동복지시설의 종별로는 영아, 육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조산시설, 아동전용시설, 교호시설, 아동입양위탁시설, 정서장애아시설, 자립지원시설, 탁아시설 등이 있다. 아동입양사업은 홀트아동복지회, 한국어린이재단, 동방아동복지회, 한국선명회, 대한사회복지회 등에서 주로 해외 입양을 해 오다가 고아 수출 제1위국이라는 비판이 국내외 매스컴에 보도되자 정부는 1996년부터 해외입양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 입양기관들의 대구지부에서도 국내입양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업방향을 바꾸고자 진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산업화 사회로 인하여 여성의 근로참여가 확대됨으로써 이들의 근로활동을 도울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0년도부터 탁아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아동복지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6·25동란 이후부터 지금까지 민간 아

동복지 시설의 운영재원 및 실태를 살펴보면 1960년대까지는 주로 외국원조에 의존되어 왔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외국원조는 점차 감축되어 1980년을 기해서는 거의 중단되었으며 반면 정부지원은 그동안 많이 증액되었으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불우아동 결연사업은 1976년부터 官주도로 추진되어 오다가 사회복지법인 한국어린이재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에서는 결연 후원금으로 아동들의 직접비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대적 과제라 할 수 있는 아동문제는 고아, 가출아, 유랑아, 기아 등의 문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와 가치관의 다양화 등에서 야기되는 비행, 범죄, 정서장애, 심신장애 등의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아야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에 심각성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도 그동안 주로 요보호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던 아동문제를 모든 아동의 보호와 건전 육성 및 청소년의 선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아동복지 정책 구현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대한 문제와 과제는 아직까지 산積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아동복지정책 실현의 일환으로 어린이 회관, 어린이 공원의 조성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를 증설 관리하는 등의 아동문제 대책에 노력하고 있다.

2. 兒童福祉 施設

대구직할시의 아동복지시설은 다음 <表 6-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3년말 현재로 육아시설이 18개로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직업보도시설, 아동교호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이 각각 1개씩 모두 21개 시설이 있다.

<表 6-29> 대구직할시 아동복지시설 현황 (1993년 12월 현재)

설 립 연 도	명 칭	설립자(법인대표)	사 업 종 류
1915. 1. 1	백 합 보 육 원	최 송 실	일 시 보 호
1954. 5. 31	대 구 혜 육 원	박 세 창	육 아 시 설
1956. 5. 26	신 애 보 육 원	우 인 모	육 아 시 설
1956. 5. 22	대 성 원	남 영 호	영 아 시 설
1957. 6. 18	신 생 원	권 미 애	육 아 시 설
1958. 9. 16	애 생 보 육 원	권 특 훈	육 아 시 설
1958. 7. 27	대 구 혜 천 원	장 희 동	육 아 시 설
1958. 11. 20	육 영 학 사	이 성 현	육 아 시 설

설 립 연 도	명 칭	설립자(법인대표)	사 업 종 류
1959. 8. 30	새 별 원	최 동 윤	육 아 시 설
1959. 7. 27	에 텐 원	신 진 옥	육 아 시 설
1960. 11. 17	희 망 의 집	김 화 식	육 아 시 설
1961. 10. 17	베 다 니 농 원	서 태 진	육 아 시 설
1962. 5. 26	호 동 원	이 정 무	육 아 시 설
1962. 3. 29	대 구 신 망 애 원	이 덕 진	육 아 시 설
1962. 8. 30	천 광 보 육 원	김 병 진	육 아 시 설
1963. 9. 25	영 생 애 육 원	김 수 진	육 아 시 설
1963. 5. 31	한국SOS어린이 마을	이 문 희	육 아 시 설
1964. 3. 16	대 성 보 육 원	박 주 구	육 아 시 설
1965. 8. 20	애 활 원	박 현 철	육 아 시 설
1965. 8. 20	애 활 원	박 현 철	직 업 보 도
1990. 8. 10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최 송 실	아 동 교 호

대구시의 시설보호아동수는 다음 <表 6-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1년에 2,191명에서 해마다 점차 줄어 1990년 1,717명, 1993년에는 21개 시설에 1,331명을 수용하고 있어 10여년 사이 6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表 6-30> 대구직할시 시설보호아동의 연도별 변동추세 (단위: 개소, 명)

연도별	시설별	계	영 아	육 아	직 전	교 호	일 시
1981		(23) 2,191	(2) 260	(19) 1,856	(2) 75		
1982		(23) 2,147	(2) 211	(19) 1,844	(2) 92		
1983		(22) 2,070	(2) 229	(18) 1,763	(2) 78		
1984		(22) 2,075	(2) 223	(18) 1,775	(2) 77		
1985		(21) 1,966	(2) 219	(18) 1,696	(1) 51		
1986		(21) 2,020	(2) 218	(18) 1,748	(1) 54		
1987		(21) 1,889	(2) 218	(18) 1,620	(1) 51		

시설별 연도별	계	영 아	육 아	직 전	교 호	일 시
1988	(21) 1,882	(2) 195	(18) 1,661	(1) 26		
1989	(21) 1,753	(2) 175	(18) 1,558	(1) 20		
1990	(22) 1,717	(2) 166	(18) 1,509	(1) 26	(1) 16	
1991	(22) 1,723	(2) 173	(18) 1,502	(1) 26	(1) 22	
1992	(21) 1,422	(1) 74	(17) 1,312	(1) 17	(1) 19	(1) —
1993 (3/4분기)	(21) 1,331	(1) 73	(17) 1,216	(1) 21	(1) 21	(1) —

참고: ()은 시설수.

자료: 가정복지과 아동복지계.

시설보호 아동들의 원인별 변천추이를 보면, 해방과 6·25 때 월남 및 전쟁고아가 대부분이던 것이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나면서 고아들이 모두 자라 성인이 되면서 자립하여 시설을 떠나게 되어 아동복지시설이 대폭 줄어들었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산업화·도시화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미혼모에 의한 고아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가족계획사업과 피임 및 낙태의 확산으로 또다시 고아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 이와 같이 과거 고아는 부모사망, 미혼모 출산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부부불화에 따른 자녀유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화·현대화에 따른 가정파괴현상이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대구시에서는 연간 미아 120~130명, 고아 30~50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180~190명의 기아가 발생, 기아비율이 84%(미아 제외)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기아가 시설보호아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부관계의 불안정, 자녀에 대한 책임감 결여 등 사회전반의 윤리성이 퇴조되고 있는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동복지 시설의 재원형태를 보면, 정부보조, 자체수입, 외부원조·결연 후원금과 지역사회 기부금 기타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보호아동의 보호비용은 아동복지법, 생활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가의 보호비용 지원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보호비는 주식을 현물로 지급하고 현금급여로는 부식비와 피복비를 개인기준으로 지급하는데, 1993년에는 대폭 증액시켜 현실화하였으나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급식비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을 훨씬 못 미치고 있어 <表 6-31>에서와 같이 보육사의 경우 근로자 최저임금수준을 약간 상회할 뿐만 아니라 다년간의 경력을 요하는 총무의 경우 420,000원 수준에 머물러 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저하와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表 6-31> 연도별 아동복지시설 보조기준

연도별	구 분	부 식 비 (인/일)	인 건 비 (인/월)	피 복 비 (인/월)	종사자급식 (인/일)	장 의 비 (구 당)
1982		220원	총 무 108,700 보육사 71,700	19,600원	307원 (167일본)	37,480원
1983		306원	총 무 167,700 보육사 106,000	37,100원	1,008원 (182일본)	37,480원
1984		315.80원	총 무 178,000 보육사 115,000	39,600원	1,080원 (182일본)	37,480원
1985		350원	총 무 196,000 보육사 133,500	39,600원	1,300원 (182일본)	100,000원
1986		370원	총 무 213,000 보육사 148,000	39,600원	1,300원 (182일본)	100,000원
1987		400원	총 무 223,000 보육사 157,000	39,600원	1,300원 (240일본)	110,000원
1988		430원	총 무 230,000 보육사 168,000	39,600원	1,500원 (240일본)	130,000원
1989		450원	총 무 266,000 보육사 190,000	42,500원	1,500원 (240일본)	130,000원
1990		500원	총 무 363,000 보육사 230,000	43,600원	2,000원 (240일본)	130,000원
1991		550원	총 무 381,000 보육사 253,000	46,040원	2,200원 (240일본)	150,000원
1992		600원	총 무 400,000 보육사 278,000	47,420원	2,500원 (240일본)	200,000원
1993		900원	총 무 420,000 보육사 292,000	74,790원	2,500원 (240일본)	250,000원

자료: 가정복지과 아동복지계.

연도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실적을 보면 다음 <表 6-32>에서와 같이 시설수는 1993년 현재 21개소로 10년전의 22개와 별 변동이 없으나 인원은 1,331명으로 거의 63%수준으로 감

소한 반면 금액은 10년 전에 비해 거의 3.5배나 증가하였다.

〈表 6-32〉 연도별 아동복지시설 지원실적 (단위: 개소, 명, 천원)

연 도	시 설 수	인 원	금 액
1982	22	2,119	632,772
1983	22	2,070	1,065,047
1984	22	2,114	1,194,920
1985	21	1,966	1,335,731
1986	21	2,020	1,507,499
1987	21	1,889	1,685,949
1988	21	1,882	1,322,044
1989	21	1,753	1,617,377
1990	21	1,734	2,097,692
1991	22	1,723	2,246,000
1992	21	1,422	2,736,000
1993	21	1,331	3,586,000

자료: 가정복지과 아동복지과.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에 대한 연도별 투자금액을 보면 다음 〈表 6-33〉에서와 같이 매년 꾸준한 투자를 해 옴으로써 대부분의 아동복지시설이 현대식 건물로 신축 또는 개축되었고 장비도 대폭 보강되었다.

〈表 6-33〉 연도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단위: 천원)

연 도	계	원사증개축()는㎡	원사개보수	장 비 보 강
1982	48,100	48,100		
1983	94,500	(320.5) 44,500	25,000	25,000
1984	176,500	(1,013.2) 145,000	6,500	25,000
1985	151,546	(1,078.01) 90,000	36,546	25,000
1986	259,930	(1,634.8) 219,000	40,000	
1987	369,374	(2,265.4) 325,894	23,500	9,980
1988	556,812	(2,265.4) 490,812	48,000	18,000
1989	312,046	(1,236) 257,420	45,626	9,000
1990	483,776	(1,916) 440,724	21,652	21,400
1991	718,888	(2,037) 568,828	44,960	105,100
1992	218,906	(442.09) 175,906	40,000	3,000
1993	262,952	(553) 202,352	40,000	20,000

자료: 가정복지과.

3. 其他 兒童福祉事業

1) 不遇兒童 結緣後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건전육성과 아동비용의 충당을 목적으로 1976년부터 불우아동 결연사업을 정부가 주관하여 전개해 왔다. 이 사업은 사회 각층의 관심있는 人士와 기업체 및 각급 기관이 시설아동과 결연을 맺어 매월 일정액의 후원금으로 지원토록 하는 사업이며, 인간적 관계까지도 연결하여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모하고 있다. 또한 1981년부터는 아동결연사업을 전문사회복지사업 민간기관인 한국어린이재단에서 담당, 추진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얻고 있으며, 소년가장돕기 결연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불우아동 결연사업의 추진실적은 다음 <表 6-34>에서와 같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후원 금액에 있어 1993년도에 겨우 5억여 원에 머물고 참여자에 비해 1인당 후원금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누구나 후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액 후원운동을 벌인 때문이다.

<表 6-34> 불우아동결연후원 추진실적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시 설 아 동		빈 곤 가 정 및 소 년 가 장	
	결 연 아 동	후 원 금	결 연 아 동	후 원 금
1984	255	92,193	—	—
1985	2,358	84,559	—	—
1986	2,465	98,931	—	33,143
1987	2,057	117,437	503(561)	54,869
1988	2,340	133,834	487(604)	98,874
1989	2,379	144,665	560(883)	105,711
1990	2,434	160,030	392(650)	140,057
1991	2,326	240,113	423(749)	150,639
1992	2,213	256,023	347(578)	261,346
1993	2,172	240,035	473(704)	246,623

참고: ()안의 숫자는 소년가장 가정 포함.

자료: 가정복지과 아동복지계.

2) 入養事業

국내입양 시책은 1976년도에 입양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혈통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관의 폐습 등으로 소기의 목적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나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6년부터 해외입양 전면금지조치에 따라 민간종교단체와 기존의 입양 기관들이 국내입양에 대한 계몽운동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表 6-35>에서 보듯이 1981년 242명의 국내 입양실적에 비해 1993년에는 반 밖에 안되는 123명에 그치고 있어 대구지역의 국내입양사업의 어두운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表 6-35> 입 양 실 적 (단위:명)

구분 연도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국 내	242	284	254	226	216	240	176	141	114	128	102	123	105

자료: 가정복지과 아동복지계.
1993년은 3/4분기 현재.

3) 어린이놀이터 設置運營

어린이 놀이공간 및 유희시설의 확대가 요구되는 시대적·문화적 상황에 부응하여 주거전용 지역, 아파트단지, 소공원 등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증설하고 있으며 다음 <表 6-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도부터는 어린이 놀이터 증설에 투자를 대폭 늘여왔다. 그리고 앞으로는 민간자원을 유도하여 놀이시설의 확대증설은 물론 시설 공작물도 다양하게 현대화해 나갈 계획에 있다.

<表 6-36> 어린이놀이터 현황

연도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개 소	38	41	47	49	50	55	60	66	72	120	131	156	161

자료: 가정복지과 아동복지계.

4) 棄·迷兒 保護

절대 빈곤층이 많았던 시대에는 生活苦로 인한 遺棄兒 발생수가 많았으나, 국민 소득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기·미아 발생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기·미아 발생시에는 우선 기·미아 일시보호시설에 보호조치하고 緣故兒童은 귀가시키며 無연고아동은 아동복지시설에 수용, 보호된다. 따라서 기·미아를 未然에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미아 수용실태를 연도별로 보면 다음 <表 6-37>에서와 같이 지난 10여 년동안 미아

는 절반 정도 감소한 반면 기아는 1/3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것은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기아가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表 6-37〉 연도별 기·미아 수용실태 (단위:명)

연도별 구분	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기아	3,383	478	495	350	380	332	258	285	355	225	225	194	176	96
미아	2,579	245	231	283	261	335	320	276	274	179	175	132	136	76

자료: 가정복지과 아동복지계.

기·미아를 연령별로 보면 〈表 6-38〉에서와 같이 1982년까지는 1세 미만이 가장 많았는데 1983년부터는 1세 이상의 기·미아 발생이 더 많아졌다. 그것은 1세 미만의 경우 대부분 미혼 모에 의한 기아로 입양위탁으로 처리되고 1985년부터는 반수 이상이 귀가 처리되었는데 이것은 경제사정의 호전으로 여가시간에 부모동반외출이 잦아 미아 발생이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表 6-38〉 기아·미아·부랑아 발생상황 및 처리상황 (단위:명)

연도별 구분	발 생 상 황							
	아 동 수			1세미만	1~4세	5~11세	12~17세	18~20세
	계	남	여					
1981	873	400	473	356	270	213	34	
1982	770	380	390	329	182	203	56	
1983	806	371	435	236	281	213	76	
1984	672	371	301	130	287	210	45	
1985	667	360	307	126	259	249	33	
1986	606	326	280	88	196	255	67	
1987	661	404	257	51	186	321	103	
1988	683	447	236	58	76	199	177	
1989	435	237	198	46	114	191	84	
1990	425	270	155	52	77	172	124	
1991	326	183	143	46	57	121	102	
1992	312	187	125	36	48	108	120	
1993	172	98	74	26	38	59	49	

연도별	치 리 상 황								
	아 동 수			귀가 및 연고자 인 도	특수시설 전 원	입양위탁	도 망	사 망	기타
	계	남	여						
1981	864	394	470	278	195	144	56	36	155
1982	795	378	417	269	42	333	59	24	68
1983	696	339	357	303	35	286	63	9	—
1984	678	357	321	288	49	240	37	13	51
1985	671	342	329	356	35	235	13	13	19
1986	607	320	287	329	74	132	53	4	15
1987	661	413	248	296	123	94	124	4	20
1988	683	447	236	242	344	—	94	3	—
1989	435	237	198	222	68	17	81	1	46
1990	425	270	155	171	111	21	86	1	35
1991	425	183	143	142	62	—	59	—	63
1992	312	187	125	136	67	—	49	—	60
1993	172	98	74	56	28	—	23	1	64

자료: 가정복지과 아동복지계.

5) 어린이會館 運營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마음껏 뛰놀며 배울 수 있는 어린이 전당을 마련하기 위하여 1977년도부터 백만인 모금걷기 운동을 전개하여 시민 각 계층의 정성어린 성금을 모아 대구어린이회관을 건립하게 되었다.

대구어린이회관은 수성구 황금동 산136-2번지 일대 44,000평의 부지에 연건평 2,715평(지하1, 지상4층)을 총 사업비 84억 3천 6백만원으로 1980년 10월 10일에 회관 건립을 착공하여 1983년 11월 15일에 개관하였다.

대구어린이회관은 개관 10년동안 다음 <表 6-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6,549명의 어린이가 입장하여 꿈과 희망을 키웠다.

<表 6-39> 연도별 입장객 현황 (단위: 천명)

구 분	계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계	6,549	269	1,198	870	798	826	1,076	890	622	539	606	666
유 료	2,294	101	458	290	284	275	331	298	257	240	295	273
무 료	4,255	168	740	580	514	551	745	592	365	299	311	393

자료: 가정복지과 아동복지계.

6) 施設延長児童 自立 對策

아동복지시설 성장아동에 대한 자립정착 대책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서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직업인으로 떳떳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延長兒들에게 職業輔導를 시키기 위해 관인학원 등에 교육비를 지원하여 기능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직업보도시설(애활원)에서 기능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직업보도과목은 운전, 자동차정비, 이·미용, 봉제 등이다.

또한 연장 아동의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들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협조로 취업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회관에서도 연장아동에 대한 취업알선, 취업상담, 취업 후 사후관리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은 아동은 <表 6-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200명 이상씩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취업실적은 <表 6-41>에서 보면 1991년까지는 반 수 이상이 취업을 했으나 1992년부터는 취업실적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表 6-40> 연도별 직업보도실적

연도별	인 원 수			직업훈련기관별 실적			
	계	남	여	계	아동직업보도시설	사내직업훈련	기 타
1989	225	125	100	225	211	7	7
1990	278	151	127	278	266	—	12
1991	274	154	120	274	274	—	—
1992	178	134	44	178	177	—	—
1993	329	208	121	329	328	—	—

참고: 1993은 3/4분기 현재.

자료: 가정복지과.

<表 6-41> 연도별 취업실적 (단위: 명)

연 도	인 원 수			취업 내역										
	계	남	녀	농업	제조업	상업	운전	이미용	사무	간호사	점원	보육사	건설업	서비스
1989	128	53	75	2	106	3	1	1	8	3	2	2	—	—
1990	102	48	54	10	49	20	3	—	7	7	5	1	—	—
1991	134	74	60	—	57	11	2	—	12	3	—	3	—	46
1992	95	53	42	—	54	13	5	1	15	—	3	—	4	—
1993	82	46	36	—	41	8	4	—	11	3	3	—	5	7

참고: 1993은 3/4분기 현재.

자료: 가정복지과.

7) 兒童相談所 運營

대구아동상담소는 처음에 부녀아동상담소로 출발하였다. 대구직할시 婦女아동상담소는 부녀자와 아동 등에 대한 생활상담과 요보호부녀 및 아동들을 계몽지도·보호하였으며 1968년 3월 경상북도 아동상담소를 개설하였다가 1973년 12월 경상북도 부녀아동회관에 이를 통합하여 부녀와 아동에 관한 복지업무를 연계 추진하게 되었다. 그 후 이를 1975년 2월 28일 대구시 부녀아동상담소로 개칭하여 아동과 부녀를 대상으로 상담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어 아동과 부녀상담업무를 분리했고, 1993년 7월부터는 모자상담소를 대구여성회관으로 옮겨 이곳은 아동상담소로만 남게 되었다. 대구아동상담소는 대구직할시 중구 태평로 3가 181번지에 所在하고 있다. 아동상담소의 상담실적은 다음 <表 6-42>와 같이 1991년까지는 아동상담의 실적이 약간씩 증가해 오다가 1992년부터 실적이 저조해지고 있다.

연 도 별	계	부 녀 상 담	아 동 상 담
1981	4,023	1,930	2,093
1982	4,065	2,002	2,063
1983	4,589	2,378	2,211
1984	4,570	2,577	1,993
1985	5,416	2,661	2,755
1986	5,235	2,271	2,964
1987	4,917	2,269	2,648
1988	4,847	2,093	2,754
1989	4,964	2,628	2,336
1990	6,514	3,205	3,309
1991	3,173	—	3,173
1992	1,958	—	1,958
1993	815	—	815

자료: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

II. 嬰幼兒 保育(託兒)事業

보육 및 탁아사업은 舊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보호자의 근로 또는 질병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시립 어린이집으로부터 시작되었다가 1980년대에 들

어와서 새마을 운동의 차원에서 유아교육이 대두되고 1980년 11월 7일 새마을 협동유아원의 설치계획이 확정, 발표되면서 1981년 3월 26일 유아교육진흥 5개년 계획이 成案되고, 1982년 12월 31일 아동교육진흥법이 공포, 시행되면서 내무부가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아교육시설을 통합하여 관장하게 됨으로써 유치원에 일임되어 있던 유아교육이 정부주도 하에 이루어짐으로써 유아교육이 공교육화되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새마을 유아원은 1991년 그 업무가 다음 <表 6-43>과 같이 내무부에서 교육위원회로 移管되었다.

1990년도 부터는 정부가 기혼여성의 취업확대에 따른 탁아수요의 급증에 대응하여 아동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업을 시행하여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맞벌이 가정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탁아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사회여건 구조의 변화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증가됨으로서 보육시설 확대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表 6-43>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 (단위:명)

구 분 연 도	원 수	원 아 수			교 사 수		
		계	남	여	계	남	여
1981	—	—	—	—	—	—	—
1982	41	5,196	2,824	2,372	121	—	121
1983	58	6,563	3,652	2,884	171	—	171
1984	59	6,322	3,236	3,086	173	—	173
1985	59	6,466	3,399	3,067	173	—	173
1986	57	7,148	3,979	3,169	183	—	183
1987	55	7,019	3,660	3,359	182	—	182
1988	55	6,689	3,643	3,046	192	—	192
1989	55	6,550	3,412	3,138	148	—	148
1990	15	1,792	1,032	760	73	—	73
1991	교 육 위 원 회 로 이 관						
1992	영유아보육시설로 통합되면서 사회복지시설이 됨						
1993	"						

자료: 가정복지과, 1992.

우리나라에서 노인을 위한 근대적 사회복지의 시초는 1885년 서울 명동에 천주교 고아원이 개설되면서 부설 양로원이 설립된 때부터이다. 당시 천주교 조선교구장 백블랑(J.Blanc)주교는 정부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노쇠자와 고아들을 구제하고자 양로원과 고아원을 시작하였다.³²⁾ 백주교는 서울 곤당골에 고아원을 설립하면서 동시에 뚝골[東谷](현 서울 관철동)에도 큰 기와집 한채를 사서 의지할 곳 없는 남녀노인 40명을 모아 수용, 보호하였다. 이것이 한국 최초의 양로원이었다.³³⁾

대구의 민간 노인복지사업은 김옥현에 의한 선행의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金玉賢(1821~1896)은 대야불(현 대구 인교동)에 살았는데 그가 기르다 죽은 영해와 걸인들을 達成 넘어 말무덤에 손수 매장했는데 그 수가 60여명이었고 기미년 흉년에는 배고파 쓰러지는 노파들을 자택으로 업어다가 수용구호한 수가 수십명에 달하였다.³⁴⁾ 또 徐相燾선생(1850~1913)은 사람을 대할 때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어 그의 사랑에는 나그네, 걸인들까지도 모여 들었고 그는 이들에게 용돈까지 주어가며 환대했다. 또 매년 춘추로 빈민들에게 양곡 數百石씩을 회사하여 가난한 이들의 慈父가 되었다.³⁵⁾ 이러한 자선행위가 바탕이 되어 좀 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구제단체가 생겨났으니 인애회가 바로 그것이다.

仁愛會는 당시 천주교 대구본당 신도회 회장 李起雲, 白應道, 李啓榮 등의 발기로 1917년 2월 1일 설립되었다. 불우이웃돕기 모금회의 성격을 가진 이 단체는 매년 초에 소정의 회비(당시 년 10전)를 납부하면 1년간 회원자격을 가지게 되고 전체 회원을 위해서는 매년 생미사를 바치고 사망하는 회원을 위해서는 煉미사를 한대 드려주는 혜택을 부여하였다. 이렇게 모금된 회비로 무의무탁한 노약자에게 거처할 집을 마련해 주고 사망시에는 초상을 치러주는 것이 인애회의 사업이었다.³⁶⁾ 그러나 해방 전까지는 노인복지시설이 없었고 해방 후 대구에 처음 설립된 양로원은 1958년 2월 11일 영락양로원이다.

공적 노인복지사업은 1944년에 공포된 조선구호령에 의한 것이 시초이다. 이 구호령 중에는 65세 이상의 노약자에 대한 내용으로 생활부조, 의료부조가 있었다. 그러나 그 후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에서는 생활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약자에 대한 보호가 실시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생계보호, 의료보호, 장제보호가 있었으며, 보호방법으로서는 거택보호와 시설보호

32) 한국샬트르성바오로회, 《바오로딸안의 哀歡 85年》, 카톨릭출판사, 1973, p.566.

33) 경성구천주교청년연합회, 《조선천주공교회략사》, 1931, pp.60~61.

34) 최정복, 《대구천주교회사》, 대건출판사, 1952, p.51.

35) 위의 책, pp.58~59.

36) 위의 책, p.64.

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복지시책은 어디까지나 무의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시책은 아니었다.

따라서 노인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된 것은 노인들 스스로에 의해 1975년 8월에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그 계기가 되었다. 그 후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의 제정과 1982년 5월 8일 경로현장이 선포되면서 퇴색되어가던 경로효친 사상의 昂揚과 노인들의 사회기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후 1989년 12월 30일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在家老人을 위한 가정봉사원제,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지급,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실비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을 포함시켰다. 또 노인여가시설을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로 분류하였다. 이로인해 이후 노인복지사업에 커다란 변화와 활기를 가져왔다. 그것은 무엇보다 노인들 스스로 적극적인 사회참여활동을 보이기 시작하여 1990년말 현재 대한노인회 대구직할시연합회 산하에 다음 <表 6-46>과 <表 6-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개 씨글과 7개구 지회, 132개동 분회에 회원 29,163명이 합심하여 상호친목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表 6-46> 13개 씨글의 현황

구 분		행 사 내 용
씨 글 명	월례회 일자	
건 강 회	매월 첫째(수)	매주(수)(금) 건강운동 실시
서 화 회	매월 첫째(월)	제13회 서화회원전 (90. 5. 10. ~ 5. 13.) 총 작품수 83점 (31점 시상) 제14회 추계서화회원전 (90. 10. 17. ~ 10. 20.) 총 출품작수 72점 (31점 시상)
기 우 회	매월 2일	연 4회씩 정기바둑대회 (구정, 경로주간, 추석, 추계바둑대회) 12명씩 시상
시 우 회	매월 10일	시조경창대회 (5월 경로주간행사) 대구 시내 노인 시조인 전원 참가, 32명 시상.
독 서 회	매월 19일	매월독후감발표 (시립도서관 대본)
게이트볼회	매월 둘째(목)	경로주간행사 (5월 9일~11일) 전회원 참석. 10. 14 대한노인회 회장기쟁탈전 회원 13명 참석. 3등 10. 9 제일 생명 사장기 출전 33명 11. 19 체육부장관기 쟁탈전 3등, 4등
봉 사 회	매월 16일	연 4회 시내 4개 양로원 방문(화성, 복음, 성노, 영락)

구 분		행 사 내 용
씨 클 명	유희회 일자	
농 악 회	매월 26일	추석, 구정, 단체행사시 참가(달구벌 축제) (정기유희회 매월 3째 일요일) 총회시 평대생중 손자, 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우수한 학생 2명을 선발 장학금 각 30만원씩 지급
장 학 회	매주 첫째(월)	
산 악 회	매월(13일, 28일)	주일마다 등산, 건강도모.
옹 변 회	매월 셋째(목)	전국옹변협회주최 옹변대회참가 5명 입선.
정 화 회	매주(일)	달성공원에 상주, 길거리에 앉은 노인 선도. 공원내 정화.
합 창 회	매월 20일	건전가요 보급 등 노래로 취미생활.

자료: 가정복지과.

(表 6-47) 노인회 조직현황

구 분		지 회	동 회	노 인 학 교	회 원 수
중	구	1	16	1	1,709
동	구	1	25	1	5,185
서	구	1	20	1	4,722
남	구	1	16	1	2,516
북	구	1	22	1	4,171
수 성	구	1	18	1	3,036
달 서	구	1	15	1	5,883
평 생 대 학				1	1,200
교 양 대 학				1	353
씨 클					388
계		7	132	9	29,153

자료: 가정복지과.

이러한 가운데서도 대구시민들의 경로사상과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인식의 부끄러운 일단을 보여준 사건이 있었으니 화성양로원 이전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대시위사건이 그것이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화성양로원은 1961년 2월 11일 대구시 남구 대명5동 302-1에 대지 357평 건평 135평의 목조와가로 설립, 30년이 넘는 낡은 건물로 새로 집을 지어야 할 형편이었다. 그러나 그 대지가 도로까지 연결되는 차가 다닐만한 길이 없었고 인접한 땅은 너무 비싼 값을 요구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그래서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470-3에 589평의 땅을 물색하여 이전

키로하고 사업승인까지 받았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위치가 동사무소 입구로 미관을 해치고 잦은 장례행사로 地價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 건축허가가 나오고 공사를 추진하자 주민들은 더욱 극렬한 반대를 하게 되었다. 주민들은 마침내 동사무소 입구가 아니면 양로원 신축을 양해하겠다는 타협안을 받아들여 지산택지개발지구에 부지 465평을 마련, 1990년 3월 2일 착공하였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주민들의 반대로 노인들과 몸싸움까지 벌였고 결국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그 후 주민 180명이 양로원 신축으로 주택가격에 피해가 우려되며 국교 주변으로 자녀교육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냈다. 대구시는 이같은 반대에 부딪히자 주민, 학계, 언론계, 사회복지전문가, 학생, 공무원 등을 모아 이 문제에 대해 토론회를 벌이기도 하였다.³⁷⁾

이러한 가운데서도 노인복지법에 의한 가정봉사원제도가 도입되어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종합복지관에서는 가정봉사원 파견을 위한 자원봉사자교육이 활발해졌고 노인대학 운영, 경로당의 설립 등이 급속히 늘어났다.

대구는 직할시 승격 이후 지금까지 10년동안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을 3개소 신축하였고, 노인회관 및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로우대제를 정착하기 위해 시내버스 승차권지급과 경로우대이발소를 274개소 지정하여 요금의 50%를 할인해 주도록 하였으며, 불우노인들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들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무료치료를 실시하며, 在家 및 시설수용 노인들에게 일반가정과의 결연을 추진하고 있다.

2. 老人福祉施設

1) 養老院 및 療養院

무의탁 노인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65세 이상의 신체·정신 또는 환경·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노인을 입소시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양로원과 요양시설 중 해방 후 대구에 처음 설립된 것은 1958년 2월 영락양로원이다.

이후 각종 사회단체에서 계속 설립하여 1993년 현재는 4개소 요양원이 있다.

37) <매일신문>, 1990년 7월 24일자 11면.

(表 6-48) 노인복지시설 현황 1993년말 현재

설 립 연 도	명 칭	설 립 자	소 재 지	사 업 종 류
1961. 11. 11.	화 성 양 로 원	정 정 기	수성구 상동 667-40	양 로 시 설
1962. 3. 29.	영 락 양 로 원	김 상 근	서구 상리동 산 263	양 로 시 설
1964. 8. 4.	복 음 양 로 원	김 상 환	북구 관음동 723	양 로 시 설
1970. 12. 14.	대 구 성 로 원	도 영 춘	달서구 진천동 700	양 로 시 설
1987. 5. 27.	대 구 노 인 요 양 원	도 영 춘	달서구 진천동 700	노 인 요 양
1989. 9. 8.	성 산 노 인 요 양 원	도 영 춘	달서구 진천동 700	실 비 노 인 시 설
1991. 7. 1.	안 나 노 인 요 양 원	권 영 민	동구 덕곡동 산 70	노 인 요 양
1992. 3. 9.	정 안 노 인 요 양 원	김 상 환	북구 관음동 723	양 로 시 설

(表 6-49) 양로원(요양원) 입소현황

연 도	구 분	시 설 수	수 용 자		
			계	남	여
1980		2	197	94	103
1981		4	266	113	153
1982		4	280	123	157
1983		4	289	119	170
1984		4	281	116	175
1985		4	278	115	174
1986		4	287	107	180
1987		4	284	112	172
1988		4	302	121	181
1989		6	314	137	177
1990		6	314	131	183
1991		8	347	143	204
1992		8	373	138	235
1993		8	374	133	241

자료: 가정복지과.

2) 敬老堂

1993년말 현재 다음 <表6-52>에서 보는 것처럼 396개소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21,523명이 회원을 포용하고 있으며 <表 6-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 바둑, T.V.시청 등으로 消日하면서 조기청소, 거리질서 캠페인, 새질서 새생활 실천 및 청소년 선도활동 참여와 경로당에서 한문

및 예절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副業을 강화하는 등 명랑하고 생산적인 경로당으로 발전하고 있다.

〈表 6-50〉 (조직) 봉사활동분야

구분 연합회 및 지회	계	연 합 회 평생대학	교 양 강 좌	중 구	동 구	서 구	남 구	북 구	수성구	달서구
조기청소	28,232			1,530	6,150	6,202	2,390	5,600	2,410	3,590
자연보호캠페인	7,600	600	600	300	1,200	700	1,100	1,300	600	1,200
청소년상담, 지도	1,752			270	300	290	200	290	111	291
거리질서확립	9,300	1,000	700	700	1,300	1,100	1,200	1,100	900	1,300
노령수당지급 서명날인	37,574			3,502	6,122	7,665	4,434	5,880	4,418	5,553
신축노인정	180			5	24	29	28	24	42	28
재래식노인정	199			16	43	33	12	43	9	43
새생활새질서 캠페인	3,500	350	350	250	500	500	450	450	250	450

자료: 가정복지과.

〈表 6-51〉 청소년 한문 및 예절교육 실적

구 분	여 름 방 학		겨 울 방 학		
	노 인 정 수	수 강 생 수	노 인 정 수	수 강 생 수	강사수
중 구	4	160	9	345	10
동 구	25	610	33	670	33
서 구	24	703	33	989	33
남 구	18	467	20	414	20
북 구	13	507	7	440	10
수 성 구	21	487	25	484	26
달 서 구	7	364	34	680	34
계		3,298	161	4,022	166

자료: 가정복지과.

市에서는 다음 〈表 6-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경로당의 확충 건립에 힘써 왔으며 각 경로당별로 월동용 연탄 800장과 운영비 월 1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의 뜻있는 人士로 구성된 후원회가 경로당별로 조직되어 말벗 되어주기, 연탄갈아주기 및 주변 청소 등을 맡아 하고 있으며, 또한 회원의 자녀와 사회단체에서 매년 5월 경로주간에 위안잔치와 효도관광을 실시하여 노인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表 6-52〉 경로당 건립현황 (단위:개소)

연 도 별	계	1980이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경로당수	396	197	4	6	9	21	23	15	3	51	50	17	19	24	73

자료:가정복지과.

3. 老人福祉事業

1) 敬老優待制度 改善

1980년 5월 8일부터 7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우대제도를 처음 실시하였으며 1982년 2월 10일 부터 우대내용 확대와 함께 65세 이상으로 우대연령을 낮추었으며, 다시 1990년 1월 1일부터 경로우대제도를 개선하였는데 그 내용은 〈表 6-53〉과 같다.

〈表 6-53〉 경로우대제도 개선내용

구 분	시 행 일	대 상	할 인 율
당 초	1980. 5	철도(특급까지), 지하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50% 무료
	1982. 2부터	시외버스(완행), 목욕료, 이발료, 극장, 여객선 시내버스	50% 무료
변 경	1990. 1부터	지하철,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열차(통일호 이하)	무료 50%
		노인교통요금(시내버스)지정지원: 월 12매 지원 이발요금 재정지원(년 45,000원) (경로우대이발소지정: 1개동 2개소 총 282개소)	50%

자료:가정복지과.

2) 老人 無料健康診断 및 治療

1984년부터 零細在家노인들에 건강진단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료건강진단을 매년 7,500명에게 실시하여 진단결과 질병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2차검진을 실시한 후 상병자에 대해 보건소 및 노아의원에 의뢰, 무료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아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아의원에서는 1990년부터 재가노인들에 대해 무료로 진료를 실시하여 연간 6,000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3) 老人學校 運營

1975년 9월 1일 한국사회사업대학(현 대구대학교)부설 노인복지대학을 효시로 하여 노인회 및 사회단체 등에서 1990년 말 현재 3개소의 노인대학을 설립, 운영하면서 16,000여명을 수료시켰으며 구지회 및 시립도서관에서는 노인학교 8개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대학교수 및 사회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국사, 윤리, 노인건강 등 교양과목과 국가지책 홍보, 현지견학 및 레크레이션 등으로 다양하게 짜여져 있으며, 수료기간은 단기 1년에서 장기 평생으로 1주일에 1~2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表 6-54〉 연합회 및 각구지회 노인학교 교육

구 분 연합회 및 지회	학 교 수	학 생 수			교육일수	교육시간
		남	여	계		
연합회평생대학	1	493	707	1,200	33	66
연합교양강좌	1	83	270	353	33	66
중 구 지 회	1	17	43	60	23	46
동 구 지 회	1	17	81	98	25	50
서 구 지 회	1	27	51	78	24	48
남 구 지 회	1	59	35	94	20	40
북 구 지 회	1	18	34	52	23	46
수 성 구 지 회	1	15	35	50	20	40
달 서 구 지 회	1	7	31	38	23	46
계	9	736	1,287	2,023	224	448

자료: 가정복지과.

4) 老齡手當 支援 및 老人能力銀行 運營

조기정년 퇴직으로 소득원을 상실하고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주기 위해서 1991년부터 거택보호노인 중 가구주 및 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70세 이상 노인에게 월 1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表 6-55〉 노인능력은행 운영실적(취업알선)

구 분	취업직종	'89	'90	(증감)	'91	'92	'93
	총 계	1,844	1,194	-650	1,885	3,066	2,373
장 기 취 업	소 계	161	272	111	450	434	125
	특수기능직	.	.	.	1	1	.
	행정사무직	.	.	.	2	1	3
	건축기능직
	수위경비직	36	35	-1	70	87	54
	청 소 원	8	13	5	16	8	3
	공 동 작 업	108	165	57	320	297	40
	기 타	9	59	50	41	40	25
단 기 취 업	소 계	1,683	922	-761	1,435	2,632	2,248
	취 로 사 업	204	177	- 27	77	174	392
	건축토목공사	103	.	-103	.	.	55
	일 손 돕 기	1,275	310	-965	1,248	236	1,587
	기 타	101	435	334	110	97	214

자료: 가정복지과.

Ⅳ. 靑少年福祉事業

1. 概 說

종래 우리나라의 청소년 육성시책은 교육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학교청소년을 중심으로 소극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60~1970년대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수반된 급격한 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사회병리현상의 하나로 대두된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특히 1980년대 초반부터는 경제발전과 함께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청소년문제에 관한 범국민적인 관심이 점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청소년육성시책은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차원에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욕구가 강력하게 나

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7년 11월 28일 청소년육성법이 제정, 공포 되었으며 동법에 의거 1988년 6월 18일 체육청소년부에 육성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어 청소년정책을 기획, 조정, 통괄함으로써 체계적인 청소년시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는 한편, 1990년 5월 12일 청소년헌장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 범국민적인 관심을 촉구하였다.

현재 청소년의 범위는 각종 법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청소년육성법상에는 9~24세 사이를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구시 청소년 인구는 직할시 승격 원년인 1981년에는 대구시 인구의 38.2%에 해당하는 703천명이었는데 비해 1992년에는 <表 6-56>과 같이 32.1%인 734천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점차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문제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들이 성장하여 장래 국가발전의 주역을 담당하여야 하는 자라나는 세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시책 추진이 요망되고 있다.

<表 6-56> 대구직할시 청소년인구 (단위: 천명)

연도별	구분	총 인 구	청 소 년 인 구			
			계	9~13세	14~19세	20~24세
1981	계	1,838	703	205	264	234
	남	903	345	108	134	104
	여	935	358	97	130	130
1989	계	2,288	769	97	303	249
	남	1,138	384	113	153	118
	여	1,150	385	104	150	131
1990	계	2,228	746	214	284	248
	남	1,113	377	112	145	120
	여	1,115	369	102	139	128
1991	계	2,281	757	224	279	254
	남	1,142	383	117	142	124
	여	1,139	374	107	137	130
1992	계	2,284	734	225	260	249
	남	1,145	378	118	135	125
	여	1,139	356	107	125	124

자료: 청소년과.

2. 靑少年 專擔部署 新設

체육청소년부에 청소년국이 설치되면서 지방청소년육성 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有關기관인 청소년업무를 통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1988년 7월 4일자로 시의 청소년업무전담 부서인 부녀청소년과가 발전적으로 개편되면서 가정복지국내 청소년과가 신설되었다. 한편 자치구는 1990년 8월 16일자로 총무과에 체육청소년계를 신설하였다.

청소년육성법에 의거 1988년 6월 중전의 청소년 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기구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20인 이내)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며, 1992년 12월 청소년기본법 제정, 공포에 따라 1993년 5월 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시지방청소년위원회로 개편(15인 이내) 운영하고 있다.

민간차원의 청소년지도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988년 9월부터 동별 20인 내외로 동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 활용하고 우수 지도위원을 표창함으로써 이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한편, 시·구·동별 청소년지도협의회(155개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도위원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1995년 말까지 동별 10명 이내로 지도위원수를 축소 조정하여 정예화할 계획이다. 1993년 11월 현재로 총 1,728명의 청소년 지도위원이 위촉되어 있다.

3. 靑少年 健全活動 支援

1) 靑少年施設 擴充

현재 대구지역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시설은 〈表 6-57〉에서 보는 것처럼 총 59개소가 있으나, 청소년인구 734천명이 이용하기에는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위한 종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적은 것이 아쉬운 점이었다.

한국청소년 기본계획(1992~2001) 시행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청소년 수련원, 수련관, 수련실 등의 청소년 수련터전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수련시설이 될 청소년 수련원을 1991년말 사업시작 이후 1993년 말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도 1993년말 착공하게 된다. 구 및 동 단위의 수련시설인 청소년 수련실은 1992년 4개소 설치, 1993년 6개소 설치계획을 추진 중이다.

〈表 6-57〉 청소년시설 현황 (1993년 기준)

계	청소년수련실	청소년공부방	심신수련장	놀 이 마 당	야 영 장	청소년회관
59	5	98	1	2	1	2

자료: 청소년과.

(1) 靑少年 夜間 공부방 設置 運營

열악한 환경의 영세민 자녀에게 학습공간 제공 및 학습지도, 생활고충 상담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 열등감을 극복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코자 1987년부터 영세민 집단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총 48개소 4,211석을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여 사회봉사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3,158명이 이용하고 있다.

(2) 靑少年 綜合相談室 運營

청소년 고충상담, 취업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개발 보급을 위해 체육청소년부의 지원을 받아 1990년 2월 24일 상담실, 취업지도실, 프로그램실 등 3실 14명으로 청소년 종합지원센타를 설치하여, 한국선명회 영남지부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으며, 1991년부터는 체육청소년부 방침에 의거 그 명칭을 청소년 종합상담실로 개칭하여 상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상담 1·2·3부로 조직을 개편하고 교수, 의사, 법률가 등으로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청소년의 고충을 전문상담 처리하고 있다.

(表 6-58) 청소년 종합상담실 상담실적 (단위: 건, 1993년)

계	취업	진로	정신	성	이성교재	교우	가정	기타
2,043	643	240	153	311	145	40	124	387

자료: 청소년과.

(3) 靑少年 修鍊院 建立

지역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달서구 송현동에 총공사비 101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7,124평, 연건평 3,011평 규모의 청소년 수련원을 1991년에 착공 1994년 8월 개관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 靑少年 團體 活動 支援

청소년들이 단체활동을 통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청소년들의 단체활동 권장, 지역단위 청소년단체협의회 구성, 운영, 우수지도자 표창 등 10개 단체 75,803명 대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청소년단체의 기능과 활동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3) 靑少年 프로그램 運營

靑少年 여가활동 기회증대를 통한 건전놀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靑少年 어울마당, 靑少年 푸른분수대, 靑少年 큰잔치 등 매년 7만6천명을 대상으로 靑少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靑少年 종합상담실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급기관, 단체의 靑少年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4) 模範靑少年 發掘 表彰

靑少年에게 귀감이 되는 모범靑少年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올바른 靑少年상을 정립하고 靑少年 선도보호에 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1989년부터 대구직할시 靑少年 대상 제도를 마련하여 1993년까지 5회에 걸쳐 효행, 노력, 봉사 등 3개 부분 31명에게 표창장, 메달, 부상을 수여하고 장학금 지급 등 지속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5) 靑少年 指導者 教育

靑少年과 현장에서 호흡을 같이하고 있는 지도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洞 靑少年위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150명을 대상으로 지도자 연수를 실시하였다.

4. 脆弱階層 靑少年 保護支援

1) 靑少年 自立支援 基金造成

도시영세민 자녀들의 진학, 직업훈련 및 생활정착 지원을 통해 자활터전을 마련해 주고자 1987년부터 1995년까지 靑少年자립기금 10억원을 목표로 1993년 11월말 현재까지 성금, 시구비 등 총66억원을 조성하였으며, 1994년부터는 이식금을 활용, 무직·미진학 靑少年,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靑少年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 無職 未進學 靑少年 對策

1991년 5월 1일 기준으로 시내 전역에 걸쳐 무직·미진학 靑少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60명이 파악되어 개인별 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이들 靑少年들의 욕구와 적성에 따라 직업훈련, 취학, 취업알선, 결연 등 보호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체육부의 방침에 의거 1993년도부터 무직·미진학 靑少年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表 6-59〉

무직·미진학 청소년직업훈련실적

(단위: 명)

계	1990	1991	1992
154	48	50	56

자료: 청소년과.

3) 勤勞靑少年 保護支援

근로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창작능력개발 및 사회관심을 제고시키고자 1989년부터 매년 청소년 야간학교학생 등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술·문학·음악 등 3개부분으로 나누어 문예행사를 개최하고 우수자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하는 한편 근로청소년 체육대회를 매년 1회 3,0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였다. 또한 이들의 면학지원을 위해 매년 청소년 야간학교 10개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도서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5. 靑少年 善導活動

1) 脆弱地域 善導對策班 運營

역, 공단, 유흥가 밀집지역 등 청소년 취약지역에 대한 선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989년 10월부터 동(洞)청소년 지도위원을 중심으로 선도대책반을 편성하여 취약지역 30개소에 주1회이상 유해업소 지도계몽 및 청소년출입단속, 배회청소년 조기귀가 유도 등 청소년 탈선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 靑少年善導放送 “사랑의 중” 運營

심야배회 청소년들의 조기귀가유도 및 청소년선도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한 이들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1985년 7월부터 시내 중심가, 공단지역 등 4개소에 “사랑의 중”을 설치하여 매일 22:00~23:00사이에 청소년 선도방송을 실시해 왔으며 1990년 11월부터는 32개 취약지역에 확대 운영하고 있다.

3) 脆弱時期 大單位 靑少年 善導活動 展開

매년 연말 연시, 하계방학 기간, 추석 전후 등 취약시기에는 청소년선도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시·구·동 공무원 및 교육청, 경찰청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시내 중심가 및 취약지역에서 대 단위 생활지도 활동과 함께 캠페인을 벌여 왔다.

4) 靑少年善導 汎市民的 關心提高

靑少年健全育성에 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시킴으로써靑少年선도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靑少年 健全育성 시민토론회 개최, 유해환경 추방 및靑少年선도 가두 캠페인 전개,靑少年선도 수범사례집 발간, 주요계기별 쟁점사안에 대한 팜플렛, 리플렛을 제작, 활용하고 있다.

V. 障礙人福祉事業

1. 概 說

대구의 장애인복지사업은 이영식 목사에 의해 설립된 장애인 특수교육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영식 목사는 나환자교회 목사였고 독립운동가로 조국광복에 젊음을 바쳤던 열정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사업에 투신하였다. 1946년 4월 19일 조국광복기념사업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교육시설인 대구맹아학원을 설립하였다.

학교는 설립하였으나 해방과 6·25라는 사회적 혼란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교사를 마련하지 못해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1953년 3월 현재의 대구대학교 대명동 캠퍼스 자리에 학교건물 기공식을 가지고 새출발을 하였다. 당시 경상북도지사 김현동, 대구시장 김종환, 미8군 후방기지사령관 등의 후원으로 어렵게 교사를 마련한 대구맹아학원은 1959년 3월 9일 시각장애아를 위한 대구광명학교와 청각장애아를 위한 대구영화학교로 분리, 개편되었다.

1966년 12월 26일에는 정신박약아 교육기관으로 대구보명학교를, 지체장애아 교육기관인 대구보건학교를 각각 설립하였다. 1981년 6월 1일,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아 기념사업으로 점서·녹음서의 출판 및 보급을 위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점자도서관을 개관하였다. 1982년 11월 20일에는 정서장애아를 위한 대구덕희학교가 설립되었다.

대구대학교를 모체로 한 이와 같은 장애인 교육활동이 민간에 의해 활발히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은 설립이 매우 늦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심과 활동이 늦은데 영향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다. 1981년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아 1986년 6월 5일 최초의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이 해 제1회 재활증진대회를 열었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등을 개최하여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켰다.

장애인복지의 기본목표는 장애인의 건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생계보호와 아울러 적극적인 보호를 실

시하고 자활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치료, 교육, 취업 등 장애 유형에 알맞는 재활시책과 자립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제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여 왔다. 또한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 공포되었고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1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의무고용제가 실시됨으로써 장애인복지증진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2. 在家障礙人福祉 增進

1) 醫療再活서비스

의료재활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하여 1990년부터 장애인 복지시설에 부설된 재활의료기관(인재재활병원)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1991년부터 보장구 교부사업을 시작하였고, 1990년부터 의료비부담이 과중하여 장애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22만 8천명에게 5천 5백만원의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의료보장을 도모하였다.

2) 職業再活서비스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장애인 재활시설과 종합복지관 등에서 다음 <表 6-60>에서처럼 전자, 인쇄, 공예 등 장애인의 적성직종을 개발하여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해 왔으며, 1992년 7월 1일 부터 장애인 재활협회 대구 경북지부에 장애인취업알선 창구를 개설하여 <表 6-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년 6월 현재 1,050명의 장애인에게 직장을 알선하였다.

<表 6-60> 직업훈련 수료 및 재학생 현황 (단위:명)

수료연도 (기 수)	수료생	직 종					교육기간
		전 산	금은세공	보석가공	전산기기	도 자 기	
1984(1기)	17	17	—	—	—	—	6개월
1985(2기)	19	19	—	—	—	—	2기 6개월
" (3기)							3기 8개월
1986(4기)	10	10	—	—	—	—	10개월
1987(5기)	7	7	—	—	—	—	1년
1988(6기)	39	10	—	10	8	11	1년
1989(7기)	36	6	10	9	5	6	1년
1990(8기)	41	10	8	8	7	8	1년
1991(9기)	37	6	7	6	10	8	1년
1992(10기)	55	11	10	11	12	11	10개월
계	206	85	25	33	30	33	—

자료: 사회과.

〈表 6-61〉

재활협회알선실적

(단위:명)

계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050	92	122	170	196	137	131	96	76	30

자료: 사회과.

또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이용시설과 장애인 재활시설의 직업훈련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여 장애인 직업훈련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일반기업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적성 직종의 기능을 습득시켜 자립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해 주기 위해 장애인 재활시설,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6개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지원하였다. 그러나 1989년도에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시행되는 1991년부터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넘어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이 사업이 중단되었다.

3) 障礙人 生活安定 支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금전적 지출을 감면해 줌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속세, 소득세의 과세가액을 공제하고 장애인용 물품 수입시 관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1~3급 장애인이 1,500cc이하의 보철용 차량을 구입할 경우 특별소비세와 방위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화요금도 장애등급에 따라 20~40%까지 감면해 주고 있으며, 저소득장애인의 중·고등학생(실업계) 자녀에게는 학비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1990년부터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저소득장애인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월 20,000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급되는 생계보조수당이 다음 〈表 6-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 시행 첫 해에는 205명에 대해 4천 2백만원이었으나 1993년에는 410명에 대해 97억원으로 늘어났다.

〈表 6-62〉

생계보조수당 지급실적

(단위:명, 백만원)

1990		1991		1992		1993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205	42	228	55	370	83	410	97

자료: 사회과.

4) 在家障碍人 利用施設 擴充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치료와 교육 및 직업훈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원 시설을 보다 다양하게 설치하여 이들의 이용기회를 확대하고자 1984년도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91년도에는 운영비 40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5) 便宜施設 設置 擴大

장애인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로, 공공건물, 통신시설 등에 맹인용 음향신호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확대해 나가고 있다. 맹인용 음향신호기는 다음 <表 6-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9년에 처음으로 24개소에 설치한 이래 1993년말 현재 대구 시내 424개소에 맹인용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 외에도 횡단보도 유도바닥제는 235개소, 횡단보도 턱낮추기는 1,164개소 등에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보행을 쉽게 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용 경사로와 전용화장실, 전용주차장, 전용전화 등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表 6-6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누계

구 분 연 도	맹 인 용 음향신호기	횡 단 보 도 유도바닥제	횡단보도 턱낮추기	장 애 인 용 공중전화기	장 애 인 용 경 사 로	장 애 인 용 변 소	장 애 인 전용 주 차 장	계
1989	24							24
1990	29	180	1,028	65	32	4		1,338
1991	29	180	1,032	67	33	4	1	1,346
1992	353	235	1,118	159	54	33	3	1,955
1993	424	235	1,164	159	54	33	10	2,079

자료: 사회과.

6) 障碍人 登錄 持續 實施

장애인의 정확한 실태 파악으로 장애인의 체계적인 관리 및 자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1988년 11월부터 장애인 등록제를 실시하였다. 대구직할시의 등록장애인은 다음 <表 6-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1천여 명씩 증가하여 시행 첫 해인 1988년에 5,054명이었으나 1993년에는 10,285명으로 늘어났다. 이 <表 6-64>에 의하면 대구시의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이 1993년 현재로 7,156명이나 되어 가장 많고 시각장애인은 567명으로 가장 적다.

〈表 6-64〉 장애인 등록 현황 (단위:명)

연 도	계	지 체	시 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1988	5,054	3,019	339	774	922
1989	6,823	4,164	455	922	1,282
1990	7,991	4,818	462	994	1,722
1991	9,032	5,710	477	1,032	1,833
1992	9,964	6,498	507	1,084	1,875
1993	10,285	7,156	567	1,171	1,931

자료: 사회과.

3. 障碍人 福祉施設 支援·擴充

장애인 복지시설이라 함은 장애인을 수용 또는 通院하게 하여 장애인의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교육, 훈련 및 요양 등의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로써 1993년 6월 현재 8개시설에 1,258명의 장애인을 수용, 보호하고 있다.

〈表 6-65〉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연 도 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시 설 수	7	7	11	8	8	8	7	7	8	8	9	9
수용인원	1,217	1,185	1,697	1,018	1,201	1,239	1,227	1,254	1,255	1,258	1,275	1,278

자료: 사회과.

〈表 6-66〉 장애인 복지시설별 현황

시 설 명	시 설 종 별	소 재 지	대 표 자	설 립 일 자
청 구 혜 양 원	지 체 성 인	경산 와촌 소월 109-1	박 윤 석	1957. 10. 28
대 안 식 식 원	지 체 성 인	북구 복현동 57	김 봉 희	1959. 1. 17
성 보 재 활 원	지 체 아 동	북구 복현동 315	최 옥 순	1960. 11.
애 망 원	지 체 영 아	수성구 파동 13	박 현 철	1953. 1. 6
인 제 요 양 원	중 증 장 애	수성구 수성4가 1225-2	황 맹 순	1949. 10.
선 명 요 육 원	중 증 장 애	수성구 시지동 28-1	한 외 근	1989. 12. 22
천 혜 요 양 원	성 인 장 애	경산 와촌 소월 109-1	박 윤 석	
일 심 재 활 원	정 박	동구 각산동 896	박 병 기	1962. 2. 12
자 유 재 활 원	정 박	수성구 시지동 28-1	강 영 신	1953. 8. 15

자료: 사회과

1985년이후부터 장애인 복지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노후시설을 증·개축하고 의료 및 직업재활 장비와 시설을 보강하여 장애인 재활기능을 크게 확충하고 전문화 하였다.

VI. 母子福祉

1. 概 說

일반적으로 母子福祉라고 하면 미혼과 기혼을 가리지 않고 모든 여성에 관한 복지전반을 포함하는 여성의 복지를 말한다. 따라서 모자복지를 종전에는 부녀복지로 불렀다. 이러한 부녀복지가 대두되는 것은 여성만이 가지는 임신, 출산 및 양육의 기능을 중심으로 여성은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아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윤락여성, 미혼모 등 불행하고 고통받는 여성뿐만 아니라 일반 주부들도 변화되는 가정생활·사회생활에 적응하며 자신을 계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고, 국가적으로도 가정에 死藏되어 있는 막대한 유희여성인력의 계발 및 활용을 위해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이다.

도시화·산업화·핵가족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산업사회는 배우자와의 死別·이혼·遺棄·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배우자가 있어도 폐질·불구 등으로 장기간 노동력을 상실하여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자가정이 날로 격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녀복지사업은 6·25 동란으로 인한 전쟁미망인 및 부모형제들과 헤어지거나 사별한 부녀자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糊口之策으로 환락가에 빠지는 등 여러가지 難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전개된 구호 부조적 사업에서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1960년대에는 이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이 제정되었는데 윤락행위방지법, 생활보호법 등이 그것이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는 1960년대부터 추진되어 온 경제개발정책의 성공과 1970년대에 시작된 새마을 운동의 영향으로 지역부녀자를 중심으로 하는 새마을 부녀교실이 운영되어 여성의 지위향상, 자조, 근면, 협동의 정신자세 확립과 합리적인 가정관리에 대한 지도계몽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때에 이들 모자가정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교육보호·생업자금융자·주택제공 등을 통하여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9년 4월 1일 법률 제4,121호로 모자복지법을 제정,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대구의 경우 이러한 부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49년 12월 6일 사회과에 부녀계를 설치하였고, 1971년 5월 1일에는 부녀계를 부녀아동과로 승격시켜 본격적인 사무추진체계를 정비

하였다. 1975년 2월 28일에는 경상북도가 운영하던 부녀아동상담소를 市事業所로 직제개편하여 요보호여성 및 가출여성의 상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1978년 목련모자원을 개원하여 영세 모자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1983년에 제2 목련모자원, 1984년에 기독교 가정복지관 등 모자원을 증설하였으며, 1991년 하반기 중에는 모자보호시설 1개소와 모자자립시설 2개소를 개원하였다. 그 외에도 1981년 7월 1일 직할시 승격 이후 대구지역에서 1920년부터 활동하고 있던 대구여자 기독교청년회 등의 여성단체 활동을 지도하기 위해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집단상호간의 인화단결과 여성능력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1984년에는 근로청소년 회관을 신축하고 부녀상담소를 설치하여 근로여성들을 대상으로 순화교육과 교양지도 등을 실시하였다. 1989년 12월 13일에는 120만 대구여성의 전당인 대구직할시 여성회관을 북구 노원 3가 483번지에 총 사업비 33억 5천 5백만원으로 부지 4,115㎡(1,245평),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건평 5,693㎡(1,722평)의 건물을 신축 개관하여 저소득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능교육과 여성의 사회참여 능력개발을 위한 사회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2. 母子福祉施設

1) 母子世帶의 實態

모자가정이 1950년대에는 전쟁미망인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60년대 이후 도시화·산업화·핵가족화 등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 새로운 요인에 의하여 수적인 증가와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 뿐 아니라 전통적인 가부장제적 인습이 잔재하여 여성의 사회적 활동 기반이 매우 취약한 형편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모자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곤란, 자녀양육 및 교육 등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보살핌이 일찍부터 요구되어 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세를 감안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 나아가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어 동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모자가정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전 모자가정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이 조사에 의하면 다음 <表 6-67>에서 볼 수 있듯이 4등급인 2십만원 정도가 23.0%로 가장 많고 9만 4천원 미만도 90가구나 되었다. 이러한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자녀들의 학비와 학용품비 등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表 6-67〉

모자가정의 월가구별 총소득

구 분	1등급 (0~94 천원미만)	2등급 (94~140 천원미만)	3등급 (140~187 천원미만)	4등급 (187~234 천원미만)	5등급 (234~280 천원미만)	6등급 (280~374 천원미만)	7등급 (374~467 천원미만)	8등급 (467~934 천원미만)	9등급 (934천원 이상)
계 3,746	90	195	670	863	677	644	259	241	107
구성비 100	2.4	5.2	17.9	23.0	18.1	17.2	6.9	6.4	2.9

1992년 대구직할시가 조사한 실태조사내용을 분석해 보면, 가구원 평균수는 3인이며 3인가족기준 월평균 세대당 소득액이 28만원 미만인 저소득모자가정이 2,495세대로 전체모자가정의 67%이며, 또한 무주택모자가정이 3,285세대로 전체모자가정의 88%로 대다수 모자가정이 자녀양육과 교육 등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2) 母子保健施設

보호자나 배우자가 없는 여자로서 18세 미만(취학시 20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무주택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3년간 시설에 수용하여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모자보호시설은 1990년 현재 2개 시설이 있었으나 다음 〈表 6-68〉에서와 같이 1992년과 지금은 모자보호시설 4개소와 직업보도시설 및 미혼모 시설이 각각 1개소씩 있다. 이 곳에는 199명의 어머니와 자녀가 수용, 보호되고 있다.

〈表 6-68〉

모자보호시설 현황

시설인가연도	명 칭	설 립 자 (법인대표)	사 업 종 류
1962. 7. 26	가톨릭여자기술학원	이 문 회	직 업 보 도
1962. 6. 7	기독교 가정복지관	안 의 종	모 자 보 호
1978. 11. 23	목련모자원	안 목 단	모 자 보 호
1986. 9. 4	대구혜림원	임 채 흥	미 혼 모
1992. 4.	소 망 원	최 정 철	모 자 보 호
1993. 11. 17	자 용 모 자 복 지 관	손 명 숙	모 자 보 호

자료: 부녀복지과.

수용자의 연령은 30~40세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세대별 가족수는 3~4명이다. 그러나 市에서는 모자보호시설에서 부족되는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조성토록 하고, 수용모자가정의 정서함양과 고충상담을 위해 독서실, 상담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다 바람직한 생활을

영위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3년간의 수용보호기간 중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퇴소하는 모자세대의 자립정착을 위해 1984년부터 세대당 퇴소정착금을 50만원씩(국비 25만원, 市비 25만원) 지원하였으나 1989년부터는 증액하여 100만원씩(국비 50만원, 시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목련모자원에서 수익사업장 이익금으로 1985년부터 세대당 3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목련모자원과 기독교 가정복지관을 통해 자립기반을 닦아 퇴소한 모자세대를 연도별로 보면 <表 6-69>과 같이 1982년부터 1991년까지 125세대에 세대원이 461명이나 된다.

<表 6-69> 모자보호시설퇴소자 현황 (단위: 세대수, 인원)

구 분	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계	125	7		5	7	19	28	7	18	27	7
	461	30		18	26	71	110	25	52	104	25
목 련	81	7		5	7	18	62	7	18	5	7
모 자 원	287	30		18	26	71	21	25	52	19	25
기 독 교 정 가 복 지 관	44						22			22	
	174						89			85	

자료: 부녀복지과.

3) 婦女職業輔導施設

환경 또는 성향을 보아 윤락행위의 우려가 있는 여성을 자활·자립토록 사회생활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직업보도시설은 <表 6-70>과 같이 1990년 말 현재 2개소가 있다.

이들 여성들은 대다수가 가정불화, 빈곤으로 사회에 대한 불신 및 열등의식을 갖고 입소되거나 수용기간(6개월, 1년) 동안 받는 <表 6-71>과 같은 내용의 정신교화와 기술습득으로 능동적인 자세로 취업하거나 결혼하는 등 사회생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表 6-70> 직업보도시설 현황

시 설 명	설 립 일	대 표 자	소 재 지
가 톨 릭 기 술 학 원	1962. 7. 26	류 영 숙	대구 중구 삼덕1가 16
대 구 혜 림 원	1986. 9. 4	이 승 환	수성구 범어동 128-1

자료: 부녀복지과.

〈表 6-71〉

가톨릭여자기술원의 직업보도실적

연 도	구 분	과 목 별				
		계	홈 패 션	컴 퓨 터	타 자	미 용
1982		26				2
1983		33				31
1984		43				41
1985		84				82
1986		80	10			68
1987		103	18			72
1988		96	30			55
1989		71	17			47
1990		84		24		53
1991		46				11
1992		76				17
1993		58				9

자료: 부녀복지과.

4) 女性會館

여성회관은 지역사회의 일반여성은 물론 저소득 여성을 대상으로 건전가정 육성과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취업지도 등 여성의 복지증진과 여성문제 해결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교양지도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하여 1989년 12월 13일 개관된 이래 현재까지 ① 직업훈련강화(1인1기 기술교육실시), ② 쓸모있는 기능인 양성(가정생활, 사회활동), ③ 직업안정사업확충(관계업체 취업알선), ④ 여성교육 대상별 확대(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생활화), ⑤ 유희인력활용 자원봉사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대여성상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3. 婦女福祉事業

1) 女性團體育成

여성의 자질향상과 여권신장 및 지위향상 등 여성문제의 당면한 사업을 위해 조직된 여성단체의 활동은 대구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이러한 여성단체의 설립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대구 YMCA와 대구여자기독교절제회 등 2개 단체가 설립되었고, 1950년대에는 대한조산협회,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 여약사회, 걸스카우트 연맹 등 4개 조직이 지부조직을 설치하였다.

1960년대 초반에는 간호협회, 한국부인회, 戰歿軍경미망인회, 국화회, 대한여성복지회, 여약사회 대구지부, 여성저축생활 대구 경북지부, 국제부인회, 재향군인회 특별부녀회 등 9개 단체가 설립되었다.

5·16 이후에는 신생활 운동, 제2경제운동, 새마을 운동, 소비자 보호사업, 여성의 평생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이 전개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전국 주부교실, 국제연맹부인회, 꽃 예술작가협회, 새마을 부녀회 등 5개 단체가 설립되었고, 1980년대에는 대구여성단체 협의회와 주부클럽 대구지부 등 12개 단체가 설립되어 여성활동에 임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3년 12월 현재 대구직할시 여성단체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단체는 <表 6-72>와 같이 52개 단체로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수는 79,873명이다. 즉, 1982년 7월 23일 당시 22개 단체가 중심이 되어 대구직할시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한 이래 날로 성장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表 6-72> 대구직할시 여성단체 현황 (단위: 단체, 명) 1993년 현재

구 분	계	사단법인	사회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단체 특수법인	기 타
단체수	52	16	18	1	3	16
회원수	79,873	33,857	6,576	440	2,831	2,153

자료: 부녀복지과.

<表 6-73> 연도별 여성단체 및 회원 수 (단위: 명)

구 분	단 체 수	회 원 수
1982	22	231,593
1983	22	231,500
1984	25	231,899
1985	30	250,717
1986	28	152,564
1987	30	152,380
1988	30	71,156
1989	33	71,256
1990	32	
1991	31	70,948
1992	33	73,907
1993	37	78,243

자료: 부녀복지과.

2) 새마을 婦女會

부녀새마을운동은 1970년대의 새마을 운동 추진 이전인 1966년에 부녀교실이 統단위에서 조직되어, 21세에서 50세미만의 여성이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 가정관리, 의식주의 생활개선, 검소한 생활자세, 節米운동 등을 추진해 왔다. 여성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조직생활을 배우고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방법을 터득하여 협동정신, 근면정신을 몸에 익히게 되었다. 1969년 새마을 어머니교실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101개동 어머니회가 조직되어 현재의 부녀새마을 운동의 모체가 되었으며, 부녀지도협의회 지도아래 여성교양강좌, 가족계획사업, 생활개선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서 행정의 시책을 통단위 주부들에게 파급하는 기능을 해왔다.

1977년 7월 8일 국무총리 훈령 제141호에 따라 부녀교실, 새마을 부녀회, 가족계획 어머니회, 생활개선 구락부 등 기존 조직의 다원화로 부녀지도 행정상 중복,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통폐합한 새마을 부녀회가 통단위에서 기본단위를 통으로 하고 통의 자립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초 우수 시범 부녀회로 구분하여 통단위 새마을 사업에 적극 참여하였다. 회원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여성으로서 시·구·동·통·반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활동 가능한 부녀자 중 가급적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여성으로서의 자질향상과 과학적인 가정관리를 꾀하며 근검절약, 불우이웃돕기 등의 생활풍토 조성 및 건전가정향상을 도모하고 총화단결로서 지역사회개발과 국가발전에 기여코자 다양하게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다가 1980년 9월 새마을 중앙연합회가 창설되었고 동년 12월 1일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가 창설됨에 따라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 대구지부가 창설되면서 1981년 9월 18일 산하 민간조직 단체로 이양되어 사업방향을 가정 새마을 운동 활성화에 두고 추진해왔다. 1990년대에 들어와 민간주도의 새마을 부녀운동으로 정착코자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부녀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고, 분야별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제 선정추진 등 자생조직 부녀 새마을 운동 참여 유도를 위하여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부녀새마을운동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表 6-7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회원수는 1982년 97,317명에서 1993년 28,971명으로 거의 3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表 6-74〉 연도별 새마을 부녀회 조직 현황 (단위:명)

구	분	조	직	수	회	원	수
	1982			2,528			97,317
	1983			2,714			93,560
	1984			2,714			84,570
	1985			2,885			72,580
	1986			2,925			64,253
	1987			3,125			58,000
	1988			3,162			48,500
	1989			3,309			36,847
	1990			3,482			26,089
	1991			3,212			27,650
	1992			3,369			28,902
	1993			3,605			28,971

자료: 부녀복지과.

3) 婦女相談

대구직할시 부녀아동상담소는 직할시 승격 이전인 1975년 2월 28일 경상북도 부녀아동회관에서 분리되어 대구시 조례 제867호에 의거 대구시 산하 사업소가 되었으며, 1978년 12월 현재의 대구시 중구 태평로 3가 181번지에 대지 797㎡(241평), 건물 653㎡(196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독립 건물을 신축하고 이전하여 명실상부한 상담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1981년 직할시 승격 이후 각 區 단위로 부녀상담원(7급)이 배치되어 1984년부터 영세부녀자, 모자세대, 해외취업자 가족들의 생활상담 등이 구단위 상담 창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즉, 직할시 승격 이전 3명뿐이던 부녀상담원이 13명으로 증원 보장되었고, 아울러 1984년 7월 15일 대구 서구 성당동에 개소된 근로청소년회관내에 상담실을 설치하여 상담실장 및 2명의 상담원이 고정 배치됨으로써 대구시의 복잡한 사회현상속에서 갈등을 가진 여성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있다.

부녀상담소에서 처리한 상담내용을 〈表 6-75〉에서 살펴보면, 그 내용이 生活苦, 求職, 가정문제, 신상문제, 요보호여성의 상담을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직할시 승격 이후 1993년 11월 말까지 총상담 건수는 158,860건에 달하고 있다. 대구지역에는 사단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가 1984년 11월 대구대학교내에 개설되어 가정문제, 법률 상담 등은 주로 이 창구를 통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 1월부터 여성회관 상담실에서 전문상담인을 위촉

운영하여 법률, 자녀교육, 인간관계 등 312건을 상담하였으며, 1981년 직할시 승격시부터 1993년 11월까지 상담소에서 상담한 실적은 <表 6-75>와 같다.

부녀상담 실적 (단위: 건)

<表 6-75>

연도별 상담별	계	구 직 상 담	가출여성 상 담	가정문제 상 담	윤락여성 상 담	생활상담	근로여성 상 담	기 타
1981	2,423	274	76	57	1,930			86
1982	2,738	226	35	63	2,002			412
1983	2,720	157	43	47	2,373		100	
1984	5,336	858	151	750	2,577	150	540	310
1985	5,232	468	358	1,863	1,920	180	240	203
1986	9,654	1,552	115	3,861	2,920	215	783	208
1987	10,488	1,091	410	4,164	2,393	230	1,515	685
1988	10,560	1,210	716	3,274	2,062	125	1,898	1,275
1989	15,579	1,115	586	3,079	1,683	265	1,985	6,866
1990	22,372	2,318	1,477	5,846	2,930	442	2,220	7,139
1991	23,372	382	52	4,942	2,418	13,885	1,693	
1992	24,083	562	69	13,495	2,411	5,263	2,283	
1993	24,303	957	48	3,933	3,635	11,797	3,933	
계	158,860							

참고: 1993년도 11월말 현재임.

자료: 부녀복지과.

VII. 淪落女性善導

8·15 해방으로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게되자 여권보호의 일환책으로 1946년 5월에는 미군정법령 제70호에 의하여 부녀자의 인신매매가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 포고령에 의해서 ‘공창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의 량쥬 미군정 장관은 1946년 5월 28일의 기자회견에서 이 포고령의 내용이 “공창의 폐지”가 아니라 여성의 노예적 상태를 해방시키는 것이므로 다만 “사창 또는 공창에로의 인신매매만이 동령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창이 정식으로 폐지된 것은 1948년 2월 14일자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7호 공창제도 등 폐지령에 의해서였다. 이로 인하여 대구시내의 9개 靑樓(遊廓)에서 몸을 팔고 있던 약 90명의 공창이 해방되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후대책의 강구가 없었기 때문에 공창이란 신분만은 해방되었으나 그 대부분이 사창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공창이 사창으로 바뀐 결과

가 되었다. 그 후 6·25동란이 일어나자 생활난과 성도덕의 퇴폐로 말미암아 매춘행위가 성행하여 시내 여러 곳에 사창가가 형성되었다. 행정기관에서는 이의 단속에 힘써 왔으나 뚜렷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968년말 현재 시내에는 약 1,200명에 달하는 윤락여성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어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1. 淪落女性 善導保護

1977년 집단지역(도원동 이주) 및 직업보호 시설입소, 포주 전업 등의 대책을 세워 시내 중구, 동구, 남구의 집단지역 및 산발지역에 대한 윤락여성 906명을 실태조사하여 이들의 의식구조를 진단한 바 있다. 그 후 1983년 4월 대구시내에 요보호 여성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하여 집단, 산발지역, 기지촌 주변지역외에 우범지역, 흥등가 주점 등에서 윤락가능여성의 실태를 점검하기도 했다. 그 결과 11개 지역에 업주 158명, 접대부 228명이 고용되어 있었으나 이들 주점가에 대하여 선도사업과 동시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4개 지역은 완전 정비되고 7개 지역은 정화되어가고 있다.

〈表 6-76〉 윤락여성 선도보호

연도별	구 분	상 답	단 속		교 양 강 좌
			회 수	인 원	
계		22,400명	298회	3,068명	13,569명
1981		1,930	21	149	1,128
1982		2,002	25	152	1,115
1983		2,373	22	188	1,460
1984		2,577	20	478	1,826
1985		1,920	20	220	1,200
1986		2,920	14	218	2,380
1987		2,393	22	220	1,082
1988		2,060	24	435	1,235
1989		1,295	55	324	878
1990		2,930	75	684	1,265
1991		21,556	79	690	1,320
1992		21,631	72	544	1,260
1993		17,303	69	634	1,452

자료 : 부녀복지과.

〈表 6-76〉에서 보면, 1981년부터 1990년 말까지 22,400건의 상담실적을 보였으며, 또한 1981년부터 지난 1990년 말까지 이들에게 건전시민의식 함양과 정서순화를 위하여 교양강좌를 298회, 3,068명에게 실시하였다. 또한 도원, 동성, 북성 산발지역 요보호여성에게 대해 성병검진을 실시함과 동시 선도단속 활동을 병행 실시 125회에 13,569명을 단속, 선도하였다.

VIII. 浮浪人福祉事業

1. 浮浪人의 定義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거주지가 없어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니는 것을 부랑(浮浪, vagrancy)이라고 하는데, 부랑인이라 함은 개인적·가정적 결손 또는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일정한 처가 없이 배회하며, 자활자립능력이 없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일정한 선도와 보호를 요하는 자를 말한다.

이와 같이 부랑인은 구체적으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무의탁한 사람 또는 연고자가 있어도 가정보호를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거리를 방황하면서 시민에게 위해와 혐오감을 주는 등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정상적인 사고와 활동력이 결여된 정신착란자, 알콜 중독자, 결인, 앵벌이, 18세미만의 부랑아, 불구폐질자 등을 대상으로 보고 있다.

2. 浮浪人의 保護節次

시·도·구나 경찰 등 지방관서에 의해 거리를 배회하는 부랑인이 발견되면 25시간 이내에 신원을 확인하여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귀가조치하고, 일정한 주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랑인 보호시설에 인계, 보호를 위탁한다. 부랑인의 보호를 위임받은 보호시설의 시설장은 인수 후 5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연고자 조회를 해야 한다. 연고자 조회 의뢰를 받은 읍·면·동장은 7일 이내에 연고자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연고자가 확인되면 즉시 귀가조치를 하고, 그래도 확인되지 않으면 3개월마다 1회이상 연고자를 재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해도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직업보도를 실시하여 최대한 사회복귀를 실현하거나 전문시설로 전원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부랑인은 자활가능 여부에 따라 분류, 수용보호 되어야 하고, 수용보호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사회사업가 또는 심리학자에 의한 상담, 판정에 따라 전문 시설보호 서비스의 종류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대구는 이러한 부랑인의 복지를 위해 1958년 12월 31일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산 46번지

에 시립 희망원을 설치, 자립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무의무탁하여 배회하는 고아, 노인, 불구자와 결인 등의 수용보호를 개시하였다. 이를 위해 市는 희망원 설치 조례(제280호 1963년 1월 16일 제정) 및 부랑인 선도시설 운영규정(보사부 훈령 제523호 1987년 4월 6일)을 마련하였다. 그후 1968년 11월 6일 현재의 위치인 달성군 화원면 본리리 85번지로 이전하여 운영해 오다가 1980년 4월 1일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유지재단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다.

3. 大邱市立希望院

무의무탁한 부랑아를 집단수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안정된 생활로 선도하기 위하여 1958년 12월에 대구시 성당동 46번지에 시립희망원을 설립하였는데 부지면적은 475,596㎡였고 부속건물 28동의 연건평은 16,295㎡였다. 1968년 11월에 달성군 화원면 본리동 85번지에 신축이전했는데 부지 면적은 43,392㎡(13,326평)이고 건평은 16,024㎡(459.65평)이다. 시설로서 사무실(31.76평), 강당(49.3평), 의무실(28.2평), 목욕실(27.67평), 창고(26.86평), 취사장(43.56평), 사체실(4.06평) 및 안내실(1평)이 각각 1실씩 있고 12동의 원생숙사(연건평 217.3평)와 3동의 직원숙사(32.7평)가 있다. 1968년말 현재 수용인원은 미성년자 165명, 불구자 228명, 노약자 22명, 성년자 60명, 합계 475명이었다.

1980년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해 오면서 시설이 개선되고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가 좋아지면서 수용자가 늘어나 <表 6-7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7년부터는 매년 수용인원이 1,500명을 넘고 있다.

부랑인 시설에는 他사회복지시설에 전원 수용이 불가능한 성년자 및 지체장애자들이 수용되어 있으며 환경위생 및 급식위생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정상인인 부랑인에 대하여는 정신교육 등을 통하여 의식개혁과 직업보도사업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表 6-77> 대구시립희망원의 연도별 수용현황 (단위: 명)

연도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수용인원	862	924	1,104	1,320	1,408	1,522	1,529	1,674	1,749	1,706	1,588	1,663

자료: 사회과.

IX. 更生保護事業

1. 更生保護會의 歷史 및 事業內容

갱생보호회는 갱생보호대상자의 자립의식 고취와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및 건전한 사회복

귀의 촉진으로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설립되었다. 이러한 목적 하에 설립된 갱생보호회는 본회 외에 전국 12개 지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인 대구지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지부는 1942년 3월 23일 재단법인 대구사범보호회로 시작하여 1961년 9월 30일 갱생보호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대구갱생보호회가 설립되었으며, 1963년 2월26일에 갱생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 법에 의거해 갱생보호 대구지부가 설립되었다. 3년 후인 1966년 8월 30일에 생활관이 신축되고 1980년 4월 23일에 이르러 현재의 위치인 대구시 동구 신천3동에 갱생보호회가 사무실을 신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갱생보호회의 적용대상자 및 사업내용을 보면 첫째, 적용대상자로는 ①징역, 금고형의 집행종료 및 면제된 자, ②가석방된 자, ③형의 선고 및 공판 시기, 유예처분을 받은 자, ④보호처분을 받은 자, ⑤소년원 퇴원 및 가퇴원 된 자, ⑥보호감호 및 치료감호의 집행종료, 가출소 또는 치료위탁이 된 자이다.

둘째, 사업내용으로는 직접보호와 관찰보호가 있으며, 직접보호에는 숙식제공, 귀가여비지급, 취업알선, 직업훈련, 생활조성 금품지급이 포함되고, 관찰보호에는 통신, 면접, 방문에 의한 선행지도 및 환경개선의 내용이 있다.

X. 救癲事業

1. 概 況

대구지역의 구라사업은 미국인 선교사 플렉처(A.G. Fletcher)가 환자 10명을 민가에 수용하고 1913년 3월 1일 나병원의 문을 연데서 비롯되었다.³⁸⁾ 의학 공부를 마치고 선교사가 된 그는 27세의 나이로 내한(1909)하여 평북 선천 지방에서 활동하다가 대구제중병원(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의 2대 원장으로 부임하였다. 여기에서 의료선교를 하던 중 거리를 방황하는 나환자가 많음을 발견하고 1913년 3월 1일 제중병원 부근에 마련한 초가 한 채에서 대구 애락원 보건병원이란 간판을 건 데서부터 그의 구라사업은 시작된 것이다.

수용된 환자들의 치료효과가 좋은 것을 확인한 플렛처는 보다 많은 환자들의 진료를 위하여 영국 구라선교회에 요청, 1,000파운드(1913년당시의 영국화폐:당시 한국 돈으로 1만5천원)

38) 대한나관리협회, 《한국나병사》, 아람인쇄, 1989, p.70.

정도를 원조받았다. 이에 달성군 달서면 내당리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 병사, 치료관, 식당, 교회 등을 반영구적으로 공고히 세워 1915년 4월에 이전하면서 80명의 환자를 받아들였다. 또한 환자를 치유하여 사회에 복귀시킨다는 데 병원의 지상목표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원내에서는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하므로써 출산을 막아 또다른 문제의 발생도 예방하였다. 이로부터 발전은 가속화되어 1924년에는 병원 명칭을 大邱 愛樂園으로 개칭하였고, 그 2년 후엔 8백명의 수용능력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나병에 대한 편견은 여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병원의 발전이 날로 새롭고 대구도시권 또한 확장되어감에 따라 중심지로 바뀐 애락원은 시민들의 집요한 철거운동과 일제의 압력을 견디어야만 했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과상적인 철거운동과 일제의 압력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푸렛처의 열의와 강인한 의지, 그리고 대지 및 건물의 보상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8·15광복을 맞은 우리나라는 혼란에 빠졌고, 이를 틈탄 나환자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도시·농촌 할 것 없이 심각한 상황이 되어 갔다. 일제 하에서 불들리게 되면 소록도로 보내어졌으며, 그곳에 일단 들어가면 죽어서도 나올 수 없다는 공포심 때문에 은둔생활하던 환자들, 그리고 각 수용기관에서 탈출한 환자들이 삼삼오오 떼지어 구걸부랑하게 되었다.

이때까지도 주치약이란 대풍자유가 고작이었는데, 환자들로서는 그마저 구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으며 봉대도 없어 형견조각으로 굶아터진 피부를 감고 다녔다. 이와 같이 기아와 병고속을 헤매는 환자들의 수는 1946~1947년에 절정에 달해 매일같이 신문에 보도되는 등 국가와 사회에 커다란 부담을 안겨 주었다.³⁹⁾

제2차 세계대전 후 각국의 나관리 추세는 이제까지의 격리수용에서 재가치료로 전환되었고 이와함께 이동진료기법이 등장하였다. 1950년대 필리핀의 이동진료는 세계의 이목을 끌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같은 세계적 동향에 따라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이동진료기법이 도입되었다.

1955년 9월 천주교 구라회를 창립한 스위니(Joseph. A. Sweeney) 신부는 이듬해 말부터 매월 1회씩 강원(원주), 경기(화성), 충남(예산, 공주, 논산), 전북(전주, 남원), 충북(옥천, 영동), 경북(김천, 상주, 예천, 봉화, 영일, 대구), 경남(밀양, 창녕, 진주, 사천, 충무, 거제, 김해, 마산, 부산) 등 전국을 두루 돌면서 재가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이동진료사업인데 그 활동근거는 성라자로원에 두고 있었다. 스위니 신부는 미국 매리놀회 소속으로 중국 광둥성에서 26년 동안 구라사업을 하다가 그곳이 공산화되자 귀국, 카빌요

39) 대한나관리협회, 앞의 책, p.119.

양소에서 근무했으며 한국에는 1954년에 입국하였다.⁴⁰⁾

1950년대 말 천주교 대구 대교구에서도 루디 신부(오지리인)를 구라사업전담 신부로 임명하고 구라사업부를 창설했다. 루디 신부는 자기 모국인 오지리의 가톨릭 부인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경북 의성군 다인면의 신탄농장과 고령군 우곡면의 은양원을 세우고 그 생계지원 및 치료사업을 전개하였다.

1961년 4월 24일에 내한한 오지리 간호원 엠마 프라이징거(Emma Freisinger)는 이 사업을 승계하여 그의 모국 가톨릭 부인회 지원으로 대구시 봉덕동 1275의 임야 15,000평을 매입, 숙사를 건립하고 전염의 우려가 있는 양성환자의 자녀들을 그 부모로부터 분리시켜 돌보게 된 것이 가톨릭피부과의원의 始發이었다.⁴¹⁾

이 당시 오지리 부인회의 지원으로 운영된 나이동진료반은 안동, 의성, 칠곡, 군위, 예천 등지로 순회진료를 다녔고, 이동진료반에 등록된 재가환자가 1,223명이나 되었고 8개의 정착장 주민 800여명에게 의약품을 지원하였다.⁴²⁾

2. 癩移動診療事業

1957년 7월 정부는 한미재단의 지원을 받아 나이동진료반을 최초로 설립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영국구라선교회도 1957년 나이동진료사업을 실시하여 최초에는 영천·경산·의성군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다가 점차 지역을 넓혀나가 1960년까지 청도·달성·군위·선산지방까지 진료지역을 확대했다.

1966년 5월 보건사회부 나이동진료 제1반은 하용마를 반장으로 하여 포항시에 주재하면서 영일·경주군 일대를 담당하였고, 1967년 6월에는 변동길을 반장으로 하는 제2이동진료반을 설립, 영주군에 주재하면서 영주군·봉화군을 담당하였다.

파티마병원은 1966년 6월 서치군을 반장으로 나이동진료반을 편성, 성주·선산·상주 등 3개 군을 대상으로 진료를 했다.

칠곡 가톨릭피부과의원도 1967년 4월 나이동진료반을 창설, 안동에 주재하던 보사부 제2반과 함께 의성·안동·예천·문경·영주·영양·봉화·청송·울진군 등지를 대상으로 이동진료를 전개하였다.

40) 대한나관리협회, 앞의 책, p.182.

41) 대한나관리협회, 위의 책, p.187.

42) 임진창, 《韓國의 社會發展과 가톨릭 教會의 役割》, 서강대학교 사회문제연구소, 1976, p. 93.

1967년 5월에는 구라선교회 나이동진료반이 발족되어 달성·고령·경산·청도·영천 등 5개군을 담당하였고 이때 파티마병원은 진료대상지역을 확대, 선산·상주·성주·칠곡·군위·금릉 등 6개군을 맡았다. 1967년 7월 파티마병원 이동진료반은 보건사회부 제1반과 통합, 대구에 주재하면서 경주·포항 등 2개 시군을 비롯한 영일·경주·영덕·성주·선산·상주 등 6개군을 사업지역으로 담당하였다.

1975년 8월 1일자로 보건사회부와 경상북도가 운영하던 제1반과 제2반을 모두 나협회 경북지부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1976년 각 기관별 진료담당구역은 다음과 같이 분담하였다.

- 나협경북지부: 포항, 경주, 영주, 봉화, 영덕, 영일, 경주, 울진
- 파티마병원: 김천, 문경, 상주, 선산, 성주, 금릉
- 가톨릭피부과의원: 안동(시·군), 칠곡, 군위, 의성, 예천
- 구라선교회: 경산, 고령, 달성, 영천, 청도, 청송, 영양

그 후 1978~1980년까지 담당지역을 조정하여 운영하다가 1980년에 다시 조정하여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현재의 각 기관별 진료담당구역은 다음과 같다.

- 나협경북지부: 대구, 포항, 경주(시·군), 영일, 영덕, 울진, 울릉
- 구라선교회: 영천(시·군), 경산(시·군), 고령, 청도, 달성, 청송, 영양
- 가톨릭피부과의원: 칠곡, 군위, 의성
- 파티마병원: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군), 점촌시, 문경, 선산, 금릉, 성주
- 영주다미안피부과의원: 안동(시·군), 영주시, 영풍, 봉화, 예천

3. 大韓癩管理協會 慶尙北道支部

대한나관리협회는 최초에 대한나예방협회 경상북도지부로 1949년 10월 15일에 설립되었다. 대한나협회는 1962년 4월 3일 사단법인 대한나협회 경상북도지부로 재편, 1966년 6월~1967년 4월까지 달성 외 3개군을 담당하는 나이동진료반을 편성, 운영하였다.

1973년 7월 1일 정부는 나협회 사업비 전액을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할 것을 결정하고 1974년 6월 1일부터는 나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일반외래환자에 대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다. 1975년 8월 1일 경상북도가 포항 등 3개시, 7개군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나이동진료반을 나협회가 인수함으로써 구라사업을 민간에서 운영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어 갔다.

1981년 대구직할시가 경상북도와 분리되었으나 구라사업은 대부분 경상북도지역에서 행해지고 있어 1985년 1월 19일자로 대한나협회 대구·경북지부를 통합,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XI. 家族計劃事業

1. 概 說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사업은 1961년 경제개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급격한 인구증가 현상이 경제사회개발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가족 계획사업을 경제, 사회계획에 포함시켜 정부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 1962년부터 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전국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다.

한편 대구직할시에서도 가족계획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영세민 유배우자에게 콘돔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정관·난관절제수술시는 무료시술은 물론 생계보조비조로 30만원까지 지급하기도 했다. 1993년말 현재 무료시술 및 진료를 위하여 지정되어있는 병, 의원은 <表 6-78>과 같이 총 167개소나 된다.

<表 6-78> 무료진료 및 시술 지정병원 현황 (단위: 개소)

연 도 별	계	중 구	동 구	서 구	남 구	북 구	수성구	달서구
1981	112	41	14	24	13	12	8	—
1982	149	52	14	40	18	11	14	—
1983	152	50	16	40	21	12	13	—
1984	165	53	15	45	23	15	14	—
1985	175	52	16	53	21	17	16	—
1986	173	47	18	53	22	20	13	—
1987	172	50	16	51	21	20	14	—
1988	173	46	15	42	15	20	16	19
1989	181	49	19	41	15	20	17	20
1990	180	47	17	42	15	22	16	21
1991	178	43	18	43	15	21	16	22
1992	175	40	17	44	15	21	16	22
1993	167	40	16	40	12	21	16	22

자료: 보건과.

2. 可妊女性の 避妊實態

우리나라 부인들의 연도별 피임실천율을 보면, 1964년에는 전체 부인의 9%에 불과했던 것이 1981년에는 57%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 후로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한편 대구직할시 가임여성의 피임실태를 보면, 1989년 77.5%, 90년 77.4%로 전국 실천율 77.1%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지역의 연도별 가임여성(15~44)의 구성비를 <表 6-79>에서 보면 1981년 전체 여성인구에 대한 가임여성인구의 비율은 55%였으나, 1993년에는 55.5%로 약간 증가하고 있다.

<表 6-79> 대구지역 가임여성 구성비 (단위: 천명)

연도별	구 분	전 체 여 성 수	가 임 여 성 수 (15~44세)	구 성 비 (%)
1981		935,005	514,466	55.0
1982		968,317	534,842	55.2
1983		988,809	541,479	54.7
1984		1,015,256	558,349	54.9
1985		1,024,489	567,549	55.4
1986		1,055,024	586,600	55.6
1987		1,093,344	607,576	55.6
1988		1,126,845	629,074	55.8
1989		1,150,066	634,722	55.9
1990		1,115,290	626,632	56.2
1991		1,139,025	640,849	56.2
1992		1,139,399	631,372	55.4
1993		1,139,399	632,443	55.5

자료: 보건과.

3. 家族計劃事業 實績

가족계획사업을 처음 실시한 1962년에는 정부에서 보급한 피임방법이 주로 “다이하그램”주 기법, “제리”발포성 정제 및 “콘돔”과 같은 재래식 피임방법과 정관수술만을 보급하였으나, 재래식 방법 중 “콘돔”을 제외한 피임방법은 보급중단에 따른 대책으로 1964년도부터 시술이 간편하고 안전한 자궁내 장치인 “리페스루우프”가 정책사업에 도입되었고 1968년부터는 먹는 피임약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했다.

第6章 社會福祉

그 후 여성불임시술이 도입됨으로써 현재 정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피임방법은 자궁내장치, 정관, 난관시술 및 먹는 피임약과 콘돔으로써 수용자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다.

직할시로 승격된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지난 10년동안 대구의 피임보급실적을 <表 6-80>에서 보면 총 1,762천명이 그간 가족계획사업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6-80) 대구직할시 연도별 피임보급 실적 (단위: 명, 개)

구 분 연도별	계	정 관	난 관	루 우 프	콘 돔	먹는피임약	월경조절술
계	1,762,070	39,559	100,619	136,854	1,034,007	365,406	85,510
1981	122,954	1,555	7,589	9,824	43,206	56,760	4,020
1982	187,684	2,782	11,534	13,182	66,715	84,983	8,488
1983	166,694	4,649	14,790	12,100	77,858	42,848	14,449
1984	150,727	5,706	12,108	9,966	75,322	35,563	12,062
1985	202,951	4,769	11,831	9,079	135,876	29,388	12,008
1986	161,429	4,279	11,212	10,612	106,905	15,812	12,500
1987	146,629	3,667	10,438	12,716	83,749	25,812	10,347
1988	134,058	2,806	7,991	12,691	83,089	20,062	7,419
1989	152,426	2,805	5,950	13,845	101,576	24,927	3,232
1990	111,788	1,936	3,121	10,149	78,285	17,521	776
1991	90,011	1,581	1,925	9,142	73,276	4,135	87
1992	82,179	1,609	1,338	8,896	66,531	3,742	63
1993	52,540	1,415	868	4,652	41,619	3,948	38

자료: 보건과.

第6節 社會福祉 關聯 團體

I. 大邱直轄市 社會福祉協議會

1. 沿 革

우리나라의 사회사업에 관한 전문단체로는 1921년 4월에 설립된 「조선사회사업연구회」가 처음이었다. 사회사업의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官民有志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월례회를 가

졌다. 그후 사회분야의 여러 사업들이 등장하면서 각종 사회사업단체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1929년에는 이들 사회사업의 통계기관으로서 재단법인 조선사회사업협회가 설립되었다.⁴³⁾ 이 협회는 조선사회사업연구회의 권리·의무의 일체를 승계하여 발족을 보았다. 그후 해방과 함께 이 단체는 소멸되고 1954년 한국사회사업연합회가 발족될 때까지 별다른 조직체는 없었다.

대구직할시 사회복지협의회는 1985년 2월 18일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 단체로, 1954년 2월 17일 발족한 사단법인 한국사회사업연합회가 그 전신이다. 사단법인으로 출발한 한국사회사업연합회는 1961년 6월 25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연합회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1970년 1월 1일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해 5월 22일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사단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1980년 12월 11일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경북사회봉사안 내소를 개소하고 초대 운영위원장에 이재선 박사가 취임함으로써 대구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1981년 7월 1일 대구시가 대구직할시로 승격되어 대구·경북사회복지협의회로 유지해 오다가 1983년 5월 21일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공포에 따라 법정단체가 되었다. 이듬해인 1984년 10월 15일 대구직할시 사회복지협의회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이해 12월 1일에 경북사회복지협의회가 먼저 창립되고, 이듬해인 1985년 2월 18일 대구직할시사회복지협의회를 창립, 초대 회장에 도영춘씨가 취임했다.

1988년 2월 20일 제2대 회장에 강영신씨가 취임하면서 3월 15일 《대구사회복지》誌를 창간했고, 4월 25일 대구시민회관에서 제1회 사회복지 대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협의회 운영에 활기를 띄게 되었다.

1990년 2월 23일에는 신천 3동에 청소년 공부방을 개원했고, 3월 9일에는 신천 1동에 공부방과 경로당을 개원하는 등 협의회가 직접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어 1991년 6월 10일 수성 1가 청소년 공부방 개원에 이어 1992년 2월 28일에는 대구직할시로부터 월성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2. 設立目的 및 事業實績

대구사회복지협의회는 설립목적은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사회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구

43) 조선총독부, 《朝鮮施政25年史》, 1935, p.594.; 손준규, 《社會保障·社會開發》, 集文堂, 1983, p.16에서 再引用.

직할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까지 펼쳐 온 주요사업과 그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調査・研究事業

①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1988년 6월과 1989년 6월 2회에 걸쳐 자원봉사활동 수요처를 대상으로 우편·전화 등을 통한 조사를 실시,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논문집을 발간하였다.

② 무의탁거택노인 실태조사: 1988년 9월부터 지금까지 9회에 걸쳐 1,513세대의 무의탁 거택노인을 호별 방문하여 면담을 통해 실태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결연사업 수원대상자를 선정해 오고 있다.

③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 1990년 10~11월에는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생활보호대상자 301가정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조사논문집을 발행했다.

④ 청소년공부방 모델연구: 1990년 4~5월에는 '도시영세민지역 청소년공부방 모델 연구'를 위해 134개 청소년 공부방을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하였다.

⑤ 대구사회복지편람 발간: 1990년 10~11월에는 120개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우편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대구사회복지편람》을 발간하였다.

⑥ 사회복지법인(시설)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1990년 11~12월에는 '사회복지법인(시설)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각 사회복지법인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논문집으로 발간하였다.

이와 같이 짧은 기간에 활발한 조사·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데 매우 유용한 기여를 하였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2) 出版・弘報事業

① 회보 《대구사회복지》誌 발행: 1988년 3월 15일자로 《대구사회복지》誌를 창간, 계간으로 발행하여 1993년 7월 1일자로 제18호를 기록하였다. 매회 5,000부씩 인쇄하여 무료로 배포하는데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를 홍보·계몽하여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② 〈사회복지신문〉 및 《사회복지》誌의 보급: 중앙협의회가 발행하는 주간 〈사회복지신문〉과 계간 《사회복지》를 보급하여 전국적인 사회복지 소식을 지역사회에 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가져오는데 기여하고 동시에 학술전문지 《사회복지》의 보급을 통해 사회복지의 수준을 높이고 학문적 발전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그 외에도 중앙협의회가 발간하는 사회복지법전, 사회복지실무, 자원봉사자교재 등 도서의 보급을 하고 있다.

③ 기타 홍보활동: 각 언론기관 및 기업체의 사보를 통해 총 150회에 걸쳐 사회복지사업을 홍보함으로써 시민계몽과 시민들의 복지참여를 촉진하고 사회복지관련 논문과 서적 등 자료를 수집·열람시키고 있다.

3) 地域福祉를 위한 奉仕事業

① 자원봉사자 교육: 지역 재가복지사업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31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여 1,617명의 자원봉사자를 양성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클럽을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육성·지도하여 가정봉사로 파견하였다.

② 사회복지대회 및 강연회 개최: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행사로 1988년 4월 25일 대구시민회관에서 제1회 사회복지 강연회를 열었고 대구사회복지대회를 1990년과 1992년 2회 개최하였다.

③ 전화상담: 1981년 7월부터 전화상담을 실시, 연간 3,500여명의 상담 및 사회봉사안내를 했다. 또 각 대학 사회복지학과 실습생을 받아 매회 4주간에 걸쳐 총 12회 63명을 지도하였다.

4) 老人福祉事業

① 노인결연사업: 대구시 4개 노인복지시설의 수용보호노인 307명에 대해 후원자 결연사업을 벌여 308명의 후원자로부터 지금까지 후원금 49,196,000원의 지원을 받아 전달하였다. 또 무의탁 재가노인 82명에 대해 73명의 후원자로부터 총 14,436,760원의 후원금을 모아 무의탁 재가노인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1990년과 1991년 2회에 걸쳐 무의탁 재가노인들을 위한 ‘나눔의 효심잔치’를 배풀었다.

1990년 7월 24일에는 화성양로원 이전신축문제로 지역주민과의 토론회를 열었다. 화성양로원은 시내 대명동 건물이 낡고 협소해 새로 신축해야 할 처지에 놓였으나 소방도로를 끼지 않아 신축이 불가능하고, 인접 토지는 소유자가 턱없이 비싼 값을 요구해 이전이 불가피하였다. 그래서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에 대지를 구입하여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구시는 주민, 학계, 언론계, 사회복지전문가, 학생, 공무원 등을 모아 토론회를 연 것이다. 그 외에도 기업과 사회복지시설의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제일모직·코오롱 외 7개 기업체와 사회복지시설이 결연을 맺도록 주선했다.

5) 協議·調整事業

대구사회복지회는 1986년부터 매년 1월에 지역 사회복지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989년부터는 매년 사회복지 증진에 헌신해 온 사회복지인에 대해 ‘대구사회복지인 상’을 시상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3회에 걸쳐 7명에 대해 시상한 바 있다.

II. 綜合社會福祉館協會

대구직할시 사회복지관협회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대구지회로서 지역사회복지관의 균형적인 발전과 운영의 내실을 위한 지식, 기술, 각종 정보를 교환하여 저소득층 및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회원권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92년 7월 15일 대구직할시 9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결성되었다.

대구시 민간사회복지관의 출발은 1985년 11월 21일 개관한 한국어린이재단의 대구사회복지관으로 비롯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정부의 복지정책변화와 국민의 복지욕구 증대로 대구직할시 각 지역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이 증대되어 현재 12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이후로 6개의 복지관이 증설될 예정이다.

대구직할시 사회복지관협회 산하의 각 복지관은 전문사회복지법인체에서 대구직할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며 지역사회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구직할시 사회복지관협회 산하의 사회복지관 현황은 1993년말 현재로 다음과 같다.

〈表 6-81〉 대구직할시 사회복지관 현황

복 지 관 명	관 장	운 영 주 체	주 소	전 화 번 호
남산사회복지관	전 팔 십	장애인재활협회	중구 남산4동 2482	255-8166
대구가정복지회	박 삼 열	대구가정복지회	북구 산격동 1304-1	955-8310
종합사회복지관				
대구종합사회복지관	백 유 영	한국어린이재단	동구 서호동 89-1	964-3334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조 우 호	천주교 대구대교구 유지재단	달서구 본동 1128	636-5567
범물종합사회복지관	곽 정 웅	한국선명회	수성구 범물동 7블럭	781-2000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박 종 근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서구 내당1동 67-9	563-6016

복 지 관 명	관 장	운 영 주 체	주 소	전 화 번 호
산격종합사회복지관	한 외 근	대구 생명의 전화	북구 산격1동 750-1	943-3094
월성제2지구 종합사회복지관	신 현 일	천주교 대구대교구 유지재단	달서구 월성동 86	634-4113
월성제3지구 종합사회복지관	김 종 만	대구·경북사회복지협의회	달서구 월성동 273	634-4113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송 순 봉	사회복지법인 원불교 삼동회	수성구 지산동 지산 5단지 33블럭	781-5156
황금종합사회복지관	강 영 신	선명복지재단	수성구 황금동 965	768-1252
홀트대구종합 사회복지관	김 병 우	홀트아동복지회	수성구 범어동 238-50	753-9310

第7節 社會福祉 專門人力 養成

I. 社會福祉 專門人制度的 沿革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전문인제도의 역사는 일제때의 方面委員制度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의 방면위원제도는 독일의 엘버펠트(Elberfeld)의 구빈위원제도를 모범삼아 성립되었다.⁴⁴⁾ 방면위원은 요보호자들에 대한 보호, 구제, 직업알선 등의 개별사회사업을 수행하였다.⁴⁵⁾ 그러나 이 제도는 식민지 조선 땅에서는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아⁴⁶⁾ 해방 때까지 대구·경북지방에서는 방면위원이 없었던 것 같다.⁴⁷⁾

그 후 해방과 함께 歐美 각국에서 귀국한 동포들과 외국선교사들의 見識을 전해 듣고 또 6·25때 들어 온 외국원조단체들의 전문가들을 통해 사회사업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느껴 1953년 서울 중앙신학교에 최초로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었다. 1956년에는 국립중앙사회사업 종사자 훈련소가 창설되었다. 1958년

44) 하상락, 《韓國社會福祉史論》, 박영사, 1989, p.372.

45) 구자현, 《한국사회복지사》 3판, 홍익재, 1991, p.194.

46) 하상락, 위의 책, pp.408~415.

47) 하상락, 위의 책, p.402의 脚註 66) 參照.

에는 이화여자대학교와 한국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에, 1959년에는 서울대학교에 각각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어 사회사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대구에서는 1963년 2월 16일 한사대학(現 대구대학교 前身)에 사회복지학과와 산업복지학과가 설치되어 각각 20명씩의 신입생을 모집한 것이 사회사업에 관한 전문인 양성의 시작이었다. 대구대학교는 故 이영식 목사에 의해 설립된 대구맹아학원을 모체로 하여 1956년 5월 1일 한국사회사업학교로 그 첫발을 내딛은 데서부터 시작된다. 1962년 2월 27일에는 한국사회사업 초급대학으로 승격되어 최초로 사회복지학과를 신설, 80명의 신입생을 받았다.

이듬해인 1963년 4년제 정규대학으로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과, 사회복지학과, 산업복지학과로 분리, 각각 20명씩의 신입생을 뽑았다. 1973년 7월 25일에는 사회복지연구소와 산업복지연구소를 설치하였고 1973년 12월 29일 대학원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과정을 신설하였다. 1977년 1월 15일에는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도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되었다. 30년 동안 향토 사회복지전문인 양성에 이바지해 온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1993년까지 학사 1,240명, 석사 137명, 박사 25명을 배출하여 이 지방 사회복지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경북대학교는 1983년 3월 학부과정에 사회복지학과를 창설, 52명의 신입생을 받음으로써 첫발을 내딛었다.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사회복지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목적으로 내건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1987년 32명의 제1회 졸업생을 사회로 배출하였다. 1987년 5월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의 실시에 따라 8명의 졸업생이 전문요원 1기로 선발되었으며 지금까지 대구·경북지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은 105명에 이르고 있다. 1988년에는 대학원 석사과정이 개설되었고 1990년 8월 첫 석사논문을 통과시킨 이래 1993년말 현재로 모두 9명의 석사를 배출하였다.

효성여자대학교는 1984년 3월 사회복지학과를 개설, 학부학생 44명을 모집하여 1992년까지 5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대학원은 1990년 3월에 개설, 9명의 입학생을 선발하여 현재 5명의 석사를 배출하였다.

II. 社會福祉士 制度의 確立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1970년 1월 1일 제정, 공포된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 2191호) 제5조에 “보건사회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제도가 시작되었다. 또 제6조 및 시행령에서 사회복지법인인 직원총수의 2/5 이상을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한 대우와 근무환경 미흡 등으로 법정인원 충원이 어려워 1976년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의무를 직원총수의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전문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전문인의 양성이 많아짐에 따라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를 사회복지사로 명칭을 바꾸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바꾸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도 세분하여 1·2·3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채용의무도 직원총수의 1/5에서 1/3로 높였다.

III. 社會福祉士 制度의 意義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 제도를 규정한 것은 사회복지사업이 오늘날 하나의 전문직업 분야로 그 자리를 확립해 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러한 전문인이 충분히 양성되어 있음을 법제도로써 인정한 것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과 복지국가건설에 매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사회복지사업은 고도의 개인적 책임을 수반하는 지적 활동인 것이다. 사회복지사업은 심리학, 사회학 등을 비롯해서 의학, 생물학, 철학, 정치학, 법학, 경제학, 정신분석학 등 여러 인접학문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 집단, 지역사회를 실제로 다룰 수 있는 고요한 이론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는 구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Client에 대한 직무수행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또 사회복지사업은 연구기관이나 협회 등을 통해 새로운 이론과 기술을 개발하고 상호 경험을 나눔으로써 이를 발전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이나 훈련기관을 통해 새로운 전문가를 양성해 내고 전문인으로서의 자격과 책임, 활동내용 등을 명확히 해 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이 되는 불우계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심리적 여러가지 문제는 단순한 선의나 동정심만으로 접근해서 진단하고 대응책을 모색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직성 인정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를 전문가에 의해서 계획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적인 요청인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은 종전의 '사회복지사업종사자'를 '사회복지사'로 격상하고 그 자격요건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은 일정수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했다.

Ⅳ. 社會福祉士 資格證 交付 現況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부터 그 근거를 마련하여 1971년 9월부터 보건사회부에서 발급하다가 1972년 8월부터 자격증 발급업무를 각 시·도에 위임하였다.

각 시·도에서는 동자격증을 1974년도까지 발급하였으며, 이후는 시·도에 따라 시기는 다소 다르나 시·군·구에 동업무를 위임하여 발급하여 오던 중 1984년 2월 28일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업무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위탁받아 교부하게 되었다.

보건사회부에서는 동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2호 및 부칙 제5조에 근거하여 동업무를 협의회에 이관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업무처리지침(사회 1461~1466)을 1984년 11월 2일자로 마련하였고, 이를 근거로 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동업무추진세부규칙(안)을 마련, 1985년 2월 5일 보건사회부의 승인요청을 하여 동년 2월 27일 이를 승인받게 됨으로서 동년 3월 1일부터 협의회가 동 자격증을 교부하기 시작하였다.

〈表 6-82〉 시설종사자 중 자격증 소지자

연 도	시설종사자 수	자 격 증 소 지 자			
1993	50개 시설	계	1 급	2 급	3 급
	733명	153	47	30	76

〈表 6-83〉 전문요원수

연 도	총 인 원	자 격 증 소 지 자			
1993	143	계	1 급	2 급	3 급
		143	140		3

第8節 其 他

I. 大邱直轄市立病院

1914년 시내의 전염병환자를 수용, 치료하기 위해 남산동에 「부립 전염병격리병사」를 설립한 것이 시립병원의 기원이다. 1922년에 서구 내당동에 대지 7,695㎡, 건평 1,633㎡(약 500평) 규모의 병동을 건립하여 이전하고 부립회생병원으로 개칭하였고, 1945년 8·15해방과 더불어 '대구부립병원'으로 개칭하였으며, 1949년에는 '대구시립병원'으로 개칭하였다. 6·25사변 중에는 수도경찰병원에 병사를 임시로 대여해 주었고, 1954년에는 공군의 원조로 북구 칠성동 409번지에 병실을 증설하였다. 한편 1956년에는 중구 동인동 295번지에 유료병원을 증설한 바 있으며 1961년에 이를 폐지하였다. 1962년에는 서구 중리동 690번지에 대지 9,900㎡, 연건평 1,798㎡(약 540평)의 병원을 신축하여 이전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68년 현재 대구시립병원의 시설현황은 <表 6-84>와 같다.

<表 6-84>	대구시립병원 시설현황	(1968년 현재)
1. 건물; 본건물, 격리병동, 결핵병동, 사체실, 취사장, 숙사, 창고 및 세탁소 각 1동		
2. 기능별 구조; 원장실, 서무실, 수부실, 내과진료실, 외과진료실, X선실, 약제실, 수술실, 검사실, 목욕실, 비리실, 이용실 각 1실, 세면장 2실, 외과병실 3실, 내과병실 6실, 정신병실 5실, 성병실 1실, 마약실 2실, 결핵병실 5실, 전염병실 10실(입원실 계 32실), 변소 8실.		
3. 치료과목; 1)내과: 일반내과, 정신, 마약, 전염 2)외과: 일반외과, 성병, 3)X선과 4)검사실		
4. 수용능력; 내과 20, 외과 20, 결핵 20, 전염병 30, 성병, 마약, 정신 각10(계120명)		
* 직원으로서는 의사 4, X선사, 세균검사원, 약사, 약제조수, X선조수, 해부기사 각 1명; 의무조수 2명, 수위 2명이다.		

II. 民間 自願奉仕活動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책임사상에서 점차 사회책임사상으로 옮겨가고 있다. 시설보호보다 재가보호가 강조되고 민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고 있다. 지역복지와 정상화이념이

확산되고 있다. 그것은 민간의 자원봉사활동으로 구체화된다. 대구지역의 사회복지사업은 처음부터 민간주도로 수행되어 왔지만 그것은 몇몇 소수의 선각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을 뿐 대중적인 참여는 없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종교기관이나 대학 동아리, 사회운동단체 등 소규모 집단들이 사회복지사업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해 왔으나 기록을 찾을 수 없어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할 길이 없다.

대구지역의 본격적인 자원봉사활동은 1982년 대구직할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시설에 파견, 봉사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기초교육을 실시한 데서부터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구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까지 38회 교육을 실시하여 모두 1,8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연계시켜 왔다.

1984년에는 여성회관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교육을 실시했고, 1985년 6월에는 생명의 전화에서 상담봉사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 지금까지 18회에 걸쳐 1,25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주로 생명의 전화를 통한 자원상담자로 봉사하고 있다.

1988년에는 민간자원봉사운동을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몇몇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대구 볼런티어센터를 설립하고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연 25회에 걸쳐 1,500여명을 수료시켰다.

맹인복지연합회는 1987년부터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5회에 걸쳐 508명의 수료자를 내었고, 나눔의 전화도 1988년 6월 28일 제1회 자원봉사자교육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12회에 걸쳐 508명의 수료자를 내었다. 맹인복지연합회에서는 교육수료자를 주로 맹인을 대상으로 봉사하는데 파견하였다. 이들은 맹인용 녹음서 제작을 위한 책낭독과 맹인 가정을 방문하여 봉사하는 활동을 해왔다. 나눔의 전화에서도 교육수료자들을 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일에 파견했다.

민간에 의한 볼런티어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즈음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재가노인들에 대한 가사봉사사업이 법으로 정해짐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1992년에는 가톨릭사회복지회와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교육을 실시하였다. 가톨릭사회복지회는 지금까지 6회의 교육을 통해 650여명의 수료생을 양성하여 주로 가톨릭계 사회복지사업에 봉사케 하였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지금까지 4회의 교육을 실시, 대구직할시 소재 복지관에 파견하여 가정봉사원으로 활동케 하고 있다. 대구직할시에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과 사업실적은 다음 <表 6-85>와 같다.

〈表 6-85〉

대구지역 볼런티어 활동 실태

기 관 명	내 용	비 고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	82년부터 교육실시, 38회교육, 1800여명 수료	기 초 교 육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87년부터 교육실시, 5회교육, 328명 수료	장 애 인 대 상
카 톨 릿 사 회 복 지 회	92년부터 교육실시, 6회교육, 650명 수료	기 초 교 육
여 성 회 관 산 하	84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13개 지역에 설치운영	여 성 대 상
자 원 활 동 인 력 은 행	여성개발원에서 시작했는데 91년부터 정무제2 장관실에서 전국 125개 센터 설치운영	주 부 중 심
맹 인 복 지 연 합 회	87년부터 교육실시, 5회교육, 508명 수료	맹 인 대 상
나 눔 의 전 화	86년 6월 28일부터 12회 교육, 508명 수료	장 애 인 대 상
생 명 의 전 화	85년 6월부터 18회 교육, 1,256명 수료	상 담 봉 사
대 구 볼 런 티 어 센 터	88년부터 25회 교육, 1500여명 수료	기 초 교 육
재 가 복 지 봉 사 센 터 (12개 복지관)	92년 1월부터 연 4회교육	가 정 봉 사 원

자료: 대구볼런티어 센터.

위에서 열거한 기관외에도 많은 기관, 단체에서 볼런티어 교육, 파견업무를 하고 있으나 볼런티어들의 수나 활동면에서 부족감이 많다. 볼런티어 활동은 그 수적 증대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교육의 기회는 증대한 반면 그 내용은 아직도 혼란의 시기이다. 각 기관마다 볼런티어의 확보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중복등록으로 인해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表 6-86〉

社 會 福 祉 關 聯 年 表

설 립 연 도	전 국	대 구 직 할 시
1784. 2	이승훈 북경에서 구베아 주교에게 세례받음 (한국천주교 창립)	
1852.	프랑스인 매스뜨르 신부 입국	
1854.	매스뜨르 신부 한국 성영해회(Saint-Enfant) 설립 (한국 최초의 근대적 사회복지사업)	
1876.	개국	
1884. 9.	미국장로교회 알렌(Allen) 입국(한국 개신교 회 창립)	
1885. 3. 15	「천주교 고아원」 설립(한국최초의 고아원) 및 부설 양로원 설립(한국 최초의 양로원)	

설 립 연 도	전 국	대 구 직 할 시
1886.	한불수교조약체결(신교자유조항포함)	
1893. 4. 22		배위량 선교사 대구에 개척 전도(대구제일교회 창립)
1910.	한일합방	
1913. 2		플렉처박사 나환자 진료소 대구애락원 설립
1914	조선 水難 구호령 시행	
1915. 10. 15		백백합 보육원(육아시설) 설립
1917. 2. 1		천주교 대구본당 仁愛會 창설
1918. 9. 15		대구 YMCA창설
1921. 4.	조선 사회사업연구회 발족	
1923. 12.		대구 경북구제회(육아시설) 설립
1924.	중앙에 사회과 개설-진홀, 자선, 사회사업, 재생원, 감화원 등 관장	
1927. 2.		경상북도 내무부 지방과(진홀, 구제, 사회사업 관장)
1927. 2.		대구 天理教 內鮮同慶會(貧窮兒 教育施設)설립
1929. 1.	재단법인 조선사회사업가 협회 창설	
1934. 7. 16		대구 샬트르 성바오로수녀회 부설 施療院 개설
1944.	조선구호령 시행	
1945.	해방 군정청 보건후생국 창설(사회복지, 노동문제 담당 보건사회부 전신)	
1946. 4. 19		대구광명학교 설립
1946. 4. 19		대구영화학교 설립
1948.	대한민국 헌법 제정 선포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보호를 명문화 - 사회복지실현의 법률적 근거 마련	
1950. 6. 25	6·25사변 발발, 군사원호법 제정	
1951. 1.		구세군 혜천원 설립

설 립 연 도	전	국	대 구 직 할 시
1951.	경찰원호법 제정, 전몰군경유가족 및 상이군경 연금		
1952. 1. 6			애망원 설립
1952. 3. 20			호동원 설립
1952. 8.			대봉탁아소, 대봉모자원 설립
1952. 9. 15			성보재활원 설립
1953. 5.			희락원 설립
1954. 5. 31			대구혜육원 설립
1956. 5. 22			대성원 설립
1956. 5. 26			신애보육원 설립
1957. 6. 18			신생원 설립
1957. 9. 16			애생보육원 설립
1957. 11. 30			에덴원 설립
1957. 12. 1			인권연맹 대구지부 발족
1958. 2.			영락양로원 설립
1958. 3. 1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설립		
1958. 7. 27			대구혜천원 설립
1958. 11. 20			육영학사 설립
1958. 12. 31			시립희망원 설립
1959. 3. 1	서울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설립		
1959. 7. 27			에덴원 설립
1959. 8. 30			새별원 설립
1960. 11. 17			희망의 집 설립
1961.	5·16군사쿠데타, 제3공화국 수립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헌법에 규정, 국가의 사회 보장 책임 규정, “민생고 해결을 혁명공약으로” 생활보호에 주력, 생활보호법 제정 갱생보호법, 윤락행위방지법, 아동복지법 제정		
1961. 10. 17			베다니농원 설립
1961. 11. 11			화성양로원 설립
1962.	재해구호법 제정		

설 립 연 도	전	국	대 구 직 할 시
1962. 3. 29			영락양로원 설립
1962. 3. 29			대구신망애원 설립
1962. 5. 26			호동원 설립
1962. 6. 7			기독교 가정복지관 설립
1962. 7. 26			가톨릭여자기술학원 설립
1962. 8. 30			천광보육원 설립
1962.			가톨릭피부과 의원 설립
1963. 3. 1	중앙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설립		
1963. 5. 31			한국SOS어린이 마을 설립
1963. 9. 25			영생애육원 설립
1963. 11. 3	산재보험법 제정		
1963. 12. 16	의료보험법 제정(법률 제1,623호)		
1964. 3. 1	성심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설립		
1964. 3. 1			한사대학(현 대구대학교 전신)
			사회사업학과 설립
1964. 3. 16			대성보육원 설립
1964. 8. 4			복음양로원 설립
1965. 8. 20			애활원 설립
1966. 5. 4			춘광 대구요양원 설립
1966. 6. 1			성보재활원 설립
1966. 12. 26			대구보건학교 설립
1968.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1968. 5. 15			사회복지회관 시설연합회 창립
1968. 7. 9			대구남양학교 설립
1968. 10. 7			애활원 설립
1970.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의료보험법 제정		
1970. 1. 1	사회복지사업법 공포		
1970. 3. 1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설립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설립		
1970. 4. 1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1971. 1. 12			성부 정신수양원 설립
1971. 11. 1			가톨릭 문화관 개관

설 립 연 도	전	국	대 구 직 할 시
1971. 12. 28			대구가정복지회 설립
1973.	국민복지연금법 제정-실시보류		
1973. 11. 1	아동시설연합회 창립		
1976.	제31차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정		
1977. 7. 1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조합 설립 실시		
1977. 12. 31	의료보호법, 특수교육진흥법		
1978. 11. 23			목련모자원 설립
1978. 12. 6			애망원 설립
1979.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적용		
1979. 3. 10			노인시설연합회 창립
1980. 4. 1			희망원 운영을 천주교대구교구에 위탁
1981.	제5공화국 수립,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 제1회 재활증진대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개최,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헌법에 규정, 행복추구권, 환경권 신설		대구직할시 승격
1981. 6. 1			대구대학교 점자도서관 개관
1981. 6. 2	재활과 신설(대통령령 제10,565호)		
1981. 6. 5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 제정 20년만에 개정,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 복지법 제정		
1981. 6. 29			대구선명학교 개교
1981. 10. 19			가톨릭 여성교육관 개관
1981. 10. 29	공교 의료보험공단 설립		
1982.	생활보호법 개정(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흡수)		
1982. 1.	영세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교부사업 실시		
1982. 7.	장애인취업알선사업 실시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1982. 11. 20			대구덕희학교 개설

설 립 연 도	전	국	대 구 직 할 시
1983. 2.			장애인 재활협회 설립
1983. 3. 1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설립
1983. 7. 25			대구정신병원 개원
1984. 3. 1			효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설립
1984. 6. 1			대구생명의 전화 설립
1984. 8. 27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립
1984. 11. 2			가정법률상담소 설립
1986.	제6공화국 수립, 헌법개정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의 무”,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을 실시할 의무”		
1986. 6. 26			한국선명회 설립
1986. 9. 4			대구해림원 설립
1986. 12. 1			대구대학교 임상사회사업실 개소
1987. 2. 11			구세군 우정의 집 설립
1987. 3. 17			대구양친회 설립
1987. 5. 27			대구노인요양원 설립
1987. 9. 1	대한법률구조공단		
1987. 11. 15			소년감별소 개소
1988.	국민연금법 전면 실시 “재해예방 노력의무”등을 국가에 부과, 의료 보험법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실시		
1988. 1. 1			맹인선교회 설립
1988. 10. 15 — 10. 24	제8회 서울 장애인 올림픽 대회		
1988. 11. 1			
1989. 1. 19	장애인 등록사업 전국확대실시		대구 요셉의 집 설립
1989. 9. 8			성산노인요양원 설립
1989. 12. 22			애망원 설립
1989. 12. 30	모자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영유아보육법 등 제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대폭개정 보호관찰법 제정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실시		

설 립 연 도	전	국	대 구 직 할 시
1989. 12. 30	장애인 복지법 전문개정		
1990.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0. 2. 24	청소년종합상담실		
1990. 8. 10			바오로 청소년의 집 설립
1990. 8. 20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설립
1990. 10. 26			‘요셉의 집’ 무료급식 개시
1991.	영유아보육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사회복지사업법 대폭 개정		
1991. 2			선명회 대구사회복지관 설립
1991. 7. 1			안나노인요양원 설립
1991. 7. 1			안나요양원 설립
1992. 1. 1			백백합보육원 아동일시보호소로 변경
1992. 2. 26			산격종합복지관 개관
1992. 3. 9			정안노인요양원 설립
1992. 4.			소망원 설립
1992. 12. 3	NU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장애인의 날』 로 정함		

第7章 市民意識

第1節 市民意識 研究 흐름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지만, 혼자 사고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서로 유형 무형의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간다. 또한 생활환경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생각하는 내용이나 방식도 바꾼다. 특히 인간들은 한 지역을 중심으로 무리를 짓고 오랫동안 상호작용하면서 특정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이렇게 한번 형성된 문화는 다시 그 사회성원들에게 생각과 말, 행동에 대해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특정 지역의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고 다른 곳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을 갖는다.

인간들은 사회적 이동이 빈번하지 않았던 전통사회에서는 지리적 조건을 포함한 자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만큼 지역에 따른 특징이 의식뿐만 아니라 인간생활 다방면에 걸쳐 나타났었다. 하지만 근대이후의 사회에서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他地域民들과의 교류가 활발하여 어느 특정 지역사람들의 특징을 잡아내는 일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산업화와 더불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지역적 출신배경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 지역사회를 이루게 되었으며, 끊임없는 이동으로 말미암아서 한 지역사회의 고유한 성격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그렇지만, 시민사회의 진행이라는 보편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의 특수한 사정과 생활경험에 기인한 시민의식의 차이를 발견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지역에 관련된 이해관계에 따라 그 주민들은 일정한 방향으로 반응을 나타내기 마련이며 이러한 공동반응을 통해서 일체감이 형성되고 나아가 일정한 사고유형이 나타난다 할 것이다. 각종 현안들에 대하여 民意가 수렴되어야 하는 시민사회에서는 오히려 집단간, 지역간 이해의 대립이 첨예화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시민들은 더욱 더 분명한 사회의식과 자기인식을 해 간다고 하겠다.

전통사회에서 나타난 지역적 특성은 주민들간의 機械的인 連帶를 반영한 것이라면, 대조적으로 현대사회에서의 지역적 성격은 주민들의 有機的인 連帶로부터 발생한다고 본다. 전통사회에서는 출생과 더불어 부여된 귀속적인 지위에 따라서 위계질서를 이루기 때문에 개인적인 자기이해의 인식과 실현을 제도적으로 잘 수용하지 않는다. 전통에 기초한 집단공통의 가치

와 규범이 개인의 개별적 사고와 행동을 구속하는 측면이 그만큼 강한 셈이다.¹⁾ 반면에 현대 사회로 들어와서는 각 개인의 자기판단과 노력에 따른 성취적 지위가 더욱 중요하다. 이제 개인이 갖는 지위들의 서열적 위치는 사회전체의 분업구조에서 얼마만큼 기능적 중요도를 차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결국 개별 성원들은 주체적인 자기이해의 인식과 실현을 위하여 분명한 자기 의사표현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특정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목적을 같이 하는 성원들끼리 집단을 이루고 일정한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이런 집단적 공동노력이 가족 단위에서부터 지역사회, 나아가 사회전체로까지 확대해가는 것이야말로 현대사회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렇게 볼 때, 현대 산업사회에 들어 비로소 나타난 시민의식은 일정한 지역을 범주로 하여 공동의 집단이해를 실현하려는 주체적 인식이자 공유한 태도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민의식은 시민들 스스로가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自己正體意識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반의 지역적 이해관계에 대한 일정한 성향까지 포함한다. 이는 시민권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파생한 보편적 현상이지만, 지역과 연관된 사안과 여건에 따라 변모·발전하는 특징을 지닌다고 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구직할시의 시민의식은 바로 대구라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갖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주민들이 지닌 공통적인 자기이해 인식과 태도를 말한다. 이러한 대구 시민의식에 대한 파악은 여러 갈래로 이루어진 지역문화 및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노력들에 힘입지 않고서는 시도할 수 없는 작업이다. 대구 시민의식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이해하는 일은 앞으로 생겨날 시민들의 집단적인 의사표출의 경향성을 유추하는 데 도움이 될 줄 안다.

I. 市民意識 研究 學史

시민의식에 관한 연구는 서로 다른 학문적 노력들을 결집한 소산이다. 사실, 한 지역적 단위에 거주하는 구성원들의 의식을 파악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달리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초점에 따라 그 강조하는 조사내용과 방법이 달라야 마땅할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갈래로 진행되어온 학술적 연구들을 잠시 정리하는 일은 이 부문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줄 안다. 이는 또한 우리가 택하고자 하는 접근방법에 대한 합리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1) Emile Durkheim,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1956.

1. 文化類型과 人性 研究

특정 지역민들의 의식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문화인류학적 연구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 탐험가나 여행자, 선교사 등이 타민족에 대한 묘사를 남긴 문헌기록을 토대로 해서 일부 서구 학자들이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비서구인들의 인성을 파악한 효시라 할 수 있는데, 대략 19세기 중엽에서 비롯되었다.²⁾ 초창기 연구자들에 따르면, 미개인 또는 원주민으로 지칭된 비서구인들은 문명인이라 자처한 서구인들과 다른 心性을 지닌다고 보았다. 곧 비서구인들은 신비적이고 前論理的인 단계의 사고를 한다는 주장이 초기의 연구에서 강조된 점이었다.

20세기에 들어서 점차 미국학계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유행하면서 문화와 인성에 대한 보편적인 학설에 관심이 모아졌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여러 학자들의 잇따른 연구작업이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 베네딕트(Ruth Benedict)의 저서인 《문화의 유형(Patterns of Culture)》³⁾이 주목받으면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문화에 대한 논의보다도 어느 특정 사회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문화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싹텄다. 그녀는 문화란 인성의 확대라고 파악하고서, 한 문화권에 속하는 성원들의 행위들 가운데 일관되게 흐르는 기본적인 유형을 주된 관심거리로 삼았다.

베네딕트에 따르면, 북미주 서북해안에 위치한 벵쿠버 지역의 콰키우틀(Kwakiutl)족과 미국 서남부 뉴멕시코 주의 주니(Zuni)족을 관찰한 것을 기초로 하여, 전자는 디오니소스형 문화(Dionysian configuration)이라고 또 후자는 아폴로형 문화(Apollonian configuration)라고 칭한다. 디오니소스형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인성은 단조로운 일상생활의 반복을 도피하여 어떤 황홀한 경지의 정신상태에 도달할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형성되는데, 마약이나 알콜을 儀禮에 사용하며 경쟁적으로 재물을 파괴하고 허풍을 떨기를 주저하지 않는 성향을 나타낸다고 한다. 반면에 아폴로형 문화권 사람들은 유별난 경험을 불신하고 오히려 질서정연한 일상생활을 따르기를 좋아하며 온순하고 관용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한다. 결국 베네딕트의 이론은 한 문화와 그 지역주민의 인성 사이에 관한 경험적 관찰 기록에 근거로 시도된 최초의 일반화 작업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겠다. 하지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 각 지역의 문화들을 단 몇 가지로 유형화하여 이해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곡해와 편견을 낳을 수 있는 문제점도 지닌다 할 것이다.

베네딕트보다 더 오랫동안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와 인성에 관한 또 다른 독보적

2) 이광규, 《문화와 인성》, 일조각, 1990, pp. 6~8.

3) Ruth Benedict, *Patterns of Culture*,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34.

인 분석을 남긴 인류학자가 미드(Margaret Mead)이다. 미드는 멜라네시아의 사모아와 뉴기니 일대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문화마다 다른 육아양식을 연구하고 육아양식에 따른 인성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그녀의 대표적 저서의 하나인 《세 부족사회에서의 性과 氣質》⁴⁾은 뉴우기니에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한 세 부족이 다른 기질적 특성을 보이는 점을 잘 밝혀주고 있다. 아라페쉬(Arapesh)족은 남녀 모두 온정적이고 평화스런 기질을 소유하며, 문두구모(Mundugumor)족은 서로를 적대시하는 불신적인 성격과 불안감이 많고 타인에 대해 공격적이며 질투심과 복수심이 강한 성향을 지닌다. 참불리(Tchambuli)족은 여자들이 활동적이고 모험심이 강하며 생계를 주로 담당하는 반면, 남자들은 가사를 맡고 몸치장에 신경을 쓰며 상냥하면서 소심한 기질을 갖고 있는 편이다.

결국 미드의 세 부족 비교연구는 비록 이들 부족들이 파푸아 뉴우기니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전혀 다른 기질적 특성을 가졌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미드의 발견은 현지참여관찰이라는 방법론상 정밀을 기한 데서 나타난 큰 성과이다. 그러나, 주민들 개개인에 대한 누적된 자료에 의한 전체상을 기술한 것이 아니고 그 문화의 이상적 유형을 기준으로 기질을 서술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연구가 시사한 내용은 의미심장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곧 인성이나 기질은 性別과 같은 생리적이고 유전적인 특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사회화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1930년대에 나타난 베네딕트와 미드의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이 치루어지는 동안에 각국의 국민성 연구를 자극하였고, 전쟁 이후에는 연구대상 지역과 민족을 넓혀서 심층적인 조사연구가 진행되는데 밑거름 역할을 하였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심리학적 행동주의와 같은 새로운 이론들과 접목하여 인성형성의 단계적 발달과정에 관한 세밀한 조사연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都市地域 研究

비서구사회의 여러 부족들에 대한 현지 참여관찰조사는 인간사회생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서구 학계에 많이 안겨다 주었다. 그 가운데 미국사회가 대중산업사회로 탈바꿈하던 1920년대에 이르러, 지역사회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던 터에 이러한 문화인류학적 연구방법을 자연스럽게 접목 응용한 연구들이 나타났다. 이 연구들은 인류학자가 미개부족을 접근이해하는

4) Margaret Mead, *Sex and Temperament in Three Primitive Societies*, 조혜 정역,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8.

식으로 미국내 지역사회를 접근이해하려는 시도로서,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린드 夫妻(Robert and Helen Lynd)의 연구⁵⁾와 워너(W. Lloyd Warner) 및 그 동료의 연구⁶⁾를 손꼽을 수 있다.

린드 부처는 그 당시 미국 생활의 표본에 해당하는 비교적 동질적인 작은 지역사회를 집중 연구하여 주민들의 일상과정 전체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일명 “미들타운(Middletown)” 연구라 불리는 이들의 선구적인 업적은 생계, 가사, 자녀훈육, 여가, 종교, 지역사회 활동참가에 대한 세밀한 기술을 담고 있고, 그 가운데 생계라는 경제적 요소가 다른 활동들에 가장 포괄적으로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곧 지역민의 의식을 포함해서 생활양태 전반에 대하여 生計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勤勞階級(the Working Class)은 주로 사물에 연관된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반면에, 營業階級(the Business Class)은 압도적으로 사람들과 연관된 활동을 한다.

린드 부부가 동일한 중소도시에서 10년을 간격으로 하여 반복적인 관찰연구를 한 점도 돋보이는 점이다. 첫번째 연구에서 밝힌 계급적 요소가 시민생활 전반을 조명하는데 관건이 된다는 ‘발견’을, 두번째 연구에서는 적극적으로 檢定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계급적 불평등은 전체 지역사회의 종합에 저해하는 작용을 하고 경제적 불황에서는 생활 조직기반에 위기를 몰아오게 되는 점을 설파하였다.

린드 부부의 연구에서 이용한 것과 유사한 연구기법으로, 워너와 그 동료 런트(Paul Lunt)는 이른바 “양키시티(Yankee City)”에서 1930년에서 1934년 동안 집중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상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그들이 이용한 연구기법은 정보자들에 대한 면접조사, 참여관찰, 설문지조사, 사례분석, 전기, 생활사, 자서전, 친족계보, 기록문헌 등 다양한 것이었다. 그 결과, 지역민의 사회생활에서 경제적 차원의 중요성이 현저하다는 주장을 펴는 데는 설득력을 얻었으나, 계급의 개념을 그 지역사회환경에서 실제 측정하려는 시도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런 판단은 워너로 하여금 “양키시티”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1940년대 초에 더 세련된 접근방법과 조사기법을 통해 일명 “존스빌(Jonesville)” 연구로 나아가게 하였다. 첫번째 연구에

5) Robert Lynd and Helen Lynd, *Middletown: A Study in Modern American Culture*,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1929.

_____, *Middletown in Transition: A Study in Cultural Conflicts*,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1937.

6) W. Lloyd Warner and Paul Lunt, *The Social Life of a Modern Commun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41.

W. Lloyd Warner, *Democracy in Jonesville*, New York: Harper and Row, 1949.

W. Lloyd Warner, *Social Class in America*, Chicago: Social Science Research Associates, 1949.

서 사용한 계급측정방법을 수정하여 계급적 지위의 특징을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하였고, 이것을 준거로 하여 더 객관적인 진술을 통해 도시지역의 불평등구조와 다른 생활영역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린드 부처의 연구와 위너와 그 동료의 연구의 공통점을 든다면, 인구규모가 크지 않은 작은 도시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그 각각의 지역사회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관하여 참여관찰하는 방법을 이용한 점이다. 아울러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지역민들의 생활전반에 걸쳐 무엇보다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다름아닌 경제적 여건임을 밝혀내었다. 특히 지역사회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똑같은 도시를(린드 부부의 경우) 다시 방문하거나 또는 유사한 도시를(위너의 경우) 골라 반복 연구하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 그리하여,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데 계급적 요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계층체계에 대한 연구관심을 이끌어내어 지역사회연구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한 바가 크다.

이들 연구들의 이런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비판점을 제기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이들이 선정한 작은 도시들의 대표성 문제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그 당시 미국 지역사회의 ‘표준’으로서 인종적으로 거의 동질적이며 일상생활이 안정된 작은 도시를 의도적으로 골라서 연구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傾倒된 전제 때문에, 이들은 계급적 요소를 지역사회 생활에서 갈등과 대립보다는 통합과 질서의 기능으로 파악하고 말았다. 다음으로, 이들이 지역사회를 하나의 전체적 단위로 접근하고자 한 점은 높이 살만 하지만, 그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지역사회의 계급구조 변동과 그 역할의 변화에 대한 주의마저 기울이지 못한 점이다. 이는 반복적인 연구를 시도하고서도 그 의의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음을 뜻한다. 사회적 변동에 기인하는 주민생활의 변화에 대하여 이론적인 함의를 추출하지 못하고 사실을 나열하고 기술하는 데 치중한 때문에 생긴 문제점이라 하겠다. 한마디로, 이들의 연구디자인이 하나의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둘 이상의 도시들을 상호비교하여 그 변화상을 추적하는 형태를 취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도시는 이질적인 성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규모면에서도 거대 도시화의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기법이나 조사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기란 엄청난 비용을 소요할 것이므로 엄두를 내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

3. 社會的 性格 研究

인간들의 성격 차이에 대한 유전적, 생물학적 설명을 배제하고 주변 환경의 우월적 영향에 주목한 이론들은 사회심리학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곧 인간의 성격형성에 대해서 자연적 환

경보다도 사회적 환경이 월등하게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성격’을 들 수 있다. 이는 한 사회⁷⁾에서 발견되는 성격상의 특징을 그 사회가 갖는 사회구조나 문화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 사회가 지닌 사회적 성격이란 것은 그 “사회⁸⁾의 대부분의 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구조의 본질적인 핵심으로서 그것은 그 집단에 공통된 기본적인 諸 경험과 생활양식의 결과로서 발달된 것”이라고 본다.⁸⁾

프롬(E.Fromm)은 독일에서 나찌스가 단시일내에 권력을 획득하고 그 세력이 급격히 팽창하게 된 주된 원인을 당시 하층중산계급의 사회적 성격에서 찾았다. 프롬에 따르면, 주로 소상공점주인, 기능인, 봉급생활자들이 하층중산계급에 속하는데, 이들은 노동자계급이나 상층중산계급 또는 과거의 귀족과는 다른 사회적 성격을 지닌다고 한다. 강자에 대해서는 동경과 사랑을 나타내는 반면, 약자에 대해서는 경멸과 증오를 드러내는 성격을 갖는다 본다. 그래서 히틀러는 이들의 성격을 교묘히 이용하여 권력을 동경하고 권위에 복종하여 강자에 무조건 충성하는 매조키즘(masochism) 성향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써 대외적인 강경정책을 천명하여 민족적인 우월감을 심어주었다. 아울러 경제적 곤란에서 오는 욕구불만을 유태인 배척과 학살이라는 방식을 통해 해소시켜줌으로써 하층중산계급의 썬디즘(sadism) 성향을 충족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나찌스가 하층중산계급의 사회적 성격에서 오는 감정적인 에너지를 동원하여 그들의 정치적·군사적 목적을 수행하는 힘으로 이용하였다고 프롬이 분석하고 있다.

리즈먼(D. Riesman) 역시 사회적 성격의 개념을 이용하여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의식성향의 변천을 분석한 대표적인 학자로서 빼놓을 수 없다.⁹⁾ 서구사회에서 중세이래 생긴 일정한 인구추이에 주목하여 역사적 발전단계를 전통적 사회, 초기 자본주의사회, 후기 자본주의사회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그 각각의 사회에 적합한 사회적 성격을 전통지향형, 內心지향형, 타인지향형으로 구별하였다.

전통지향형의 인간은 전통적 생활방식을 답습하고 동조하여 변화와 혁신을 기피하는데, 이는 전통적 사회가 토지와 인구의 비율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관습적 행동을 인간관계에서 요구하며 개인의 창의성이나 자율성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데에 기인한다. 초기 자본주의사회로 접어들면 인구가 격증하고 사회적 이동이 심하며, 물질 팽창이 진행되는데,

7) 여기서 사회란 한 국민일 수도 있고, 한 지방일 수도 있고, 또한 한 계급일 수도 있다.

8) E. Fromm, 《자유에서의 도피》, 이극찬역, 민중서관, 1968, p. 315.

9) David Riesman with Nathan Glazer and Reuel Denney, *The Lonely Crowd: A Study of the Changing American Charact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0.

이와 같은 격동의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것이 필요하므로 새로운 인간형이 요구되는 바, 곧 내심지향형이다. 이 유형의 인간은 자기중심을 잃지 않고 유년시 부모로부터 주입받은 추상적 이상과 가치를 쫓아 행동한다. 일상생활에서는 근검과 절약을 중시하여 금욕주의적 결핍의 심리가 엿보인다. 그러다가 금세기의 후기 자본주의사회로 들어서면 대량생산과 서비스업의 발달에 힘입어 물자와 여가가 풍부해지고 인구성장도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이런 가운데 내심지향형의 내내심과 결핍의 심리는 퇴색하고 풍요 및 소비의 심리를 지닌 새로운 성향이 대두하는 바, 그것이 타인지향형이다. 이 유형의 인간은 전통이나 양친으로부터 교육받은 행동의 원리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동료, 친구, 여론, 매스 미디어와 같은 외부의 의견을 쫓아 행동한다. 마치 마음속에 레이더를 장치한 것처럼 끊임없이 타인의 신호를 포착하여 그들의 기대와 선택에 민감한 반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리즈먼은 이미 미국의 대도시 상층중류계급에서 타인지향형이 지배적 형태의 사회적 성격으로 자리잡아 간다고 보았다. 그리고 타인지향형은 미국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가 성숙해가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성향으로써 대다수 사람들의 행동양식에서 일반화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여하튼, 사회적 성격에 관한 분석은 사회구조적 특성과 변화에 따라 인간집단의 집합적인 의식상태와 행동양식에서 그 성향이 달라지는 점을 이해하는데 크나큰 기여를 한 셈이다. 특히 구체적인 시대와 사회에 따라 새로운 의식성향을 주도해가는 집단과 그 특성을 밝히는 데 시뮬하는 바가 크다. 그러면서도 아쉬운 점은 너무 거시적인 수준에서 시도하는 분석이라서, 비교적 작은 단위의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일어나는 변화를 포착하는데에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들 연구방법은 경험적 자료제시에 인색하기 때문에, 그 발견내용이 어느 정도로 객관적인 정황묘사로서 성공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얻기 힘든 것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여태까지, 인간집단의 의식구조를 파악하는데 고전적 모델이 될 만한 기존연구들을 소개하였다. 요약하면, 넓은 세계지역의 수많은 사회들 가운데, 몇 개의 원주민부족들과 도시지역민들, 그리고 일부 국민국가를 대상한 연구들은 한결같이, 이들 사회성원들이 문화와 사회구조의 영향아래 인성과 성격, 나아가 태도 및 행동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밝혀준다. 하지만, 서로 강조하는 내용과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개념용어의 사용에서 다양성을 보이며, 그 나름대로의 연구방법에서도 제한점을 안고 있다. 이는 특정 인간 개인의 내면세계나 의식을 이해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그 집합적 의식을 파악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임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전체사회를 대상으로 하든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든지, 앞의 고전적 연구들에 비견할 만한 학술적 성과는 아직 보고된 적이 없는 것 같다. 다만 린드 부처와 워너의 연구 전통을 모방한 조사들이 우리나라 사회학 분야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편이다. 이 가운데, 최근 춘천시를 대상으로 조사연구한 보고서¹⁰⁾는 다른 지역사회연구의 귀감이 될 듯하다. 그와 같은 연구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서 반복하여 시행한다면 한 지역사회의 변화상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기대할 만하다.

II. 大邱市民意識 關聯研究

대구지역권에 속한 주민들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어떤 것은 역사적인 기록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으며, 또 다른 류의 연구들은 실제 경험적인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살펴보고 있다. 이들 학술적 연구들의 역사는 둘 다 모두 그렇게 길지 않다.

1. 文獻調查研究

우리가 사는 지역권의 문화적 특성과 성격적 특징에 관한 관심은 선인들의 문헌속에 간간히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먼저, 西山大師가 8道人心을 戲談삼아 논하면서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 慶尙道人을 泰山喬嶽에 비유한 말이다. 그리고 李重煥은 擇里志 人心篇에서 역시 8道人의 성격을 논하면서 경상도의 순후한 인심이 평안도 다음으로 아주 좋다면, 風俗 質實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경상도 지역민들, 즉 영남인들의 성격이 한편으로는 태산교악처럼 기개가 강직하다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성격이 소박건실함을 그 특징으로 삼는다고 하겠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언급되어진 그 시대에서 나타난 영남인의 성격을 묘사한 것이다. 시대가 변하면 문화풍속도 바뀌고 사회구조도 달라지므로 해서 그 성원들의 성격도 변할 줄로 믿는다. 아울러서 위의 예들은 대구지역을 포함한 영남권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언급된 것이므로 꼭 대구주민들의 성격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 다만 대구의 위상이 영남지방에서 중추도시로서 손꼽을 만 하며, 또 그 배후지의 역사적 배경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참고할 내용이라 하겠다.

아무튼 대구시민들을 포함해서 영남인들은 술한 先賢들을 배출한 곳에 산다는 자부심을 오랫동안 지녀왔다. 李重煥의 擇里志 慶尙道篇에서 영남지방을 人才府庫라고 지칭할 만큼 역사

10) 한림대사회조사연구소·춘천문화방송편, 《춘천리포트: 지방자치와 전환의 모색》, 나남, 1991.

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학문과 사상 면에서 창조적인 인물을 배출한 중심지였으며, 또한 대의를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은 立節之人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온 지방이었다. 따라서 영남은 이러한 인물들의 강한 영향을 받아 온 지역임에 틀림없다.

이에 관한 단편적인 示唆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市中の 한 일간지에서 연재된 적이 있는 이 地方先人들의 소개 기사를 들 수 있다.¹¹⁾ 이 소개기사에 실린 인물들을 살펴보면 學者와 志士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비록 학술적인 방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소개인물들을 選定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라 본다.

대구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전통이 서려있는 영남지역의 행정중심도시로서 갖는 의미가 자못 큰 곳임에는 분명하다.

근대화와 더불어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 대구시민들의 사회적 성격을 학술적으로 논의한 문헌으로서는 崔弘基의 연구¹²⁾가 돋보인다.

대구시민이 지닌 특성은 대구의 배후지를 형성하고 있는 영남지방의 전통적인 사회구조와 문화에서부터 연유한다고 전제하고서, 그는 權威主義, 傳統主義, 閉鎖主義가 대구시민의 행동방식과 사고방식을 심층부에서 결정하는 ‘성격구조의 본질적인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파악한다. 대구시민의 성격구조의 重核的 요소라 해서 그것이 모든 시민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均一하게 지배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 한다. 개개인의 인성은 상이한 출생과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임을 부인하지 않고, 다만 동일한 지역에서 공통된 기본적인 경험과 생활양식 때문에 발달한 핵심적 요소의 특성에 따라 시민들이 행동하고 사고하는 경향이 짙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겠다.

대구시민의 권위주의적 성격은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의 가치관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는 영남지방이 유학자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온 탓이라고 본다. 전통주의적 성격은 “논리적인 것보다도 경험이나 전통에다 더 신뢰를 두고서 변화를 원하지 않는 심리적 경향”¹³⁾인데, 이것은 가부장적 가족제도뿐만 아니라 自足的인 촌락적 사회질서에서부터 나온 것으로 본다. 폐쇄주의적 성격 역시 가부장적 가족제도 및 자족적인 촌락공동체의 생활을 기반으로 성립한 특징으로서, 가족주의의 가치관이 확대되어 질서를 기조로 하는 생활에서 형성된 것이라 한다. 이

11) 〈영남일보〉 1967년 11월 22일자에서 시작하여 1968년 3월 29일에 이르기까지, 〈열: 古今先人和 後裔들〉의 34회에 걸친 연재기사에 모두 35인의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學者가 15인, 志士가 14인, 政治人이 3인, 武人이 3인으로 나타난다.

12) 최홍기, 〈대구시민의 사회적 성격의 몇가지 특징〉 《시정연구》, 1968, pp. 71~78.

13) 최홍기, 위의 논문, p. 74.

폐쇄주의 성격은 혈연과 지연을 중심으로 하는 배타주의로 발전가능하며, 이런 성향은 권위주의적 생활태도와 더불어서 더욱 강화하는 양상을 띠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대구사람들은 초면인사를 나눌 때 姓氏, 貫鄉 및 出生地 등을 따져서 사회적인 位階를 밝힘과 함께 혈연 지연적인 동일성 여부를 따짐으로써 곧 상대방을 동료로서가 아니면 局外者로서 의식하고 그에 따라 반응태도를 달리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上位者에게는 恭順으로 대하고 下位者에 대해서는 君臨하려고 하며 국외자에 대해서는 배타적 태도를 취한다고 한다. 국외자들에게는 자연히 이러한 태도가 대구사람들은 사귀기가 어렵다느니, 보수적이다 하는 인상을 심어주게 된다는 것이다.¹⁴⁾

최홍기씨의 이러한 분석은 대구시민의 기질적 특성을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연원을 동시에 파악하고 그 현대적 의미를 재현하여 학문적 용어로 表象化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성과라 하겠다. 그런데 대구시민들의 의식구조를 類型化하고 要目化한 근거를 구체적 자료의 제시에서 찾지 않은 제한점을 지닌다. 특히, 그의 연구 이후에 대구시가 산업구조를 비롯하여 행정구역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온 관계로 해서 오늘날의 시민의식을 얼마만큼 포착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참고로, 1979년 가을에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일제 36년과 해방 30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을 때, 대화 모임의 참가자들은 해방 30년 동안 현실적인 면에서는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심층적인 면에서는 별로 변화가 없다는 데 공통된 의견을 모으고, 여전히 의식구조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권위주의적 성향, 획일주의적 성향, 이중심리적 성향을 내세웠다.¹⁵⁾ 이 진단이 옳다고 한다면, 1970년대 말까지 우리사회 전반은 최홍기씨가 파악한 대구시민의 사회적 성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의식구조를 존속한 셈이다. 말할 것도 없이 대구라는 지역사회는 우리나라 전체사회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공통적인 의식성향을 지니고 있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의식구조에 관한 이런 종류의 접근방식으로서 지역별로 나타나는 역동적인 변화상을 이해하는 데 한계에 부딪힌다. 곧, 시민의식을 진단하는 방법으로서 현 단계의 문헌조사연구만을 의존하면, 대구시민의 사회적 성격과 우리나라 전체사회의 의식구조의 특징 사이에 질적인 차별화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고 만다.

14) 최홍기, 앞의 논문, p. 75.

15) 영남일보사, 《경북연감》, 1979, pp. 79~80.

2. 社會調查研究

바로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문헌조사는 대구시민의 의식구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장점이 있으나 구체적인 현실경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 때문에 아쉬운 점이 크다. 대조적으로, 사회조사연구는 개념의 조작화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지니고 있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공통관심사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그만큼 경험적 현실을 담아 낼 수 있다. 동시에 지역간, 집단간 차이 역시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까닭에 여러 대중매체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시중의 일간지들이 지나간 해의 각종 현안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조사를 통해 그 의식을 진단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조사는 대구시민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지 않고 경북도민을 함께 포함하여 標本調査하며 그 결과를 일괄적으로 분석처리한 내용을 보고하기 때문에, 대구시민의 의식구조를 파악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더군다나 조사항목의 대부분이 의식구조 자체를 파악한다기보다는 정부시책에 대한 만족도 또는 그 평가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계점도 있다. 또한 그 조사 시행의 주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해서 설문내용과 표집방법 등에서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時系列的인 변화상을 분석하는 자료로서는 불만족스런 면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론조사의 성격이 강한 것이지 시민의 의식조사로 간주하기에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 밖에도, 개별 연구자들이 대구시민의 일부를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경우가 있기도 하다. 특정 직업집단이나 계층을 상대로 하여 체계적으로 노동의식 및 계층성향을 측정하고 분석한 연구들을 들 수 있다.¹⁶⁾ 이들 연구 역시 그 주안점이 의식구조의 변화상을 파악하는데 있지 않다. 더군다나 대구시민전체를 母集團으로 하지 않은 조사연구인 관계로 시민의식에 관련하여 그 변화를 가늠하고자 하는 데는 부합하지 않은 자료라 해도 무방할 성싶다.

다행한 일은,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한 이후 3회에 걸쳐 대구시민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그 표본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의식조사가 있는 점이다. 이 조사들은 거의 일정한 시기를 간격으로 하고 있고 유사한 표집방법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한 것이다. 게다가 설문지 응답조사법을

16) 대구시를 조사대상지역으로 해서 의식조사를 체계적으로 시도한 대표적인 예로써 두 학위논문을 들 수 있다. 박승위, 《도시인의 소외의식에 관한 사회학적 접근》, 경북대학교 문학박사학위논문, 1992. 김지섭, 《화이트칼라의 내적 분화와 계층론적 함의:대구시 전문 관리 사무직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문학박사학위논문, 1992.

사용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조사설문지 상호간에 동일한 설문항목을 다수 포함하도록 하여서 그에 대한 대구시민들의 응답이 얼마만큼 달라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시계열적으로 대구시민의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시계열적 분석은 현재 다른 지방의 도시지역에서는 구비하지 못한 여건이라서 더욱 뜻깊은 일이다.

따라서, 대구시민의 의식구조에 관한 분석은 시계열적으로 시행한 경험적 조사연구를 기초로 하여 시도하기로 한다. 주로 계량적인 분석기법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의식구조의 심층적 측면까지 도달하는 질적분석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제한점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줄 안다. 한가지 제언한다면, 대구시와 비교가능한 몇 지역들을 동시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지역민들에 대하여, 문화와 인성의 연구들이 시사하는 것처럼, 가정내에서 일어나는 육아양식 및 자녀사회화의 구체적 과정에 대한 세밀한 참여관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게다가 일정한 시간차를 두고 반복해서 조사하여, 사회구조의 변동과 일상생활수준에서의 변화 사이에 일정한 연관성을 밝혀내는 연구로까지 나아가면 더할 나위없이 좋은 일이다. 이런 작업이 선행됨으로써, 설문지조사에 기초한 경험적 자료에 못지 않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에서 탈피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래야만 비로소 타지역과 차별성을 지닌 대구시민들의 기본인성구조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에 기초한 사회적 성격에서 나타나는 시민의식상의 특징은 무엇인지, 파악해내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다.

III. 大邱市民意識 調査研究

대구시민의 의식구조를 파악해내는 방법으로, 여러가지 대안들 가운데, 시계열적으로 시행한 설문지 조사법을 택하게 된 사정을 앞에서 다루었다.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시민들의 의식에 관한 체계적인 사회조사는 1984년 4월 9일에서 12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대구지구청년회의소의 후원으로 당시 鄭喆洙 경북대 교수가 실시하고 나중에 〈대구시민의 가치관 및 의식구조〉라는 제목으로 《시민의식 관계사업 종합보고서》에 실린 조사연구이다.¹⁷⁾

처음 조사연구가 있는 5년 뒤에 다시 鄭교수가 同청년회의소와 KBS대구방송총국 공동의

17) 정철수, 〈대구시민의 가치관 및 의식구조〉, 《시민의식 관계사업 종합보고서》, 대구지구청년회의소, 1984, pp. 123~236.

후원으로 실시한 것이 그 다음 조사연구이다.¹⁸⁾ 이 두번째 사회조사는 1989년 2월 17일에서 21일 사이에 행해졌고, 그 주된 목적은 지나간 5년 동안에 대구시민의 의식이 어느 정도 변하였는가를 비교분석하는 데 있었다. 그리하여 과반수 이상의 조사문항을 1984년도 조사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였다.¹⁹⁾ 이 사회조사는 《대구시민의식 변화조사》라는 별도의 연구보고서를 낳았다.

본 분석을 위한 마지막 사회조사는 1993년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실시한 것인데, 대구직할시사 편찬위원회의 예산으로 本執筆人의 책임아래 진행한 것이다. 1993년도의 조사에서도 역시 1984년도와 1989년도의 공통적인 조사항목을 다시 포함하였다.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이 조사의 主眼點은 거의 10년 사이에 일어난 대구시민들의 의식구조 변화상을 파악하고자 함에 있다.

요컨대, 1984년도, 1989년도, 1993년도 이렇게 3회에 걸쳐 실시한 사회조사연구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대구시민의식의 변화를 가늠하는 일이 가능하다. 그 분석결과를 정리하기에 앞서, 이들 사회조사연구들끼리 서로 비교가능한 동질적인 성격의 것인지를 따지는 일이 필요하다. 조사방법과 분석기법의 일관성 여부가 관건이라 하겠다.

1. 調査方法

세번에 걸친 사회조사는 모두 설문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조사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속성을 묻는 문항을 제외하고 공통적인 조사문항의 수는 크게 잡아 30개에 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1문항이 몇가지 다른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30항목이 넘는 조사문항이 세번의 사회조사에서 취급된 것은 무척 다행한 점이다. 하지만 처음 사회조사 때부터 장기적인 연구설계를 하지 않은 것이어서, 또 조사때마다 그 당시의 시사성 있는 문제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포함시키기도 하여서, 세번의 사회조사의 설문지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시기를 소급해서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1984년도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지만, 1989년도와 1993년도에만 서로 같이 해당되는 문항수가 10개나 더 있다.

표집방법은, 세부적으로는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3회의 사회조사 모두 대구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행정구역가운데 구청 단위에서 有意的으로 선정한 集落(clusters)을 통하여 임의표집을

18) 참고로, 청년회의소는 ‘내고장 사랑운동’의 일환으로 후원한 것이며 방송총국은 개국 5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참여한 것이다.

19) 나머지 문항은 시사성이 있는 문제와 지역민들이 그 당시 관심가질 만한 각종 정치, 경제, 사회 문제들을 다룬 것이다.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이른바 다단계 임의적 집락표집을 시도한 것인데, 크게 보아 無作爲標集(random sampling)에 가깝다고 하겠다.

1984년도와 1989년도의 조사시에는 區마다 1개의 중학교를 有意的으로 선정한 다음, 이들 각 중학교에서 3개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이들 학급에 속한 학생들의 학부모, 형이나 언니를 대상으로, 성별 및 연령별 분포를 고려하여 1개 구에 100명씩의 표본을 임의로 추출한 것이 최종 조사대상자들이다. 1984년도에는 대구직할시 산하에 6개구만 설정되었던 관계로 해서 해당 標本數가 600명이고, 1989년도에는 7개구로 늘어난 관계로 해서 조사대상자는 700명이다. 회수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부실한 것을 제외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된 설문지 부수는 1984년도에는 538부이고, 1989년도에는 688부이다. 1989년도에는 설문지 문항에 따라 無應答者가 나타나게 되어있어서 항목에 따라서는 실제분석시에 조사응답자의 수가 조금씩 달리 나타날 수 있다.

1993년도의 조사에서는 표본수가 모두 1,300인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1993년도 사회조사 당시 대구시의 常住人口를 대략 240만명으로 잡고, 그 2,000분의 1을 표본으로 선정하면 조사대상자는 1,200명이 해당된다. 이들을 7개 구의 인구수에 비례하도록 나눈 다음, 앞선 사회조사에서와 같은 절차를 통해 표본을 뽑았다. 이번 사회조사시에는 본조사에 앞서서 1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모두 회수하여 부실한 응답지를 제외하고서 행정단위별, 성별 분포를 감안하면 표본수가 母集團의 인구비례에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예비조사의 대상자 100명까지 포함하여 모두 1,300명을 조사대상으로 고려한 것이다. 이 전체 1,300명을 대상으로 1,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서 조사응답자로 하여금 自由記入式으로 응답하고 반환하도록 하였다. 끝내 회수되지 않은 경우도 있거니와 앞서 말한 것처럼 설문항목에 대하여 불충분하고 부실한 내용의 것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집계,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이 1,247부이다.

이렇게 볼 때, 세번의 사회조사는 모두 설문지 응답조사이며, 공통적으로 포함된 동일 문항수가 30항목을 넘어서고, 표집방법에서도 동일한 원칙 아래 유사한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졌으므로, 상호비교를 위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이 된 표본수에 있어서 차이가 난 것은 행정구역단위의 변경과 상주인구수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더욱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에서 나타난 것이므로 비교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2. 分析技法

세번의 사회조사는 각각 그 조사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단순한 백분율분석을 시도하였다.

1984년도 사회조사는 그 당시 여건상 통계처리를 수작업으로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변인들 사이의 상관성을 따지는 고급 통계분석은 시도하기 어려웠다. 1989년도의 조사결과를 분석할 때에는 전산으로 통계처리를 하였으며,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주요한 항목들간의 교차분석표를 제시하고 chi-square 검정까지 실시할 수 있었다.

최근에 실시한 1993년도의 사회조사결과는 전산부호화하여 보관하고 있으므로 분석목적에 따라 다양한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전의 1980년대 조사들의 原資料(raw data)는 이미 폐기되었고 그 분석결과만 단순통계 형태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고급통계인 시계열분석(a time-series analysis)을 통한 변화추이를 잡아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단순한 백분율표를 상호비교하여 시민의식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런 분석기법은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오히려 간단명료한 내용을 제공하므로 이해에 도움을 더해 주는 면이 있다. 다만 조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 분석표가 제시하는 수치의 해석에 조심을 기하여야 할 줄 안다.

따라서, 똑같은 문항에 대한 응답의 비율이 항목별로 세월이 지나면서 얼마만큼 달라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시민의식의 변화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결코 시민의식이란 개념을 하나의 경험적 지표로 조작화하는 일은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부문에 대한 응답을 조목별로 정리하여 살펴보고 나중에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나는지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시민의식의 변화상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 옳겠다. 앞서 언급했듯이, 설문지에 실린 문항에 대한 응답 내용만을 가지고 시민의식을 파악하는 일은 제한된 여건아래서 취하는 次善의 방법이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의 하나는 시민의식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포착하는 일이다. 곧 시민운동의 역사적 추이를 각종 자생적 민간단체의 형성시기와 주요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그 성격변화에 주목함으로써 시민의식의 성향을 분석할 수 있으리라 본다.

第2節 大邱市民意識의 展開

대구직할시의 시민의식은 대구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갖가지 懸案들에 대하여 시민들 대부분이 무엇을 인지하며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측정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동일한 사안에 대해 시기를 달리하면서 응답내용이 변하는 정도를 가늠하여 시민의식의 변천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곧 설문지를 통한 표본조사를 일정한 시기에 걸쳐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시민의식의 전개과정 樣相을 推論할 수 있는 일이다.

대구시민의식의 전개양상을 살펴봄에 있어 조사설문내용을 크게 세가지 부문별로 나눌 수 있다. 그 세가지 부문이란, 첫째 대구지역사회 자체에 대한 관심과 태도, 둘째 대구지역민들에 대한 자체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생활에 관련한 가치관이다. 대구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태도는 대구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얼마만큼 충족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이며, 대구지역민들에 대한 자체평가는 다름아닌 대구시민 스스로가 많이 지니고 있다고 믿는 시민적 기질과 행위형태를 묻는 것이며, 사회생활에 관련한 가치관은 대구시민들이 일상 사회생활 가운데 겪은 문제들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세 부문에 관련된 설문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구시민들이 대구지역사회 자체에 관하여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의 예로서는, ① 대구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 ② 대구시의 도시적 성격규정, ③ 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한 정도, ④ 서울 지향성에 대한 태도, ⑤ 대구시가 지방도시로서의 불리한 정도, ⑥ 대구시장 이름의 인지도, ⑦ 지역 발전을 위한 조건, ⑧ 대구지역에서 기업성장이 어려운 이유, (9) 대구지역 定住意識과 변화의식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대구시민들 스스로가 평가하는 대구시민들의 기질과 행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항목으로는 크게 나누어, ① 대구시민의 기질, ② 不當行爲 인지도, ③ 大邱人心의 변화로써 구성한다. 이 가운데, 대구시민의 기질적 특성과 부당행위 형태는 각각 11개의 서로 다른 세부항목으로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대구시민들이 일상사회생활 가운데 형성한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는, ① 근린의식, ② 가족주의, ③ 전통주의, ④ 폐쇄주의, ⑤ 민간신앙의식, ⑥ 남녀차별의식, ⑦ 황금만능의식, ⑧ 성취의욕, ⑨ 자녀관 및 직업관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대구시민의식의 전개양상은 하나의 지표로써 집약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고,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한 대구시민의 인식과 태도 및 가치판단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기별로 비교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I. 大邱地域社會에 대한 關心과 態度

대구시민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대하여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대구시민들의 의식을 파악해내기 위한 작업의 첫 단계라 하겠다.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아홉개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市民의 自矜心

인간은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기 마련이다. 자기의 생활터전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례하여 그만큼 자부심을 지니기 때문이다. 대구시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긍지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대구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조사항목의 하나로 삼았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모르겠다를 제시하였다. 조사년도별로 응답자들이 답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表 7-1>이다.

<表 7-1> 시민의 긍지심

연 도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모르겠다	4. 무응답	計(실수)
1984	67.1(361)	9.3(50)	23.4(126)	0.2(1)	100(538)
1989	67.2(462)	13.8(95)	19.0(131)		100(688)
1993	54.2(676)	18.0(225)	27.6(344)	0.2(2)	100(1,247)

1984년도와 1989년도의 조사에서는 대구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비율이 응답자들의 2/3에 해당하여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93년도 조사에서는 대구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지닌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사대상자의 54.2%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대구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조사대상자의 1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부정적인 응답자의 비율은 1984년도부터 일관되게 높아져가는 경향을 드러낸다. 곧 대구직할시의 시민들은 해가 지날수록 자신들이 거주하는 도시의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잃어가는 형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시민 전부가 이런 경향을 드러낸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속성에 따라 교차표분석을 시도하면, 어느 집단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교차표분석은 1989년도와 1993년도의 조사결과에서만 가능하다. 이들 분석표에 따르면,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찾을 만한 특정 경향성은 1989년도 조사시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兩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응답자의 연령이 20대와 같이 적을수록, 또 출생지역이 영남권지역이 아닌 경우에 대구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89년도 조사시에서는 두드러진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1993년도 최근의 조사시에서는 생활정도가 낮을수록 시민으로서의 긍지심이 부족하고, 생활정도가 높을수록 그

에 비례하여 대구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엇보인다. 1989년도와 1993년도의 응답자들을 상호 비교하면, 오로지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집단과 생활정도가 상인 계층에서만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진 이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 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밖의 집단에서는 해가 바뀔수록 일관되게 자부심을 잃어가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2. 都市의 性格 規定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사회에 대한 태도는 그 도시 자체의 성격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 아무래도 자신이 사는 도시가 생산적인 도시라든지 교육문화면에서 자랑거리를 내세울 수 있는 도시라고 인식하면, 그 거주도시에서의 사회생활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대구시민들 스스로가 규정하는 대구시의 도시적 성격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 조사항목은, “대구를 어떤 종류의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서 그 응답으로 ① 공업도시, ② 교육문화도시, ③ 정치행정도시, ④ 소비도시, ⑤ 모르겠다는 제시한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응답내용을 정리한 <表 7-2>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대구시의 도시적 성격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규정되어가는 경향을 잡아낼 수 있다. 1984년도 조사시에 응답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얻은 것은 대구시가 교육문화도시라는 항목으로서 44.6%에 이른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공업도시라는 응답인데 25.1%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면,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한 무렵인 1984년도에만 해도 조사응답자의 대다수가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의 성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고 해석가능하다. 1989년도에 이르러서는 조사대상자의 30.6%가 대구시를 공업도시라고 답하고, 29.7%가 소비도시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교육문화도시라고 응답한 비율은 21.4%로 상당히 하락하였다. 아울러 도시적 성격이 어떠한지를 모르겠다는 응답자도 상당수 증가하여 그 비율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16.8%를 차지하였다.²⁰⁾ 1993년도의 조사에서는 대구시가 소비도시라는 응답을 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서 43.3%에 이른다. 그 다음이 공업도시라고 답한 사람들이 차지하여 전체 응답자의 24.3%를 구성하고 있다. 교육문화도시라고 답한 사람들은 16.3%를 차지하여 1984년도 조사 이래 그 응답비율이 많이 하락한 것이다. 1984년도의 응답내용과 1993년도의 것은 좋은 대조를 이루는데, 대구의 일차적 도시 성격이 교육문화도시라는 점에서 소비도시라는 점으로 자리바꿈이 일어났음을

20) 모르겠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진 것은 그만큼 도시가 거대화하고 복잡화하면서 하나의 성격규정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알 수 있다.

〈表 7-2〉

대구의 도시적 성격

연 도	공업도시	교육문화	정치행정도시	소비도시	모르겠다	무 응 답	計(실수)
1984	25.1(135)	44.6(240)	3.2(17)	17.3(93)	9.8(53)		100(538)
1989	30.6(210)	21.4(147)	1.5(10)	29.7(204)	16.8(115)		100(686)
1993	24.3(303)	16.3(203)	2.2(27)	43.3(540)	13.7(171)	0.2(3)	100(1,247)

이와 같이 대구시가 소비도시라고 인식하는 시민들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아졌다는 사실은 바로 많은 시민들이 시에 대한 자부심을 별로 갖지 못한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그리고 대구시가 영남지방에서 정치행정의 중심도시라고 인식을 하는 응답자마저 얼마되지 않은데, 이는 직할시로 승격하였음에도 그 期待機能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는 관례적으로 정치행정의 중심도시가 다른 도시적 기능까지 활성화한다고 볼 때, 대구시의 도시적 성격이 정치행정도시로서 부각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로 하여금 도시 자체에 대한 자긍심이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과 연관이 있지 않나 싶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속성에 따라서 대구시의 도시적 성격규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면, 1989년도와 1993년도의 조사분석결과들이 일치되는 연관성을 나타낸다. 대구시가 소비도시라고 인식하는 응답자들은 젊은 층에서, 학력이 높은 층에서, 또 화이트칼라 직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나이 많은 층에서는 상대적으로 공업도시 또는 교육문화도시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저학력층과 블루칼라 직종 종사자들 가운데는 공업도시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차별성은 응답자들 자신이 일상생활속에서 경험하는 내용의 차이에서 유래한다고 본다. 그런데, 응답자들의 대구시에 대한 도시적 성격규정과 그들의 주관적 생활정도와는 뚜렷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3. 市의 發展程度

개인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생활수준은 거주지역의 발전정도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발전을 중시하고 다른 지역과의 비교의식을 갖는다. 곧 시민의식은 시민 자신의 거주지역발전에 대한 인식 및 평가를 포함한다.

대구직할시민들이 대구시의 발전정도에 대해 국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살펴본 것이 <表 7-3>이다. “대구지역이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발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가운데 “그렇다”고 답한 사람들은 계속 줄어가고 반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사람이 늘어감을 알 수 있다. 1984년도 조사의 경우에 대구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표본전체의 6할을 차지하였으나 1989년도 조사와 1993년도 조사에서는 각각 37.7%와 26.9%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구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하지 않은 곳으로 인식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조사가 진행될수록 각각 30.7%, 45.1%, 58.8%로써 꾸준히 증가하였다. 한마디로, 대구의 발전정도에 대하여 시민들은 최근 들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를 하고 있다.

<表 7-3> 대구의 발전정도

연 도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무 응 답	計(실수)
1984	60.2(324)	30.7(165)	9.1(49)		100(538)
1989	37.7(258)	45.1(309)	17.2(118)		100(685)
1993	26.9(335)	58.8(733)	14.1(176)	0.2(3)	100(1,247)

1989년도와 1993년도 調査時에, 대구시의 발전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해 있다는 인식은 학력이 높은 층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며, 또한 전문관리직 종사자와 기업주들 사이에도 강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응답자의 출신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대구시를 포함한 영남지역 출신자들 사이에서 대구시의 낙후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비영남권지역 출신자들 경우보다 더 높다. 하지만, 비영남권지역출신의 응답자들도 그 절반인 50.9%가 1993년도 조사시에 대구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하지 않았다는 답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응답내용은, 부도올이나 실업률, 물가 등의 여러 경제관련 통계치가 최근 제시하듯이, 대구시가 다른 대도시지역에 비해 더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음을 시민들 스스로가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가리킨다고 본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해 있다는 인식이 갈수록 심화된다면, 두가지 상황을 앞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시민들 일부가 지역발전에 더 민감한 의식성향을 갖고서 지역발전에 불리한 사안들에 대하여 공동대응하려는 이른바 시민운동을 전개하려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시민들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意思를 갖고서 기회가 닿으면 轉出해 갈 것이다.

4. 서울 指向性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도권과 영남권에 시설투자를 많이 해온 셈이었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의 중추기관이나 주요기능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만큼 서울지향적인 생활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형편이다.

옛날부터 속담에도 “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다. 이런 속담에 동조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편이다. 대구시민들은 이 속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긍하는지, 또 그 비율이 얼마나 달라져 왔는지를 살펴보면, 서울을 지향하는 성향을 직접적으로 측정해낼 수 있으며 동시에 대구지역사회에 대한 열등의식을 간접적으로 잡아낼 수 있다고 본다.

〈表 7-4〉를 살펴보면, 위에서 예로 든 우리 속담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답을 고른 응답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4년도 조사에서는 47.4%였었는데 1989년도 조사에서 36.2%로 낮아졌다. 그러다가 1993년도 조사 경우에는 다시 그 찬성비율이 40.3%로 증가함을 보였다. 위 속담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는 답을 한 응답자의 비율을 세번의 조사 순서대로 나열하면, 39.8%, 51.5%, 48.9%이다. 정리하자면, 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들 가운데 서울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거나 또는 계속 낮아져가는 것이 아니고, 1989년도 조사에서는 낮아졌다가 1993년도 조사에서 다시 높아져가는 면을 조금 드러내는데 1984년도 조사결과와 수치보다는 아직 낮다.

〈表 7-4〉

서울 지향성

연 도	1. 찬성한다	2. 찬성하지 않는다	3. 모르겠다	무응답	計(실수)
1984	47.4(255)	39.8(214)	12.8(69)		100(538)
1989	36.2(248)	51.5(353)	12.3(84)		100(685)
1993	40.3(503)	48.9(610)	10.6(132)	0.2(2)	100(1,247)

조사응답자들을 사회인구학적 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남성들보다는 여성들 사이에 서울 지향성의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나는 점은 세번의 조사에서 공통적이다. 연령별로 보면, 1989년도 조사 당시 20대가 서울 지향성의 응답비율이 39.5%로써 다른 연령층에 비해 조금 높은 셈이었는데, 1993년도 조사 당시에 젊은 층일수록 찬성비율이 높고 나이든 층일수록 낮은 경향이 확인하여 20대에서 57.8%, 30대에서 47.1%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를 감안해 보면, 1989년

도 조사시에 대졸이상의 학력층에서 서울 지향성이 다른 학력층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나서 39.8%였는데, 1993년도 조사 결과는 고학력층으로 갈수록 서울 지향성이 높아져서 대졸이상의 응답자들 경우에 53.1%가 위의 속담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출생지역별로 보면, 1993년도 조사시 대구와 경북지역 출신의 경우보다 경남 및 다른 지역 출신의 경우에서 서울 지향성의 답에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우리 사회에 서울중심적 發展觀이 자리잡은 것이 엇그제의 일이 아니듯이 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여실히 서울 지향적 사고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앞날의 개인적 성장을 위한 기회탐색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가 젊은 층, 학력이 높은 층, 그리고 여성층에서 서울 지향적인 성향의 응답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5. 地方과 中央의 差別意識

지방거주민들이 무턱대고 서울 지향적인 사고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유형 무형의 불편함을 겪고 인생체험에서 터득한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방도시에 살기 때문에 서울사람들에 비해 불리한 대우가 현실적으로 있다고 믿은 결과와 다름 아니다. 대구시민들은 그들이 서울에 살지 않아서 생긴 불이익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면 그 근거를 밝히는 길이 된다고 본다.

“대구사람들이 지방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사람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고서, ① 늘 그렇게 생각한다, ② 가끔 그렇게 생각한다, ③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가지의 응답항목을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을 정리한 것이 <表 7-5>이다.

<表 7-5> 지방이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느끼는 정도

연 도	1. 늘 그렇게 생각	2. 가끔 그렇게 생각	3. 별로 그렇게 생각않음	무응답	計(실수)
1984	13.9(75)	44.6(240)	41.5(223)		100(538)
1989	24.3(167)	50.1(344)	25.6(176)		100(687)
1993	17.1(213)	48.4(604)	33.8(421)	0.7(9)	100(1,247)

1984년도 조사시에 대구사람이 지방사람이라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늘 그렇게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13.9%, 가끔 그렇게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44.6%로 나타났다. 1989년도 조사 결과는 늘 그렇게 생각한다는 비율이 24.3%, 가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50.1%로써 전체적

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는 사고를 하는 응답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4년도의 경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1993년도의 조사시에 이런 경향이 조금 누그러져 17.1%와 48.4%로 나타났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번의 조사 결과 각각 41.5%, 25.6%, 33.8%로 계산되었다.²¹⁾

참고로 이런 결과와 앞 항의 것을 대조하면, 지방사람으로서 서울사람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을 자주 할수록 서울 지향적 사고를 더 많이 할 것으로 보았던 우리의 주장과 좀 다른 양상을 얻은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다. 즉 1989년도 조사시에 서울 지향적 사고를 가진 응답자가 다른 조사년도들에 비해 가장 낮은데도, 지방사람으로서 불리한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는 응답비율은 다른 비교년도의 경우보다 더욱 높게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판단은 비교시의 논리전개상 이른바 생태학적 오류를 범한 꼴이다. 어떤 도표의 한 범주와 다른 도표의 한 범주를 같은 집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집단간 비교를 할 경우에 실제적인 의미를 담는 것은 해당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동일하도록 통제될 경우라 할 것이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고려해보면, 서울 지향적 사고가 강한 집단에서 역시 지방사람으로서의 불리한 대우를 더 자주 생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곧 젊은 연령층일수록 또한 고학력층일수록 서울사람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으로 1989년도와 1993년도 조사에서 드러난다. 덧붙인다면, 응답자들의 직업종류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전문관리직을 위시한 화이트칼라층에서 노무기술직과 같은 블루칼라층에서보다 지방사람으로서 일종의 열등감 내지는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1993년도 조사시에는 생활정도에 따라서도 응답내용이 달라지는 양상이 뚜렷하여, 하층집단으로 내려갈수록 서울사람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는 의식이 없는 것으로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아

21) 여기서, 다른 지역민들은 이와 같은 지방사람 불이익 문제에 관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궁금할 수 있다. 1986년 3월에 全北道民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를 참조하면, 대구시민들의 응답내용을 좀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지방 사람이기 때문에 전북인들이 서울 사람들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가운데 “무응답”한 경우가 0.4%, “늘 그렇게 생각한다”는 응답이 27.1%, “가끔 그렇게 생각해 본적도 있다”의 경우가 54.5%, “별로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18.2%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大邱市民들은 어떤 조사년도에서도 지방사람으로서의 불이익 문제를 전북도민들보다 더 자주 고려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지방 사람으로서 서울 사람들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는 의식이 전북도민들 사이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교육정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이러한 의식이 더 확고히 자리잡은 경향을 보인다.(윤근섭·김영기·정학섭, 〈전북지역주민의 의식구조 및 지역사회발전에 관한 연구〉《사회과학연구》14, 전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87, p. 73.)

지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서 잠시, 대구사람들은 서울사람들에게 자신을 비교하기보다 다른 지방사람들에 비해서 자신들에 대한 대우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지방에 산다고 하는 동일한 조건을 갖춘 다른 지역민들에 비교해서 대구시민 자신들의 처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므로써, 대구시민들이 자기지역의 전국적 위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조사항목은 1993년도의 설문지에만 포함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대구사람들이 다른 지방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16.0%,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경우가 59.0%, 그리고 “모르겠다”라고 답한 것이 24.9%로 나타났다. 곧 6월에 가까운 응답자가 다른 지방사람에 비해 더 나은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결코 적지 않은 것 같다.²²⁾

6. 市長이름의 認知度

전통적으로 행정중심도시의 우두머리는 권위의 상징이자 명예로운 직책이었다. 근대행정조직상 대구지역의 최고행정관은 대구市長이다. 지역민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도시의 행정부서의 最高頂点인 市長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의 표시 하나가 그 姓銜을 익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가정생활에서나 조직생활에서 민주적 인간관계가 보편화해가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에 속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누구인가 하는 관심은 市政에 대한 참여의식의 첫걸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열의정도를 가늠하게 하는 지표라 하겠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長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해야하는 일정이 잡혀있기도 하므로, 시민들 자신의 권익신장을 위한 노력은 선출될 시장 개인의 이름은 말할 것도 없고 인물됨됨이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나아가야 할 줄 안다.

〈表 7-6〉은 조사응답자들에게 “현재 대구시장의 이름을 아십니까?”하고 묻고, 그 답으로 ① 알고 있다 또는 ② 모르겠다는 요구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1984년도 조사 당시의 시장이름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41.1%였다. 1989년도 조사 당시의 시장이름을 알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45.8%, 그리고 1993년도 조사 당시의 시장이름을 아는 경우는 50.2%로 나타나서 해가 지날수록 대구시장의 이름정도는 안다는 사람들이 꾸준히 조금

22) 그런데, 이 모르겠다는 응답이 관심없다는 뜻을 담고 있는지 해석이 곤란하다. 以前 조사에서 이 설문내용이 다루어졌더라면 앞의 비율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를 유추하기 어렵지 않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씩 상승하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시장이름을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감소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이름을 모른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유지한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할 만하다. 혹시 市長의 사회적 지위가 너무 中央隸屬의이고 또 시장의 更迭이 너무 잦아서 시민들이 미처 그 이름을 인지할 시간적 여유가 생활형편상 없었던 것이 이유라 한다면 오히려 다행스런 일일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연관지어 분석하면, 문제의 심각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본다.

〈表 7-6〉 시장이름의 인지도

연 도	1. 알고 있다	2. 모르겠다	무응답	計(실수)
1984	41.1(221)	56.3(303)	2.6(14)	100(538)
1989	45.8(314)	54.2(372)		100(686)
1993	50.2(626)	49.5(617)	0.3(4)	100(1,247)

응답자의 연령별로 살펴볼 때, 20대의 젊은 층에서는 시장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차지한 비율이 59.8%, 64.7%, 76.7%, 이렇게 조사시마다 증가해가는 추세를 보인다. 대구시의 앞날을 좌우할 연령층으로부터 市政에 대한 적은 관심마저 이토록 해가 갈수록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은 문제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한 책임은 일정부분이나마 識者層이 짊어져야 할 성 싶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찾아진다. 1989년도 조사의 경우, 응답자들 가운데 전문관리직 종사자의 75.3%가 시장이름을 모르고 있다고 답한 것과 대조적으로 노무기술직 종사자는 그 비율이 51.4%이다. 1993년도 조사 경우, 전문관리직 종사자의 55.5%와 학생집단의 86.2%가 시장이름을 모르는 응답자들인 반면에 노무기술직 종사자는 그 비율이 44.6%인 것이다.

응답자의 생활정도에 따라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면, 상층일수록 시장이름의 인지도가 높고, 하층일수록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은 1989년도 조사에서나 1993년도 조사에서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아무래도 먹고살기 바쁘고 일상생활 가운데 對面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에서 시장의 이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것이라는 일반인의 상식과 부합하는 결과라 하겠다.

7. 地域發展을 위한 條件

거주지역에 관심을 갖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발전문제를 생각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비교할 만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된 곳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갈수록 어떻게 하면 자기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숙고하게 마련이다. 대구 시민들이 대구시의 발전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지를 <表 7-7>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表 7-7>

지역발전을 위한 조건

연 도	1. 지역경제 의 활성화	2. 시민의식 의 개선	3.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 실시	4. 더 많은 문화시설	5. 지역유지의 각성과 책임감	무응답	計(실수)
1984	28.6(154)	44.2(238)	5.8(31)	19.1(103)		2.3(12)	100(538)
1989	36.5(250)	38.8(266)	6.9(47)	17.8(122)			100(685)
1993	33.7(420)	36.5(455)	4.6(57)	13.0(162)	11.1(138)	1.2(15)	100(1,247)

“대구지방이 더 살기 좋은 고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써 1984년도와 1989년도의 조사설문지에서는 다음 네가지의 응답항목을 제시하였다. ① 지역경제의 활성화 ② 시민의식의 개선 ③ 지방자치제 실시 ④ 보다는 문화시설. 그런데 1993년도의 조사에서는 ⑤ 지역유지의 각성과 책임감이라는 항목을 하나 추가하였다.

대구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서 가장 두드러진 응답은 시민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1984년도 조사시에 이런 의견을 제시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44.2%를 차지하였으며, 1989년도와 1993년도 조사시에는 각각 38.8%, 36.5%로 나타났다. 1993년도 조사설문지에서 地域有志의 각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응답항목이 추가되었는데 이 항목도 넓은 의미에서는 시민의식의 개선과 밀접히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시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두 번째로 많이 제시된 것이 지역경제의 활성화 문제이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와닿은 경제문제에 대한 비중이 그만큼 높다고 하겠다. 그런데 조사응답자들은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제의 실시와는 크게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은 경향이 짙다. 1993년도 조사에서는 ‘명실상부한’이라는 수식용어를 지방자치제 앞에 달았는데도 응답자의 4.6%만 동의하였다. 그리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대구시가 발전하는데 더 많은 문화시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한 응답자의 비율은 1984년도 조사 결과 19.1%로 나타났고, 1989년도와 1993년도의 조사결과에서는 각각 17.8%와 13.0%였다. 이런 경향의 이유를, 그동안 대구시의 문화시설에서 좀 나아진 면이 있었다는 데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대구시의 경제적 낙후성이 현실문제로 더 심각

하게 대두된 점에서 까닭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1989년도와 1993년도 조사결과의 교차분석표 가운데, 응답자들의 직업에 따라 응답내용에서 차이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전문관리직과 판매직 종사자들은 일관되게 시민의식의 개선 보다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에, 노무기술직 종사자들 경우에는 시민의식의 개선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1993년도 조사결과에서 눈여겨볼 대목 하나는, 판매서비스직과 노무기술직 종사자들은 그들의 15% 정도가 지역 유지의 각성과 책임감을 대구시의 발전 조건으로 지목하였는데 이것이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 경우에 비해 2배 가량 더 많은 점이다.

8. 企業成長의 障礙理由

현대사회는 산업사회이고 산업사회의 발전은 기업의 성장에 달려있다. 결국 대구시가 발전하는 밑바탕은 지역기업이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여 고용창출과 稅收의 주요 원천으로 구실할 때 굳건히 다져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역기업성장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라고 시민들이 생각하는가 하는 점은 지역발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이것은 지역발전의 가능성을 시민들이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하며, 그리고 실현가능한 지역발전책을 모색하는 데도 참고할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본다.

〈表 7-8〉은 이 문제를 살펴보는데 도움을 준다. “대구에서는 기업인들이 성장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답으로서, ① 자금유통사정이 좋지 않다 ② 동업자끼리 경쟁이 너무 심하다 ③ 주위의 시기심이 많다 ④ 입지조건이 좋지 않다 ⑤ 모르겠다, 이렇게 다섯 항목을 제시하였다. 1984년 이래 세번의 조사에서 자금유통의 곤란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특히 이 문제는 1993년도 조사시에 44.3%의 응답비율을 차지하여 현실적으로 심각한 면을 드러낸다고 본다. 이러한 사정은 ‘지방의 돈이 모두 서울로 집중한다’는 향간의 말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것 같다.

〈表 7-8〉 기업성장이 어려운 이유

연 도	1. 자금유통 곤란	2. 동업자 경쟁과열	3. 주위의 시기 심이 많다	4. 입지조건이 좋지 않다	5. 모르겠다	무응답	計(실수)
1984	39.2(211)	25.3(136)	6.0(32)	8.9(48)	20.4(110)	0.2(1)	100(538)
1989	33.6(230)	18.3(125)	6.7(46)	15.9(109)	25.4(174)		100(684)
1993	44.3(552)	18.3(228)	5.2(65)	14.3(178)	16.9(211)	1.0(13)	100(1,247)

동업자의 경쟁과열 문제도 첫 조사시에 25.3%의 응답자가 지목하여 두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몇가지 한정된 類似業種의 중소기업들이 대구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형편을 잘 반영해 준다고 하겠다. 그 다음, 응답항목 가운데 모르겠다는 비율이 높는데 이것은 별로 관심없다는 표현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또 이 表에서 언급을 요하는 대목은, 입지조건이 좋지 않아서 기업성장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첫 조사시보다 그 이후에 증가한 점이다. 이것은 대구지역발전의 한계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아닐까 한다. 입지조건이 좋지 않다는 인식은 나이가 젊은 20대 연령층에서 더 많이 자리잡아가는 경향을 보이며(1989년도 조사시 18.6%에서 1993년도 조사시에는 28.9%로 증가하고 있다), 1993년도 조사시에서는 이런 인식이 고학력층에서도 많이 나타나서 그 집단의 22.6%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의 장래를 생각할 때, 젊은 층과 고학력층에서 대구의 입지조건 자체가 좋지 않아서 기업이 성장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많이 해 간다면 이것은 지역발전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낳는 것과 다름아닐 줄 안다.

덧붙여, 대구시의 기업인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더 말할 나위 없고, 적어도 시민들이 그렇게라도 믿고 있다면 미래에 대한 전망이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밝히는데 직접 연관이 되는 조사항목이 세번의 조사마다 설문지에 실렸는데, 그 응답결과를 정리한 것이 <表 7-9>이다. “대구의 기업인들이 이 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주고서, ① 많이 하고 있다 ② 대체로 많이 하는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네 가지 가운데 한 응답을 고르게 하였다. 1984년도 조사때부터 1993년도 조사때까지 “그저 그렇다”라고 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세번의 조사 결과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그 비율이 51.6%, 54.4%, 46.7%로 나타났다. 거의 절반의 응답자가 이 항목에 답한 것이다. 사실, 대구 기업인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보다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경향도 해가 지날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대체로 많이 하는 편이다”라는 응답비율은 14.7%에서 8.0%, 5.9%로 하강한 반면에 “별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 경우는 30.7%였던 것이 36.0%, 46.2%로 해마다 증가한 것이다. 이런 결과는, 실제 기업인들이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든지 아니면 하지 않든지 하는 것과 상관없이, 시민들이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 어떠하다는 점을 잘 드러내고 본다. 지역발전에 대한 투자가 시민들사이에 기대하는 집단들로부터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인식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면, 그만큼 지역발전에 대한 실망감도 크다고 하겠다.

〈表 7-9〉 기업인의 지역발전 기여도

연 도	1. 많이 하고 있다	2. 대체로 많이 하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별로 하고 있지 않다	무 응 답	計(실수)
84년	2.9(16)	14.7(79)	51.6(277)	30.7(165)	0.2(1)	100(538)
89년	1.6(11)	8.0(55)	54.4(372)	36.0(246)		100(684)
93년	0.6(8)	5.9(73)	46.7(582)	46.2(582)	0.2(2)	100(1,247)

9. 定住意識과 地域變化意識

여태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구시민들은 대구시 자체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성향이 높아가는 추세에 있다. 이런 양상이 더 나아가면, 대구시에 대한 애착심을 잃고 기회가 닿으면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려는 의식을 낳는다고 하겠다. 어떤 지역이든시간에 그 상주인구가 늘지않게 되면 斜陽의 길에 접어든 것으로 보아 틀림이 없다. 현단계에서 실망스런 점이 있다하더라도 계속 자신의 지역에 남아 있겠다는 의식을 많은 대구시민들이 갖고 있다면 市의 발전은 시간문제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해서, 정주 의식을 대구시민들이 얼마만큼 강하게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전망하는데 하나의 열쇠가 된다고 본다.

대구시민들 가운데 어느 정도가 이주하려는 의사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1993년도 조사설문지에다 “장래를 위해 살고 계신 지역을 떠날 생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새로 넣었다. 이에 대한 응답항목으로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이렇게 세가지를 실었다. 다른 곳으로 移住하려는 意思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39.9%였으며 移住 意思가 없다는 경우는 42.9%였고, 그 나머지는 모르겠다는 답을 택하였다.²³⁾ 응답자 가운데 고학력층에서 이주 의사가 있다고 한 경우가 50.9%나 차지하여 그 절반을 넘었고, 또한 젊은 연령층일수록 이주 의사를 더 많이 나타내는 경향을 보여서 20대의 67.8%가 떠나고 싶다는 意向을 드러내었고 50대의 경우는 그런 의향이 없다는 비율이 51.2%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출

23) 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1992년도의 한 조사에서는 떠날 생각이 있다는 답의 비율이 29.9%, 떠날 생각이 없다는 응답비율은 48.1%, 그리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22.0%로 나타났다(朴彰昊, 《大邱地域經濟社會 住民意識調查》, 大邱·慶北開發研究院, 1992, p. 45.). 채 일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대구시민들이 이주의사를 그만큼 더 많이 갖게 된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표본선정을 포함한 조사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 標本誤差와 연관된 부분이 크다고 봄이 타당할 성 싶다.

생지역별로도 상관관계가 있는데, 상식적인 예측에 들어맞게도, 대구시 출생자는 절반정도가 이주 의사가 없다고 답한 반면에 응답자 자신의 출생지가 대구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이주 의사의 비율이 높아져서 非영남권 출신자의 경우는 56.3%가 이주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다.

이주하려는 뜻을 밝힌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는데, 일곱가지의 선택항목에서 가장 많은 응답이 “주거환경이 좋지 않아서”이며 그 다음 많은 것이 “도시생활이 싫어서”이고 그 다음 순서가 “자녀교육 때문에”라는 이유를 들었다.

또 이주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가서 살고 싶은지에 대해 묻고서 그 응답항목으로 ① 대구시 내 다른 지역 ② 서울지역(수도권) ③ 다른 직할시 ④ 인근 중소도시 ⑤ 경북도내 군이하 지역 ⑥ 대도시 근교 ⑦ 기타, 이렇게 제시하였다. 응답한 비율은 서울지역(수도권)과 경북도내 군이하 지역에서 똑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높은 것이 대구시내 다른 지역이었다.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의 상관성을 분석해 볼 때, 대졸자 이상의 고학력층 응답자들은 그 집단 전체의 17.5%가 서울지역(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싶다는 응답을 고른 것과 대조적으로 저학력층에서는 그 집단 전체 응답자 12.5%가 경북도내 시골지역을 이주희망지로 선택한 것이 눈에 뜨인다. 20대의 젊은 연령층을 살펴보면, 그 전체 응답자의 25.6%가 서울 지향적인 이주의식을 드러내었고, 또 비영남권 출생자도 그 22.3%가 같은 의식을 가졌다. 바꾸어 말하면, 1993년도 조사 응답자 가운데 고학력층 전체의 17.5%와 20대 연령층 전체의 25.6%가 장래를 위해 서울지역으로 떠나고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리 사회의 서울 지향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결과인데, 대구시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려할만한 수준의 수치라고 본다.

아무튼,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격을 지닌다. 일차적으로는 시민 각자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이해타산에 따라서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고, 이차적으로는 지역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관계에 따라 市政目標와 施策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구시민들이 지역사회의 변화 가운데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이런 이차적 이유로 해서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두가지 문항을 1993년도 조사설문지에 새로 포함시켰다. “대구지역에서 최근 5년동안 가장 좋아진 점은?”이라는 질문과 “대구지역에서 최근 5년동안 가장 나빠진 점은?”이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그 각각의 응답항목은 서로 같도록 하여 ① 교통사정 ② 소득수준 ③ 주거환경 ④ 교육여건 ⑤ 문화시설 ⑥ 기타, 이렇게 설정하였다. 80년대의 두 조사 당시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문항들이지만, 과거 몇년간의 변화상을 시민들이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밝힐 수 있다고 본다.

〈表 7-10〉을 살펴보면, 가장 좋아진 점으로는 주거환경을 들 수 있고, 가장 나빠진 점으로는 교통사정을 들 수 있다. 32.9%의 응답자들이 대구시의 좋아진 면 가운데 신축 아파트단지와 빌딩의 경관이 눈에 띄이는 가장 좋은 변화라 인식하며, 반면에 대구시에서 나빠진 면으로는 교통혼잡과 무질서로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67.5%에 이르고 있다.²⁴⁾

〈表 7-10〉 최근에 가장 좋아진 점과 가장 나빠진 점

항 목	최근에 가장 좋아진 점	최근에 가장 나빠진 점
1. 교 통 사 정	11.6(145)	66.6(831)
2. 소 득 수 준	14.4(180)	11.1(139)
3. 주 거 환 경	32.2(402)	10.0(125)
4. 교 육 여 건	10.2(127)	3.4(43)
5. 문 화 시 설	17.0(212)	5.7(71)
6. 기 타	12.6(157)	1.8(22)
무 응 답	1.9(24)	1.3(16)
계	100(1,247)	100(1,247)

도시가 지닌 장점은 살려나가고 단점은 고쳐나가야 시민들로부터 市 자체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낼 수 있음에는 재론이 필요없다. 그런데, 대구시의 경우, 최근에 들어 낙동강 수질오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고,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과 정부의 일방적인 고속철도 지상화 계획발표를 접하면서 시민들의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의식이 급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구 시민의식의 변화를 施政方針에 얼마만큼 반영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태도 역시 달라져가리라 본다.

II. 大邱市民의 氣質과 行爲特性

한 지역민의 정체감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 부여되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24) 앞에서 잠시 언급한 조사에서도 恰似한 결과를 얻었다. 가장 좋아진 점에서는 응답비율의 순서가 주거환경(28.1%), 소득수준(22.9%), 문화시설(14.9%), 교통사정(14.2%), 교육여건(11.5%), 기타(8.4%)로 나타났다. 가장 나빠진 점에서는 그 차례가 교통사정(61.7%), 주거환경(19.0%), 문화시설(10.6%), 소득수준(6.4%), 교육여건(2.6%), 기타(1.7%)의 순이었다(朴彰昊, 앞의 책, 1992, pp. 29~43.).

지역민 상호간에 교환하는 意味媒體를 통해서 끊임없이 형성, 변화해 간다. 여기서 의미매체란 말, 표정, 행동, 심지어 사건과 같은 여러가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는 신호들을 말한다. 시민들의 기질과 행위형태는 시민 자신들의 正體意識을 공유한 결과로서, 일정한 시기에 걸쳐 특정 유형으로 틀지워지고 따라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고 본다. 시민의식은 이러한 기질과 행위적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해결과정으로부터 發顯된다고 하겠다. 우리는 시민의식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는 없고 다만 이처럼 발현된 것을 통하여 그 실체에 접근해갈 수 있을 따름이다. 현실적으로는, 次善의 방법이지만, 시민들 스스로가 자신을 포함한 다른 시민들에 대한 특성을 평가하게 하여 그 最頻的 유형을 찾는 것으로 代行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전제아래, 대구시민들은 그들 자신에 대하여 어떤 특성을 지녔다고 생각하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대구시민의 기질과 부당행위 형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 다음에는 대구인심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고려하고자 한다.

1. 市民의 氣質

시민의 기질이란 것은 베네딕트의 문화유형 개념이나 프로의 사회적 성격 개념에 상응하는 내용을 가리킨다. 이 개념들 모두는 동일문화권내에서 성원들 대부분이 공유하는 기본 인성구조를 가리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갖는다. 이렇게 보면, 대구시민의 기질은 대구지역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환경, 곧 영남문화권내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성격적 中核을 일컫는다.

현실경험에서 나타나는 대구시민의 인성적 특징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지닌 성격유형을 총망라해서 조금씩 추출하여 조합한 형태일는지 모른다. 하지만 실증적 조사를 통해 시민의 기질을 밝히기 위하여 이 모든 성격유형을 다 제시하고 응답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취한 방법이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대구 시민의 기질 가운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특성과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특성을 각각 5개씩 기술하도록 하고, 그 응답결과를 집계하여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11개의 특성들(traits)을 선택한 것이다.²⁵⁾

25) 조사항목으로 10개가 아닌 11개의 특성을 정한 까닭은 이러하다. 즉 장점에 해당하는 항목 5개와 단점에 해당하는 항목 5개를 포함하도록 예정하였지만, 예비조사 결과에서 “보수적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이 항목은 보는 입장에 따라 장점일수도 또 단점일수도 있으므로 中間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항목을 포함시켜 전부 11개의 특성들을 토대로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장점에 속하는 5개 항목은, “신위가 있다” “정의심이 강하다” “단결심이 강하다” “순진하고 투박하다” “생활력이 강하다”이며, 단점에 속하는 5개 항목은, “배타적이다” “사교성이 적다”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다” “시기심이 많다” “사치허영심이 많다”이다(정철수, <대구시민의 가치관 및 의식구조> 《시민의식관계사업 종합보고서》), 대구지구청년회의소, 1984, pp. 141 ~ 142).

〈表 7-11〉은 대구사람들의 기질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1984년, 1989년, 1993년 세번에 걸친 조사의 응답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表 7-11〉

대구시민의 기질

시민의 기질 연 도	긍정적 대답	긍정적 대답	긍정적 대답
	84년	89년	93년
1. 보수적이다	57.3(308)	64.7(437)	73.0(910)
2. 배타적이다	31.0(167)	32.5(220)	33.8(422)
3. 신의가 있다	62.7(337)	49.3(331)	49.0(611)
4. 사교성이 적다	54.9(295)	48.7(326)	61.4(761)
5.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다	43.0(231)	40.9(274)	46.7(582)
6. 정의심이 강하다	55.6(299)	47.9(322)	43.0(536)
7. 단결심이 강하다	40.9(220)	32.5(218)	21.1(263)
8. 순진하고 투박하다	64.5(347)	58.9(397)	58.5(729)
9. 생활력이 강하다	58.0(312)	58.6(393)	49.7(620)
10. 시기심이 많다	28.8(155)	32.5(217)	37.3(465)
11. 사치 허영심이 많다	46.1(248)	52.4(353)	59.3(739)

먼저, 각 조사시기에서 전체 항목 가운데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 세개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984년도 조사 결과에서는 대구사람들이 “순진하고 투박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비율이 64.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신의가 있다” 62.7%, “생활력이 강하다” 58.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세항목 모두 장점에 속하는 것들이다. 1989년도 조사에서는 “보수적이다”는 응답비율이 64.7%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순서로는 “순진하고 투박하다” 58.9%, “생활력이 강하다” 58.6%가 이어진다. 1993년도 조사 결과는 그 차례가 “보수적이다” 73.0%, “사교성이 적다” 61.4%, “사치허영심이 많다” 59.3%의 순이다. 이처럼 최근에 들어오면서 대구시민의 기질 가운데 바람직한 가치덕목보다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측면이 浮上한다고 하겠다.

이런 경향은 각 항목별로 응답비율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해가 지나면서 갈수록 더욱 높아져가는 응답비율을 얻은 항목으로는, “보수적이다” “사치허영심이 많다” “시기심이 많다” “배타적이다”를 손꼽을 수 있다. 반대로 해가 지날수록 더욱 낮아

저가는 응답비율을 얻은 항목을 들자면, “신뢰가 있다” “정의감이 강하다” “단결심이 강하다” “순진하고 투박하다”이다. 이 밖에도 1984년도와 1989년도 조사보다 1993년도 조사에서 더 높은 응답비율을 얻은 것으로 “사고성이 적다”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다”를 빼놓을 수 없다. 반면에 “생활력이 강하다”는 항목은 1993년도 조사에서 그 이전 조사들보다 더 낮은 응답비율을 얻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장점에 해당하는 기질은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조적으로 단점에 속하는 기질들에서는 응답비율이 갈수록 높아져감을 알 수 있다.

이제는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의 相關關係를 1989년도 조사와 1993년도 조사 결과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⁶⁾

① 보수적이다: 응답자들의 학력이 높을수록 대구사람들이 보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문관리직 종사자들도 다른 직업인들에 비해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② 배타적이다: 나이가 젊은 20대층에서, 대졸이상의 고학력층에서, 전문관리직과 사무직 종사자들에서, 그리고 출생지가 대구시가 아닌 응답자들 사이에서, 대구사람들이 배타적이라는 인식을 더해 가는 경향을 보인다.

③ 신뢰가 있다: 학력이 높은 층일수록, 또 화이트칼라 직업인들이 대구사람은 신뢰가 있다는 인식을 비교적 많이 하는 것 같다. 특기할 점으로, 비영남권출생자들이 1989년 조사 당시보다 1993년도 조사에서 대구사람이 신뢰가 있다는 점에 더 높은 비율로 동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④ 사고성이 적다: 응답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또 전문관리직 종사자들에서 대구사람은 사고성이 부족하다는데 동의하는 경향이 해가 갈수록 짙다.

26) 참고로, 1984년도 조사분석에서는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의 相關關係를 오직 性別과 出身道別만 고려하였다. 그 결과가 제시된 분석표를 일별하면, 1984년도 조사에서 남녀간 차이를 크게 드러내는 항목은 “사치허영심이 많다”와 “배타적이다”의 두개가 해당된다. “사치허영심이 많다”라는 항목에 대해, 남성 응답자의 경우는 그 43.5%가 부정을 하고 41.6%가 긍정을 하였는데, 여성측에서는 그 대다수인 50.6%가 그렇다고 인정하였고 31.2%가 그렇지 않다는 답을 하였다. “배타적이다”에 대하여 남성 응답자의 경우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비율이 39.4%이고, 그렇다라고 한 것이 31.6%인데, 여성 응답자의 경우는 그렇다에 30.5%, 그렇지 않다에 29.7%로 나타났다. 출신도별로 살펴보면, 경상도출신 응답자들과 他道출신 응답자들 사이에 贊反 비율이 크게 相馳하는 항목은 “배타적이다”와 “시기심이 많다”이다. 경상도출신 응답자의 35.5%가 배타적이지 않다고 하였고, 30.3%가 배타적이라는데 동의하였다. 타도출신 응답자의 경우는 대구사람들이 배타적이라는 데 38.3%, 그렇지 않다는데 28.3% 답하였다. 시기심이 많다는 것을 수긍한 경상도출신 응답자는 그 27.3%였던 반면에 그런 기질을 부정한 비율이 44.9%로 나타났다. 거꾸로 타도출신은 수긍한 비율이 41.6%로, 부정한 비율 25.0% 보다 더 높았다(정철수, 앞의 논문, 1984, pp. 144~150).

⑤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다: 젊은 연령층일수록, 고학력층일수록, 사무직 종사자에서 이런 기질을 대구사람들이 갖고 있다는데 동의하는 비율이 더욱 높아져가는 경향을 보인다.

⑥ 정의심이 강하다: 고졸이하 응답자들에서 대구사람은 정의심이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아져간다. 전문관리직 종사들 사이에서만 1989년도 조사때 보다 1993년도 조사때에 대구사람은 정의심이 강하다는데 더 많은 동의를 하고 다른 직업인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더 높다. 다른 변인들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높아가는 경향을 나타낸다.

⑦ 단결심이 강하다: 전반적으로 1989년도 조사에 비해 1993년도 조사에서 대구사람은 단결심이 강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상승하였다. 그 가운데 남성 응답자들이 태도변화의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눈에 띈다. 1989년도 조사 때보다 1993년도 조사 때에 단결심이 강하다는 응답비율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과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크게 나타난 것으로 응답자의 출생지역 변인도 들 수 있다. 곧 영남권출생자들은 단결심이 강하다라는 응답비율이 많이 하락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많이 상승하였다. 반면에 비영남권 출신자들 경우에는 그 응답비율의 변화폭이 아주 좁다.

⑧ 순진하고 투박하다: 남성들과 경남출생자들에서, 대구사람은 순진투박하다는 인식을 하는 응답자가 1989년도 조사보다 1993년도 조사에서 조금 늘어났다. 그 밖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응답에서 그 비율이 상승하였다.

⑨ 생활력이 강하다: 판매서비스직 종사자와 비영남권출신자들에서만 큰 변화가 없는 응답비율을 나타내고 그 밖에는 전제적으로 생활력이 강하다는 응답비율이 하락하였다. 20대 연령층 경우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1989년도에 비해 1993년도 조사에서 많이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⑩ 시기심이 많다: 거의 모든 집단들에서 대구사람은 시기심이 많다는 인식을 더해 가는 경향을 보인다. 응답자들 가운데 30대 연령층과 사무직 종사자에서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하게 드러난다. 오직 이런 경향에서 벗어난 집단이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응답자들로서, 시기심이 많다는데 수긍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더해감을 나타낸다.

⑪ 사치허영심이 많다: 대구사람은 사치허영심이 많다는 응답비율이 1989년도 조사때 보다 1993년도 조사에서 모든 응답자 집단들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특히, 30대 연령층, 저학력층, 노무기술직 종사자들, 그리고 대구경북출신자들이 아닌 응답자들이 이런 응답경향을 더욱 많이 드러낸다. 아마도 이들 응답자 집단들은 생활기반을 다지기에 힘쓰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므로해서 다른 대구시민들의 과시적 소비성향에 민감할 수 있고 또한 비판적인 태도를 갖기 쉽다고 본다.

2. 不當行爲 認知度

부당행위는 사회적 일탈행위이다. 사회의 가치규범에 어긋나고 공동체적 질서를 흐트러지게 하는 행위들을 말한다. 일탈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따르면 오히려 성원들에게 적절한 행위의 허용 경계선을 인식시켜 주는 교훈적 효과를 낳기도 한다. 도시사회는 성원간 익명성이 보장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도시인은 행위의 허용 경계선을 넘어서는 경향을 지닌다. 시민의식은 이에 대한 경계심을 포함한다고 본다. 따라서, 지역성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은 시민의식의 단면을 측정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행위규범에서 일탈한 부당행위의 종류를 총망라하자면 끝이 없다. 그런즉, 사회생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경험가능한 부당행위 11가지를 제시하여 그 발생정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코자 한다.

“우리 고장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11가지의 부당행위 각각에 대하여 “많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에서 그 하나의 응답을 하도록 한 결과가 <表 7-12>에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 “많다”와 “다소 있다”라는 응답비율을 합하여 그 높은 수치는 곧 그 행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表 7-12〉 부당행위에 대한 인지도

항 목	연도	1. 많다	2. 다소있다	3. 별로없다	4. 전혀없다	무응답	計(실수)
1.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행위	1984	15.4(83)	53.4(287)	27.9(150)	2.4(13)	0.9(5)	100(538)
	1989	21.0(143)	59.4(404)	16.8(114)	2.8(19)		100(680)
	1993	19.4(242)	62.3(777)	17.4(217)	0.7(9)	0.2(2)	100(1,247)
2. 투서나 진정서 등으로 투고하 는 행위	1984	7.4(40)	39.1(210)	42.4(228)	10.0(54)	1.1(6)	100(538)
	1989	6.7(45)	38.9(263)	39.6(268)	14.8(100)		100(676)
	1993	7.0(87)	36.5(455)	48.4(603)	7.5(93)	0.7(9)	100(1,247)
3. 타 지방사람들을 배척하는 행위	1984	9.5(51)	27.5(148)	42.6(229)	19.3(104)	1.1(6)	100(538)
	1989	13.2(89)	37.9(256)	28.6(193)	20.0(137)		100(675)
	1993	15.0(187)	32.2(401)	37.9(473)	14.2(177)	0.7(9)	100(1,247)
4. 공직자에게 금 품향응을 베푸 는 행위	1984	10.8(58)	44.8(241)	30.5(164)	12.8(69)	1.1(6)	100(538)
	1989	20.4(138)	40.7(275)	24.6(166)	14.2(96)		100(675)
	1993	21.1(263)	49.2(613)	21.1(263)	7.6(95)	1.0(13)	100(1,247)

항 목	연도	1. 많다	2. 다소있다	3. 별로없다	4. 전혀없다	무응답	計(실수)
5. 불량배들의 폭력행위	1984	40.2(216)	45.7(249)	11.2(60)	2.0(11)	0.9(5)	100(538)
	1989	45.4(308)	41.0(278)	10.5(71)	3.1(21)		100(678)
	1993	38.4(479)	47.0(586)	11.8(147)	2.4(30)	0.4(5)	100(1,247)
6. 호화혼수 등의 허례허식 행위	1984	31.1(167)	48.3(260)	16.5(89)	3.2(17)	0.9(5)	100(538)
	1989	34.8(235)	45.0(304)	16.4(111)	3.8(26)		100(676)
	1993	32.3(403)	48.7(607)	16.4(205)	2.4(30)	0.2(2)	100(1,247)
7. 미성년자 탈선 행위	1984	37.4(201)	46.1(248)	13.0(70)	2.6(14)	0.9(5)	100(538)
	1989	32.8(223)	50.4(343)	13.1(89)	3.7(25)		100(680)
	1993	29.5(368)	55.0(686)	12.1(115)	2.8(35)	0.6(7)	100(1,247)
8. 교통질서 및 거리질서 위반 행위	1984	37.9(204)	43.7(235)	14.5(78)	2.6(4)	1.3(7)	100(538)
	1989	46.9(319)	41.2(280)	9.0(61)	2.9(20)		100(670)
	1993	52.4(654)	39.6(494)	6.7(84)	0.9(11)	0.3(4)	100(1,247)
9. 향락질서 위반 행위	1984	23.0(124)	51.7(278)	19.7(106)	4.3(23)	1.3(7)	100(538)
	1989	36.0(244)	41.7(282)	17.7(120)	4.6(31)		100(677)
	1993	35.4(441)	47.2(588)	15.3(191)	1.8(23)	0.3(4)	100(1,247)
10. 상거래질서 위반행위	1984	30.1(162)	48.0(258)	16.7(90)	4.1(22)	1.1(6)	100(538)
	1989	35.4(241)	44.9(305)	15.9(108)	3.8(26)		100(680)
	1993	31.6(394)	47.1(587)	18.8(234)	2.2(28)	0.3(4)	100(1,247)
11. 사치낭비 풍조	1984	32.0(172)	43.3(233)	18.2(98)	5.2(18)	1.3(7)	100(538)
	1989	29.7(202)	45.9(312)	18.6(126)	5.7(39)		100(679)
	1993	39.9(497)	46.2(576)	11.9(148)	1.8(22)	0.3(4)	100(1,247)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아, 각 조사 당시마다 인지도가 가장 높은 부당행위 세가지씩을 나열해 보자. 1984년도 조사 결과에서는 그 차례가 “불량배들의 폭력행위” 85.9%, “미성년자 탈선행위” 83.5%, “교통질서 및 거리질서 위반행위” 81.6%의 순으로 나타났다. 1989년도 경우는 “교통질서 및 거리질서 위반행위”가 88.1%로 1위, “불량배들의 폭력행위” 86.4%가 2위, 그 다음으로 “미성년자 탈선행위” 83.2%가 차지하였다. 1993년도 조사에서도 “교통질서 및 거리질서 위반행위”가 92.0%로 상승하여 1위를 지키고, 2위는 “사치낭비풍조” 86.1%, 3위가 “불량배들의 폭력행위” 85.4%였다. 이제, 항목마다 그 추세를 살펴보면, 대체로 네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시기가 지나면서 그 인지도가 계속 높아져 가는 것이 두드러진

항목인데, 교통질서 및 거리질서 위반행위, 향락질서 위반행위, 사치낭비풍조,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베푸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80년대에서는 급격히 상승추세였다가 90년대에 들어와 그 상태에서 멈춘 경우인데,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행위와 타지방사람들을 배척하는 행위가 그 예에 해당한다. 셋째, 처음부터 인지의 정도가 제법 높으면서 더 이상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경우인데, 불량배들의 폭력행위, 미성년자 탈선행위, 호화혼수 등 허례허식행위, 상거래질서 위반행위가 그것이다. 넷째, 아주 조금이나마 줄어가는 추세로 나타난 것은 투서나 진정서 등으로 남을 무고하는 행위뿐이다. 이렇게 보면, 부당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는 시민의 기질에 대한 것처럼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곧, 시민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체감을 갖는 경향이 갈수록 뚜렷하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면 아래와 같다.²⁷⁾

①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행위: 이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적으로 한 변인내의 집단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 1989년도 조사결과와 1993년도의 것을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많다”의 응답비율이 감소한 대신에 “다소 있다”라는 답의 비율이 상승하였다.

② 투서나 진정서로 남을 무고하는 행위: 1989년도와 1993년도의 분석결과를 비교하면, 20대 연령층에서 이 행위에 대한 인지도가 조금 높아졌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별로 없다”의 응답비율이 높아진 반면에 “다소 있다”는 응답비율이 낮아졌다. 이 경향에서 예외적인 집단은 고학력층인데, “전혀 없다”의 응답비율은 감소한 대신에 “별로 없다”의 응답비율이 상승하였다.

③ 타지방사람들을 배척하는 행위: 응답자의 학력과 출생지 변인에서 상관관계가 높은데, 즉 고학력층과 비영남권출신자들에서 이 행위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1989년도와 1993년도 결과를 비교하면, 20대 연령층에서 이 행위가 “많다”고 답한 비율이 많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혀 없다”의 응답비율은 감소하고 대신에 “별로 없다”의 응답비율이 상승하였다.

④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베푸는 행위: 이 행위에 대한 인지도는 학력 변인과 상관관

27) 1984년도 조사 결과의 분석표에서는 남녀 성별로만 정리하고 있다. 남녀간의 인식차이가 눈에 띄게 나타난 항목을 언급하면, 타지방사람들을 배척하는 행위가 전혀 없다는 인식을 하는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남성 응답자의 것에 비해 높으며, 불량배들의 폭력행위가 많다는 응답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남성들에 비해 높고, 사치낭비풍조가 많다는 응답에서도 마찬가지로 경향을 볼 수 있다. 교통질서 및 거리질서 위반행위가 별로 없다는 데에 답한 여성의 비율도 역시 남성의 비율보다 높다(정철수, 앞의 논문, 1984, pp. 165~168).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과 남성들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가 서로 다른데 연유한 현상이라 본다.

제가 나타났는데, 학력이 높은 응답자들일수록 그 해당 응답비율이 저학력층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연령층에 있는 응답자들 가운데 그 인지도가 높아져 갔다는 양상이 뚜렷하다.

⑤ 불량배들의 폭력행위: 양 시기의 조사를 비교할 때, 인지도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다만 학력이 낮은 응답자층에서 이 부당행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점이 두드러진다.

⑥ 호화혼수와 같은 허례허식 행위: 응답자의 학력 변인과 출생지 변인에서 집단간 차이가 드러난다. 고학력층에서 이 행위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높고, 출생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출신자는 이 부당행위가 “다소 있다”라는 응답에서 비율이 가장 높는데 그 밖의 출신자들 경우는 “많다”라는 선택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난다.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거의 없다.

⑦ 미성년자 탈선행위: 20대의 젊은 층에서 이 부당행위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응답자의 학력이 높은 층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해 가는 추세가 보인다.

⑧ 교통질서 및 거리질서 위반행위: 응답자의 학력 변인과 상관성이 나타나는데, 고학력층일수록 남들보다 앞서 이 문제를 인지한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이 부당행위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고, 특히 20대와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이 행위가 “많다”라는 응답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⑨ 향락질서 위반행위(유원지에서 고성방가 등): 이 부당행위와 응답자의 학력 변인이 상관관계를 갖는다. 응답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향락질서 위반행위를 더 많이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1989년도와 1993년도 조사의 결과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상승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20대 연령층을 보면 이 부당행위가 “많다”라는 응답에서 비율이 높아졌으며, 30대 연령층에서는 “다소 있다”의 응답비율이 높아졌다.

⑩ 상거래질서 위반행위(바가지 요금 등): 전반적으로 이 부당행위의 인지도에서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응답자의 40대이상 연령층에서 “다소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졌고 그 대신에 “많다”는 응답비율이 줄었다.

⑪ 사치낭비풍조(외래품 사용 등): 이 항목에 대한 인지도는 응답자의 학력 변인과 상관성을 갖는다. 역시 학력이 높은 층일수록 인지도가 높다. 1989년도와 1993년도의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사치낭비풍조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연령층에서 그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3. 大邱人心의 變化

앞에서, 11개씩 주어진 세부항목에 대하여 응답자들이 선택한 응답내용을 토대로 하여 그

비율정도가 변화해 가는 것을 분석초점으로 삼았다. 지금부터는 응답자 자신들이 대구시민의 인심이 변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변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바로 이것은, 인심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지 아니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지를 응답자 스스로 판단한 바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변화양상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된다.

〈表 7-13〉을 살펴보면, 조사 당시를 기점으로 하여 예전에 비해 대구인심이 어떠한지를 묻은 질문에 대한 응답이 나타난다. 1984년도 조사 당시에 대구인심이 옛날에 비해 많이 변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58.6%를 차지하며 조금 변하고 있다고 답한 것은 27.7%를 차지하여 변한다는 생각을 하는 응답자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86.3%에 해당한다. 1989년도의 조사결과는 대구인심이 변한다는 생각을 가진 응답자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86.2%를 차지하여 1984년도의 경우와 거의 같은 결과를 드러낸다. 다만 1989년도 조사시에는 1984년도 경우보다 많이 변하고 있다는 응답이 줄은 반면에 그만큼 조금 변하고 있다는 응답이 늘은 셈이다. 1993년도에 와서, 대구인심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인식이 응답자들 가운데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약해져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변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하는 사람들 수보다는 여전하게 많다. 결국 대구인심은 과거에 비해 변하고 있다는 인식을 80%에 이르는 응답자들이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表 7-13〉 대구 인심의 변화정도

연 도	1. 많이 변하고 있다	2. 조금 변하고 있다	3. 별로 변하고 있지 않다	4. 전혀 변하고 있지 않다	무응답	計(실수)
1984	58.6(315)	27.7(149)	12.6(68)	0.9(5)	0.2(1)	100(538)
1989	54.3(373)	31.9(219)	11.9(82)	1.9(13)		100(687)
1993	41.7(520)	39.3(490)	18.1(226)	0.7(9)	0.2(2)	100(1,247)

1989년도와 1993년도의 응답내용을 사회인구학적 속성 변인들과 교차분석한 것을 살펴보면, 대구인심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연령이 많은 층일수록, 또 학력이 낮은 층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1989년도와 1993년도의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차이나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변인이 생활정도인데, 1989년도 조사시에는 하층으로 갈수록 인심의 변화가 많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높은 양상을 드러내었다. 대조적으로, 1993년도의 경우에는 대구인심이 비교적

변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중류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층과 하층에서는 인심의 변화가 많다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달리 말하면, 1989년도에 비해 1993년도 조사시에 나타난 특징 하나는, 생활정도가 상층에 속한 응답자들 가운데 대구인심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더 높게 차지한 점이다.

대구인심이 변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만을 뽑아서 그들이 생각하는 인심 변화의 방향을 묻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 <表 7-14>이다. 이 표를 보면, 대구인심이 변하되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해가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表 7-14> 대구 인심의 변화방향

연 도	1.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2. 좋지 못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무응답	計(실수)
1984	28.2(131)	55.6(258)	16.2(75)	100(464)
1989	24.6(146)	75.4(447)		100(593)
1993	20.6(257)	61.2(763)	18.2(227)	100(1,247)

1984년도의 조사에서는 28.2%의 응답자가 좋은 방향으로 대구인심이 변하고 있다고 답하였는데, 1989년도와 1993년도 調査時에는 각각 24.6%와 20.6%로 나타났다. 좋지 못한 방향으로 대구인심이 바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84년도보다 1993년도 조사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1989년도 조사결과는 無應答者를 제외한 까닭에 상대적으로 이 항목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대다수의 조사응답자들이 대구인심이 해마다 좋은 방향보다는 좋지 못한 방향으로 변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는 異論의 여지가 없다.

III. 大邱市民의 價値觀

가치관은 일종의 定型化한 의식, 곧 가치판단에 영향 미치는 意識定型인 것이다. 다시 말해, 의식의 일상적 지향이 일정한 방향성을 갖추면서 형상화한 의식구조이다. 대구시민의 가치관이란 대구지역의 주민들이 일상적 삶을 영위하면서 부딪히는 갖가지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하여 특정한 지향성을 드러낸 일종의 의식구조를 말한다. 이를 경험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들을 대상으로 표출되어진 시민들의 판단과 태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의 사항들을 분석하는 목적은 특정의 의식성향이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따위를 평가하는데 결코 있지 않고 시민 의식구조 자체의 변화상을 조명하려는데 있다는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줄 안다.

1. 近隣意識

도시화의 진행은 인간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들고 사회생활에서 익명성과 고립감을 낳은 경향이 짙다. 촌락적 지역공동체에서는 이웃과의 유대관계가 곧 친족관계의 연장선 위에 이루어지므로 아주 돈독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반면에, 도시사회에서는 이웃과의 공동체적 의식이 희박하다는 것이 定說이다. 실제로, 직장생활이나 취미생활이 서로 다르면 그만큼 삶의 공통분모를 찾지 못하고 도시사회생활에서의 인간관계는 남남이 되고마는 경향이 짙다. 이런 뜻에서, 이웃과 직장을 중심으로한 근린의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일은 시민 공동체의식의 현주소를 점검하기 위한 징검다리를 놓는 것이라 할 수 있다.

〈表 7-15〉에서 응답자들은 자신들의 동네 이웃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맺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조사 설문지에, “지금 사시는 곳에서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① 서로 집을 방문하고 가깝게 지낸다, ② 왕래는 하지 않고 마주치면 인사는 나눈다, ③ 서로 인사를 나눈 적이 별로 없다, 이렇게 세 응답항목을 제시하였다. 1984년도와 1993년도 조사 결과는 아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응답자의 4할 정도가 자신들의 이웃과는 서로 방문할만큼 가깝게 지낸다는 응답을 하였다. 1989년도의 경우는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비율이 조금 낮아서 34.5%였다. 반면에 서로 왕래는 않지만 인사는 나눌 정도의 사이라는 응답에서는 모든 조사년도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1989년도 조사 당시가 조금 더 비율이 높았다. 이웃간에 서로 인사도 나누지 않은 응답자들은 전체의 6% 안팎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대구시민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편이라 하겠다.

〈表 7-15〉 근 린 관 계

연 도	1. 서로 방문하고 가깝게 지낸다	2. 왕래는 하지 않고 인사는 나눈다	3. 서로 인사도 않는다	무응답	計(실수)
1984	42.0(226)	52.4(282)	5.6(30)		100(538)
1989	34.5(236)	59.3(406)	6.3(43)		100(685)
1993	40.7(507)	53.4(666)	5.9(74)		100(1,247)

1984년도 조사결과는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상관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1989년도와 1993년도의 조사결과까지 함께 살펴보면, 여성 응답자들이 남성측보다 이웃과의 친밀도가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 연령별로 보면, 젊은 연령층이 나이 많은 층보다 이웃과의 관계 형성에 소홀히 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학력별로는 고학력층일수록 조사시기마다 이웃과의 친밀도를 증진해 가는 면이 엇보이지만 대체로 이웃과의 來往程度가 약한 경향을 보인다.

〈表 7-16〉에서는 응답자들이 자신의 직장에 대한 귀속감 정도를 얼마만큼 강하게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오랫동안 신세를 진 직장과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곳에서 현 직장보다 더 좋은 대우로 채용코자 한다면 직장을 옮기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세가지 답변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 ① 옮기겠다, ② 옮기지 않겠다, ③ 모르겠다, 이다. 세번의 조사를 비교해 보면, 1984년도와 1993년도 조사 결과는 앞서서와 같이 매우 비슷하다. 직장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하는 응답자들이 전체의 2/3에 이른다. 1989년도 경우는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1/4인데, 다른 조사연도에 비해 높은 셈이다. 이렇게 보면, 직장에 대한 귀속감이 한동안 하락하다가 景氣의 불안정과 더불어 다시 상승하는 추세라 하겠다.

〈表 7-16〉 직장귀속의식

연 도	1. 옮기겠다	2. 옮기지 않겠다	3. 모르겠다	무응답	計(실수)
1984	15.6(84)	65.1(350)	19.3(104)		100(538)
1989	19.8(136)	55.2(380)	25.0(172)		100(688)
1993	15.2(189)	67.1(837)	17.6(219)	0.2(2)	100(1,247)

응답자들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보면, 성별로나 연령별로는 일정한 경향을 잡아내기 힘든데 굳이 언급한다면, 남성측이 여성측에 비해 옮기겠다는 응답비율이 일정한 것 같고,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옮기겠다는 응답을 비교적 많이 한듯하며 20대 젊은 층에서는 옮기지 않겠다는 태도가 최근에 들어 높은 경향이다. 이는 갈수록 대학 졸업생의 취업이 어려워지는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학력별로 보면, 저학력층에 비해서 고학력층에서 직장을 옮기지 않겠다는 응답자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 이 결과 역시 대졸자들의 취업난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응답자들 가운데 자기 직장에 대한 귀속감이 비교적 높은 것은 직장에 대한 의리 때문만이 아니고 현실 경제사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까지 드러낸다고 해석하고 싶다.

현실생활이 더욱 각박해져 가는 一面은 〈表 7-17〉을 살펴보아도 짐작 가능하다. “버스안에

서나 백화점에서 누군가가 소매치기 당하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① 범인을 내 손으로 직접 잡겠다, ② 범인을 잡는데 협력하겠다, ③ 당국에 신고하겠다, ④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므로 모르는척 하겠다, ⑤ 보복이 두려우므로 모르는척 하겠다, ⑥ 실제 당해봐야 알겠다, 이렇게 제시하여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현실이해타산을 가장 하지 않은 응답내용은 ①항인데, 조사연도가 진행될수록 그 선택비율이 낮아져가는 추세이다. 반면에 남보다 자신의 안녕 문제를 우선시 하는 응답항목인 ④항과 ⑤항에서는 그 비율이 높아져가는 추세라 하겠다.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대목을 찾는다면, 1989년도 조사 당시보다는 1993년도 조사 결과에서 남의 어려운 사정을 무관심하지 않고 그래도 도우려는 태도라 할 수 있는 ②항과 ③항에서 응답비율이 높아진 점이다. 그리고 무관심한 태도 소지자보다는 아직까지 ①항, ②항, ③항을 선택한 응답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表 7-17〉 소매치기에 대한 태도

연 도	1. 내 손으로 직접 잡겠다	2. 잡는 협력	3. 당국에 신고	4. 상관없으므로 모르는척 하겠다	5. 보복이 두려워 모르는척	6. 실제 당해 봐야알겠다	무응답	計(실수)
1984	5.8(31)	48.0(258)	13.0(70)	1.7(9)	5.9(32)	25.6(138)		100(538)
1989	4.8(33)	36.2(249)	11.6(80)	2.8(19)	15.0(103)	29.5(203)		100(687)
1993	3.5(44)	40.4(504)	14.0(174)	1.6(20)	13.6(169)	26.5(331)	0.4(5)	100(1,247)

성별로 보면, 남성 응답자들이 여성측보다 사태에 대처하는데 더욱 행동에 적극성을 보여 상식적인 짐작과 어긋나지 않는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젊은 층에서 소극적인 태도가 강해져 가는 경향이 뚜렷하다. 보복이 두려워 모르는척 하겠다는 응답항목과 실제로 당해봐야 어떻게 할는지 안다는 응답항목에서 조사연도가 진행할수록 선택비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개인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 태도가 젊은 연령층에 자리잡아 가는 단면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그런데, 응답자의 학력별로는 이 문제와의 일정한 관련성을 잡아내기 어렵다.

2. 家族主義

가족주의란 간단히 말해 개인보다는 가족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경향이다. 바꾸어 말하면, 개인의 생활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가족단위에서 집단공동으로 대처하려는 의식이다. 이 의식은 우리 전통사회의 중심적 가치를 형성한 것으로, 가부장적 권위주

의의 바탕을 이루었다. 대구시민들이 가족주의 성향을 얼마나 지녔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대구시민들이 전통사회의 의식구조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지름길이라 본다. 이를 위해, 3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는데, 첫째, 가족의 代를 이어 내려가야 한다는 인식, 둘째, 가족성원들을 한올타리 안에 묶어두려는 태도, 셋째, 가족원들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려는 의식에 관한 것이다.

첫째, “가정에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라는 질문을 하고서, ① 양자를 들여서 대를 잇는다, ② 본처외의 다른 여자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도록 한다, ③ 아들이 없더라도 그대로 산다, 이렇게 세가지 응답항목을 제시하였다. <表 7-18>에서 그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1984년도 조사 당시만 해도 가족의 대를 이어가려는 인식이 응답자 전체의 23%(①항과 ②항의 응답비율을 합한 것)에 달했는데, 그 이후의 조사년도에서는 계속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3년도 조사에서는 代를 이어갈 아들이 없어도 그대로 살겠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91.6%를 차지하여 상당한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응답자의 성별로 보면, 남성쪽의 태도변화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여성 응답자에 비해서는 아들에 대한 미련을 못버리는 편인 것 같다. 이와 같은 경향은 연령별로 볼 때 나이 많은 층에서도 나타난다. 학력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1984년도와 1989년도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들의 학력이 낮을수록 가족의 대를 이어가야 한다는 인식을 더 많이 갖고 있음이 드러났었는데, 1993년도 조사에서는 학력차이에 따른 이런 연관성은 사라지고 없음을 알 수 있다.

<表 7-18>

代的 계승

연 도	1. 양자를 들여서 계승	2. 본처외의 다른 여자 통해서라도 아들낳게	3. 아들이 없더라도 그대로 산다	무응답	計(실수)
1984	17.8(96)	5.2(28)	77.0(414)		100(538)
1989	10.6(72)	2.6(18)	86.8(590)		100(680)
1993	5.5(69)	2.4(30)	91.6(1,142)	0.5(6)	100(1,247)

둘째, “자녀의 결혼 후 분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① 장남이든 차남이든 모두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좋다, ② 장남의 경우만 같이 살고 차남 이하의 경우는 분가하는 것이 좋다, ③ 장남이든 차남이든 형편에 따라 사는 것이 좋다, ④ 같이 살지 않고 모두 분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네가지 응답항목을 제시하고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表 7-19>를 살펴보면, 모든 아들이 함께 동거하는 것을 원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세번의 조사에서

해가 지날수록 계속 낮아지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장남과 동거하길 원하는 태도는 80년대 조사 당시만 해도 17% 남짓되는 응답자들이 갖고 있었는데, 1993년도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5.5%로 떨어졌다. 그렇지만, 이런 비율의 변화를 두고 응답자들 대부분이 전통사회에서 바람직한 가족유형이라고 여겨진 확대가족에 대한 선호감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 자식들이 모두 분가하기를 바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형편에 따라서 어느 아들이라도 함께 사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들의 비율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자 그대로 ‘형편에 따르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지 자식들의 분가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태도가 여전한 것 같다. 다시 말해서, ①항, ②항, ③항에 응답한 비율의 분포에서는 많은 변화가 나타난 것이지만, 이 세개의 항목을 선택한 응답자들의 비율을 합하면 변화가 별로 없는 것이다. 곧 핵가족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대하여 형편이 닿는다면 따라가지 않으려는 가족의식을 지키고 있다고 본다. 이런 의식은 여성쪽보다는 남성쪽에서 더 강하게 드러난다. 연령별로 보면, 1984년도와 1993년도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1984년도 조사에서는 20대와 50대 연령층 가운데 전통적인 가족의식을 가진 응답자들이 많고, 그에 대조되는 것이 30대 연령층으로 분가를 바라는 응답자 비율이 34.4%로 상대적으로 많이 높다. 20대에서 아들 모두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22.6%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고, 또 모두 분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비율은 15.9%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다는 것은 약간 의외의 결과로 보인다. 1993년도 조사 결과에서는 20대 응답자들이 모든 아들과 부모가 동거하는 것을 선호한 비율에서 다른 연령층보다 높지만 7.8%로 줄었고, 모두 분가하는 것을 선호한 비율이 25.6%로 40대 이하의 다른 연령층과 비슷하다. 그런데, 20대의 이런 변화는 1984년도 조사와 1989년도 조사 사이에 일어난 현상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학력별로 보면, 1984년도의 경우에 저학력층에서 가족의식을 좀더 유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의 조사년도에서는 학력에 따른 의식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表 7-19〉 자녀의 결혼후 분가

연 도	1. 모든 아들이 함께 동거	2. 장남만 동거	3. 형편에 따라 어느 아들이든	4. 모두 분가	무응답	計(실수)
1984	13.0(70)	17.7(95)	47.6(256)	21.7(117)		100(538)
1989	8.7(60)	17.3(119)	49.3(338)	24.6(169)		100(686)
1993	6.4(80)	5.5(69)	63.2(788)	24.8(309)	0.1(1)	100(1,247)

셋째, “노후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를 묻고서는, ① 내 자신이 모은 돈이나 재산으로 살아가겠다, ② 연금으로 살아가겠다, ③ 자녀들에게 의지하여 살겠다, ④ 친척들에게 의지하여 살겠다, ⑤ 양로원에 의지하겠다, ⑥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다섯 항목 가운데 답을 고르도록 하였다. 〈表 7-20〉에 정리된 내용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이미 1984년도 조사 당시에 자녀에게 의지하여 노후생활을 하겠다는 비율이 전체의 8.9%에 지나지 않았다. 조사년도가 최근에 올수록 이 비율은 5.5%, 2.9%로 감소하였다. 그 반면에 자신이 모은 돈이나 재산으로써 살아가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56.7%에서 시작하여 64.6%, 68.9%로 계속 증가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연금에 의지하겠다는 비율도 4.5%, 8.2%, 12.3%로 나타나서 조사년도마다 상승추세를 보였다. 노후생활대책을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비율은 1984년도의 28.6%에서 1989년도 21.1%, 1993년도 14.7%로 일관되게 줄었다. 이렇게 볼 때, 응답자들은 가족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지하려는 의식보다는 자기 개인의 생활문제에 대해 스스로 대비하는 의식이 점점 더 높아져감을 알 수 있다. 이런 의식은 남녀 응답자들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는 없고, 연령층에 따라서는 계속 차이가 나타난다. 나이가 젊은 층일수록 자신이 모은 재산과 돈으로 노후에 살아가겠다는 응답비율이 높는데, 20대 이하의 연령층과 50대 이상의 연령층의 이 응답비율의 차이는 조사년도가 지나갈수록 좁혀져 간다. 그만큼 나이 많은 층에서 가족에게 자신의 노후생활을 맡길 수 없다는 인식이 최근으로 올수록 확산해 가는 경향을 나타낸다. 응답자의 학력별로 보면, 고학력층일수록 노후대비를 자신의 힘만으로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는 반면에 저학력층일수록 자녀들에게 의지하겠다는 항목과 또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항목에 높은 비율의 응답을 하였다. 그리고 생활정도가 낮은 계층일수록 노후생활대책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 더 높은 경향으로 계속 나타난다.

〈表 7-20〉 노후의 생활대책

연 도	자신이 모은 돈이나 재산	연 금	자녀에게 의지	친척에게 의지	양로원에 의지	별로 생각안함	무응답	計(실수)
1984	56.7(305)	4.5(24)	8.9(48)	0.6(3)	0.7(4)	28.6(154)		100(538)
1989	64.6(444)	8.2(56)	5.5(38)	0(0)	0.6(4)	21.1(145)		100(687)
1993	68.9(859)	12.3(154)	2.9(36)	0.1(1)	0.7(9)	14.7(183)	0.4(5)	100(1,247)

요약하면, 세번의 조사결과를 분석할 때, 대구시민들은 가족주의적 성향이 해가 갈수록 현

격하게 저하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젊은층, 고학력층, 여성 응답자 사이에서 그 경향이 강하다. 대체적으로, 아직까지 확대가족 유형이라는 형식적 측면에서는 전통적 가족의식을 선호하는 면을 유지하고 있지만, 가족의 대를 잇는다는 노후의 생활대비를 하는 문제에서는 개인주의적 의식이 지배적인 면을 드러낸다. 곧 가족공동체에 대한 미련은 버리지 않고 지키려는 의식을 엿볼 수 있으나 세태의 흐름에 따라 가족성원에 의지하기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의식이 우세해 간다.

3. 傳統主義

전통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의지나 기호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는 문화적 전통이 제시하는 행위규범에 따라 태도와 행동을 정해버리는 경향이 짙다. 전통주의는 문화권에 따라 구체적 의미가 다른 것도 사실이다. 아래의 문항들은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고수해 온 행위규범 몇가지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 행위규범들 가운데, 지키지 않았을 때 사회적 제재를 강하게 받는 原規(Mores)에 해당하는 것부터 약하게 받는 習俗(Folkways)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 원규에 해당하는 행위규범으로부터 개인은 이탈하기 쉽지 않고, 습속에 해당하는 행위규범에 대해서는 동조하는 정도에서 변화가 높은 것이 通例이다.

5개의 문항을 중심으로 대구시민들의 전통주의에 관한 의식변화를 살펴보자. 이 문항들은 결혼제도와 연관된 것들인데,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결혼을 하는 것이 ‘정상적’ 삶이라는 이른바 普遍婚 제도를 지켜왔다. 개인주의가 발달한 현대 서구사회에서는 결혼이 개인의 삶에서 의무조항 또는 필수요건이라는 의식이 퇴색한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고 본다.

첫째, “동성동본끼리 결혼을 허용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① 전적으로 찬성이다, ② 일정한 범위(8촌)내에서는 허락치 않는다는 조건부로 찬성한다, ③ 원칙적으로 반대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구제해 줘야 한다, ④ 전적으로 반대이다, ⑤ 모르겠다, 이렇게 다섯가지 응답항목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답하게 하였다. 〈表 7-21〉은 동성동본 결혼 허용문제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정리한 것이다. 1984년도 조사 설문지에서는 이 문항이 포함되지 않았다가 1989년도 무렵에 동성동본 불혼법 폐지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그 당시에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時事性을 지닌 문제로 제시되었다. 1989년도 조사결과에 비해, 1993년도 조사결과는 동성동본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모든 항목에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의 비율은 낮게 나타난다. 동성동본 결혼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1989년도 조사대상자의 32.3%에 해당했는

데, 1993년도에는 22.9%였다.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상관지어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로는 응답자들 사이에 이 문항과 통계적인 연관성을 나타낸다. 젊은 층일수록 찬성입장이고 나이 많은 층일수록 반대입장이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20대 연령층에서는 전적으로 찬성 또는 조건부 찬성의 입장으로 쏠려 가는 경향이 높다. 학력이 높은 층에서 낮은 층에 비해 찬성입장을 더 찾아볼 수 있고, 전문관리직 종사자는 다른 직업인들보다 찬성입장이 뚜렷하며 반대한다는 비율이 1989년도 16.5%에서 1993년도 8.2%로 감소해 간다.

〈表 7-21〉

동성동본의 결혼

연 도	1. 전적으로 찬성	2. 조건부 찬성	3. 원칙적으로 반대, 불가피한 경우 구제	4. 전적으로 반대	5. 모르겠다.	무응답	計(실수)
1989	3.2(22)	13.5(93)	41.0(282)	32.3(222)	9.9(68)		100(687)
1993	5.6(700)	19.6(245)	45.5(568)	22.9(286)	6.2(77)	0.1(1)	100(1,247)

둘째,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고 묻고, ① 찬성이다, ② 반대이다, ③ 모르겠다에서 하나 답하도록 하였다. 〈表 7-22〉에서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응답자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1989년도 조사 당시 찬성이 15.1%, 반대가 65.4%였었는데, 1993년도 조사 결과는 찬성이 13.9%로 줄었고 반대는 72.3%로 늘었다.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함께 고려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보면, 1989년도 조사 결과에서는 남녀 응답자 사이에 별다른 응답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가 1993년도 조사 결과에서 남자집단은 여자들보다 찬성하는 입장이 드러나고, 여자집단은 남자들보다 반대하는 비율이 높다. 세간의 얘기처럼 간통죄가 폐지되면 여성쪽이 더 피해를 보기 쉽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 같다.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서도 입장차이가 분명하다. 젊은 연령층일수록 폐지입장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가고, 반면에 나이 많은 층일수록 폐지반대의 비율이 높아간다. 1989년도와 비교해서 1993년도 조사에서 20대는 찬성입장이 더 많아졌고,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반대비율이 더 높아졌다. 그만큼 간통죄 폐지문제에 대한 世代間의 의견차가 커져가는 경향이다. 응답자의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학력층 집단에서 다른 학력층보다 간통죄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는데 이런 연관성은 1993년도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난다. 직업별로 보면 전문관리직과 사무직 종사자들은 간통죄폐지 찬성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경향을 보이고, 판매직과 노무기술직 종사자들은 간통죄폐지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경향을 보여 서로 대조적이다. 아무튼, 전체적

으로 모르겠다라는 응답비율은 감소해 가면서 폐지 반대 입장에 서는 비율이 높아져 가는 경향을 나타낸다.

〈表 7-22〉

간통죄 폐지

연 도	찬 성	반 대	모르겠다	무응답	計(실수)
1989	15.1(104)	65.4(450)	19.5(134)		100(688)
1993	13.9(173)	72.3(901)	13.8(172)	0.1(1)	100(1,247)

세월이 지나면서, 동성동본 결혼 허용문제에서는 전통적인 가치판단에서 멀어져감을 볼 수 있었는데, 간통죄 폐지문제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가치판단으로 오히려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다. 한가지 해석은, 결혼대상자를 선정하는 문제에서는 제도보다는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간통죄 문제는 개인의 결혼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개인행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 같다. 바꾸어 말하면, 집단이나 제도의 존속 자체에 주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하는 것에도 판단의 기준을 두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간통죄 문제에서도 전통주의를 따르다기보다는 개인주의를 따르는 의식성향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셋째,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응답항목으로, ① 결혼 전 성관계가 있어도 상관없다, ②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는 있어도 무방하다, ③ 약혼한 사이에는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④ 결혼 전 성관계는 있어서는 안된다,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表 7-23〉는 1984년도 조사결과까지 포함하여 응답내용을 실고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들의 대다수인 2/3정도가 조사때마다 혼전 성관계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취한다. 다만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는 허용될 수 있다는 응답비율이 첫 조사때 보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적어도 지난 10년동안에 응답자들은 혼전순결을 중요시하는 전통가치에 동조하는 성향에서 별로 변화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고려해 보면, 일정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남성보다는 여성 응답자들이 혼전순결을 더 의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젊은 연령층일수록 혼전순결의식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드러나고, 특히 20대 연령층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는 혼전 성관계가 있어도 무방하다는 응답비율이 22.0%, 26.2%, 43.3%로 조사때마다 증가일로에 있다. 대조적으로,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혼전 성관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답한 비율이 69.0%,

76.2%, 81.4%로 나타나서 전통가치규범에 따르는 응답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결국, 혼전순결 문제에 대해서도 연령차이에 따른 세대간의 인식차이가 커져가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응답자의 학력집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다.

〈表 7-23〉

결혼전 성관계

연 도	1. 있어도 상관없다	2. 사랑하는 사이 에는 무방하다	3. 약혼한 사이 에는 무방	4. 있어서는 안된다	무 응 답	計(실수)
1984	3.5(19)	13.4(72)	15.6(84)	66.7(359)	0.8(4)	100(538)
1989	1.7(12)	14.1(97)	14.8(102)	69.3(476)		100(687)
1993	3.0(38)	16.8(210)	13.6(169)	66.4(828)	0.2(2)	100(1,247)

넷째, “혼인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① 부모가 정하는 것이 좋다, ② 본인의 동의를 얻어 부모가 정하는 것이 좋다, ③ 부모의 동의를 얻어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좋다, ④ 본인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네가지 선택항목을 제시하였다. 전통사회에서는 혼인을 정하는 일은 당사자 개인보다는 부모의 권한에 속하였는데 서구문화의 유입과 더불어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당사자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변화과정은 〈表 7-24〉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부모가 결정하는 경우는 첫 조사때에도 이미 전체 응답자 가운데 5.0%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더욱 감소해 가는 반면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 본인이 결정한다는 항목의 선택비율이 48.2%, 48.8%, 56.5%로 점차 상승추세에 있다. 그런데도 본인 자신이 결정한다는 항목의 응답자 비율은 큰 변화없이 11%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런 대체적인 추세에서 남녀 응답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는 없다. 그러나, 역시 응답자의 연령층에 따라서는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다. 짐작할 수 있듯이, 고연령층보다는 젊은 층일수록 당사자 위주의 결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 세대의 변화에 나이 많은 층이 따라가는 면을 볼 수 있는데, 50대 이상의 연령층을 살펴보면, 부모의 의사를 우선시 하는 항목들에서 응답비율이 줄어가는 반면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자식들이 결정하는 쪽에 쏠리고 있다. 즉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③항에 응답한 비율이 28.2%, 45.7%, 51.2%로 늘어가고 있다. 학력별로 보면, 80년대의 저학력층 응답자들에서 부모가 정한다는 항목과 본인이 정한다는 항목에서 다른 연령층보다 응답비율이 높은 점이 눈에 띈다. 고학력층에서는 그 60% 정도가 조사년도마다 부모 동의하의 본인결정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혼인에 관한 의사결정

〈表 7-24〉

연 도	1. 부모가 결정	2. 본인의 동의없이 부모가 결정	3. 부모의 동의없이 본인이 결정	4. 본인 자신이 결정	무응답	計(실수)
1984	5.0(27)	35.3(190)	48.2(259)	11.3(61)	0.2(1)	100(538)
1989	4.5(31)	36.7(252)	48.8(335)	10.0(69)		100(687)
1993	1.8(22)	30.2(376)	56.5(704)	11.5(144)	0.1(1)	100(1,247)

다섯째,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婚姻慣行 하나가 결혼상대자를 고를 때 궁합을 보는 일이다. 〈表 7-25〉은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리한 것인데, 설문형태는 다음과 같았다: “혼인을 정할 때는?” ① 궁합을 꼭 보아야 한다, ② 궁합을 참고로 하는 것이 좋다, ③ 궁합을 볼 필요가 없다. 응답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사년도에 따라 변화가 거의 없는 셈이다. 특히 궁합을 볼 필요가 없다는 응답비율은 38% 안팎인데, 표본오차를 감안할 때 38%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하겠다. 응답자의 성별을 고려하면, 여성쪽이 남성쪽보다 궁합을 볼 필요가 있다는 태도를 조금 더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1984년도 조사에서 20대는 궁합을 볼 필요없다는 태도에서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50대 이상의 高 연령층에서는 궁합을 꼭 보아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21.1%로 나타나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그러다가 이 비율이 1989년도 15.9%, 1993년도 5.8%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응답자의 학력집단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저학력층은 궁합을 꼭 보아야 한다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면 고학력층은 궁합을 볼 필요가 없다는 항목에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궁합의 필요성

〈表 7-25〉

연 도	1. 꼭 보아야 한다	2. 참고로 하는 것이 좋다	3. 볼 필요가 없다	무응답	計(실수)
1984	8.8(47)	52.8(284)	38.3(206)	0.2(1)	100(538)
1989	10.3(71)	52.7(362)	37.0(254)		100(687)
1993	6.3(78)	56.0(698)	37.7(470)	0.1(1)	100(1,247)

요컨대, 전체적으로 보면, 전통주의적 의식이 지난 10년동안 별로 퇴색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전통주의적 의식이 계속 퇴조해 가는 경향은 20대와 같은 젊은 연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고학력층에서도 이런 경향이 확산해 가는 추세이다. 반면에 일부 여성층과 고

연령층에서는 전통주의를 더욱 고수해 가려는 측면도 찾아볼 수 있다.

4. 閉鎖主義

폐쇄주의란 일정한 지역공간에 대한 자기동일시가 지나치게 강한 성향이다. 地域緣故主義라고도 말한다. 폐쇄주의는 內集團과 外集團間의 분리의식을 낳고, 외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내집단에 대해서는 맹목성을 갖는 특징이 있다. 폐쇄주의 의식을 파악해 내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을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通婚圈 의식을 조사함으로써 그 이해를 얻을 수 있다.

“본인이나 자녀의 혼인을 정할 때 어느 지방 출신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하여, 서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 이북, 해외동포, 어느 지방 사람이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응답항목을 정하여 제시하였다. 〈表 7-26〉에서 그 응답내용을 정리한 것을 살펴보면, 경상도라는 응답비율이 1984년도와 1989년도 조사에서는 각각 38.7%, 37.7%로서 거의 변화가 없다가 1993년도 조사에서 23.0%로 줄어 들었다. 서울을 선택한 비율도 1984년도에 15.6%였다가 1989년도에 10.7%, 1993년도에 9.2%로 감소하였다. 그 반면에 어느 지방이라도 상관없다라는 항목에서의 응답비율은 37.6%, 43.3%, 61.3%, 이렇게 조사 때마다 상승추세가 뚜렷이 나타난다.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의 교차분석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表 7-26〉

혼인과 지방색

연 도	서 울	경 기도	충 청 도	전 라 도	경 상 도	강 원 도
1984	15.6(84)	1.1(6)	4.5(24)	0.7(4)	38.7(208)	0.4(2)
1989	10.7(73)	1.6(11)	5.6(38)	0(0)	37.7(258)	0.3(2)
1993	9.2(115)	1.0(13)	2.8(35)	0.8(10)	23.0(287)	0.6(7)
제 주 도	이 북	해 외 동 포	어느 지방 사람이라도 상관없다		무 응답	計(실수)
0.4(2)		1.0(5)	37.6(202)		0.2(1)	100(538)
0.3(2)	0.3(2)	0.1(1)	43.4(297)			100(684)
0.2(3)	0.1(1)	0.2(3)	61.3(765)		0.6(8)	100(1,247)

폐쇄주의 의식을 통혼권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측정해 본 결과, 응답자들은 해가 지날수록, 특히 1989년도와 1993년도 조사 사이에, 폐쇄의식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난다.

5. 民間信仰意識

민간신앙의식이란 傳來하는 민간신앙의 효험을 믿고 의지하려는 성향을 말한다. 보는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지만, 서구사회의 과학적 지식이 우리 사회의 제도교육에서 강조되면서 민간신앙은 미신이고 비합리적 사고의 부산물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은 셈이다. 여기서는 더 낫다, 더 못하다를 가리기보다는 다만 시민들의 의식구조의 한 부분을 조명한다는 의미에서 민간신앙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기로 한다. 궁극적 목표가 바로 그 변화정도를 파악하여 의식의 변천을 살펴보고자 함에 있다.

“점, 푸닥거리, 토정비결, 사주관상, 궁합, 풍수지리와 같은 것들의 효과가 있다고 믿고 앞으로 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에 대하여 ① 있다, ②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답하도록 하였다. 〈表 7-27〉에서 그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1984년도와 1989년도 조사 사이에 민간신앙의 효험을 믿는다는 쪽의 응답비율이 조금 상승하고 그 대신에 믿지 않는다는 경우가 하락하였다가 그 이후는 거의 같은 응답비율을 유지한다. 1993년도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3할에 가까운 28.5%가 민간신앙의 효험이 있다고 믿고 앞으로도 해 볼 생각이라고 답하였다. 여성 응답자들이 남성측에 비해서 민간신앙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응답비율이 조사년도마다 약간씩 더 높다. 1993년도 조사결과를 보면, 남성 응답자의 1/4정도와 여성 응답자의 1/3정도가 민간신앙의 효험을 믿는다는 응답을 하였다. 1989년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1993년도 경우에는 20대 이하와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30대와 40대 집단들보다 민간신앙에 대한 긍정적 답을 하였다. 학력별로 보면, 1989년도 조사에서는 고학력층보다는 저학력층 응답자 가운데 민간신앙에 대한 긍정적 응답비율이 10%가 더 높다. 그러나 1993년도 조사에서는 그 비율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 직업별로 보면, 전문관리직과 사무직 종사자들이 1989년도 조사에서는 민간신앙에 대한 긍정적 응답비율에서 16.7%와 23.9%로 나타났었는데, 1993년도 조사에서는 각각 상승하여 25.5%와 37.1%로 나타났다. 대부분 다른 직업집단에서는 오히려 그 해당비율에서 하락추세를 보였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1989년도 조사결과와 1993년도 조사결과가 매우 恰似한 응답비율을 나타내지만, 내용적으로는 20대의 젊은층, 고학력층,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 종사자들에서 민간신앙에 대한 효험을 믿는 태도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가지 현대질병에 대한 동양적 치료기법을 대중화하면서 전통적인 고유사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가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表 7-27〉

미신에 대한 경험 및 태도

연 도	있 다	없 다	무 응 답	計(실수)
1984	22.3(120)	77.0(414)	0.7(4)	100(538)
1989	29.1(199)	70.9(484)		100(683)
1993	28.5(355)	70.5(879)	1.0(13)	100(1,247)

6. 男女差別意識

남녀관계를 지배와 복종관계로 인식하는 성향을 남녀차별의식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성우월주의와 연관되어 나타나고, 남녀평등사상과 대립하는 것이다. 남녀차별의식은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두루 발견되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남아를 선호하고 남성들이 사회적 지위를 독점해 온 현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 하겠다. 모든 시민사회에서는 성차별을 조장하는 제도를 고쳐나가는 추세에 있다. 성차별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그만큼 건전한 시민사회의 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 대구시민들의 의식가운데 남녀차별의식이 얼마만큼 자리잡고 있으며 또한 그 변화정도는 어떤지를 3개의 문항을 토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가정에서 주요한 일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① 남편이 전적으로 처리한다, ② 아내가 전적으로 처리한다, ③ 남편이 주로 처리하되 아내의 의견을 참조한다, ④ 아내가 주로 처리하되 남편의 의견을 참조한다, ⑤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다섯가지 응답항목을 제시하였다. 〈表 7-28〉에서 그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부부합의해서 처리한다는 응답비율이 모든 조사년도에서 가장 높지만, 1989년도 조사와 1993년도 조사 사이에 15%가 넘게 하락하여 52.2%로 최종 집계되었다. 다른 응답항목들을 보면, 1984년도와 1989년도 조사 결과는 크게 다른 점이 없는 반면에, 1989년도와 1993년도 사이에 그 응답비율이 조금씩 높아졌다. 1993년도 조사결과를 보면, 주요 가사처리를 남편이 주로 하고 아내의견을 참조한다는 비율이 32.0%, 그 반대의 방식이 8.6%로 나타난다. 이런 결과가 男性爲主意識이 증가했음을 뜻하는지 아니면 남성들이 점차 가사역할을 분담해 가는 것인지 분명한 해석을 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부부합의로 처리한다는 응답비율이 하락한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볼 수 없겠다.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의 교차분석표를 보면, 남편이 주로 처리하고 아내의견을 참조한다는 응답에서는 남성측 비율이 여성측 비율보다 계속 더 높다. 이렇게 보면, 남성의 가사참여를 아내입장에서는 부부합의로 처리한다는 식을 받아들이는 측면이, 동시

에 남편입장에서는 남편이 주로 처리하고 아내의견을 참조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을 것 같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젊은 층에서는 부부합의해서 처리한다는 응답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여 다른 연령집단들보다 계속 더 높게 나타난다. 학력집단간 응답비율 차이는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

〈表 7-28〉

가사에 대한 의사결정

연 도	1. 남편이 전적으로 처리	2. 아내가 전적으로 처리	3. 남편 위주로 처리 아내 의견 참조	4. 아내 위주로 처리 남편 의견 참조	5. 부부합의 처리	무 응 답	計(실수)
1984	3.2(17)	0.5(3)	25.6(138)	4.3(23)	66.2(356)	0.2(1)	100(538)
1989	1.8(12)	0.9(6)	25.7(176)	3.9(27)	67.7(463)		100(684)
1993	4.3(54)	2.3(29)	32.0(399)	8.6(107)	52.2(651)	0.6(7)	100(1,247)

둘째, “여성이 결혼 후에도 직업 갖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묻고, ① 되도록이면 갖는 것이 좋다, ② 본인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좋다, ③ 되도록이면 갖지 않는 것이 좋다, ④ 여성은 가정만 지켜야 한다, 이렇게 네가지 응답항목에서 하나를 고르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정리한 것이 〈表 2-29〉이다. 조사년도마다 가장 높은 선택비율은 본인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항목에서 나타났다. 1984년도와 1989년도 사이에 10% 가량 증가하였다가 1993년도 조사에서는 조금 떨어졌지만 절반이 넘는 54.9%이다. 기혼여성이 가능한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는 응답비율은 15.8%에서 시작하여 22.3%, 31.7%로 계속 증가하였다. 반대로, 기혼여성의 취업에 부정적인 인식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즉, 가능한 갖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비율이 23.4%, 14.4%, 10.6%로, 또한 가정만 지켜야 한다는 응답비율도 11.5%, 4.7%, 2.7%로 하락추세를 보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혼여성의 취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우세해져 가는 경향이 뚜렷하다. 하지만, 이것을 남녀평등의식이라고 단정짓기엔 설부른 느낌이 든다. 남편만의 벌이로는 생활이 넉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부 맞벌이는 여성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겨다 주는 일일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성에 따라 결과를 정리해 보면, 남녀 응답자들 사이에 차이가 드러난다. 여성응답자들은 되도록이면 갖는 것이 좋다는 항목에서, 남성응답자들은 되도록이면 갖지 않는 것이 좋다는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낸다. 특히 여성응답자들 경우에 결혼후 되도록 직장을 갖는 것이 좋다는 항목을 선택한 비율이 18.2%, 27.6%, 41.8%로 급상승하는 면을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1984년도 조사에서는 연령이 많은 층일수록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양상이었으나, 그 이후 조사

년도에서는 연령집단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학력별로 보면, 저학력 집단일수록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에 그 선택비율이 높아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 정도차이는 점점 좁혀져간다. 1984년도와 1993년도 조사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응답비율이 고학력층으로 갈수록 높아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 응답항목을 고학력집단의 53.1%(1984년도), 56.0%(1989년도), 58.2%(1993년도)가 선택하여 조사년도마다 응답비율이 높아가는 추세이다.

〈表 7-29〉 기혼 여성의 취업

연 도	되도록 갖는 것이 좋다	본인의 의사대로	되도록 갖지 않는 것이 좋다	가정만 지키도록	무 응 답	計(실수)
1984	15.8(85)	49.1(264)	23.4(126)	11.5(62)	0.2(1)	100(538)
1989	22.3(153)	58.7(403)	14.4(99)	4.7(32)		100(687)
1993	31.7(395)	54.9(684)	10.6(132)	2.7(34)	0.2(2)	100(1,247)

셋째, 우리사회는 공식조직 내에서 남녀간 지위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表 7-30〉은 이런 문제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는데 적합한 조사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 해당 문항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직장에서 남자직원의 능력이 여자직원보다 조금 모자라더라도 장(長)의 자리에는 남자를 앉힌다면?”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여기서, ①항을 선택한 경우가 남녀차별의식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고, ②항을 선택한 경우는 남녀평등의식을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조사년도마다 남녀차별의식을 나타낸 응답비율이 52.4%, 34.6%, 32.5%로 감소해 가는데 특히 1984년도와 1989년도 사이에 큰 변화를 보인다. 응답자의 성별 차이는 모든 조사년도에서 나타난다. 짐작되듯이, 남성 응답자 가운데 남녀차별의식이 더 많다.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젊은 응답자일수록 남녀차별의식이 상대적으로 적다. 학력별로 보면, 1984년도와 1989년도 조사 결과에서는 고학력층이 저학력층보다 남녀평등의식을 더 많이 보였으나, 1993년도 조사 결과에서는 학력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가 지날수록 남녀차별의식은 감소해 가는 추세에 있으나 남성집단이 여성집단에 비해, 고연령층이 젊은 층에 비해 남녀차별의식을 가진 비율이 일관되이 높게 나타난다.

〈表 7-30〉 남녀 차별의식

연 도	찬 성	반 대	무 응 답	計(실수)
1984	52.4(282)	47.4(255)	0.2(1)	100(538)
1989	34.6(236)	65.4(446)		100(682)
1993	32.5(405)	67.4(840)	0.2(2)	100(1,247)

7. 黃金萬能意識

황금만능의식은 인간관계에서나 사회생활에서 금전적 가치를 최고로 중시하는 성향을 말한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人情과 같은 정신적·심리적 요인보다는 물질적 풍요를 앞세우는 풍조가 만연해졌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개인들에게 인품보다는 돈으로 사람들 평가하는 의식을 갖게 한 것으로 본다. 대구시민들 사이에 이런 황금만능의식이 어느 정도 자리잡았는지, 또한 그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돈이면 안되는 일이 없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서,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모르겠다, 이 가운데 하나를 답하게 했다. 이 문항의 조사 결과가 〈表 7-31〉에 정리되었다. 황금만능의식에 동조하는 응답자 비율이 1984년도 38.9%에서 1989년도 54.1%로 많이 늘었다가, 1993년도 47.7%로 다시 줄었으나 1984년도에 비해서는 높아졌다.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우리 사회에서 ‘돈이면 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셈이다.

〈表 7-31〉 황금만능의식

연 도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모르겠다	무 응 답	計(실수)
1984	38.9(209)	53.3(287)	7.8(42)		100(538)
1989	54.1(372)	38.8(267)	7.1(49)		100(688)
1993	47.7(595)	45.2(564)	6.9(86)	0.2(2)	100(1,247)

1984년도와 1989년도 조사 결과에서는 여성측에서 남성측보다 황금만능의식에 대한 찬성율이 높았으나, 1993년도 조사결과에서는 남성측보다 약간 낮아졌다. 연령별로 보면, 1984년도 조사 때에는 20대 연령층과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다른 연령집단들보다 찬성율이 높았다. 1989년도와 1993년도 조사 경우는 나이가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찬성율은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1993년도 조사에서 더 뚜렷함을 볼 수 있다. 학력별로 보면, 저학력 집단들에서 황금만능의식을 지닌 비율이 고학력 집단보다 더 높은 경향을 드러낸다. 이 경향은 1989년도 조사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8. 成就意欲

성취의욕은 현상유지보다는 새로운 것을 모색하려는 성향으로서, 불확실한 세계에 대한 모험의식이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진취적 성향이기도 하다. 경우에 따라, 보수성이나 전통주의와 대립하는 의식성향이라 할 수 있다. 성취의욕을 近代性의 상징으로 보는 사람들은, 한 지역사회가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의식이 바로 다름아닌 성취의욕이라고 한다.

대구시민들의 성취의욕의 정도와 변화를 <表 7-32>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과 같은 의견에 대하여 어느 쪽에 찬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항목으로, ① 성공을 위해서는 실패를 각오하고서라도 무엇인지 색다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② 색다르고 새로운 것은 실패하기 쉬우니 관례대로 따르는 것이 좋다, ③ 모르겠다, 이렇게 세가지를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1984년도에 ①항을 선택한 응답비율이 71.7%였던 것이 1989년도에는 59.9%로 하락하였다. 1993년도 조사에서는 62.7%로서, 1989년도 조사때보다 조금 상승하였지만 1984년도 경우에 비하면 감소한 것이다. 즉 성취의욕을 드러낸 응답자의 비율이 80년도의 양조사 사이에서 크게 떨어졌다고 본다. 그 반면에,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제법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측이 여성측에 비해 성취의욕을 드러낸 비율이 더 높다.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성취의욕에 대한 찬성율이 높아간다. 그리고 1989년도와 1993년도 조사 사이에 40대 연령층에서 찬성율이 53.4%에서 63.8%로 상승한 점도 눈길을 끈다. 학력별로 보면, 고학력층이 저학력층보다 상대적으로 성취의욕에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이러한 학력집단간 차이는 최근에 들어올수록 더 벌어지는 경향이 짙다.

<表 7-32>

성취의욕

연 도	1. 성공을 위해 새로운 것 시도	2. 관례대로 따르는 것이 좋다	3. 모르겠다	무 응 답	計(실수)
1984	71.7(386)	19.1(103)	8.6(46)	0.6(3)	100(538)
1989	59.9(411)	23.0(158)	17.1(117)		100(686)
1993	62.7(782)	23.3(291)	13.8(172)	0.2(2)	100(1,247)

9. 子女觀 및 職業觀

대부분의 성인들은 자녀를 거느리며, 그 자녀에 대한 교육은 부모의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직업을 갖지 않고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업 선택에서 인생관이 나타난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자녀관과 직업관에 대한 조사항목을 선택하고 그 결과분석을 통해 시민의식의 一面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녀의 교육은 어느 정도까지 원하십니까?”를 묻고, 그 응답내용을 아들의 경우와 딸의 경우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表 7-33〉에서 아들의 경우를 보면,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아들의 교육을 대학이상까지 마치기를 원하고 있다. 1993년도 조사에서 無應答者가 많이 나와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지만 조사년도마다 전문대학까지 나오기를 희망하는 응답비율이 상승추세에 있다고 하겠다.²⁸⁾ 응답자의 성별을 고려하면, 여성측에서 남성측보다 아들의 교육을 대학원이상 또는 해외유학까지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다. 응답자의 연령을 고려하면, 여성층과 같은 응답경향을 20대 연령층에서 찾을 수 있다. 응답자 학력과 연관지어 보면, 고학력집단일수록 저학력층보다 자기 아들의 교육을 대학원이상 또는 해외유학까지 시키려는 意思를 밝히는 비율이 더 높다. 그러나 1989년도에 비해 1993년도 조사에서는 고학력 응답자들의 이런 희망비율이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전문관리직 종사자들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表 7-33〉 자녀의 교육정도(아들의 경우)

연 도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 학	대학원	해외유학	무응답	計(실수)
1984		2.2(12)	1.3(7)	44.9(241)	31.0(167)	19.7(106)	0.7(4)	100(538)
1989		2.3(15)	2.7(7)	47.9(307)	27.1(174)	20.0(128)		100(641)
1993		0.6(8)	4.0(50)	46.0(574)	22.5(281)	16.1(201)	10.7(133)	100(1,247)

딸의 경우는 어떠한지를 〈表 7-34〉에서 살펴보면, 대학까지는 보내려는 응답비율이 조사년도마다 절반을 넘어선다. 그러나 대학원이나 유학까지 고려하는 비율은 아들의 경우와 비교해서 낮으며, 반면에 전문대학 이하의 항목에서 아들의 경우보다 비율이 더 높다. 그러나 최

28) 1993년도 조사결과에서 무응답이 의미하는 바가 그 해당 응답자에게 아들이 없고 딸만 있다든지 또는 아예 자녀를 갖는 것에 뜻을 두지 않은 경우라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무응답자들을 제외하고 전문대학 희망비율을 계산하면 4.5%이다.

근에 올수록, 딸을 적어도 전문대학까지는 보내겠다는 경향이 보인다. 응답자의 성별을 고려해서 보면, 아들의 경우처럼 역시 여성 응답자들에서 남성측에 비해 대학원이상 내지는 해외유학까지 딸을 교육시키길 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로 살펴봐도 아들의 경우와 거의 같은 경향이 드러난다.

〈表 7-34〉 자녀의 교육정도(딸의 경우)

연 도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 학	대학원	해외유학	무응답	計(실수)
1984	0.9(5)	11.1(60)	5.4(29)	51.1(275)	13.4(75)	7.8(48)	10.4(56)	100(538)
1989	0.3(2)	10.5(67)	5.8(38)	57.4(377)	13.7(90)	12.6(93)		100(657)
1993	0.3(2)	2.8(35)	7.1(89)	50.7(632)	15.4(192)	10.7(134)	13.1(163)	100(1,247)

다음으로, “자녀의 직업으로서 어떠한 직업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묻고, 그 답으로 20가지의 직업종류와 其他欄을 제시하였다.²⁹⁾ 〈表 7-35〉를 참고하여, 1984년도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직업을 차례대로 세가지를 든다면, 학자(교수) 19.5%, 의사 12.3%, 공무원 11.5%이다. 1989년도에는 그 순서가 학자(교수) 23.5%, 공무원 14.5%, 교사 10.2%로 나타난다. 1993년도에는 학자(교수) 14.2%, 교사 12.6%, 공무원 8.1%이다.³⁰⁾ 이렇게 보면, 이 고장은 巨儒碩學을 배출한 崇文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따라서 선비를 높게 평가하는 인식이 여전히 두드러진 면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상관관계를 따져보면, 1984년도의 경우에 위의 응답비율 순서에서 크게 벗어난 층이 50대 이상의 연령층인데, 학자와 의사를 선호한 비율이 각각 15.5%씩이고 그 다음 높은 비율인 12.7%가 교사를 선택하였다. 1993년도 조사결과에서 전체응답 경향과 많이 차이나는 집단이 20대 연령층인데 이들은 예술가와 언론인을 각각 11.1%씩 선택하였고, 그 다음 순으로 학자(교수)를 8.9% 선택하였다. 그리고 고졸이하의 학력층에서는 교사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전문관리직 종사자는 학자(교수)를 선택한 비율이 29.1%로 눈에 띄었다.

29) 이 문항은 아들의 경우와 딸의 경우를 분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상응답자들 가운데 아들에 적합한 직업, 또 딸에게 적합한 직업을 각각 취하여, 두가지 이상의 직업종류를 선택한 경우도 있다. 특히 1993년도 조사에서 이런 경우가 많았다.

30) 1993년도의 두 가지 이상 답한 事例를 제외하고 이들 비율을 계산해 보면, 17.7%, 15.7%, 10.1%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두가지 이상 택한 직업종류에 이들 직업이 포함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새로 계산된 비율을 최소한이라고 볼 수 있다.

〈表 7-35〉 자녀의 직업

직업	연도	1984	1989	1993
체육인		1.3(7)	0.7(5)	1.2(15)
정치가		7.4(40)	2.6(18)	1.2(15)
학자 (교수)		19.5(105)	23.5(161)	14.2(177)
예술가		2.4(13)	3.4(23)	3.7(46)
교사		7.1(38)	10.2(70)	12.6(157)
공무원		11.5(62)	14.5(99)	8.1(101)
법조인		8.2(44)	6.3(43)	4.9(61)
의사		12.3(66)	7.2(49)	5.8(72)
약사		5.4(29)	6.3(43)	3.8(48)
회사원		3.2(17)	4.8(33)	3.1(39)
실업가		3.3(18)	4.7(32)	4.7(59)
군인		2.8(15)	0.9(6)	0.6(7)
외교관		4.1(22)	3.7(25)	3.0(38)
엔지니어		5.8(31)	3.8(26)	3.1(39)
간호사		1.1(6)	0.9(6)	1.0(12)
언론인		0.7(4)	2.5(17)	2.7(34)
연예인			1.0(7)	1.2(15)
종교인		0.5(3)	0.9(6)	1.3(16)
농업인		0.4(2)	0(0)	0.1(1)
상업인		1.5(8)	1.5(10)	0.9(11)
기타		0.9(5)	0.7(5)	2.2(27)
무응답		0.6(3)		0.2(2)
적성에 맞는 직업				0.8(10)
두 가지 이상				19.6(245)
計 (실수)		100(538)	100(684)	100(1,247)

마지막으로, “많은 직업 가운데 어떠한 직업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① 명예가 낮더라도 수입이 좋은 직업, ② 수입이 적더라도 명예가 높은 직업, ③ 명예

나 수입보다도 봉사적인 직업, ④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나의 적성과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직업, 이렇게 네가지를 제시하였다. 직업관이자 인생관을 반영하는 응답항목들이다. 조사결과를 <表 7-36>에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응답비율은 조사년도마다 자신의 적성과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직업에서 나타나며, 그것도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이다. 1993년도 조사 당시 68%의 응답자가 이 ④항을 선택하였다. 명예보다는 소득이 높은 직업을 선택한 비율이 조사년도마다 두번째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봉사적인 직업을 갖겠다는 비율은 해가 지날수록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아무튼 명예나 봉사만으로 직업을 갖겠다는 비율은 1993년도 조사에서 각각 6.7%에 지나지 않는다.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연령과 학력, 직업에 따른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낸다. 젊은 연령층일수록 취미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선호는 비율이 높아가며, 高年齡層일수록 수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직업을 갖겠다는 경향이 짙다. 20대의 경우는 취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원하는 비율이 1984년도 74.4%, 1989년도 73.4%, 1993년도 84.4%로 집계되었다. 학력집단에 따라서도 일정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고소득우선의 직업 항목에서는 저학력층의 선택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 반대로 취미와 적성을 강조한 항목에서는 고학력층의 선택비율이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높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문관리직과 사무직 종사들 가운데 적성과 취미를 우선시하는 응답비율이 1989년도 조사때보다 1993년도 조사때에 더욱 높아져서 각각 70%를 상회하는 반면, 그 응답비율이 상승한 정도만큼 고소득을 앞세우는 직업을 선택한 비율은 낮아진 셈이다. 대부분의 다른 직업집단에서는 그 경향이 이들 화이트칼라층의 것과 정반대로 나타난다. 또한, 두 조사시기에서 전문관리직 종사자들은 명예를 중시하는 비율도 14%를 넘어, 다른 직업인들에 비해 두배정도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

<表 7-36>

직업관

연 도	1. 명예나 낮아 도 고소득인 직업	2. 수입이 적더 라도 명예가 높은 직업	3. 명예나 수입 보다도 봉사 적인 직업	4. 적성과 취미 를 살릴 수 있는 직업	무 응 답	計(실수)
1984	19.9(107)	8.3(45)	9.3(50)	62.1(334)	6.4(1)	100(538)
1989	17.8(122)	8.5(58)	8.0(55)	65.7(451)		100(686)
1993	18.4(229)	6.7(84)	6.7(83)	68.0(48)	0.2(3)	100(1,247)

第3節 市民意識과 市民運動

앞 절에서는 설문지 표본조사를 통해 얻은 실증적 자료를 분석하여 시민의식을 측정, 파악하고자 하였다. 시민의식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시민의식이 집합적으로 표출하여 형상화한 시민운동의 전개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하여 밝히는 작업이다. 시민운동은 시민사회의 구체적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의 집합적 표출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시민들이 지역사회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자생적 단체를 통해 대처하는 자발적인 조직활동이다. 따라서, 순수민간단체의 출현과정과 설립목적, 그리고 활동정도를 추적함으로써 시민의식의 흐름을 잡아 볼 수 있다. 이런 작업은 아무래도 사건중심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 기록이 漏落되었거나 조사자의 시야에서 제외된 에피소드는 애초부터 관심밖의 대상이 되고마는 것이 근본적인 한계점이다. 市中の 일간지 기사들을 토대로 하는 次善의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아래에서는, 먼저, 대구시민들이 최근들어 어느 정도로 시민의식의 표출경험을 하였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대구지역관련 신문기사에서 자생적 순수민간단체의 활동을 추출,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앞으로 시민의식이 나아갈 방향을 전망하기로 한다.

I. 市民意識의 表出經驗

시민은 일상생활 가운데 겪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노력을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의 권익을 신장하려는 도시지역 사람들이다. 대구지역의 시민들이 市의 정책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는다고 생각하는지, 제도적 절차를 밟아 順理的으로 처리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은 주로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지역사회 주민들이 市의 정책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물었는데, 그 응답항목의 선택비율은 ① 모든 분야에 걸쳐서 행사하고 있다 2.6%, ② 분야에 따라 행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31.9%, ③ 대체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51.8%, ④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12.6%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응답자의 2/3정도가 대구시민들이 시정참여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런 경향은 남성 응답자들이 여성 응답자들보다 더 강한 양상을 보인다. 여성의 응답비율은 ①항과 ②항에서 남성 경우보다 더 높으며, ③항과 ④항에서는 그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연령에 따라서도 응답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20대 연령층에서 ③항을 선택한 비율이 76.7%로서

다른 연령집단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응답자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저학력층 집단들은 ①항과 ②항에서 고학력층보다 응답비율이 더 높고, ③항과 ④항에서는 고학력층의 응답비율이 저학력층 경우보다 더 높다. 전문관리직 종사자들도 다른 직업집단들에 비해 ③항과 ④항에서 응답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지난 5년 동안 다음과 같은 행동에 한번이라도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를 묻고서, 시민의식이 표출하여 나타난 행동의 예를 ① 기관에 항의, ② 기관에 청원서 제출, ③ 가두서명 성명, ④ 공청회 참석, ⑤ 캠페인 참여, ⑥ 시위에 참가, 이렇게 6개를 제시하고 그 각각에 대해 유무를 밝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의 참여경험이 높았던 예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면, 캠페인 참여(30.0%), 가두서명이나 성명(28.0%), 기관에 항의(15.9%), 공청회 참석(13.8%), 시위에 참여(7.7%), 기관에 청원서 제출(7.0%)의 順으로 나타난다.

다른 시민들을 상대로 자신의 뜻이나 가입단체가 하고 있는 일을 안내하고 또 동조자를 모으기 위하여 다른 시민들을 의도적으로 접근해본 경험자가 대구시민 가운데 비교적 많음을 알 수 있다.³¹⁾ 실제, 모든 정치행동의 예에서 전국평균수치를 상회하고 있다.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연관지어 살펴보면, 이러한 행동표출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경험을 드러낸 집단으로는, 남성, 20대 연령층, 고학력자,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 종사자, 사회계층으로는 중간층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집단에서 분출하는 현실참여의 욕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 같다. 다른 행동 예들에서보다도 기관에 대한 청원서 제출경험에서 가장 낮은 응답비율이 나타나는 것은 모든 집단들에서 공통적인 경향인데, 이 점이 示唆하는 바를 따져볼 필요도 있다. 시민들 사이에 아직 시민사회에서 적법적이고 합리적인 대처의식이 약한 면도 없지 않겠지만, 기관에게 믿고 맡기는 것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더 큰 이유라 싶다. 갈수록 다원화하고 時急化하는 시민들의 市政 참여욕구를 순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行政通路가 시민에게 열려야 할 줄 안다.

31) 1991년 3월과 4월에 실시된 전국적인 표본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나온 전국 평균수치와 앞에서 제시한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1993년도에 실시한 조사결과를 서로 비교해 보면, 대구 응답자들이 정치행동참여 경험도가 더 높다고 하겠다. 위의 전국적 표본조사는 한국사회의 계급구조를 밝혀보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조은·강정구·신광영, 〈한국사회의 계급구조〉《한림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 연구논문시리즈 #92-6》). 그리고 대구시의 경우와 비교하는데 참고된 분석은 1993년도 하계 사회학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가운데 발췌한 것임을 밝혀둔다(유광무, 〈한국사회 중간계급의 생활양태와 사회의식〉, 한림대학교, 1993).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관에 항의 13.9%, 기관에 청원 2.8%, 가두서명·성명 18.5%, 공청회 참석 10.5%, 캠페인 참여 13.9%, 시위에 참가 7.4%라는 전국평균수치가 나온다.

II. 市民運動의 展開

시민운동은 우발적인 집단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조직활동으로, 자생적 민간단체의 출현과 성장에 힘입어 전개한다. 시민사회의 성숙은 시민운동을 기반으로 하며, 그런 만큼 이는 사회운동의 한 갈래에 속한다.

돌이켜 보면, 근대 서구사회에서 공업화와 도시화는 동시적 현상이었다. 그래서 그 사회의 사회운동은 노동운동이 중심이 되었고, 곧 체제 자체의 변혁을 위한 계급운동으로 추진되면서 정치운동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대중교육의 확대와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시민욕구가 발생하였으나 해결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뒤따르지 못함으로써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시민들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민운동은 옛날의 것과 다른 성격과 목적을 갖기 때문에 신사회운동이라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시민운동은 舊韓末의 사회변혁기에 개화사상의 물줄기에 힘입어 씨앗이 뿌려졌다고 할 수 있다. 민간 지도층에서 서구문물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 특히 서구사회의 제도를 우리 사회에 도입하고 이식하려는 애국계몽운동이 그 시초이다. 그 이후 일제의 수탈과 침략을 저지하고 민족자존과 독립을 위하여 숭한 시민운동이 이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해방이후 정부의 무능이나 부정부패, 심지어 독재정권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자주적 활동이 맥을 이어가기에 힘겨웠지만, 1987년의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시민운동은 활기를 되찾아 오늘날에는 시민사회의 성숙을 기약할만큼 성장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다음과 같이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첫 시기는 구한말에서 4.19 의거 이전까지로 잡고, 시민운동의 移植期라 이름 붙일 수 있으며, 그 다음 시기는 4.19 의거에서 1987년 민주항쟁 이전까지로 하여, 시민운동의 發芽期라 부를 수 있고, 마지막으로 1987년 민주항쟁이후 지금까지는 시민운동의 成長期라 할 수 있다. 아무튼 역사에 대한 모든 시기구분이 그렇듯이 이 구분 역시 자의성을 떨쳐 버릴 수 없는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대구시의 시민운동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그 분기점을 직할시승격 시점으로 잡아서, 그 이전과 이후로 시기구분을 하고자 한다. 그 까닭은, 앞에서 분석한 경험조사가 직할시승격 이후에 실시되었으므로 그와 비교하려는 단순한 뜻에서 찾을 수 있다.

대구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시민운동이 가장 앞서 발생한 곳이다. 1907년 2월에 일어난 國債報償運動의 震源地가 大邱였기 때문이다. 국채보상운동의 취지는 금연한 代金을 모아 일본에 빚진 국채 1천3백만원을 갚고 국권을 되찾자는 것으로, 순수민간운동의 嚆矢로서 손색

이 없다고 본다.

해방이후, 대구시민은 대구시가 제1의 야당도시로서 차지한 전국적 위상에 대한 자부심이 줄곧 강하였다. “모든 선거의 승패가 대구시민의 向拜에 달린 것처럼 인식”³²⁾ 되기도 하였다. 선거때마다 야당후보에게 투표하여 독재정권에 제동을 거는 일은, 大義를 위하고 正義를 추구하려는 전통적 사대부정신과 맥을 같이 하였기 때문이다. 3.15 부정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대구시민의 2.28 쫓기는 결국 4.19 의거의 도화선이 되어 자유당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

3공화국이 들어서면서 政府要職에 대구지역의 연고를 가진 人士들이 등용되기 시작하면서 차츰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갔다. 관권이나 금권의 맛을 들이면서 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대구시민은 오히려 대구지역이 여당의 전국적인 보루로서 지니는 위상에 자긍심을 갖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성향은 곧바로 시민의식에 대한 변화를 낳았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대구시민은 다른 지방도시와 다르다는 선민의식을 지니고서 상대적 우월감정을 통해 현실을 낙관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본다. 가끔 ‘대구가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어디까지나 한강이남의 제1도시로서 올바른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나온 주장이었다. 예를 든다면, 지방도시 가운데 직할시로 승격할 수 있는 구비여건을 대구시가 갖추었는데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아직 없다는 식의 문제인식이었다.³³⁾ 이것이 1970년대의 대구정서라 할 수 있다. 이른바 대구에 대한 중앙의 無待接論이라 하겠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에 직할시로 승격하고 대구출신인사가 중앙무대를 주름잡는 현상이 빚어지면서, 이런 類의 위기의식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으며, 대구시의 전국적 위상에 대한 과대평가 내지는 자기 만족감에 도취하고 있었던 셈이라 하겠다. 이른바 小中央意識에 자족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維新이래 정치경제문제에 억눌려 있었던 사회문제가 전국 어느 곳에서나 불거지면서 대구지역에서도 서서히 생활주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이 자리잡아 갔다. 고속경제성장과 정권유지정책들에 의해 과생된 문제들이 山積하여 더 이상 시민들의 눈에 가려질 수 없었다. 산업재해와 환경공해의 희생자들을 위시하여 각종 소외계층들(여성, 노인, 고아, 장애

32) 영남일보사, 《경복년감》, 1971, p. 239.

33) 대구에서의 직할시승격운동은 민간단체인 대구상공회의소가 1970년도에 펴낸 調査書, 《대구시의 법적 지위: 그 새 좌표의 모색》에 자극받은 것 같다. 이 당시 대구시민의 인식은,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구시와 별로 차이가 없었던 부산시가 인구 1백만을 넘어서자 1963년 1월 1일을 기해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계속 발전하여 이제는 대구시와는 비교가 안된다는 것이었다. 대구시도 인구 1백50만을 육박했으니 직할시승격이 이미 한참 늦은데도 왜 되지 않는가 하는 불만이 강하였다(〈영남일보〉, 1979. 1. 제10913호.).

자, 빈민, 철거민 등)의 인권과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거국적이고 체제변혁적인 문제에만 집착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자생적인 순수 민간단체들이 하나둘씩 창립되기에 이르렀다.³⁴⁾ 특히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하여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대구시에도 많은 시민단체들이 설립되었다. 크게 보아, 대구지역의 시민단체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단체의 하부기관으로 설립된 것과 지역의 필요에 따라 자생적으로 발족한 단체로 나누어지는데, 그 수는 엇비슷하다. 단체의 인적차원을 살펴보면, 연령이 비교적 젊으며 교육수준도 높은 편이다. 단체들간의 회원 중복이 나타나며, 단체 참여인원은 전체 시민의 숫자에 비해 아주 적다. 그렇지만, 해가 갈수록 전업주부의 참여가 늘어가며 전문가의 참여도 절대 인원수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양상이다.

유관 단체들끼리 협의회를 구성하는 현상도 나타났으나, 이런 노력은 전담요원의 부족, 사업방향에 대한 이견, 재정부족, 사무실 공간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지속적 사업추진이 힘든 면도 없지 않았다.³⁵⁾ 이런 사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수돗물폐놀오염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부터, 자발적 환경모임이 대구지역에서 잇따라 결성³⁶⁾되면서 지역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은 크게 달라졌다. 또 주부들을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나면서,³⁷⁾ 여러 사회단체들에서 새바람이 일고 그 조직기반을 다지는 호기를 맞이하였다.³⁸⁾ 아울러, 대구 지역에서도 전문성을 띤 사회단체들의 활동이 활성화하였다.³⁹⁾

그리고 1991년 3월에 발생한 폐놀사건 영향으로 嶺南地域의 40여개 단체가 참여하여 ‘낙동

34) 일찍부터, 종교단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적십자사, YWCA, YMCA 등의 사회단체안에 많은 소모임이 형성되어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불쌍한 이들에게 봉사를 꾸준히 해왔는데 이후의 시민단체들은 이런 활동에 영향입은 바가 적지 않다고 본다. 이 시기 외부단체의 영향없이 순수하게 자생적으로 출발한 활동의 한 예는 1986년에 大邱地域 女教授모임으로 출발한 ‘애린회’를 들 수 있다. 여성의 전화를 이듬해 개설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조선일보〉, 1991. 9. 15.).

35) 한 예로, 대구여성단체 협의회의 어려운 사정이 보도되기도 하였다(〈매일신문〉, 1990. 1. 24.).

36) 〈한겨레신문〉, 1991. 9. 14.

37) 1991년 무렵에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부쩍 늘었는데 주부중심의 단체가 결성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그 가운데 대구지역에서는 ‘주부아카데미협의회’와 ‘함께하는 주부모임 주택청약저축가입자 시민모임’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매일신문〉, 1991. 5. 7.).

38) 〈영남일보〉, 1991. 12. 5.

39) 이 무렵에 형성된 대표적인 전문단체를 들면, ‘소비자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한 변호사모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구경북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구경북지부’, ‘간호실천연구회’, ‘산업보건연구회’를 언급할 수 있다(〈영남일보〉, 1991. 11. 27.). 특히, 교수, 변호사, 의사, 기업인 등을 중심으로 순수민간연구단체인 대구사회연구소가 1992년 5월 22일 창립하였는데, 〈대구경북 지역동향〉이라는 研究誌를 창립 1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제10집을 발행하기에 이르렀다는 기사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매일신문〉, 1993. 5. 17.).

강살리기운동협의회'를 탄생시킬 수 있었는데, 그 이후 지역현안과 연관된 사건이나 사태가 발생할적마다 有關 단체들은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⁴⁰⁾ 그리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호응도를 드높히는데 기여하였다.

이처럼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가 커가는 만큼 자생적 시민단체들의 재정난은 더욱 심해져감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지원은 여전히 관변단체들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목소리도 나타났다.⁴¹⁾ 한 예로, 지역환경단체에는 업무전담인력이 부족하고, 오염측정장비를 보유한 곳이 한군데도 없다고 하였다.⁴²⁾ 사실, 역사가 오래되거나 조직이 큰 단체에서도 자체 공간마련에 부심할만큼,⁴³⁾ 민간단체는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만큼 위로부터의 지원은 받지 못한다고 하겠다. 한편,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무분별한 지원은 '또 다른 관변조직'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한다.⁴⁴⁾ 이제는 자생적 시민단체에 대한 자율성 저해의 소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 정부가 민간단체 등록제를 폐지하는 방침을 정하였기 때문에,⁴⁵⁾ 모든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行政官署가 감당하는 일이 더더욱 어렵게 되었다고 본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시민운동의 생명인데,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 해도 행정의 선별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시민운동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없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 하나는 시민단체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행정적 지원관계의 調和문제이다.

Ⅲ. 未來社會와 市民精神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에 따르면, 앞으로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부문이 선진국 경제의

40) 여러 여성문제 관련단체들이 '성폭력특별법제정을 위한 대구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한 것도 이 예에 속하며(〈매일신문〉, 1992. 1. 24), 그리고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가 대통령선거실시를 앞두고 결성된 것도 마찬가지이다(〈대구일보〉, 1992. 11. 15.). 이후 시민단체들간의 공동 협력관계는 지역현안문제의 등장과 맞물려 이루어져간다. 예로써, '대구고속철도 대책 시민단체 대표자 회의', '미군기지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대책위', '청소년을 위한 담배 자동판매기 철거 및 설치금지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쌀 및 기초농산물 수입개방 저지를 위한 대구경북 범시민 비상대책위' 등이 1993년도에 잇달아 결성되었다.

41) 〈영남일보〉, 1992. 1. 29.

42) 〈영남일보〉, 1992. 8. 14. 1994년 正初에 전국을 들쭉신 낙동강수질오염사태의 再發을 두고 볼 때, 이들 단체에 대한 행정지원이 일찍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43) '민주주의민족통일 대구경북연합(대경연합)'과 같은 재야단체와 '홍사단 대구지부'와 같은 시민단체도 회관 마련을 위해 다양한 기금모집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라 한다(〈매일신문〉, 1993. 12. 10.).

44) 〈한겨레신문〉, 1993. 6. 20.

45) 〈중앙일보〉, 1993. 6. 30.

진정한 ‘성장부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모든 선진국에서 노인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의료 및 치료 시설이 더욱 필요하며,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가가 충족시켜줄 수 없는 일이다. 乳母國家의 역할은 반드시 국가재정난을 초래하여 실패하기 때문에, 정부가 사회분야에 있어 집행자나 경영자가 되기를 중단하고 정책 수립자로서 자기 역할을 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오히려 사회부문(social sector)의 업무를 외부에 하청주어 조직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에 왔는데, 그만큼 정부기관은 巨大組織化하여 관료주의에 몰들어 마침내 공통처럼 화석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본다. 여태까지, 정부가 서비스근로자의 최대고용주라 하겠는데, 이들 정부 서비스근로자들의 생산성은 방만한 조직 아래에서 향상될 수 없다. 정부기관은 규칙과 규제를 생산성보다 앞세우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나타난 자발적인 시민조직체의 가장 큰 공헌은 바로 시민정신의 의미를 느끼게 하는 새로운 중심적 역할을 하는데 있다. 탈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 시민은 자원봉사자이다. 시민들은 혈연관계나 親疏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참여와 봉사에 근거하여 생활의 의미를 찾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미래사회에서의 지역사회는 참여하고 몰입해야 하는 장소인데, 이제는 더 이상 애국심만으로도, 가족애정만으로도 살 수 없는 사회로 변하였기 때문이다.⁴⁶⁾

그런만큼, 남은 과제는 시민의식을 건전하게 육성지도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건전한 시민의식은 다름아닌 시민정신이다. 시민정신은 시민사회에 적합한 시민의식을 말한다.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有機的인 連帶意識의 발로이자, 도시지역에서 나타나는 原子的 大衆性을 극복 가능케하는 시민공동체 의식이다. 지금부터는 개인이나 집단의 권익신장이나 보호만을 앞세우는 시민행동이나 운동을 지양하고 시민 전체의 안녕과 市의 번영을 도모하는 노력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생적인 순수 민간단체들마저 백안시하던 권위주의적 시대와는 다르게 이들을 장려하고 활용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예전에는 정부가 관변단체만을 조직, 지원하고, 시민의 이익보다는 정권의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마다 동원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市 행정의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킨다는 것은 도시사회가 複雜多元化할수록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정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려면, 시민단체들에게 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이 바람직하며, 시민단체들은 단체이익만 내세우거나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 가능

46) 피터 드러커,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이재규역, 한국경제신문사, 1993, pp. 250~264.

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도시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을 먼저 생각하는 인식과 태도를 지녀야함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대구지역은 이런 시대적 변화를 과연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낙동강 수질오염을 인식시켜준 폐놀사건이 터지고, 통치권자가 바뀌면서 대구지역출신인사가 주요직책에서 배제되어 가는 추세를 통해, 대구시민은 이제 현실을 직시한다고 본다. 특히, 고속철도가 대구시를 지상으로 관통할 수 밖에 없다는 발표를 접하고서 정책적 소외마저 체감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대구정서가 형성, 곧 대구에 대한 중앙의 푸대접론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보면,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되기 이전에는 대구지역이 다른 지방도시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아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소극적 의미의 위기론이 있었다고 한다면, 직할시 승격이후 처음으로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고개를 내민 위기의식은 상대적으로 적극성을 띤 것이라 본다. 대구시가 당연히 누려야 할 3대도시의 위상이 무너지고 그 많은 지방도시의 하나로 전락해 간다는 절대적 피해의식이 싹트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런 대구시민이 가진 위기의식은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앞에 우리나라 국민전체가 지닌 불안감과 맞물려 좀더 증폭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대구시민들은 대구지역이 서울지역에 비해 낙후된 곳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일부 대구사람들은 이제 다른 지방도시에 비해서도 대구시의 발전정도가 뒤떨어지는 형편이라는 인식도 갖는다. 이러한 인식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대구지역의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맞물려 일어나는 어음부도율의 상승, 실업률의 증가, 물가고 등의 현실문제와 연관되어 확산해간다. 그리하여 이래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과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간다고 본다.⁴⁷⁾심정적인 공감대를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정서론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현실감각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현실인식은 일상생활에서 공통적으로 대응해야하는 사회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할 때마다 행동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1994년 정초 낙동강수질 오염사건이 재발하면서 이런 조짐은 可視圈안에 자리잡은 셈이다.⁴⁸⁾

47) 대구 문화방송, 송년보도특집 〈지역의식구조 진단〉, 1993년 12월 20일 방영.

48) ‘낙동강 수질오염사태 해결을 위한 대구경북 범시도민 비상대책위원회’가 1994년 1월 18일에 결성식을 갖고, 낙동강 수계 정밀조사를 위한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 긴급예산투입으로 낙동강수계전체에 걸쳐 주민에게 실질적 감시권이 보장되는 국민감시체계의 상설운영 등을 촉구하고 나설 수 있을 정도로, 行政官署를 추궁하기에 이르렀다(〈하나신문〉, 1994. 1. 19, 제123호). 1994년 7월 2일에는 낙동강 발암물질 검출 은폐사실과 관련해서 대구지방환경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구환경운동연합이 검찰에 고발하기도 하였다(〈한겨레신문〉, 1994. 7. 3).

사실, 대구지역의 언론사에 시민들의 의견개진이 부쩍늘어 가며,⁴⁹⁾ 심지어 京釜고속철도 대구구간을 지하화하기 위해 필요하면 성금을 내겠다는 응답자가 7할이 넘어설 정도이다.⁵⁰⁾ 이런 현상은 시민사회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 필수요건인 시민정신의 태동을 의미하는, 아주 바람직한 변화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대응하던 양상에서 벗어나, 시민운동이 市政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비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면이 나타나고 있다.⁵¹⁾ 시민운동에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생명이라면, 묵묵한 이웃사랑에서 자원봉사하는 시민단체는 심장이라 할 수 있다. 사회봉사는 단순히 慈善을 베푸는 일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윤곽하게 하는 범시민운동으로 승화하여야 미래사회의 전도를 밝히는 사회의 파수꾼 노릇을 시민들이 해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구시의 앞날은 밝다고 하겠다.

49) <매일신문>, 1993. 8. 28.

50) <매일신문>, 1993. 10. 20.

51) 앞으로의 지하철 개통에 대비하기 위해, 대구지역 장애인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들이 대거 참여하여 ‘노인도 장애인도 탈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자는 시민단체협의회’의 발기식을 1994년 1월 19일에 가졌다(<하나신문>, 1994. 1. 20.). 그리고 전환기를 맞이하여 대구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집중토론하는 기회가 많아졌다. 한 예로, 대구문화방송(주)과 매일신문사가 공동주최하고 대구사회연구소가 주관한 시민대론회가 1994년 6월에서 7월까지 6차에 걸쳐 개최되었다. 이는 국제화, 개방화, 개혁의 시대에 걸맞는 시민의식을 탐색하는 자리를 지방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第8章 大邱市域 村落社會의 都市化

第1節 村落社會의 都市化

도시는 사회적·지리적·경제적 공간이다. 대도시와 소도시, 읍사회, 마을사회간의 인구 및 직업이동이 영속적으로 야기되며, 수퍼마켓, 구역시장 등을 통한 경제교환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사회관계망이 구조화되어 있는 공간이다.

대도시 안팎의 촌락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도시가 확장·축소되며, 산업공단의 설치 등에 따라 촌락과 도시사회의 경제·사회·문화공간이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인류학자들은 단순사회나 전통사회의 사회조직과 사고체계에 관심을 갖다보니 사회·문화 변동이 급격하게 야기되고 있는 대도시 안팎의 촌락사회에 관한 체계적이고도 심층적인 인류학적 연구를 한 예는 찾기 어렵다.

인류학에서 도시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관심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이다. 이전만 하더라도 인류학은 도시를 연구하는 일과 동떨어진 학문으로 여겼었다. 당시의 인류학자들은 도시적 事象을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론적 시도를 한 것이 아니라, 소규모 단순사회를 연구하던 전통적인 조사방법과 인식론적 준거를 적용하여 그 실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1960년대 이후 도시를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은 세계 도시들이 분화·발전하면서 거의 보편적으로 야기되는 이주문제, 전통사회의 해체와 그 생활양식의 변화, 빈곤문화 등과 같은 도시적 事象(urban fact)들이 범세계적으로 야기되는 데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연구에는 도시화와 친족관계망, 종교양태와 의례, 인구문제, 도시민속 등에 관한 심층적 연구는 거의 없다.

1970년대 이후 비로소 소수민족, 종교, 직업 관계망, 친족조직, 결사체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때의 도시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는 도시적인 사회·문화적 事象에 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도시적 事象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미시적인 문제 중심적 접근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시적 事象과 이를 둘러싼 거시적인 사회·경제사적, 지리학적, 정치학적, 인구학적 측면에 대한 상보적인 연구가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빈곤문화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연구단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오스카 루이스(O.Lewis)

가 떼보쯔틀란(Tepoztlan)에서 야기되고 있는 빈곤문화를 도시의 중심문화와는 다른 자생적인 역사와 생활양식을 가진 하위문화로서 다섯 가족을 중심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관계의 해체현상에 관한 연구를 한 바 있다.¹⁾ 이는 경제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가난이 발생하고, 사회체계가 가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례연구이다. 그러나 여전히 왜 이러한 다섯 가족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빈곤문화가 발생하는데 근간이 되는 거시적인 세계경제나 국가경제사의 변화에 관한 설명을 여전히 숙제로 남겨놓고 있다.

이와같은 이론적 정향은 우리가 대구지역의 촌락사회를 이해하는 데에도 관련된다. 특히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촌락사회의 도시화 문제는 도시와 농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도시성(urbanity)과 농촌성(rurality)이 복합되거나 일치되어가는 제 양상을 살펴 보아야 접근이 가능하다.

전통적으로 한국 인류학과 사회학계에서 연구단위로 간주해 오던 촌락사회는 지역사회와 초지역사회, 국가사회, 세계사회 등의 연구관찰단위와 관련시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촌락사회의 연구는 선형적으로 지역사회와 그밖의 전체사회와 문화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를 해야 한다. 촌락사회의 연구·관찰 단위는 소규모 단순사회의 연구단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촌락사회 주민의 생활양식에 나타나는 다양성은 상이한 목적과 다양한 형태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자원이동과 관련된다. 그리하여 촌락에 관한 미시적 접근뿐 만아니라 거시적 접근 또한 보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초지역적 조직과 규범체계가 작용하는 원리나 방식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면 초국가적 결사체나, 전문화된 개인 결사체, 정치조직, 국가 규모의 직업조직, 은행체계, 가격시장, 국가 경제 등과 같은 요소들이다²⁾. 이런 요소들간의 구조적 관계나 영향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가를 이해하기 위해 촌락사회, 지역사회, 초지역사회, 국가사회 등의 사회적 단위들 간에 중층·복합되는 포괄적인 구조적 관련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시적·거시적 연구의 상호보완적 연구는 촌락사회를 연구하는데 제기되고 있는 인류학 방법론 상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리라 여겨진다.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는 도시의 산업생활로 인해 야기된 분업이 성원들간의 상호의존도를 증가시킨다고 믿고, 사회적 밀집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뱅턴(M. Banton)은 뒤르케

1) Lewis Oscar, *Five Families: Mexican Studies in the Culture of Poverty*, New York: Basic Books, 1959.

2) Leeds Anthony, "Locality Power in Relation to Supraalocal Power Institutions," (ed.) Southal A., *Urban Anthrop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p.27.

임(E. Durkheim)이 제시한 논리에 따라 사회관계는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이행한다는 발전모형을 통해 도시화에 따른 사회관계망의 밀집도를 분석하려고 하였다.³⁾

그러나 오늘날 기계적 연대나 유기적 연대의 구분은 여전히 유럽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지 실제 이런 구분의 준거상 명확한 토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워스(L.Worth)가 도시와 농촌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다음과 같은 이념적 모형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그는 촌락과 도시를 대별시키고 그 다양한 문화적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공동체/비 공동체, 민속/도시, 미개/문명, 자연스러움/피상적·인위적, 단순함/복잡함, 지방적/범세계적, 부족사회/대중사회, 도덕적/퇴폐적, 정태적/동태적, 인간적/물인간적, 다원적/일원적, 동질적/이질적, 제한적 대안의 행동양식/다양한 대안의 행동양식, 통제적/개방적, 통합적/비통합적, 적응주의자적/비적응주의자적, 聖/俗, 미신·신화적/합리적인 두 측면으로 구분한다. 이와 같은 이분법적 준거는 도덕성이 개입된 모호한 측면이 많을 뿐 만 아니라 객관적인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검증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⁴⁾ 워스의 연구관점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점은 도시가 갖는 유동성, 도시와 인접한 촌락사회와의 연속과 불연속의 양상에 관한 논급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촌락사회가 지역에 따라 상이한 역사적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일정한 공간 속에 사회관계가 다양하게 재구조화 되어 있는 사실도 간과하고 있다.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시역 촌락사회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중심부와 주변부적인 상황에서 다차원적이고 이질성이 심화되어 가는 변동의 특성이 존재한다. 모든 촌락사회는 하나같이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해 유사한 과정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전통적인 동성촌락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실상과 도시 주변지 촌락사회의 체 모습은 아주 상이한 공간과 시간속에서 복합·다층적으로 층위화되어 장기지속적 시간속에 누적되어 나타나고 있다. 지역마다 야기되는 사회·문화변동의 다양성을 간과해서는 각 사회가 갖는 특수성을 놓쳐 버릴 가능성이 있다.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의 포괄적 관련성 속에서 촌락사회의 도시화 양상에 관해 비교·분석할 때 그 이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3) Banton Michael, "Urbanization and Role Analysis," (ed.) Southal A., *Urban Anthrop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p.51.

4) Gulick John, "Urban Anthropology," Honigman J.H.(ed.), *Handbook of Social and Cultural Anthropology*,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1973, p.993.

第2節 研究領域과 限界

본고에서는 대구市域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는 촌락들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 야기되고 있는 도시화 양상을 다루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런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촌락사회가 어떻게 중심부에 위치한 대구직할시와 포괄적 관련성 속에서 어떻게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변화하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그리하여 시역 공간의 구조화 현상과 도시화에 따른 생업공간과 교역공간의 변화, 인구 이동의 축, 농어촌 노동력과 공업노동력의 사회분화 과정, 생업구조변화와 사회적 시간, 교통공간의 변화, 사회관계망 등에 관해 주로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이런 제 양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조사지역을 선정하고 현지조사를 시행해야 하겠으나 재정적 사정으로 인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래서 연구의 영역과 한계를 미리 밝혀 두고자 한다. 대구시역 촌락사회의 도시화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이미 연구·조사된 보고서와 필자가 경험·조사한 바를 토대로 대구의 都市化와 시역 촌락사회의 사회·경제적 공간이 역사적으로 복합·다층화된 양상을 연구·해석할 것이다. 즉 이 연구를 통해 대구 시역 촌락사회의 변동에 내재하고 있는 사회적 논리를 이해하고 도시화의 결과가 촌락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고찰하려고 한다.

第3節 大邱의 都市化와 經濟空間 變化

도시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는 촌락에 비해 인구가 조밀하고, 다양한 교통망으로 인근촌락과 소도시를 연결하며 인구 밀집도가 높다. 둘째, 도시주변에는 영양공급지역이 있고,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양식과 채소를 공급한다. 예를 들면 채소재배지역, 과수경작지역, 수도재배지역, 상업지역 등과 같은 지역들이 도시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증가하는 도시주민을 위해 배후지에는 식량·채소공급지대 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일하는 이들이 필요한 생산물을 도시로 공급하지 않으면 도시주민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야기될 것이다. 셋째, 도시의 지리적 공간의 확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제적 합리성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적 공간의 이용전략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도시가 크면 클수록 거주하는 노동자에 의해 보완적인 비용이 제공된다. 대기업들은 생산력을 고양시키고 운영상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변 지역사회의 노동자와 농민의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대규모 산업공단을 대도시 주변지역에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노동구조 분화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⁵⁾ 도시 주변지역에 산업체가 집중하자 도시 인근 촌락의 농업경작자가 산업노동자화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넷째, 도시의 주변 경제공간은 상품, 자본, 노동력 등이 이동하는 공간이다. 다섯째, 도시민의 사회적 공간은 앞에서 언급한 특징으로 인해 복잡다단한 사회관계망으로 구조화된 양상을 띤다.

이런 일반적인 도시의 특성이 대구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 먼저 개항기부터 대구의 형성 양상과 도시화 과정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개항전까지만 하더라도 대구는 도시적 성격을 띠었지만 식량과 그밖의 필요한 농작물을 공급하는 촌락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정치적·행정적 중심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개항이후 대구는 도시화 과정을 격게되고, 상품 교역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개항이후, 일본의 조선경제 침략의 거점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구의 도시화과정은 일본 상품을 소비하는 기지로서 뿐만 아니라 대구 배후지의 농산물을 집산하고 대구를 상업도시화하여 대륙진출을 위한 공급기지 역할을 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다. 일제하에 대구부가 근대적인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다. 인구증가와 함께 도로확충 등의 도시계획이 실시되었다.

대구 발전과정은 대구 거주 일본인들의 정치활동과 관련없이 서술될 수 없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면에서 일인들의 생활권과 한국인의 생활권이 대립을 이루어 근대적인 제시설 및 설비들은 그 대부분이 일인 생활권을 중심으로 건설되어 이용되었다.

대구에 민간인으로서 일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시점은 청일전쟁이 시작되는 전년도부터이며 최초에는 남문내에 의약 및 잡화상을 개점했던 2인에 불과했다. 청일전쟁중 대구에는 일본군 2,3개 중대가 상주했으며, 부대의 주둔과 함께 소수의 부대용품 조달상들이來往한 바 있었으나 전쟁이 끝나자 이들은 다시 철수하여 불과 몇 호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다가 1903년부터 경부철도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일인수는 증가하고, 그 익년에 노일전쟁이 개전되어 철도공사진행을 서두르게 됨에 따라 일인 내주자의 수는 급증하게 되었다. 이후 1904년 2월에 200명, 4월에 800명, 6월말에 1,000명 이상이 머물렀다.⁶⁾

대구시와 市域에는 상인이 운집하여 대성황을 이루었고 전국 최대의 서문시장과 연 2회 열리는 약령시에 전국 상인이 운집하였다. 개시일은 보통 1일과 6일, 2일과 7일, 3일과 8일, 4일

5) 권이구·성태규·박성용, 《경산의 경제와 의생활》, 영남대학교 박물관, 1993, p.11.

6) 박현수, 〈식민지 도시에 있어서 일본인 사회의 성립—1900년 무렵 부산과 대구의 경우—〉, 《인류학연구》 5, 영남대 문화인류학연구회, 1990, p.17.

과 9일, 5일과 10일과 같이 음력의 5일째로 되어 있었으며, 서로 인접해 있는 시장은 그 개시일을 달리하는 것이 보통이다.⁷⁾

이때 이후부터 일제는 공업기반이 약한 대구를 상품 유통 거점으로 정하고, 일본 상품 유통 기지로서 뿐만 아니라 배후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산시키는 상업도시로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30년대에는 대구의 상권이 경북은 물론 타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어 개항장을 제외한 서울·평양 다음의 무역액을 나타내게 되었고, 1937년 이후 섬유를 중심한 공업도 급진적인 발전을 보이게 되었다. 한일합방 이후, 대구부는 일부 면을 통폐합하여 대구면으로 되고 대구부가 관할하는 지역은 성곽이 철거되기전의 성내에 해당되었으며 제외된 지역은 달성군을 설치하여 그 관할하에 두게 되었다.

1930년 이후, 대구의 도시공간은 몇 단계의 도시개발로 인해 확대·변화되었다. 대구의 도시개발은 1937년에 처음으로 대구부와 인접한 달성군 수성면, 달서면, 성북면의 일부지역에서 시작되었다. 1960년대 이후 도시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인구는 경북 각 지역의 농어촌에서 모여든 사람이다. 대구의 도시적 성격은 레드필드(R.Redfield)의 이른바 민속사회의 특징을 가진 반대극에 있는 도시도, 위스의 이념형 도시로서 촌락사회와 양극을 이루는 누계적 도시도 아니다. 대구의 인구집중현상에는 아직도 都鄙간의 표류현상이 보이며, 도비간의 밀고 당기는 도비간 풀 현상도 보인다. 대구시는 이런 뜻에서 영남지방의 전통사회 여러 촌락과 도비 양극화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체계의 틀속에 있는 것이며 지역적 아이덴티까지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⁸⁾

이후 1965년에 대구시의 권역은 성서, 월배를 포함한 230.63km²로 확장되었다. 1972년에는 개발제한 구역을 설정하여 대구직할시, 달서군, 칠곡군, 경산군, 고령군 일부 지역이 선정되었다. 이에 교통망과 통신망이 급진적으로 발달하여 인접 지역과 대구의 공간구조는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지역의 경제성과 개발 잠재력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지역구조로 개발되었다.

첫째, 거대도시인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한 인접 주변지역은 준 선진지역인데 비해 양대도시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지역 선진도가 크게 낮아지며, 지역간 격차가 더욱 현저해 지고 있다. 둘째, 대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구조는 지형적 제약 때문에 대구에 인접한 주변지역만 준 선진지역을 이루고 있을 뿐, 그외 주변지역은 대부분 준 후진지역으로 연결된다. 셋째, 경

7) 대구시사편찬위원회, 《대구시사》 2권, 대구직할시, 1973, p.271.

8) 김택규, 〈거대도시개발과 전통문화의 활성화〉, 《2000년대를 향한 대구시의 미래관》, 미래학회, 1983, pp.79~138.

북개발주축을 중심으로한 선산~대구~경주~울산~부산~마산 등을 연결하는 일대지역이 영남권 지역발전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다. 즉 영남권의 선진지역은 포항~울산~부산~마산을 잇는 동남해안지대를 저변으로 하고 선산을 정점으로 한 삼각형의 중앙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영남권의 북부지역과 서부지역은 지역 경제성과 개발 잠재력이 빈약한 낙후지역을 형성하고 있다.⁹⁾

이런 대구의 지리적, 교통경제적 특징으로 인해, 1970년대 이후 산업·기업·자본·노동력·교육기관·상가 등이 대구 중심부로 집중되고 있는 반면에 주변 인근 지역들은 저발전 상태에 처해 있어서 점차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양극적 공간구조의 분화를 지양하기 위해 대구의 도시개발 전략은 다음과 같이 시행되고 있다. 첫째, 지방도시 및 농어촌의 집중육성과 수도권인구의 집중을 억제한다. 둘째, 국토의 중·서부, 서·남부지역에 신산업소재지 단지조성과 산업의 첨단화를 촉진하고 있다. 셋째, 종합적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는 일이 시도되고 있다.

대구에는 수도 서울과 항도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간의 중간 요충지다. 88고속도로, 중앙 고속도로, 호남·영서지방과의 가교로서 그 공간적 특성을 띄고 있으며, 전국 고속도로망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같은 공간개발과 시역에 산업공단을 조성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산업화에 따른 공간 분화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성서 인근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서는 현재 대구시 달서구에 속해 있으며, 파산동, 호림동, 파호동, 갈산동, 이곡동, 신당동 등의 6개동으로 달성군, 칠곡군, 성주군에 접해있다. 성서의 총 세대수는 주민등록부상 1993년 9월 28일 현재, 3,991세대 12,960명이다. 동별로 보면 파산동이 331세대 1,100명, 파호동이 178세대 629명, 호림동 157세대 554명, 갈산동 1,011세대 3,028명, 신당동 851세대 2,737명, 이곡동 14,83세대, 4,912명이다.

이 지역의 인구동향을 보면, 외지에서 투입된 공단 근로자들로 인해 인구이동이 심하다. 주민의 대부분은 이곳에 오래전부터 살던 토박이가 아니고 타지에서 전입해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성서공단 조성과 함께 이곳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들은 공단조성과 함께 산업체에 취직하거나, 조그마한 가게를 열어 여기에서 얻는 수입으로 생활을 한다. 토지를 많이 가진 일부 농민 가운데는 지가 상승으로 인해 부자가 된 이도 있다. 이들은 이 돈으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로 생활을

9) 박양춘, 〈영남지역의 지역구조와 성장거점〉, 《문리학총》 4,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1977, pp.121~123.

하거나 성서지역에 있는 상가나 그밖의 부동산에 재투자 한다. 큰 사업을 하기보다 조그만한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성서공단 조성으로 많은 외지인이 이주함에 따라 음식점, 술집, 상점 등이 증가하였다.

파산동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대구직할시에 편입된 이후 경제적으로 더 향상된 것이 없다 한다. 파산동 주민들은 옛날부터 벼농사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없다. 농업기계화가 되어서 경운기가 가구당 한대씩 있다. 몇 집은 트랙터를 소유하고 있다. 채소와 생선은 일주일에 한 두번씩 오는 트럭 채소상에게서 구입하고, 그밖의 생활필수품은 대구 시내 서문시장에서 구입한다.

최근 성서로 이주한 사람을 제외하고 몇 대에 걸쳐 성서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신들이 도시인이라고 여기기 보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농사꾼'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도시에 살게 되어 도시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농촌 생활방식을 영위하고 있다.

성서지역이 산업화됨에 따라 야기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공단조성으로 인구가동이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주자 가운데 대다수는 공장 노동자들이고, 서어비스업 종사자도 늘고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택지개발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지역의 토지가와 전세가격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전세가격을 보면 89,90년도에 45~50만원 하던 것이 93년 현재 100~130만원으로 한 평당 지가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89년도에 비해 300~500% 상승하고 있다.

공단 조성전의 이곳 주민들의 생업은 농업이었으나 공단이 조성되면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가 늘고 있다. 그리고 식당, 당구장, 슈퍼마켓, 다방, 사진관, 세탁소, 주점 등에 종사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공단 주변지역에는 사진관, 세탁소, 백화점, 슈퍼마켓, 여인숙, 무도장, 대중 음식점, 간이 음식점, 종합병원, 이발소, 목욕탕, 학교, 유치원, 양로원, 주유소, 차고 등이 있다.

이런 업종의 증가에 비해 이곳 토박이 주민들의 수입원은 농업이고 집세나 부업을 하여 수입을 얻는 이들도 있다.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이들은 대구에서 직장을 가졌거나 마을내에서 슈퍼마켓,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세탁소, 연탄가게, 주유소, 분식점, 세탁소, 비디오 가게 등을 운영하기도 한다.

도시공간의 배열은 주거지역(주거전용,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집단상업, 노선상업), 공업지역(공업전용, 공업, 준공업), 녹지지역(생산녹지, 자연녹지)으로 분화되어 있다. 이러한 광역개발은 대도시 주변지역의 과대 성장을 억제하고, 대구시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대구직할시의 기능 일부를 분담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이런 개발전략은 주변 지역사회를 다음과 같

이 역할 분담을 하도록 입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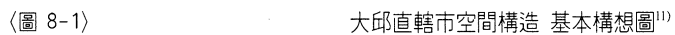
〈表 8-1〉 대구 주변지역 개발방향¹⁰⁾ (단위:1,000명)

대구주변지역	인 구	대구와의 관계	대구주변지역	인 구	대구와의 관계
고령군~다산	3,645 (1979)	근교농촌	달성군~가창	10,395 (1979)	휴양지 개발
경산군~경산	39,016 (1979)	학원연구도시	옥 포	7,592 (1979)	휴양지 개발
하 양	23,904 (1980)	업무기능	칠곡군~지천	4,335 (1979)	근교농촌
압 량	2,428 (1979)	학원업무도시	동 명	6,334 (1979)	신도시
달성군~다사	5,396 (1979)	도시근교농촌	영천군~금호	17,612 (1980)	유통단지
화 원	11,745	위락도시	성주군~선남		근교농촌
하 빈	3,916 (1979)	도시근교농촌	군위군 악계		휴양농촌·과수원

대구의 발전방향 축은 크게 세 방향이다. 고산·경산 방향의 발전축, 고령·현풍 방향의 발전축, 그리고 안동방향의 발전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도심권은 중추관리기능, 업무, 상업적 기능을 담당하고, 동부권은 유통, 위락, 주거, 업무, 상업 등의 산업구조로 배열되어 있고, 서남권은 생산, 유통, 집단거주가 복합되는 기능을 하도록 구상되어 있다. 그리고 교통공간은 대구~광주간 고속도로와 대구~마산간 고속도로, 대구~경주 간 전철화, 대구~포항간 국도 4차선으로 확충되고 있다.

대구와 인근 주변지역의 기능배분과 개발방향에 기반을 둔 공간구조의 분화·개발전략은 영남내륙의 중심부로서 대구의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고, 임해공업지와 내륙공업지, 경북북부의 산악지대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교류를 증대시켜 지역사회의 총체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0) 대구직할시, 《대구도시재정비계획》, 1987, p.21.



이 지역의 세력권은 대구직할시와 경상북도가 관련되는 행정권, 도시의 모든 기능이 대구에 의존하는 경산, 진량, 하양, 금호, 왜관, 현풍 등지와 같이 시간상 30~40분 걸리는 약 30km 내외의 지역으로 구성된 직접생활권과 60km 내외의 지역의 통학권, 100km 내외의 지역의 경제영향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배후지역은 문화·교육·경제분야에서 대구직할시와 강한 의존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구는 생활권을 중심한 분산적 거점도시로 단계적 다핵도시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경산·성서간 동서축을 발전의 축으로 하고 있다. 도시산업의 기반이 되는 생산공간은 성서·월배지역이며 휴식·위락공간은 팔공산, 앞산의 산악경관축, 낙동강·금호강·신천을 연결하는 수변 경관축이 형성되어 있다.¹²⁾ 이런 대구의 개발축은 시역 주변지역의 공간구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表 8-2〉 대구직할시의 개발축과 개발방향¹³⁾

구 분	기 능 배 분	개 발 방 향
성 서 지 역	생산, 유통, 업무, 주거	산업 및 공업관련업무중심(공업지역확장) 유통단지 건설(컨테이너 기지) 주택지개발
월 배 지 역	유통, 공업 집단주거	유통단지 건설 지역중심 상업건설, 공업지역 확장 대규모 중·고밀 주택지 개발
고 산 지 역	보건, 연구, 주거	국제경기장 건설 연구기관 유치(연구단지) 교외주택지 조성
안 심 지 역	유통, 주거	유통단지 건설 주택지 개발 인쇄업, 자동차 판매업, 부품상 유치
공 산 지 역	위락, 휴양	자연환경보호 위락휴양시설 개발(팔공산 자연공원) 고급저밀 주택지 조성
칠 곡 지 역	유통, 주거	유통단지 건설 대규모 중·고밀 주택지개발 건축자재 및 목재상 유치

12) 대구직할시, 앞의 책, p.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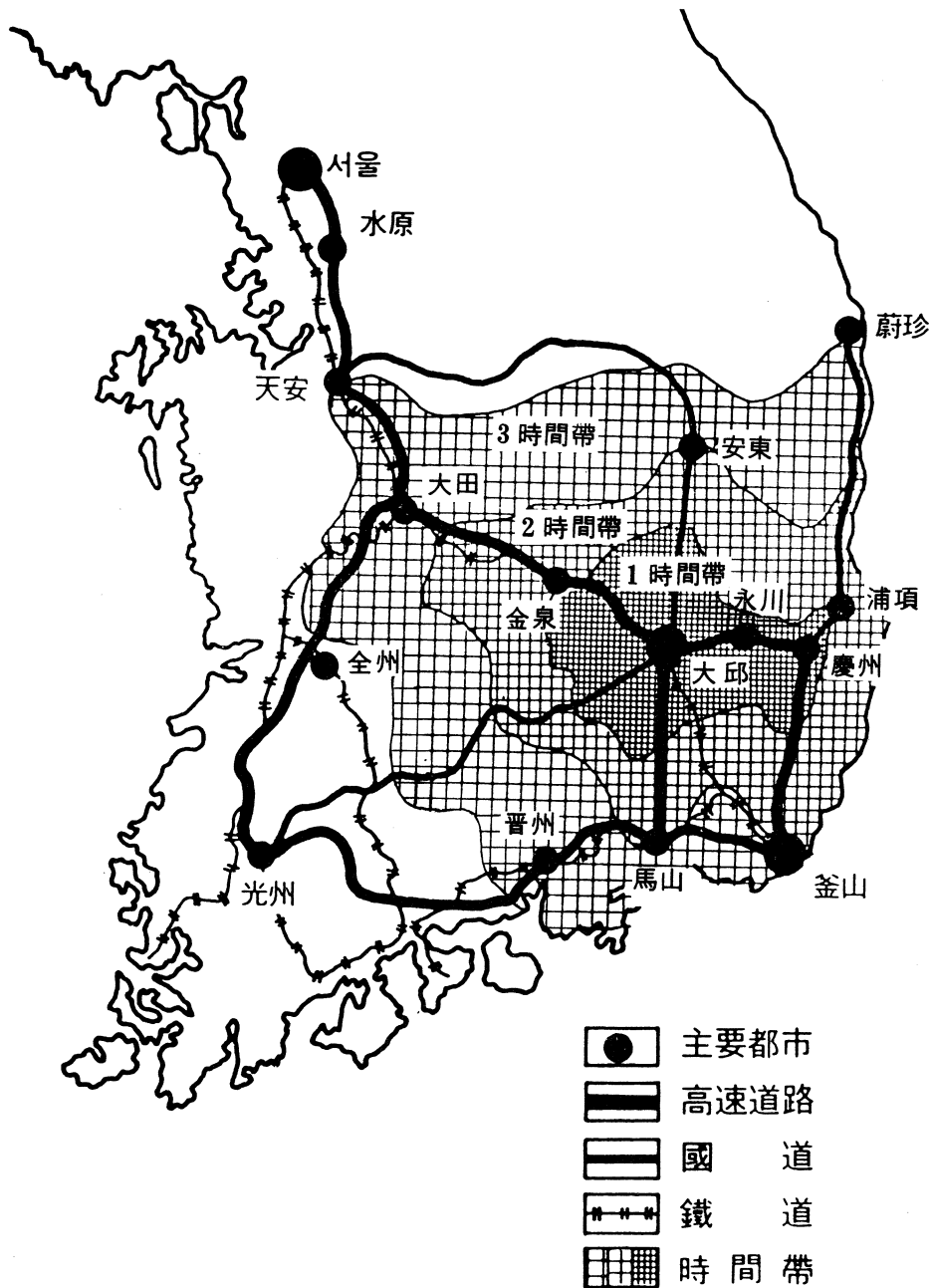
13) 대구직할시, 앞의 책, p.64.

전술한 바와 같이 대구의 도시화에 따라 배후지 공간의 저발전 현상은 심화되고 있고 도시와 시골의 경제적, 사회적 노동의 공간분화가 야기되고 있다. 시역의 행정권역과 생활권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공단이 시역 주변지역에 형성되고 있다. 이런 변화가 점증함에 따라 교통공간 또한 점차 세분화되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철도 등의 교통망들이 확대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시의 발전과 도시인구의 증대에 따른 중심부와 주변부의 양극화는 인구이동, 상품유통, 운송 등에 많은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발전 과정이 어느정도 지나고 나면 산업화, 도시화의 중심부의 확대는 중지되고 이에 따라서 주변지역으로 간주되던 지역들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表 8-3〉 廣域交通網體系¹⁴⁾

區 分	細 部 事 項
高 速 道 路	京釜高速道路, 邱馬高速道路, 88高速道路가 設置되어 首都圈, 中部圈, 湖南圈, 嶺南圈을 直·間接으로 連結
	中央高速道路, 大邱~金海高速道路의 建設로 嶺東圈과 釜山圈을 直結하고 全國高速道路網의 中心地로 役割期待
國 道	4號線(群山~甘浦), 5號線(馬山~中江鎭), 25號線(鎭海~淸州), 26號線(大邱~群山), 30號線(邊山~大邱)等 5個路線이 國土의 東西南北 方向으로 直接 連結
地 方 道	911號線(淸道~大邱) 淸道方向, 1093號線(晉州~大邱) 玄風方向, 907號線(赤中~海平) 河濱方向, 908號線(倭館~竹田) 缶溪方向, 987號線(密陽~慶山) 慶山珍良方向 等 5個路線이 大邱周邊의 放射線 補助機能을 擔當
鐵 道	京釜線이 通過하고 大邱線의 起點으로서 中央線, 慶北線, 東海南部線이 直·間接으로 連繫
	京釜高速電鐵이 建設되고 京釜線과 大邱線의 既存線路를 電鐵化하면 大邱廣域交通網은 劃期的으로 變革
航 空	都心에서 30分帶에 立地한 東村飛行場에서 서울, 濟州方向으로 各各 5回/日 運航
	國際空港이 없어 國際的 巨大都市로 成長하는 데 莫大한 支障을 招來

14) 대구직할시, 앞의 책, p.147.



〈圖 8-2〉

大邱直轄市 勢力圈圖¹⁵⁾

15) 대구직할시, 앞의 책, p.43.

이와 아울러 새로운 거주지의 등장과 사회집단의 형성, 토착인구의 재정착화 현상 등이 야기되고 있다. 도시의 배후지역에는 인구가동이 심화되고 있다. 시골지역에 거주하면서 노동하는 농민에 의해 이곳은 도시 주변지역의 공장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다. 시역 주변의 도시화 영향은 전통적 공간의 붕괴와 분화 현상이 점증되고 있다. 시역은 생산, 유통, 업무, 주거, 보건, 연구, 교육, 위락·휴양, 산업공간 등으로 분화된다.

대구의 도시개발 특징을 보면 남서쪽 개발지역은 칠곡군, 달성군, 고령군 지역까지 넓게 퍼져있고, 고산방면 또한 새로운 개발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 지역의 일부에는 상가지역이 밀집되어 있다. 공장지대는 북구와 서구에 밀집 분포되어 있고, 남구의 월배지역에 공단이 있다. 직할시 승격 이전에는 현 공단지역들이 도시외곽에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승격후 성서공단과 월배공단을 제외한 이 지역들은 도시의 부 도심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을만한 지역에 위치하게 되었다. 한편 중구를 중심으로 그 인접지역에 초·중·고등학교가 집중되어 있다. 현재 이전이 계획되고 있고, 이전된 학교들은 거의가 중구와 남구에 위치한 학교들이다. 그리고 중구의 반 이상이 상가지역이다.¹⁶⁾

수성구 시지동에는 1976년도에 13개 자연촌이 산재해 있었으나 공장 및 도로의 확장, 택지가 들어섬에 따라 저수지와 자연촌, 그리고 전답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논농사를 짓던 각 농가는 대구시와 인근 소도시로 이주하여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 개발지역 주변에는 세탁소, 의상실, 미용소, 약국, 화장품점, 사진관, 철공소, 주점, 식육점, 전업사, 다과점, 의상실, 양곡매매업소, 잡화점, 복덕방, 피아노 교습소, 철공소, 여관 등이 늘어서 있다. 주민과 공단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의류, 주류, 과자류, 여성용품류, 채소류, 어물류 등을 연쇄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빈 방을 공장직원이나 노동자들에게 전세를 놓아 이것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집이 많다. 공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소박한 인정이 있어서 몇몇 집에서는 방을 그저 빌려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요즈음에는 빈 방을 놀리지 않고 수입을 얻으려는 집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식구들이 쓰는 가구도 세를 놓아 생활비를 벌려고 하는 집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마을 주민들 가운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한가한 철을 틈타 공장이나 공사장에서 품삯을 번다.

16) 김택규, 앞의 논문, p.183.

第4節 都市化와 住民의 生活樣式

I. 職業移動과 社會的 時間

성서공단 주변지역에 산재해 있는 목재업, 섬유업, 제조업, 전자부품산업, 기계산업 등에 종사하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전세나, 월세로 얻은 셋집이나 기숙사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이들의 고향은 경북지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서울이다. 서울출신의 산업체 종사자들이 두번째로 많은 것은 서울지사가 대구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업종의 취업자들은 대부분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이고 미혼자들은 용돈과 결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휴일날 근로자들은 일의 피로를 풀기 위해 집에서 쉬며, 미혼자들은 종교모임에 참여하고, 여행이나 독서를 하기도 한다. 근로자의 학력은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이가 많고 대학교를 졸업한 이도 있다.

근로자 임금은 70만원에서 90만원이다. 여성의 월급은 50만원이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거리상 가까운 서구, 달서구, 남구에 거주하고 있다.

하루 일과 가운데 공단 근로자들의 여가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낮 동안 1~2시간 정도 쉴 여유가 있다. 생활리듬은 불규칙하고, 취침시간도 11시 전후이다. 어떤 이는 밤 12가 넘어서 취침하는 경우도 있다. 일과중 여가시간에는 주로 수면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운동이나 장기·바둑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취침전까지 대개 TV를 시청하고 음식점이나 다방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아침에는 출근준비로 매우 바쁘며, 교양서적을 읽는다 든가 운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전통적으로 촌락사회의 농업 경작자들은 농한기와 농번기의 자연주기에 따르지만 공장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음식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등 산업시간에 맞는 규칙과 관행을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즉 단조롭고 관행화된 시간규칙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을 하는데 있어서 공장주가 요구하는 규칙과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장주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마련한 규범과 시간을 전유하는 방식과 규칙·관행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다. 산업체 생산을 위한 시간적 질서는 개인의 생활주기를 용납하지 않는다. 농업사회에 있어서 농한기와 농번기와 같은 규칙적인 계절리듬 대신에 인위적으로 조작된 시간의 흐름으로 대체된다. 월급받는 날은 노동자 생활에서 특별한 주기를 부여한다. 물건구입, 휴식, 여가를 즐기는 일 등이 이때 이루어진다.

주변 촌락사회 주민들의 인간관계는 친소관계로 구체화된다. 이웃과의 친밀한 정도는 도시

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친밀한 관계는 이웃들간의 상호작용 정도, 즉 경제교환, 이웃집 가기, 노동력 교환, 현금부조, 길흉사 때 도와주기 등으로 이루어진다. 옛날에는 “가까운 이웃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낫다”고 하였지만 요즘 이웃간에 얼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웃간에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면, 바쁜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을 돌보며, 집을 봐주는 일 등이 간혹 있지만 남편끼리 친한 경우는 드물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직장에서 다른 일을 하다 보니 얼굴을 볼 기회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리고 3~4년 사이에 이사가는 이들이 많아 한정된 거주지내에도 인구이동이 심하며 같이 거주하는 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이웃관계를 맺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II. 周邊地域의 貧困文化

대구주변지역에는 대구직할시의 발전과정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남아 있는 빈곤문화의 한 역사적 잔영이 서려있는 곳이 있다. 비산동 ‘원고개 시장’ 일대가 이러한 문화적 특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비산동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시장은 “옛날 원님이 고개를 지나면서 쉬었다”고 붙여진 지명이다. 이 곳은 1950년 6·25사변 이후 도시 빈민들이 밀집한 곳이었다.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건물이 낮고 낡아있다. 꼬불꼬불한 골목길은 몇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이다. 가구수는 많으나 한 가구에 여러 세대가 같이 살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영세민이다.

자료 제보자인 한 아주머니는 20여년전 이사를 당시에 이 부근의 마을모습과 찌들었던 생활모습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이곳은 모두 허술한 초가집들 뿐이었다. 시집와서 남편과 함께 세탁소를 운영하였다. 8남매 중 차남에게 시집을 왔지만 맏며느리 역할을 했다. 시집을 당시 시할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남편과 함께 살았다. 요즘과 같은 쌀밥은 엄두도 못냈고, 보리쌀로 밥을 해먹었다. 당시 배추값이 7원이나 하여 김치 담아 먹기도 힘들었다.”

그리고 한 지역 주민이 현재와 과거의 생활상을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요즘 이 동네 생활은 과거생활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살기가 힘들어서 도망간 여자가 5명이나 된다. 남편들은 가정에 대해 애정과 관심이 없다. 폭력을 휘두르고 담배, 술 등을 즐기는 이들이 많다. 결혼 전에 좋게 대해주던 남편이 결혼후에 아내, 자식들에게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 동네에 살

다가 시집을 간 이 가운데 2년을 못살고 돌아온 여자가 있다. 8~9식구가 방 2칸, 부엌 하나가 딸려있는 오두막집에 살고 있다.”

III. 市域 村落社會의 變化

사회·경제적 중심부인 대구의 역할이 주변부에 영향을 주어 市域의 촌락사회가 변화하고 있다. 20여년 전만 하더라도 도시근교에서는 벼농사를 주로 경작하였지만 수박, 배추, 무 등을 경작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성서에서 다산으로 가는 인근 지역에서는 참외를 많이 경작하고 있다. 참외는 12월 초에 파종해서 보통 이듬해 4월 초에 첫 생산을 한다. 그 후 약 두달 동안 출하를 하여 6월 말에 최종 수확을 한다. 그 후 연작으로 벼를 심거나 8월 중순에 배추를 심기도 한다. 이 지역의 토양은 사질황토이기 때문에 참외를 생산하는 데 적합하다. 평당 12,000원 가량의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의 주 수입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재배기간이 길고 작업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수박을 재배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최근에 성서·성주 주변지역에 수박재배가 갑자기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 지역의 토양은 다른 마을보다 수박생산에 적합한 사질토이다. 수박은 참외에 비해서 생산기간이 짧고 인건비와 노동력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비닐하우스에서 수박을 재배하는 경우, 평당 약 10,000원 정도이고, 노지수박은 약 4,000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하우스 수박은 1월에 파종하여 5월 중순에 생산한다. 그리고 참외와 같이 오랫동안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1회의 생산으로 끝난다. 노지수박은 2월말에 파종하여 6월 말경에 생산한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박은 주로 서울로 판매한다. 수확철이 되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농협직원이 파견 근무하면서 농산물 판매활동을 돕는다.

도시주변지역에 산업공단이 설립되면서 이웃간의 온정적이고 협동적인 전통은 이미 상실한 지 오래이고, 자신의 이해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일에는 무관심하다.

다음은 현재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고산 시지동의 변화상이다. 전통적으로 시지동 주민들이 행한 경제활동은 논농사와 포도·딸기를 중심한 발농사, 상가운영, 전세수입, 공장노동 등이었다. 이곳 주민들은 수리관개시설을 이용하여 수도경작을 하였다. 수익성이 높은 포도를 경작하고 있다.

시지에 새로 조성된 아파트단지에는 세탁소, 의상실, 미용소, 약국, 화장품가게, 철공소, 사진관, 주점, 전업사, 다과점, 양곡매매업소, 잡화점, 복덕방, 연쇄점, 음식점, 다방 등이 있다. 고

산에 있는 연쇄점을 경영하고 있는 한 주민은 농사를 짓다가 그만두고 공장노동자와 동민들에게 의복, 술, 과자, 채소, 어물 등을 판매하고 있다. 미용소에서는 부녀자들이 결혼식이나 나들이할 때 머리를 손질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입을 올린다 한다. 양곡매매업소는 공장 직원 가족들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곳이다. 마을 청년들은 인근 공사장에 가서 생계비를 번다. 개인 용돈으로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가정의 생활비에 보태어 쓴다.

IV. 市域 아파트團地住民의 生活樣式

시역의 촌락사회에는 이미 아파트단지가 많이 건립되어 있고 이곳 주민들의 생활양식도 변화되었다. 시역 아파트 거주자들은 젊은 연령층의 핵가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민의 직업은 사무직, 영업관리직, 자영업 등이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도 있다.

아파트 단지내 주민들의 관계는 일반 주택지의 주민보다 훨씬 근린간에 자유롭다. 단지내의 거주자들은 서서히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형성되어온 일반지역사회의 경우와 달리 일시에 많은 이들이 집합되어 이루어진 이들이다.

주거의 근접성이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고, 거주자 개개인의 기능적인 요구는 부차적으로 존재한다. 상호관계는 아이들을 통하여 부모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맞벌이 부부는 상당히 많고 노부모들이 쉬다가 서로 알게되어 부부들간에 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그리고 단지내의 여가를 이용하는 모임으로 인해 맺어지는 경우도 있다. 교제의 상대는 전체적으로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같은 층수에 한정되기도 한다.

친족성원들의 거주지를 보면 많은 친족원들이 시내에 거주하며 같은 단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북현동 시영아파트의 경우). 가장이나 부인들은 고기, 야채 등을 주거지역에서 구입하지만 손수 차를 운전하는 이들이 늘면서 생활 필수품을 도심의 백화점에서 구입한다.

第5節 市域 村落社會住民의 社會的 空間

I. 市域 村落社會의 結社體

도시화란 도시가 증가함에 따라 야기되는 특징적인 도시적 생활양식이 증가되는 것을 의

미한다. 대구주변 시역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결사체의 양상은 이러한 도시화를 이해할 수 있는 징표이다. 사회적·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역 촌락사회 성원들의 결사체 가입은 노동력이나 재화의 교환을 통해 맺어진 사회적 관계의 친밀도를 나타내어 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결사체를 통해 다양한 관계를 맺는 일은 성원들이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결과이다. 자발적 결사체에 가입하여 이루어지는 비형식적인 경제교환은 친소성을 나타내어 주기도 한다. 비형식적 경제는 주변 촌락사회 성원들간에 기존의 사회관계망을 재구조화 한다.¹⁷⁾

대구로 이주한 주변 농촌의 주민들이 어떻게 이런 결사체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생활에 적응 하는가? 자발적 결사체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공동의 이해나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원들의 의지를 근간으로 자유롭게 형성·집단화된다. 이타적인 면에서 조직되는 경우도 있지만 성원상호간에 수평적인 인간관계에서 상호 균등한 교환을 전제로 구성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급격한 도시화나 산업화가 야기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는 제조직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며 변화과정에 처해있는 촌락사회 성원들의 인간관계를 구조화한다. 그리하여 결사체는 어떠한 사회의 특징적인 사회관계망의 표상이기도 하다.

결사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위와 역할이 성원들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즉 개별 성원들에게 회장과 부회장, 감사 및 그밖의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결사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재조항이 필요하다. 성원들이 어떠한 규칙을 어겼을 때 반드시 회원에게 벌칙을 내리는 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대도시로 이주한 농촌사회 주민들은 새로운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해 다양한 결사체에 가입하고 있다. ‘도시의 농민들’(peasants in the city)로 불리는 사람들의 도시생활 적응문제는 거의 모든 개발도상국들의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이다. 도시로 이주한 농민들은 농촌문화의 요소가 그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도시문화요소에 전면 노출되면서 그들이 가져간 농촌문화는 점차 그 영향력을 잃어가게 된다. 이주한 이들이 도시문화의 주변인으로 있으면서 새로운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발적인 결사체, 즉 혈연에 의한 결사체, 학연에 의한 결사체, 지연에 의한 결사체 등을 조직하여 구성원들간에 소속감과 일체감을 내리지 못한 외지인들에게 효과적인 적응전략이 될 수 있다.¹⁸⁾

17) 박성용, <농업생산, 교환, 사회적 공간>, 《문화인류학》 23, 한국문화인류학회, 1992, p.81.

18) 이문웅, <신흥공업도시에서의 도시인의 생활적응; 특히 생활전략을 중심으로>, 《사회변동의 이론과 실제》, 서울대 출판부, 1986, pp. 128~143.

전술한 내용에서 도시로 이주한 농촌주민이 새로운 도시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자발적 결사체에 가입하는 일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은 대구 지역 촌락사회 주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구지역 촌락민들이 결사체에 가입하는 이유를 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첫째, 친목과 상호부조를 위해서이다. 둘째, 집의 용돈을 마련하거나, 저축을 하여 결혼비용, 학비 등에 보태쓰기 위해서이다. 셋째,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이다. 넷째 영업자금을 조달하거나 부채를 갚기 위해서이다. 다섯째, 지역정당을 후원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역할에서 처럼 계는 개인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성되고 있다 하겠다. 그밖에 자발적 결사체를 통해 의·식·주 생활에 대한 정보교환, 자녀의 교육에 관한 의견교환, 부부생활, 공동의 관심사를 나누기 위해서 가입한다. 그리고 혈연적 관계가 전통사회보다 소원해지는 만큼 정감적인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사체에 가입하기도 한다.

한편 결사체에 가입하면 성원들은 일정한 규범과 규칙을 이행해야 한다. 계의 구성원으로서 그 집단의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사체의 가입은 동류의식을 고양시키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기도 한다. 도시화함에 따라 지역 촌락사회에서도 외지 이주인이 늘어나고 전통적인 이웃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계를 조직함으로써 근린들 간에 ‘우리’라는 감정과 상호부조의 정신을 갖는 계기를 마련한다.

대구지역 촌락사회의 결사체 종류는 대개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개 향토의 같은 학교를 졸업한 이들끼리 조직한 동기회, 마을의 길흥사 때 서로 돕기위한 상호회, 농사일 등을 돕고 농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결사체 등이 있다. 마을마다 청년회와 4H 클럽 등이 있지만 젊은이들이 대구나 서울 등지로 이주함에 따라,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리고 테니스, 배구, 축구 등의 운동을 통해 연대를 유지하고자 하는 운동클럽이 있다. 청년들이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조기회에 참여하는 것도 한 예이다. 관공서 공무원, 학교교사, 정미소 주인 등과 같은 지역유지들은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 등에 가입한다. 도시화로 친족집단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친목회는 멀리 떨어져 있는 씨족 성원들간의 사회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재조직되기도 한다. 그밖에 애향회와 같은 결사체를 통해 주민들은 지역사회의 규범과 전통을 준수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구현하려 한다.

자발적 결사체는 토박이와 이주자간의 갈등을 해결해 주기도 한다. 상이한 직업을 가진 이들끼리 결성한다. 부조관계를 결속시키는 외에 결사체에 가입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증가시킨다. 상호부조의 사회적 안전장치가 결사체다. 관행화된 행위와 다양한 인간관계가 결합된 양상은 지역의 특성과 도시화의 제 양상을 나타내 준다. 결사체를 통해서 사회적 공간을 확대하고 경제적 자본을 증가시키며, 성원들간의 소속감을 상징화하는 집단행동과 가치를 서로

나누기도 한다.

다음은 대구지역인 성서 상인동의 단양 우씨들의 동성촌에 관한 민족지에서 보고된 자발적 결사체이다.

1. 城西 上仁洞의 結社體

1) 단양우씨 청년회

단양 우씨 청년회에는 상인동과 대구에 거주하는 단양 우씨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령층은 20~30세로 구성된다. 회비는 없다. 회원은 80여명. 청년회는 정치적 이익집단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집회장소는 대구 예식장이며 집회가 열리는 날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공고한다.

2) 화수회

도시화에 따라 사라져가는 문중의식을 환기시키고 문중을 재조직하기 위해 결성된 모임이다. 단양우씨 화수회는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일본 등 12개 지부가 결성되어 있다. 화수회의 사업을 보면 회보발간, 대동보 편찬, 낙동서원 건립과 역동선생 기념비 건립, 문중결속, 爲先事業, 후손장학 등의 활동을 한다.

3) 동갑계

1958년에 발족하여 친목계 역할을 하고 있다. 계금은 모임 때마다 조그만한 연회를 위해 일정 금액을 각출하거나 혼상 때 필요한 금액을 분담하여 거둔다. 이 계는 단양 우씨 혈족들끼리 결성된 것과 새로 이주해온 이주자들끼리 조직된 두 가지가 있다.

4) 장학계

상인 2동의 우씨 10가구가 그들의 자녀들의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960년 4월에 결성하였다. 회원은 12명이다.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요즈음엔 계금을 없애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임 때마다 윤번제로 소액을 거둔다. 친목계의 역할을 한다.

5) 동갑계

월배국민학교를 졸업한 우씨 가운데서 30~40세 사이의 졸업생들이 조직한 모임이다. 계금과 모이는 시기는 필요에 따라 정해지는데 활동이 많지 않은 친목계이다. 1970년 3월에 결성되었다.

6) 경조계

상인동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계이다. 계원은 현재 30여명인데 모두 가구주이며, 연령층은 30~60세이다.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계금은 1년에 쌀 4말씩인데 길흥사 때마다 개인별로 부조를 한다.

7) 청년회의소

경제적으로 상위계층에 속하는 청년들이 청년회의소에 가입하고 있다. 청년회의소의 성원들은 지역단위를 월배로 하고 있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가입하기도 한다.

8) 마을금고

월배 마을금고가 발족한 시기는 1971년이다. 간이상수도설치, 지붕개량, 담벽개량, 하수도설치, 합동결혼식,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사업을 하거나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1979년 말 회원수는 8,210명, 총 자본금 17억 7천 4백만원에 이를 정도로 번창하였다. 마을금고가 이같이 번창한 것은 토지투기 붐에 따른 토지대금의 적립과 공장 및 종업원을 상대로 한 금고업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마을금고는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단양 우씨의 공동체적 결속을 다지는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다.¹⁹⁾

이런 결사체를 혈족과 각성에 따라 구분하고, 그 목적, 회원자격 및 연령, 회원수, 회비, 발족시기, 결사체 관련 지원보면 다음과 같다.

19) 박정진, 〈도시화에 따른 대도시근교 씨족집단의 사회·경제적 변화 연구: 대구 근교 월배읍 단양 우씨를 중심으로〉,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1980, pp.33~39.

(表 8-4) 上仁2洞 丹陽禹氏가 가입한 結社體²⁰⁾

구 분		결사체명	목 적	회원자격 및 연령	회원수	회 비	발족시기	결사체수
氏族의 共同體的 會聚와 結社体	전출자·거주자의 결사체	派 宗 契	位 土 마 련 문중재산증대	8~5 代 祖 子 孫	결사마다 5~6명	年 中 쌀·보리1말		5
		私 宗 契	"	4 代 祖 (堂內)子孫	결사마다 2~3명	"		20
		靑 年 會	政治的集團 親 睦	20~30 세	80명	없 음	1971	1
		花 樹 會	門 中 結 束	丹 陽 禹 氏	831명	없 음	1953	全國12개 支部中大邱
	거주자의 결사체	同 甲 契	政治的集團 親 睦	40~50 세	결사마다 10여명	매 월 不 定 額	1958~1965	3
		同 窓 契	親 睦	30~40 세	결사마다 6~10명	"	1970~1975	2
		花 樹 契	共同體的 協 同	30~60 세 婦 女 子	30명	出 資 金 不 定 額	1962. 1	1
		慶 弔 契	"	30~60 세 男 子	30명	"	1965. 8	1
各姓 結社体	씨족과 결성된 各姓의 결사체	靑年會議所	地 域 奉 仕		2명			"
		Lions	"		3명			"
		Rotary	"		5명			"
		마 을 금 고	邑 社 會 共 同 體	제 한 없 음	30명	"	1971. 11	"

2. 방촌동의 결사체

방촌동은 대구 근교의 마을로서 도시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방촌동은 약 350년 전 문화 유씨 大承公 19세 사직공이 대구에 입향한 뒤에 형성된 마을이다. 대구역에서 버스로 약 40분 가량 걸리는 곳에 위치한 전통촌락으로 집촌 형태를 이루고 있다. 북쪽에는 팔공산이

20) 박정진, 앞의 논문, p. 39.

뻗어 있고, 남쪽으로 낙동강의 지류인 금호강이 있으며, 동쪽으로 평야가 펼쳐 있다.

방촌동에는 농민들보다 봉급생활자가 차츰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 초, 이곳의 농민들 가운데 일부는 토지가격이 상승하자 전답을 팔고 대구시로 이주하였다. 반면에 도시의 빈민층들, 즉 노동자들은 집과 땅값이 싸고 계절마다 농업노동력이 필요한 이곳으로 이주하였으며,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속들도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20년전에는 문화 유씨들이 30여호 정도 있었으나 외지에서 새로운 이주자들이 유입하자 각성촌이 되었다. 이 마을의 결사체 종류를 보면, 홍사 때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상포제와 같은 결사체는 없고, 길사때 협조하는 혼인제, 동갑제, 관광·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오락제, 친목제 등이 있다. 그외 식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통제 등이 있었다.

1) 관광오락제

이 제는 1971년 음력 2월 15일에 결성되었다. 계원은 모두 18명 이었다. 명절이나 경사가 있을 때 계원들끼리 모여 농악, 춤, 노래, 율놀이 등과 같은 오락을 하였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의 조출한 잔치를 하면서 4~5년간 계속해 계금을 적립하였다. 이 제는 여러 명이 함께 여행을 다니기 위해 조직되었다. 구성원의 연령별 변화양상을 보면 1971년에 40~45세에 5명, 46~50세 4명, 51~55세에 9명으로 총 18명이었다. 1979년에는 30~35세에 3명, 36~40세에 4명, 41~45세에 6명, 46~50세에 7명, 51~55세에 6명, 56~60세에 7명, 61~65세에 7명, 66~70세에 2명이된다. 당시 이 제의 구성원 총수는 43명이었다.

계금도 1인당 5백원에서 2,000원으로 증액되었고, 갯돈도 계원들끼리 나누어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에 1년씩 정기적금을 넣어 매년 봄에 관광버스로 여행을 하고 있다.

구성원이 다양한 것은 동성촌에서 점차적으로 각성촌으로 변화되면서, 도시 주변지역에 농업 종사자 수가 줄고 봉급생활자가 증가하여 친족조직의 사회적 관계가 약화되고 촌락민 상호간에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2) 解東親睦契

해동친목제는 전술한 관광오락제와 유사한 결사체로 총무가 1인 있으며 3개월에 한번씩 회비 5000원씩 각출한 금액으로 가을에 전국 관광을 한다. 이 제는 비교적 여유가 있는 주민들이 모인 결사체로 2,000여평 이상의 과수원과, 20마지기 이상의 논을 경작하는 이와 월 수입 30만원 이상되는 주민들끼리 결성된 모임이다. 이 제에는 45~55세 사이의 주민만이 가입할

수 있다.

3) 혼인계

1979년 이전에 이 마을에서는 상포계가 있었으나 현재에는 길사 때 상호부조하는 계만이 존재하고 있다. 가입하고 있던 동민들이 도시로 떠남에 따라 계가 소멸되었다 한다. 현재의 혼인계는 1979년 1월 15일, 주민 16명이 매월 300원씩 계금을 내기로 하고 결성하였다. 자녀들의 혼인연령이 비슷한 주민들끼리 모여 자녀가 결혼할 때 계원에게 돼지 20관짜리 한 마리, 쌀 1가마, 술 5말을 부조한다.

4) 동갑계

마을내 동갑계로 ‘한취계’, ‘37회’, ‘사족계’ 등이 있다. ‘한취계’는 “동갑내기들끼리 뜻을 크게 세우고 취뿌리 같이 이어나가자”라는 뜻에서 조직한 계이다. ‘37회’는 국민학교 동기생들끼리 조직한 모임이다. ‘사족계’는 뱀띠의 성원들이 모여 가족과 같이 지내자는 뜻에서 조직한 계이다. ‘한취회’를 조직한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경애와 신의를 토대로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여 개인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회는 방촌동의 동기생들로 구성된다. 회원은 회장 1인, 총무 1인, 일반 회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은 이회를 대표하고, 총무는 회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회장 유고시 권한을 대행한다. 정기집회는 1년에 6회로 짝수달 세째 토요일 오후 7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정기집회에 불참할 시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회의 회원이 혼인을 할 경우 금 5돈에 준하는 금액을 부조금으로 지불하며 만약 부조금이 회비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회원들간에 평등하게 분배한다.

5) 16인계

16인계는 금융 기능을 하는 계이다. 이 계에 가입하고 있는 계원들의 직업은 막노동 2명, 회사원 4명, 군속 9명, 농업 1명 등 총 16명이다.

6) 반지계

이 계는 반지를 갖기 위해서 50~66세 사이의 아주머니들끼리 조직한 계이다. 1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분포를 보면 노동 종사자 일이 8명, 영세농 2명, 무직 1명으로 되어 있다.

전술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도시화과정에서 시역 촌락사회 주민의 역동적인 변화과정에

반응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직업계층에 따라 조직되는 결사체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성원 대부분이 어떠한 책임과 지위를 맡고 있어서 사회적·문화적 지위의 상승감을 만끽할 수 있다.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집단 소속감을 강조함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역할변화에 대한 융통성을 부여하는 비공식적 구조가 발달되어 있다. 이런 조직에 가입하는 것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과 관련된다.

II. 市域 村落社會 住民의 社會關係網과 同姓村落의 都市化

1. 옷 골

도시화가 대구근교 동성촌의 사회관계망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옷골의 경우를 본다. 옷골은 대구시 동구 둔산동에 소재한 자연촌이다. 1940년 당시 행정구역상 달성군 동촌면에 편입되었다가, 1951년 대구시역 확장에 따라 동구 둔산동으로 이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옷골은 1910년~1940년까지 45가구 정도의 경주 최씨의 씨족성원들과 하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1935년 옷골에 살던 동성을 보면 경주 최씨가 25호 18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타성 2호가 있었다. 주민의 경제계층을 보면 지주 2호, 자작 5호, 자작겸 소작 3호, 소작 17호로 구성되어 있었다.²¹⁾

1940년대 이 마을은 태평양 전쟁으로 큰 변화가 야기되었다. 마을 근처에 동촌비행장이 건립되었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수 백년이나 세거하던 마을을 떠나야 했다. 옷골 최씨의 종손은 정감록에 따라 문경군 농암면 중니동으로 이사하였고, 전답을 소작인에게 매도하였다 한다. 그러나 다른 친척들은 이곳에 눌러 앉아 살았다. 문경군으로 이주하였던 종가가 다시 환향하였으나, 이미 전답을 다 팔아버려 생활기반은 상실한 후였다. 신분상 주종관계에 있던 하인들 대부분은 이 동리를 떠났으며, 과거 소작을 하였던 주변 마을의 농민들은 토지개혁에 따라 자기 땅을 가지게 되었고,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생활수준도 향상되었다.

최씨중에는 6.25사변 이후 얼마남지 않았던 전답을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로 충당하기 위해 매각하는 일이 증가하였다. 일부는 대구, 부산, 서울로 이주하였으나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1940년대 초기의 전답면적을 보면 논이 1,000두락, 밭이 1,000두락이었다.

21) 善生永助, 《朝鮮의 聚落》, 1934, p. 820.

그러나 1973년에는 논이 13,900평, 밭이 49,231평으로 밭 면적이 논 면적의 4배나 된다. 전체 밭의 99%는 과수원이었다.²²⁾

‘도시속의 농촌’으로 알려진 옷골의 사회·경제사적 변화과정과 대구시의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그들의 사회관계망과 통혼권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마을의 경우, 同姓의 성원들이 마을내 타성과 혼인한 경우는 없다. 인접군 영역이 45.2%로 가장 높고, 타도 25.2%, 도내 타시군 19.1%, 달성군내 9.6%이다. 이런 사례에 비해 비동성 주민의 경우, 대도시 및 인접군과의 통혼이 30%로 가장 높다. 同姓 주민들은 윗대부터 원거리 통혼이었던 반면에 비동성의 주민은 동네혼에서 차츰 원거리 통혼을 하고 있어 현재 마을내혼은 찾아볼 수 없다.²³⁾

앞의 사실을 통해 우리는 세대별로 통혼거리가 변화함을 알 수 있다. 동성성원들의 부모대 혼인이 인접한 郡 영역에 이루어진 것은 주변의 반촌 성원들과 혼인하여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전략의 산물이었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양상은 혼인한 성씨에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특정한 양반계층의 씨족과 집중적으로 혼인하는 경향은 없다. 이곳 주민들과 자주 혼인관계로 맺은 성씨는 이씨, 김씨, 안씨의 순이다. 이씨 중에는 광주 이씨, 전주 이씨, 여강 이씨가 많으며, 김씨 가운데는 김해 김씨, 서흥 김씨가 많은 편이다. 이곳에서는 하회나 양동과 같은 반촌에서 처럼 어떠한 양반 씨족을 이상적인 혼인대상으로 택해 몇몇의 성씨들간에 연줄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실용적인 면을 고려한 혼인전략이 동원되고 있다.

“해방 전에는 아버지대, 본인대의 통혼은 양반가문과 통혼을 주로 하였다. 최씨 종파에 속한 가문이 경상도의 家格이 높은 문중과 혼인하는 경향이 있었고, 지파손에서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대구 이북을 상혼으로 치고 이남은 낙혼으로 여긴다. 해방후 본인대에 이르러 통혼가의 혼주 직업에 있어서 도시적인 직업을 갖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통혼가의 성씨로만 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입혼, 즉 장가를 가는 경우는 양반들로서 가격이 낮아도 가세가 넉넉한 혼처를 택하는 한편 출혼 즉 딸의 출가시는 입혼가의 가세보다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다”²⁴⁾

22) 이성해, <도시근교농촌의 혼인에 관한 사례연구>, 《사회문화논총》 창간호, 사회문화영남학회, 1978, p.130.

23) 위의 논문, p.138

24) 위의 논문, pp.138~139.

상술한 바에서 우리는 부모대의 혼인이란 단순히 한 개인의 만남 이상으로 혼입자와 혼출자에 따라 집안을 선택하는 전략이 상이하게 개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혼지역에서 인접군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도 당시의 적정한 혼인연령의 인구가 인접군에 있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혼인 적령기의 젊은이들이 1970년대 이후 도시로 이주하니 자연히 통혼권도 아랫세대로 내려올수록 대구와 같은 중심도시에 집중되었으리라 여겨진다.

한편, 이 마을의 초혼연령을 보면 어느 정도 도시화의 영향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이 마을의 평균 초혼연령을 보면 남자 24.1세, 여자 20.8세이다. 동성은 妻年長이 57.1%, 夫年長이 28.6%임에 비해서 타성은 처년장이 20%, 부년장이 60%로 동성과 각성이 서로 대조적이다. 이들의 평균 연령이 17세로 조혼의 경향이있음과 일치하고 있으나 본인대 이후 동성·각성이 모두 부년장으로 바뀌고 있다. 즉 1960년 이후로 남자의 연령이 배우자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남녀 혼인 가능한 연령의 性比가 불균형을 이루었고, 인접한 지역과 유지되어 오던 통혼 인구수 변화가 이러한 결과를 더욱 부채질하였으리라 여겨진다.

이런 사실들은 촌락사회가 도시화함에 따라 야기되는 인간관계망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民俗誌의 事象이다. 교육정도와 통혼권을 보면 일반적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근거리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원거리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 이런 사실은 학력이 높을수록 활동 권역이나 배우자 선택범위가 그만큼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제 양상을 종합하여 보면 웃골사회는 대구시와 근접하고 있으면서도 1960년대까지 대도시 근교지역으로서는 전통적 가치체계와 전통적인 동성집단형태가 유지되고 있었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1970년 이후 대구시 산업화와 근교 농업인구의 대구 이동, 토지가 상승등으로 경제적 공간의 분화와 붕괴가 야기되어 지속되어 오던 사회적 공간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대구의 중심부 사회와 의존적 관계를 맺어 가고 있는 과정에 처하게 되었다 하겠다.

2. 大邱市域 同姓村落의 都市化

善生永助는 한국의 동성촌락 형성에 관련된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 ① 지방에 세력있는 집의 자손이 부근의 적지를 택하여 이전, 거주하는 경우, ② 어떤 지방의 세력있는 집의 자손이 부근에 분가하여 그것이 발전하는 경우, ③ 중앙관직에 있던 이가 적지를 택하거나 관에서 토지를 하사받아 물러나 은거하면서 정주하여 발전한 경우, ④ 인구가 조밀한 남쪽 한국지방으로

부터 인구가 희박한 한국의 서쪽지방과 북쪽지방으로 일족 또는 일가가 이주·개간·개척하여 그 후손이 번창한 경우, ⑤ 지방관으로 있던 이가 관직을 물러난 뒤 그대로 정주하여, 수년후 재래·정착하여 자손이 번영한 경우, ⑥ 불평을 품고 산간으로 은거하거나, 죄가 있어 유적되어 그대로 정착한 자의 자손이 발전한 경우, ⑦ 전쟁의 화를 면하기 위해 피난하여 귀향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자손이 번창한 경우, ⑧ 갑이란 씨족이 발전한 촌락에 을이란 씨족이 침입하여 갑을 상호 또는 갑을병의 씨족이 병립, 발전한 경우 ⑨ 갑이란 씨족을 구축하고 을이란 씨족이 발전하여 또는 앞의 씨족이 쇠미하여 새로운 씨족이 발전한 경우, ⑩ 선조의 분묘를 지키기 위해 묘막을 짓고 살던 자의 자손이 번영한 경우 등이다.²⁵⁾

그리고 그는 동성촌락의 발달조건을 다음 몇 가지로 언급한다.

첫째, 원시시대에 있었던 촌락사회 형태가 잔존하고 있었다. 둘째, 유교사상으로 동성불혼이 철저했지만 이전에는 혈족 결혼제가 실시되고 있었으므로 일반적으로 동족관념이 여전히 강했다. 셋째 신라, 고려, 이조에 이르기까지 토지제도가 미비하여 대관호족이 私田領有하여 지방에 활거하여 일족들이 번성하여 이를 조장하였다. 넷째, 공천·사천의 노예제도가 최근에까지 지속되었고 농경·가사 등의 노역을 하여 일가의 생활이 편리하기 때문에 동성촌이 발전하였으며, 대가족제도가 확대된 것이다. 그리고 동족간의 상호부조의 관념이 철저하기 때문이다.²⁶⁾

전술한 논의에서 善生永助가 이런 요건을 열거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 동성촌락이 전근대적·미발전된 상태의 미개사회적인 사회·문화적 실체가 잔존되어 오고 있다는 점을 은연중에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음을 주지하는 바이다. 동성촌락이 성립하는 과정에 존재하는 구조적 원리나, 구조적 인과성에 관한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원시촌락사회의 실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으며, 동성불혼의 범위가 어떻게 동성촌락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토지제도·노예제도 등이 어떻게 촌락사회를 형성하는 근간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더군다나 대가족제도라는 수적인 크기와 동성촌락이라는 혈연적 지리적 단위의 집단을 동일한 차원에 두고 이해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 씨족성원간에 상부상조의 정신이 철저하다고 하여 타성의 성원들간에는 상호부조의 정신이 별로 없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善生永助의 논의는 동성촌락 발달, 형성요인에 대한 그 설명의 타당성을 잃고 있다.

동성촌락을 형성하는 데 관련된 구조적 인과성과 동성촌락의 사회구조적 특성, 그리고 이런 촌락이 형성되는 데 관련된 거시적인 사회·문화적 변동의 흐름에 의거한 설명이 필요하다.

25) 善生永助, 앞의 책, pp.219~220.

26) 위의 책, p.220.

동성촌락의 형성은 17세기 이후 유교의 이상향을 실현하기 위한 이념적, 사상적 흐름과 농업생 산력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사회적 전략, 토지제도의 변화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지역마다 산재하고 있는 동성촌락의 분포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8-5〉 著名 同族部落 發生年代(1930)²⁷⁾

年 代 道 名	500年 以 上	500~ 300年	300~ 100年	100年 未 滿	不 明	計
京 畿 道	27	85	70	2	51	235
忠 清 北 道	10	43	31	2	48	134
忠 清 南 道	12	35	20	3	61	131
全 羅 北 道	15	26	22	—	29	92
全 羅 南 道	31	101	52	1	53	238
慶 尙 北 道	36	110	44	4	52	246
慶 尙 南 道	8	53	17	2	55	135
黃 海 道	24	53	31	1	34	143
平 安 北 道	7	25	9	—	7	48
平 安 南 道	14	49	26	3	20	112
江 原 道	12	25	14	1	27	79
咸 鏡 北 道	—	12	11	3	3	29
咸 鏡 南 道	11	29	4	1	18	63
計	207	646	351	23	458	1,685
比 率(%)	12.3	38.3	20.8	1.4	27.2	100

이 자료를 도별로 구분해 보면 경상북도가 가장 많고, 전라남도, 경기도 순이다. 이 3도가 200촌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황해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평안남도의 순이다. 가장 적은 수를 보이는 곳은 함경북도와 평안북도이다.

동성촌락이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특징을 보면 산록에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고, 평야, 배산 임수형 지형, 산음, 계곡, 구릉, 분지, 연하, 임해, 연안 등에 위치한다. 그런데 우리는 산록, 평

27) 洪慶姬, 《촌락지리학》, 法文社, 1985, p. 336.

야지역에 동성촌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록에 동성촌락이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임란 이후부터 산을 개간하기 위한 양반가문의 진출이 아마도 두드러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곳에서 재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와 絶勝地에서 유교이념을 구상화하려는 전략이 상호접합되어 거주하여 되었으리라 여겨진다.

그런데 동성촌락이 평야지대에 많이 분포하는 것은 답작지역에는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므로 이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동성촌락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리라 여겨진다. 당시에 가족이나 친족성원에 의한 노동력 수급은 축력이나 다른 사회조직보다 우선하였기 때문에 맥작지대보다 더 많은 동성촌락이 답작지대에 분포하였으리라 여겨진다. 17세기 전후 동성촌락의 가족구조나 친족구조에 관한 연구나 자료가 없어 당시의 친족구조가 어떻게 농업생산력과 농업노동력 동원에 관련되었는지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당시의 가족구조와 친족구조가 농업노동력 체계와 긴밀하게 관련을 맺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하여 촌락을 단위로 하는 혈연집단이 노동집단화 되어 수도경작 때 요구되는 부족한 농업노동력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리라 여겨진다.

한편 배산임수형에 동성촌락이 산재하는 것은 풍수지리설의 영향과 아울러 풍수피해를 방지하고 경작지, 연료 및 음료수를 공급받기 위해서이다. 즉 자연의 도태압력을 벗어나기 위한 생존전략이 동성촌락을 성립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리라 여겨진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동성촌락의 사회구조적 측면의 특징이다. 흔히 동성촌락이라면 남계 혈족만으로 형성된 일련의 집단으로 여기나, 실제로는 사위나 외손들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하회나 양동의 경우 이러한 점이 잘 나타나고 있다. 외손과 사위가 한 마을에 거주한 사실은 당시의 비단계적 출계원리로 서류부가제도, 외손봉사 등의 관행으로 미루어 보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상속에 있어서 남녀 균분상속이 이루어졌었고, 처향이나 외향 거주가 흔히 있는 일로 간주되었다. 어떤 마을내에서는 친족, 처족, 외족이 함께 거주하는 양상을 띠었다. 즉 종법제도, 비단계적 출계의 원리, 유교이념을 구상화 하려는 전략 등이 동성촌락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하겠다.

그밖에 동성촌락을 형성하는 데 기반이 된 경제적·사회적·생태학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성촌락은 우선 촌락안에 있는 씨족집단의 조직과 기능이 각성을 포함한 촌락전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즉 씨족조직의 기능이 각성을 포함한 촌락 전체의 그것과 일치하거나 또는 지배적 영향력을 가질 때 비로소 동성촌락 또는 씨족촌락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씨족 성원들이 한 곳에 모여 산다는 수적인 위세와 선조의 신분적 권위가 남아 있는 자손들의 지체(신분), 그리고 경제적 우위 등을 기반으로 하여 부계씨족의

ㅂ 혈연으로 이루어진 촌락을 동성촌락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동성촌락의 인간관계는 씨족 조직 내부에서는 종손, 문장, 유사 등의 조직 질서와 향열의 높낮이, 대소가 관계, 연령의 장유 등의 위계질서를 이루면서도 각 집의 독립성은 강하여 집들은 수평적, 대등적인 성격이 유지된다. 셋째, 혈열집단의 성격은 씨족 성원들이 선조를 정점으로 하여 ‘불망기본’이라는 조상 숭배관념과 그 구체적인 행동화인 제사에 매여 있는 데 특성이 있다. 시조나 파시조(파조, 중시조, 입향조)에서 비롯하여 자기까지의 출계관계를 따지는 의식이 씨족집단을 지배하였고, 봉제사, 접빈객을 통해 혈연을 지키려는 행동체계는 이들 생활의 중추를 이루어 왔다. 넷째, 씨족성원은 동성불취의 외혼 규제와 이에 따른 부처거주혼제도, 구신분에 따른 계급내혼의 규제 때문에 지역내혼 특히 동내혼인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가급적 가까운 곳에서 조상의 官爵이나 학통 등 지체가 대등한 타성을 찾아 통혼하여 왔다. 이른바 혼반을 형성하여 서로 혼인관계를 맺어 온 것이다. 따라서 동성촌락들과 그들의 통혼권이나 거주지역은 자연히 한계를 가지게 되었고 양자는 어느정도 중복되게 되었다.²⁸⁾ 이와 같은 동성촌락의 사회적, 지리적, 경제적 특징은 대구지역 동성촌락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1930년대 善生永助는 대구지역의 동성촌락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60여개의 촌락 가운데 100세대 이상의 동성 가구가 존재하는 촌락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달성면(서중, 서하): 김해 김씨, 김녕 김씨
 월배면(월배, 조암): 성조 이씨, 단양 우씨
 성북면(동중, 동하): 달성 서씨
 수성면(하수서, 수동, 수비, 수현내): 인천 이씨
 공산면(해서촌, 해북촌): 인천 장씨, 경주 최씨
 해안면(해서부, 해동면): 경주 최씨
 풍각면(각현내, 각 이동): 평택 임씨, 밀양 변씨

이런 성씨들 가운데 1930년대 대구지역에 산재한 50호 이상의 동성촌을 이루고 있던 씨족을 보면 입향시기가 300여년전으로 여겨지는 달성군 산격동에 입향한 달성 서씨, 달성군 성북면 서변동의 인천 이씨, 달성군 성북면 동변동의 능성 구씨, 달성군 공산면 미대동의 인천 장씨, 달성군 수성면 지산동의 중화 양씨 등이 있다.

28) 김택규, 〈촌락생활〉《경상북도사》하, 1983, pp.695~696.

(表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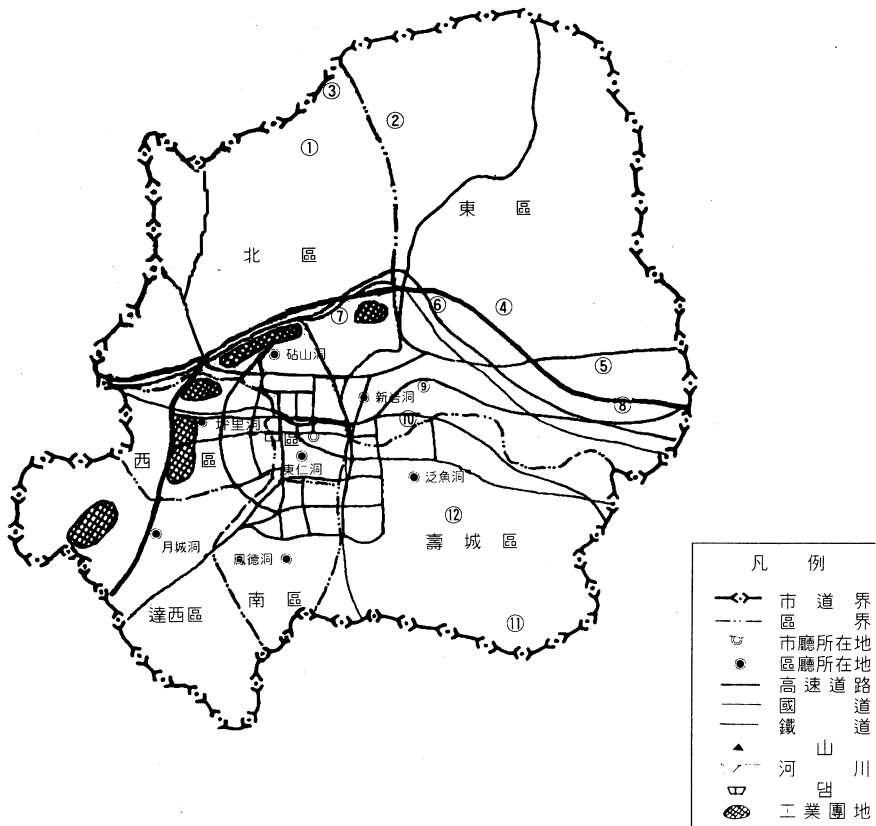
동성집단의 형성과정과 구성²⁹⁾

동성집단	구분 가구수	동 족자 연 촌락명칭	입 향 조				입향성씨	입향연대	입 향 동 기
			회	호	관 직	생물연수			
만촌동 達城夏	24호	느지	첨우		가성대부			380년전	개 간
만촌동 達城徐	20호	느지	승후					340년전	개 간
범어동 綾城具	156호	公水淵(淵)	수종		철원대도호부사	1450~?		1500년경	연산군폭정을피해
산격동 達城徐	200호	매잠	사진	시제		선조무진~인조을유	여흥閔氏	400년전	입 서
황금동 一直孫	21호	지내	처눌	모당		1553~1634		400년전	임란을 피해
지산동 中華楊	79호	지산	우정					?	좋은 토지를 찾아
평광동 丹陽禹	85호		익신					400년전	임란때 피난
방촌동 文化柳	20호		유번					400년전	개 간
도 동 達城徐	42호		시립	전귀당				?	임란때 피난
봉무동 慶州崔	73호	강동	제날	충익		1634~1693		340년전	옷골에서 분가
동서변동 綾城具	40호	무태	희신				전씨	400년전	임란때 피난
검단동 羽溪李	58호		기신	금계	첨정		경주김씨	450년전	살기좋은 땅을찾아
서변동 仁川李	42호	무태	수리정	태암	강릉모우계인	1556~1607	능성구씨	400년전	임란을 피해
입석동 英陽南	20호		실	석호		1599~?		300년전	연비관계
검단동 順興安	60호		황	추산			우계이씨	350년전	
상인동 丹陽禹	47호	월촌	정			1460~?	현풍곽씨	1520년경	정도전 난을 피해
둔산동 慶州崔	50호	옷골	동집	대암			문화유씨	?	

그리고 단양 우씨의 선조가 달성군 상인동에 입향한지는 420년이나 된다³⁰⁾ 300년 이상되는 동성촌락의 정착양상은 대구시가 갖는 지형, 지질, 지세와 관계있다. 시가지 중심부를 남북으로 관류하고 있는 신천과 동서로 관류하는 금호강 및 낙동강 일부 구역과 舊 市 외곽지의 네 방향으로 분포하고 있다. 특히 평야지대는 낙동강, 금호강, 신천변에 형성되어 있고, 동서쪽은 비교적 개방된 분지형 지형조건을 보유하고 있어 주거지가 평야지대 부근에 발전되어 있다. 언급한 성씨들의 거주지는 舊大邱市의 주변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지형의 고도가 100m 이하의 완만한 곳이다.

29) 성백광, 〈도시속의 동족집단의 연구〉《문화비평》6, 형설출판사, 1991, p.54.

30) 善生永助, 《앞의 책》, p.477.



- ① 동·서변동 능성(綾城) 구(具)씨,
인천(仁川) 이(李)씨.
- ② 검단동 우계(羽溪) 이(李)씨,
순흥(順興) 안(安)씨.
- ③ 봉무동 경주(慶州) 최(崔)씨.
- ④ 도동 달성(達城) 서(徐)씨.
- ⑤ 둔산동 경주(慶州) 최(崔)씨.
- ⑥ 입석동 영양(英陽) 남(南)씨.
- ⑦ 산격동 달성(達城) 서(徐)씨.

- ⑧ 방촌동 문화(文化) 류(柳)씨.
- ⑨ 만촌동 달성(達城) 서(徐)씨,
달성(達城) 하(夏)씨.
- ⑩ 범어동 능성(綾城) 구(具)씨.
- ⑪ 지산동 중화(中華) 양(楊)씨.
- ⑫ 황금동 일직(一直) 손(孫)씨.
- ⑬ 상인동 단양(丹陽) 우(禹)씨.
- ⑭ 평광동 단양(丹陽) 우(禹)씨.

〈圖 8-3〉

대구직할시 동성집단의 분포도

3. 門中組織의 都市化

문중성원들의 도시 이주, 해외이민, 친족성원들간의 정체감 단절, 종위토·문위토·묘위토 등과 같은 종중재산의 매각, 도시개발에 따른 종중재산의 상실, 선조봉행 의식의 약화 등으로 문중조직의 구성과 성격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대구지역 문중의 구성원리를 보면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화변동의 실상을 알 수 있다. 어떠한 문중은 재조직·재구조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다른 동성집단 성원들은 타지로 이주함으로써 동성집단 자체가 해체되어 가는 경우도 있다.

1) 달성 서씨

대구 달성지역에 400여년 동안 세거해온 산격동 달성 서씨의 경우, 1970년에 이미 문중조직을 대의원제로 바꾸어 젊은이들이 문중일을 맡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들은 대구를 중심으로 달성군 일원의 7개파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33명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이들은 신망과 학식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 선출되며 대부분 50~60대이다. 정기총회는 연 1회 동짓날 산격동에 있는 제실에서 개최하며, 임시총회를 수시로 열어 문중행사에 관해 논의한다. 특히 각 파에서 몇 사람을 고문으로 추대하여 이른바 고문, 대의원 연석 회의를 실시하기도 한다.

2) 입석동 영양 남씨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공공 건물이나 도로확장, 택지조성 등으로 종산과 종답은 정부기관에서 매입하면서 어떤 특정인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게 되자 문중재산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 1976년에 유사중심의 문중조직을 위원회제로 바꾸었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비롯한 다수의 위원들로 구성된 운영 형태를 갖추고 있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1일에 개최하며 이때 문중 공동재산의 관리업무 및 1년 동안의 문중행사를 결산·보고하거나 다음해 문중업무를 계획하고 예산을 책정한다. 임시총회는 각 파끼리만 모이는 派門會를 포함하여 1년에 5~6회 정도 열린다.

3) 범어동 능성 구씨

범어동 능성 구씨의 문중은 1971년에 이사회제로 전환하여 이사들은 50대 전후의 비교적 젊은 층으로 구성하였다. 이들이 문중을 법인화한 것은 도시화과정에서 문중재산을 보존·관리·이용하고 이를 토대로 동성성원들을 결속시키기 위해서이다. 이 문중에서는 음력 3월 15일과 10월 15일, 연 2회의 정기총회와 연 5~6회의 임시총회를 개최하며, 조상숭배, 화목단결,

문중재산의 관리문제, 업무경과보고, 문중규약변경 등에 관해서 논의한다.

1971년에 이들은 연명으로 되어 있던 문중소유의 토지와 임야를 범어동 都元帥派 총중명의로 등기 이전을 했다. 그리고 1976년 ○주택에 4,700여평의 종산과 180여평의 종답 일부를 매각하면서 많은 금액을 받아 현재 4층 건물 두 개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처럼 문중재산의 엄청난 증가와 현금의 축적으로 유사중심의 문중조직을 이사회제로 바꾸게 되었다. 인적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3명을 비롯하여 이사는 6개파에서 각각 1명씩 선출되며 별도로 종손을 포함시켜 7명이다. 그리고 감사 2명을 두고 있다. 이들은 모두 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으로 중임이 가능하다. 이들이 갖추어야할 자격요건으로는 덕망과 학식, 그리고 문중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성실성이다. 이들은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는다. 顧問制度가 있어서 문장격에 해당되거나 과거 문중일에 관계했던 사람들을 임시총회에 수시로 초대하여 문중일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 다음은 능성 구씨 도원수파의 문중 규약³¹⁾을 살펴본 것이다.

제1조(목적) 본 문중은 宗財의 망실약취를 방지하고 爲先, 宗族의 발전, 향상 및 종족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문중의 명칭은 능성 구씨 도원수파 0 문중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본 문중의 사무소는 대구직할시 수성구 범어동 000번지에 둔다.

제4조(재산) 본 문중의 재산은 별첨 목록에 의한다.

제5조(임원) 본 문중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명

1. 이사장 1명

1. 이사 5명

1. 서기 1명

1. 감사 2명

제6조(선출) 본 문중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7조(임무) 본 문중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1. 고문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이사장은 문중을 대표하고 문중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1. 서기는 이사장의 명에 따라 문중사무에 종사한다.

1. 감사는 문중의 자산, 경리, 기타 업무전반을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 될때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1) 조강희, <도시화과정의 동성집단연구> 《민족문화논총》 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pp.277 ~ 278.

제8조(임기) 본 문중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집행) 본 문중의 이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1. 세입, 세출, 예산의 의결 및 결산

1. 사업계획

1. 자산의 관리

단 부동산의 처분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총회 및 이사회) 본 문중의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3월 15일(춘계)과 10월 15일(추계) 2회 열리며, 필요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한편 이사회는 이사장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소집된다.

제11조(의결) 본 문중의 총회 의결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는 정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에 의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2조 제9조 3항의 부동산 처분 승인은 150세대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13조 본 규약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제14조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일반통례에 따른다.

제15조 본 문중의 회계연도는 매년 음력 3월 16일부터 다음해 음력 3월 15일까지로 한다.

제16조 본 규약은 1971년 6월 17일 임시총회에서 제정하고 당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개 정

제1차 1972년 4월 28일(음 3월 15일)

1. 제 12조의 부동산 처분 승인시 회의 결정수를 150세대 이상의 출석에서 참석인원으로 그 승인은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차 1977년 5월 2일(음 3월 15일)

1. 제 1조의 종재의 망실약취를 방지하고 삭제한다.

1. 제 5조의 임원을 고문 약간명, 이사장 1명, 서기 1명, 감사 2명에서 이사장 1명, 조리사장 1명, 이사 9명, 총무 1명, 감사 2명으로 개정한다.

1. 제 12조의 개정기록이 미비하여 재결의 한다.

제3차 1978년 4월 22일(음 3월 15일)

1. 제 5조의 임원중 부이사장 1명을 2명으로 한다.

제4차 1979년 4월 11일(음 3월 15일)

1. 제 5조의 임원중 부이사장 2명을 3명으로 한다.

제5차 1988년 5월 4일(음 3월 15일)

1. 제 5조의 임원중 부이사장 1명은 실무 부이사장이라 한다.

이런 문중규약에서 우리는 대도시의 문중조직, 문중의 구성이 재집단화되고 있고, 문중의 법적 성격, 재산의 소유형태 등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대도시 문중의 역할이 향촌사회의 문중과 마찬가지로 공동 조상의 분묘관리와 수호, 제사봉행, 종원간의 친목을 주로 하고 있음은 동일하다. 도시 문중에서는 문중재산으로 선조 제사봉행, 서원, 재실, 묘각, 묘비관리, 경로당 운영, 장학사업, 구휼사업, 묘소관리 등에 사용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도원수파의 문중은 분파된 종중을 의미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다른 전통 촌락사회의 종중에서 보이는 관행적 차원에서 종손의 생득적 지위와 역할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종손에게 제사나 그밖의 종중 일을 대표하는 권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역 각 문중의 재산이 종손명의로 되어 있는 문중은 거의 없다. 그리고 구씨 문중 가운데 종손 한 사람이 이사로 선출되고 있지만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거의 없으며, 다른 문중의 종손들이 이사회나 대의원에 뽑히지 못한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보아 종손의 지위가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중의 대표는 이사장이 대표하며, 문중재산에 관해서도 이사회는 최고의 집행기관으로 세입, 세출, 예산의 의결, 결산, 사업계획, 자산의 처리 등의 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하여 종손은 문중재산에 관해 문중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

“선대까지만 해도 종손의 위치는 절대적이었다. 비록 문중에 재원이 없어 물질적 혜택은 입지 못했지만 성원들로부터 존경과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소위 근대화의 물결에 따라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하고 승조, 보종관념이 희박해져 가는 현대 도시사회에서는 종손만이 가질 수 있었던 조상의 음덕 같은 것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문중조직까지 이사회제도로 바뀐 마당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빼고 종손이 할 수 있는 일이 달리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종손이라고 해서 굳이 문중 태두리에 얹매어 있어야 할 이유도 없지 않는가”³²⁾

이 종중성원의 얘기는 도시문중의 종손역할이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준 예라 하겠다. 이런 양상은 문중조직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관리인이나 대표자를 두는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야기된 결과중 하나이다.

동성집단의 분화과정은 문중재산에 대한 소유형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문중재산은 전답, 임야가 주가 되는데 이것은 문중의 어떠한 대표자 1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 그리하여

32) 조강희, 앞의 논문, p.284.

이 대표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그 후손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소유권 상속이나 분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문중 성원간에 문중재산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대구시의 문중들은 토지를 매각하여 현금으로 전환·운영하고 있다.

한편 법인체적 성격을 띤 단체로 문중재산을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60년대 이후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선조의 유택인 종산과 전답, 문위토 등이 산업공단조성, 택지개발, 공공건물 건립, 도로확장 공사 등으로 인해 매각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현금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공동재산이 문장이나 문중성원 명의로 되어 있어서 문중재산에 대한 연대의식이 강했던 과거에 비해 문중에 대한 보종의식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여겨진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문중의 활동이다. 능성 구씨 문중에서는 출가한 딸까지도 참석하는 화수회를 연중행사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61세 이상의 남녀 70~90명에게는 경로잔치를 베풀고 산업시찰을 겸한 효도관광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 10월에 문중 장학금을 전달하는데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과 고등학생 8~10명을 선정하여 각각 쌀 5가마니와 3가마니를 지급하고 있다. 이와같은 장학제도는 방촌동 문화 유씨 문중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은 1980년 전국 규모의 '대승장학회'를 구성하여 매년 8월에 전국적으로 7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평광동 단양 우씨의 문중에서는 종답을 처분하여 장학기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³³⁾

한편 단양 우씨의 경우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문중에서 위토를 마련하고, 묘사와 봉제사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파종계와 사종계를 결성·운영해 오고 있다. 파종계의 구성원은 8대조에서 5대조의 자손들로 구성된다. 사종계는 4대조, 즉 당내 자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종파마다 4개의 사종계가 있다. 사종계에는 대개 2~3가구가 가입하고 있다. 계금은 1년에 쌀 한 말, 보리 한 말이다. 그리고 파종계, 사종계와 유사한 성질의 대종계가 있다. 문중재산은 답 50두락, 전 30두락, 임야 100정보 등 토지이외에 낙동서원에 재실 등의 문물을 가지고 있다. 파종계와 사종계에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탈계는 원칙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탈계하는 일은 조상을 배반하는 불명예스러운 일로 간주한다. 이 계는 가장 오래된 모임이면서 씨족 공동체적 성격을 나타내는 결사체이다. 최근에 도시화에 따라 전출자가 늘고 문중의 응집력이 약해졌지만 이 계를 통하여 친족성원간의 유대를 확인하기도 한다. 우씨들은 문중재산에서 서원 향사, 묘사, 節祀 등의 각종 제사비용과 접빈객 위선사업, 중

33) 성백광, 앞의 논문, 1991, p.63.

손 생활비 보조, 서원 및 제실의 보수 등과 같은 각종 경비를 마련한다.

第6節 社會的 時間의 變化와 祭祀慣行

과거 기제사의 경우 4대를 봉행하였으나 1970년 전후 2대 혹은 3대 봉사를 하기로 하였다. 대다수의 문중이 제사를 지내는 시간을 초저녁으로 바꾸어 지내고 있다.

〈表 8-7〉 대구직할시 동성집단의 제사봉행의 실재³⁴⁾

區分 마을 및 氏名	忌 祭		墓(時) 祭		祭 費(만원)	節 祭 설
	代數(代)	祭時(時)	日 時	參與範圍(名)		
동변동 능성 具	3代	새벽(50%) 저녁(50%)	10월 10일	40~50명	30만원	신정(1977년)
서변동 능성 具	3	9~10時	10월 둘째일요일	80~100	40	신정(1980년)
서변동 인천 李	2(1981년)	06~07	10월 8일	70~100	50	구정
검단동 우계 李	4	12~01	10월 15일	80~90	40	신·구정
검단동 순흥 李	4	12~01	10월 16일	60~80	40	구정
봉무동 경주 崔	4	9~10	10월 15일~17일	40~80	40~50	구정
도 동 달성 崔	4	9~10	10월 7일~8일	80~100	50	구정
둔산동 경주 崔	4		10월 1일	40~50	30	신정(1976년)
입석동 영양 南	3	12~01	10월중 일요일 (행사 때 결정)	90~100	50	신정(1976년)
산격동 달성 徐	4(50%) 2(50%)	새벽(30%) 저녁(70%)	한식, 10월 4일	90~110	50~60	신정(30%) 구정(70%)
방촌동 문화 柳	3	9~10	10월 둘째일요일	130~150	60	신정(1980년)
만촌동 달성 徐	2(1980년)	9~10	한식(시조~18대) 10월(19대~)	80~100	50	신정(1972년)

34) 성백광, 앞의 논문, p.55.

區分 마을 및 氏名	忌 祭		墓(時) 祭			節 祭 설
	代數(代)	祭時(時)	日 時	參與範圍(名)	祭費(만원)	
만촌동 달성 夏	4	9~10	10월3일~4일	40~50	30	신정(1971년)
범어동 능성 具	2(1980년)	9~10(1980년)	10월1일, 10월15일	90~100	60	구정
지산동 중화 楊	4	12~01	10월 17일~19일	300~500	60	구정
황금동 일직 孫	4	12~01	10월중 일요일 (8월향사 때 결정)	130~150	50	신정(1973년)
상인동 단양 禹	4	04~05	10월 1일~20일	70~100	50	구정
평광동 단양 禹	3	9~10(1986년)	10월 15일	60~80	40	구정

그리고 祭日에 자식들이 부모 있는 곳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노부모가 자식 있는 곳으로 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조상숭배의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직장관계상 자식보다는 부모가 움직이는 것이 훨씬 번거롭지 않으며 시대에 맞추어 살수 밖에 없다”라는 한 고로의 말은 사회적 시간사용 전략과 제례 관행의 효율적 봉행이라는 두가지 측면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라 하겠다. 이같은 현상은 다른 문중성원의 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묘사일은 대개 음력 10월 초부터 15일 사이에 실시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제관이 늘어나면서 일요일로 바뀌고 있다. 그예로써 서변동 능성 구씨 문중은 과거 묘사일이 음력 10월 15일이던 것을 5년 전부터 10월 둘째 일요일로 바뀌었으며, 입석동 영양 남씨의 경우도 3년 전부터 10월 3일 묘사에서 10월 첫째 일요일로 바꾸었다. 또한 황금동 일직 손씨의 경우도 1983년부터 8월 향사때 10월 중 어느 일요일을 택하여 묘사를 지내고있다. 검단동 羽溪 이씨 문중 역시 10월 15일의 묘사일을 일요일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다”

농사를 지으면서 한 마을에 정착생활을 하던 전통사회의 제사봉행 관행은 현대사회와 같이 짜여진 시간 규칙과 준칙에 따라야 하는 근로자, 공무원들의 사회적 시간 사용 전략에 의해 변화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제사도 간소하게 지내려고 하여 많이 진설하던 제수도 가능한 줄이고 있다. 이웃끼리 행하던 음복관행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第7節 市域 村落社會의 經濟的 基盤과 共同體의 慣行의 變化

I. 大邱의 經濟構造와 村落社會의 經濟的 基盤

1969년 12월 1일, 대구의 산업별로 취업인구를 보면 농림수산업이 5.1%, 광공업이 33%, 서비스업이 66.9%이었다. 1970년대 초부터 농업과 임업, 축산업, 고등원에 등에 종사하는 농업인구는 경지면적의 도시화로 상당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³⁵⁾ 1970년대 대구지역의 경제구조는 해외 공산품 수출정책으로 인해 시역에 공업단지가 건설되고 이에 따라 수도경작지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일부 시역 주민들은 수도경작보다 도시근교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수익을 올리기 위한 과수와 채소를 경작함으로써 산업별, 경제계층별 생업전략의 분화 현상이 야기되었다.

대구시역에 위치한 둔산동의 주민들 가운데 과수농업, 즉 복숭아, 포도를 경작하면서, 상업, 노동에 종사하는 이가 증가하고 있다. 주민의 직업구성을 보면 시역 촌락사회가 겪는 직업이동의 특성을 알 수 있다. 1978년에 과수원과 미작을 동시에 경영하는 이가 51.1%, 과수원 14.9%, 미작 4.3%이었다. 겸업농가의 생업형태를 보면 아주 특징적이다. 과수원과 논을 경작하면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이가 14.9%, 사무직에 종사하면서 과수원을 경작하는 이가 4.3%, 미작농업을 하면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이가 2.1%, 미작농업과 노동에 종사하는이 4.3%, 과수원과 사업을 겸하는 이가 21.1%이다. 한편 비농가로서 공무원 8.5%, 가내공업 2.1%, 노동 17.1%이다. 부업 6.4%이다.³⁶⁾ 이런 직업구조의 변화와 아울러 젊은이의 직업도 다양하다. 그들은 텔레비전 수리, 자동차 정비업, 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체, 슈퍼마켓, 금은세공업 등에 종사한다.

세계경제체계의 산업·기업은 대구시역 촌락사회의 전통적 농촌경제와 사회구조를 심각하게 변화시켰다. 그리고 산업공단의 건설로 인한 산업부문과 농업부문간의 불평등한 발전은 지역사회의 상대적 자급자족 경제를 축소·변화시켰으며, 농촌과 도시인구의 변동을 야기시켰다.

대구시가 외곽지로 발전함에 따라 교통망 확충, 사회·경제공간조직의 분화, 지역 촌락사회의 경제활동 변화 등이 야기되었다. 그리고 대구 주변지역 인구의 도시이동으로 인해 전통적

35) 경상북도, 《향토자료집》 경상북도편, 1968, p.59.

36) 이성해, 앞의 논문, 1978, p.135.

인 농업경제의 역할은 축소되고 과수경작이나 도시근교 채소농업이 증가하였다. 반야월·방촌 등과 같은 대구주변지역에서는 과수재배농가가 증가하였다. 또한 다양화된 농작물의 상업화 전략, 여성노동력의 이용 등의 현상이 주변 촌락사회에 등장하였다.

지역촌락사회에는 자본가적 생산양식과 그에 따른 사회관계의 분화현상이 야기된다. 농업경작자와 농업이 분리되고 있다. 한편 노동은 간혹 가족성원의 무상의 노동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다. 가족성원의 노동은 농업생산을 위한 봉사의 의미가 있다. 자식의 의무적 노동은 결혼비용이나 학비제공 등과 같은 보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농업기계화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통 농기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농업기술체계가 존재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시장경제에 충분한 적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농업부문에 있어서 임금노동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런 변화과정의 경제체계 촌락사회의 공동체적 경제적 토대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촌락사회는 논, 밭, 임야, 산, 재실, 수리시설 등과 같은 공동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 공동재산은 마을을 구분하는 가시적 지표이다. 그러나 마을 공동재산의 역할도 점차 변화해가고 있다. 대구지역 촌락사회에 있어서 이런 공동토지, 임야, 재실, 서원 등과 같은 공동재산이 오늘날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다만 한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문중재산을 기반으로 각 친족원들의 상징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와 이를 뒷받침할 경제자본의 정치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구시의 書院과 祠가 여전히 남아 문중성원들의 결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表 8-8〉

大丘府의 書院과 祠³⁷⁾

名 稱	位 置(舊地名) (新地名)	創 建 年 代	享 祀 人 物
研經書院	府北20里 畫岩下 大邱直轄市 北區 研經洞	明宗18年(1563)	李 滉(主) 鄭 述·鄭經世(配)
表 忠 祠	府北20里 智妙玉山下 大邱直轄市 東區 智妙洞	顯宗11年(1670)	申崇謙(主) 金 樂(配)
洛濱書院	府西 40里 妙洞 達城郡 河濱面 妙洞	顯宗 15年(1674)	朴彭年 등 死六臣(并)

37) 대구시, 《大邱市史》1, 1973, pp. 436~437 및 大邱直轄市文化財係長 提報.

밑줄은 현존서원. 主:主享, 配:配享, 并:并享 혹은 合享, 獨:獨享.

名 稱	位 置(舊地名) (新地名)	創 建 年 代	享 祀 人 物
伊江書院	府西 20里 伊江下 洛江上 達城郡 多斯面 伊川里	仁祖 14年(1636)	徐思遠(獨)
龜巖書院	府西 3里 南山下 大邱直轄市 中區 東山洞	顯宗 6年(1665)	徐 沈·徐居正·徐 嶧 徐省(并)
南崗書院	府西 70里 豐角縣 南山下 清道郡 角北面 南山里	肅宗 17年(1691)	朴漢柱(主) 朴壽春(配)
青湖書院	府東 20里 守東面 大邱直轄市 壽城區 黃金洞	肅宗 20年(1694)	孫處訥(主)·柳時潘(配) 孫肇瑞·鄭好仁(追)
百源書院	府北 40里 大邱直轄市 東區 道洞	肅宗 18年(1692)	徐時立(獨)
尚德院	府 東門外 大邱直轄市 中區 南山洞	肅宗 8年(1682)	李 庸羽·俞拓基·金義淳 李在秀(并)
德洞書院	府南 10里 月背面 大邱直轄市 達西區 上仁洞	肅宗 34年(1708)	禹拜善(獨)
西山書院	府北 10里 東中面 大邱直轄市 北區 檢丹洞	純祖 24年(1824)	蔡貴河·蔡應麟 蔡先修·蔡光見(并)
西溪書院	府北 10里 東下面 大邱直轄市 北區 山格洞	?	李文和·李 軫(并)
玉溪書院	府南 30面 達城郡 嘉昌面 大逸里	正祖 22年(1798)	徐鈞衡(主) 徐 杓(配)
梧川書院	府北 20里 上守西 大邱直轄市 壽城區 巴洞	英祖 20年(1744)	楊熙止(獨)
清白書院	府北 40里 解北村 大邱直轄市 東區 百安洞	肅宗 27年(1701)	李 榮·鄭守忠(并)
琴巖書院	府北 40里 洞南 達城郡 多斯面 梅谷里	英祖 40年(1764)	鄭師哲·鄭光天(并)
柳湖書院	府北 20里 解西村 大邱直轄市 東區 不老洞	正祖 8年(1784)	郭再謙(獨)
龍湖書院	府西 20里 河東 達城郡 多斯面 鋤齋洞	肅宗 34年(1708)	都聖俞·都汝俞 都愼修(并)

名 稱	位 置(舊地名) 新地名)	創 建 年 代	享 祀 人 物
屏巖書院	府西 30里 城西面 大邱直轄市 達西區 龍山洞	英祖 40年(1764)	都應俞·都慶俞(并)
鳳巖祠	府南 10里 下字西 大邱直轄市 壽城區 上洞	正祖 23年(1799)	孫 遶(獨)
平川祠	府北 20里 解西村 大邱直轄市 東區 智妙洞	正祖 1年(1777)	崔 認·崔 誠 崔東輔(并)
鹿洞書院	府南 40里 上字南 達城郡 嘉昌面 蛛洞	正祖 15年(1791)	金忠善(獨)
龍岡書院	府西 30里 城西面 大邱直轄市 達西區 龍山洞	肅宗 22年(1696)	許得良·許復良(并)
伊絡書院 獨巖書堂	達城郡 多斯面 巴山洞 大邱直轄市 東區 鳳舞洞	高宗 2年(1865)	

한편 문중재산의 운영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340년전 입향조인 承厚의 후손이 세거한 만촌동의 달성 서씨, 같은 동에서 동성집단을 이루었던 달성 서씨, 황금동 일직 손씨, 범어동 능성 구씨, 방촌동 문화 류씨, 상인동 단양 우씨들의 경우에, 공공시설물이 건립되고, 국도확장으로 인해 토지와 임야와 같은 문중재산을 매각하게 되었고, 문중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축적하였다. 이들 성씨 가운데 만촌동 달성 서씨의 경우, 1969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당시 문중일을 맡아 보던 노인들이 보상금을 받아 조상의 묘를 이장하기 위해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전답, 산 등을 매각하는데 재투자했으며, 남은 돈으로 묘각, 묘비, 그리고 서원을 보수하였다. 어떤 문중의 경우에는 문중토지와 임야 일부를 매각하여 건물을 세우고 건물임대료로 문중행사와 위선사업, 장학사업 등을 하고 있다. 묘사 때에는 묘직이에게 위토답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제수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직접 제사봉행을 하고 있다.

한편, 친족성원의 보종에 대한 상징적 구심체로서 유명 반가에서 종택을 숭앙하고 보전하고자 하였던 씨족은 둔산동 경주 최씨, 도동 달성 서씨, 검단동 순흥 안씨이다. 달성 서씨의 경우, 종택에서 선조의 불천위 제사를 종손이 여전히 봉행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택은 과거 선조의 위세를 나타내기 위해 고색 창연한 모습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현대 건물로 바꾸고 있다. 그리고 종위토, 문위토 등과 같은 문중재산이 종손 명의로 되어 있는 동성 집단은 거의 없다. 모두 중명의로 등기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表 8-9〉 대구지역 동성집단의 종가와 종손³⁸⁾

洞 區 分 洞 및 氏名	宗 宅		職 業	補 宗	影響力行使	年 齡(歲)
	有 無	形 態				
동 변 동 능 성 구	무(시내)		학 생	무	무	21
서 변 동 능 성 구	무(서울)		사 업	유	무	52
서 변 동 인 천 이	무(인천)		공무원	무	무	51
검 단 동 우 계 이	무(시내)		사 업	무	소	58
검 단 동 순 홍 안	유	보 존	?	무	중	
봉 무 동 경 주 최	무(시내)		사 업	무	중	52
도 동 달 성 서	유	보 존	무	무	중	63
둔 산 동 경 주 최	유	보 존	농 업	무	다	67
입 석 동 영 양 남	무(둔산동)		농 업	유	소	50
산 격 동 달 성 서	무	구암서원	무	무	다	70
방 촌 동 문 화 류	무(서울)		회사원	유	무	56
만 촌 동 달 성 서	유	한 옥	공무원	무	무	57
만 촌 동 달 성 하	유	현대식	사 업	무	중	63
범 어 동 능 성 구	유	현대식	공무원	무	무	47
지 산 동 중 화 양	무(시내)		의 사	무	소	62
황 금 동 일 직 손	무(도동)		사 업	무	무	47
상 인 동 단 양 우	유	현대식	사 업	무	소	61
평 광 동 단 양 우	유	현대식	교 사	유	무	62

II. 共同體의 慣行의 變化

촌락사회 變化的인 변화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상징적 지표는 동제이다. 촌락민들간의 연대를 맺게 해주고 정체성을 구상화하는 동제가 농촌사회에서는 시행되고 있으나 대구지역 촌락사회에서는 거의 소멸되고 없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제의 제의와 절차·관행 등을 살펴보면 시역 촌락사회의 도시화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대구지역 촌락사회에서 마을 주민들의 正體性을 구상화 해주고 상호유대를 강화하며, 계절적 주기에 따라 남녀노소, 神人合一을 지향하는 상징의례로서 동제를 지내는 곳은 거의 없다.

38) 성백광, 앞의 논문, p.56.

도동의 달성 서씨와 지산동 중앙 양씨 마을뿐이다. 당나무가 있는 곳은 여름 더위를 피하는 휴식처이자 동네 공론이 형성되는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나 팽나무, 느티나무, 회나무, 오동나무, 포고나무 등과 같은 노거수들이 거의 사라져 버리고 없다.

정월 대보름이나 그 전날 동민의 안녕과 한 해의 풍년과 除禍招福을 빌던 동제의는 없고, 단지 오락적인 몇몇 농악만이 고로들에게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게 해줄 뿐이다. 상인동 단양 우씨의 동제는 1960년 이후, 제주의 선출, ‘우리’라는 공동체 정신의 소멸, 생기복덕일에 맞는 제주 선출의 어려움, 3일에서 7일 정도 목욕재계하면서 치성을 드리는 전통의례를 수행하는데 겪는 어려움, 농한기와 농번기의 구별이 없는 도시의 생활주기, 이주민과 대대로 마을에서 살아오던 토박이간의 갈등으로 사라지고 없다.

전통촌락사회에 있어서 생산단위는 공동체적 윤리에 준하는 촌락관습법의 시행단위와 일치한다. 그리하여 노동조직이자 사회제재조직이면서 촌락 공동 관습법을 시행하는 조직으로 농청·정청 등이 있었다. 이러한 조직은 이미 한국 농촌사회에서는 거의 소멸되었고 그 유제의 한 현상으로 품앗이와 같은 공동노동조직이 잔존할 뿐이다. 문중성원간에 전통촌락사회에서 이루어지던 품앗이나 두레와 같은 공동노동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며, 宗員에 대한 구속력도 그리 크지 못하다. “죽보간행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경비를 염출하는 데 종원의 관심이 있지 문중재산과 문중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이도 그리 많지 않다”는 어느 문중 성원의 말처럼 도시에 있어서 보종의식이나 문중의 역할은 점차 변화일로에 처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구지역 촌락사회의 도시화 양상을 촌락사회, 지역사회, 국가사회와 같은 사회단위들 간의 포괄적 관련성 속에서 살펴 보았다. 도시화의 영향으로 시역 촌락사회 주민의 생활양식, 사회·경제적 공간등에 많은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시역 촌락사회의 전통 농업경제체계가 산업화와 상품경제체계에 영향을 받아 농업노동력과 공업노동력간의 분화현상이 점증하고 있다. 생업공간과 사회적 공간의 변화에 따른 인구·직업 이동 현상이 심화되고, 혈연을 근간으로 형성되었던 촌락조직이 외지에서 이주한 성원들로 대체 되었으며 공동체적 윤리와 규범, 전통 민속종교, 공동재산 등이 사라졌다. 주민의 사회적 시간을 이용하는 관행이 변화함에 따라 제의 수행 방식도 바뀌었다. 주민들은 다양한 결사체를 통해 도시문화에 대한 사회·심리적 적응을 시도한다. 시역이 점차 도시화함에 따라 이와 같은 역동적인 사회·문화변동 양상이 촌락사회 주민들에게 야기되고 있다.